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14-14



THE HISTORY OF ANYANG CITY

09

##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안양 지역은 1970~1980년대 공단 조성과 함께 노동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봉제·전자·금속 제조업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에 맞서 노조 결성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제09권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contents

---

# 1 산업화 전후 안양의 공장노동과 노동운동

- 제1장 안양 100년의 노동과 노동운동 / 008
- 제2장 식민지시기 안양의 공장노동과 노동운동 / 026
- 제3장 해방 후~1960년대 안양의 공업 성장과 노동운동 / 034
- 제4장 1970년대 안양 공업지대의 확산과 산업화의 그늘 / 072
- 제5장 1960~1970년대 안양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노동자 문화 / 102
- 제6장 1970년대 안양 노동운동의 태동 / 132

# 2 1980년대 안양의 노동세계와 노동운동

- 제1장 1980년대 안양 도시화의 심화와 노동자 일상의 재구성 / 152
- 제2장 1980년대 안양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소비·여가 생활 / 176
- 제3장 1980~1986년 안양 노동운동의 새로운 경향 / 206
- 제4장 1987년 안양의 노동자대투쟁과 노동운동의 확산 / 242
- 제5장 전노협·민주노총의 결성과 안양 노동운동의 분화 / 286
- 제6장 안양 노동운동 지원 단체의 결성과 활동 / 316

---

## 3 신자유주의와 탈산업화 속 안양의 노동과 노동운동

제1장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에 따른 안양 노동의 변화 / 346

제2장 안양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의 분화 / 366

제3장 안양의 노동 형태 변화와 새로운 갈등 / 392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안양 노동운동의 변화와 전망 / 434

제5장 안양 노동의 역사적 궤적과 21세기 노동의 전망 / 472



# 01

## 산업화 전후 안양의 공장노동과 노동운동

제1장 안양 100년의 노동과 노동운동

제2장 식민지시기 안양의 공장노동과 노동운동

제3장 해방 후~1960년대 안양의 공업 성장과 노동운동

제4장 1970년대 안양 공업지대의 확산과 산업화의 그늘

제5장 1960~1970년대 안양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노동자 문화

제6장 1970년대 안양 노동운동의 태동



# 제1장

## 안양 100년의 노동과 노동운동

---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공장노동의 확산과 노동자 계급의 형성

20세기 한국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이다. 19세기 후반의 개항과 20세기 벽두의 식민화, 중반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쳐 이 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산업화이다. 20세기 가장 뒤늦게 등장했지만 앞선 시기의 모든 변화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산업화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외형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가치관과 윤리의식은 물론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가히 전방위적 영향을 행사한다. 예컨대 K-Pop과 한류의 영향력을 경제개발과 떼어내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산업화가 초래한 가장 중대한 공간적 변화가 도시화일 것이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서울이며 그 연장선상에 수도권 도시화와 공업화가 놓여 있다. 안양은 이러한 한국 20세기의 변화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결과물일 것이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간적 배치상 안양의 공업화와 도시화는 거의 불가피한 일이었다. 서울의 비대화는 인근 지역을 식민화하여 자신의 지배지역으로 삼는 현상을 강화하였다. 이른바 위성도시가 만들어졌고 그중의 하나가 안양이었다.

물론 안양은 오래전부터 서울의 변두리로 피서와 위락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식민지 시기만 하더라도 안양의 포도밭과 딸기밭이 서울 사람들의 위락공간으로 자주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20세기의 산업화와 위성도시화는 차원을 달리하는 변화를 내포하기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산업화는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였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자본의 논리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오랫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던 안양은 20세기 들어 전대미문



1932년 설립된 조선직물주식회사

의 격변에 휩싸인다. 안양에 근대적 공장이 들어선 것은 식민지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과 밀접해진 안양에 대규모의 근대적 공장이 들어선 것은 1932년 조선직물주식회사가 최초였다. 그러나 본격적 산업화는 해방과 분단을 거친 이후 1960년대 들어서였다. 주지하듯이 공업화 위주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박정희 체제의 경제개발 전략이 본격 가동되면서 안양도 그 영향에 깊숙하게 편입된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불러왔고 안양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급성장하게 된다. 이른바 수도권은 서울의 확장을 의미했고 안양은 말 그대로 서울이라는 행성 주위를 맴도는 위성 도시가 된다. 위성도시의 역할은 서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서울이 필요로 하는 값싼 주거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서울에 자리하기 힘든 각종 공업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요컨대 안양은 서울 중심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배후 공간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만들어낸 최대의 사회집단이 노동자이다. 자본주의를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자본과 임노동의 결합으로 상품이 생산되는 생산양식이다. 즉 자본은 생산 수단과 원료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 생산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요컨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계를 돌려 상품을 생산할 노동력이 필수불가결하다.



1961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노동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기차를 탄 금성방직 노동자(서울역, 임구강 제공)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하늘에서 푹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서 공급될 수밖에 없다. 산업화 이전 중심적 산업은 농업이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도 전 인구의 60% 이상이 농민이었고 결국 노동자는 농민의 새로운 이름이지 않을 수 없다. 흔히 한국의 산업화를 특징짓는 이촌향도 현상이란 곧 농민이 노동자와 도시민이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안양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농민 중 일부가 정착하여 만들어진 도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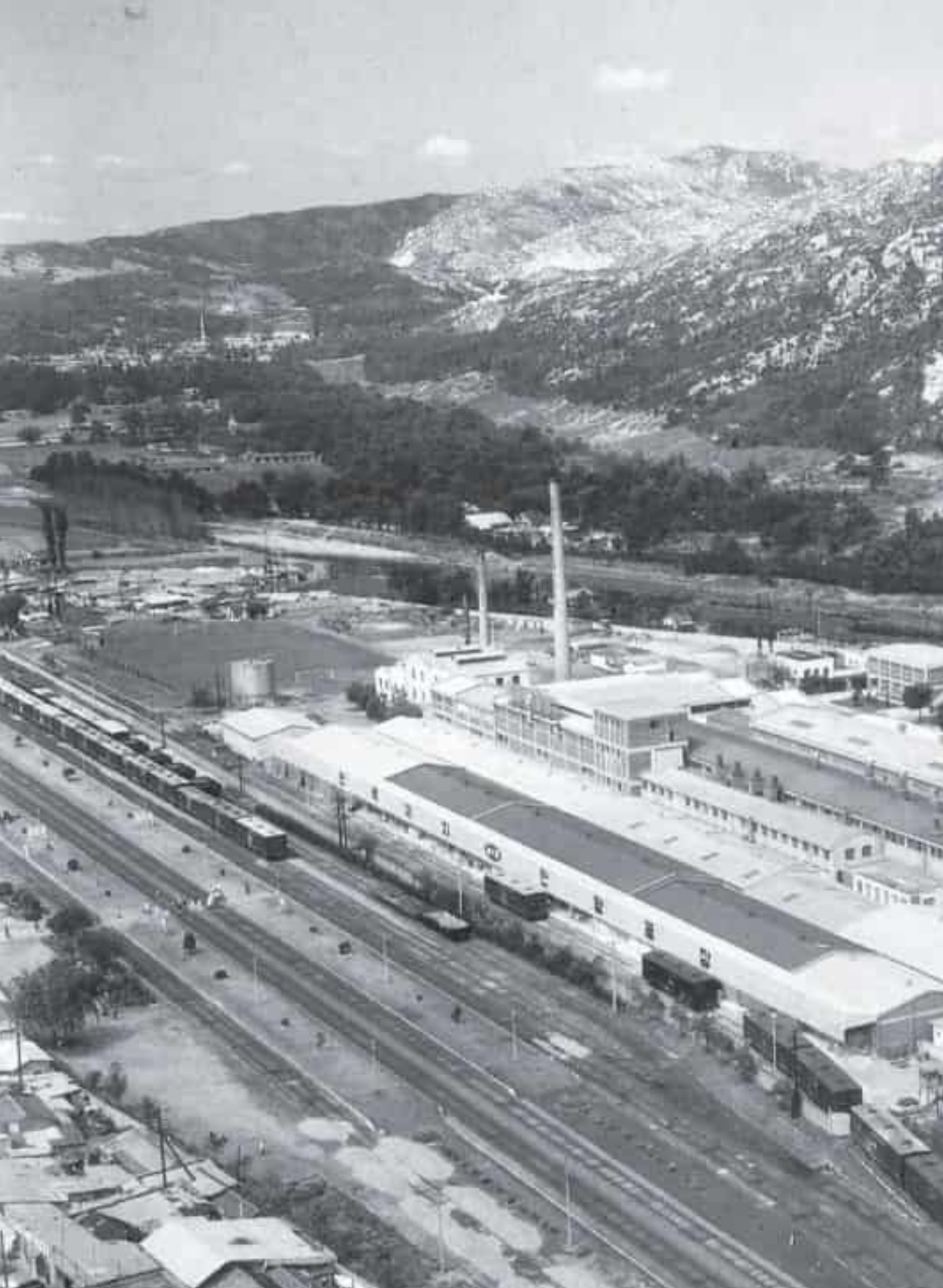
산업화가 시작된 직후인 1965년 안양의 인구는 약 5만 명 선이었는데, 이중 2차 산업 인구가 31.2%인 반면, 1차 산업 인구는 26.4%로 떨어졌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인구는 약 11만 명이었는데, 2차 산업 인구는 무려 64%에 달하였다. 그렇기에 당시 안양은 누가 보아도 공업도시라는 데 이의를 달기 힘들었다. 불과 10년도 안 되어 인구가 두 배로 늘고 그중 60% 넘는 사람이 2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안양의 산업화 속도를 실감케 해 준다.

이 무렵 안양은 노동자 도시였다. 전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장노동자였다. 그러나 이는 안양이 자립적 도시가 아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 산업이 극히 미약하여 자족적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도 인간이기



1969년 호계동 일대 공업단지(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70년대 초반 한국제지주식회사 안양공장 전경(한국제지주식회사, 『한국제지 35년사』, 1993)

에 재생산에 필요한 각종 도시기능이 필요했지만, 안양은 이를 자립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요컨대 당시 안양은 공장만 들어서고 도시 생활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태부족인 상태였다.

## 2.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의 분화

1980년대 안양의 산업구조는 급속도로 재편되었다. 즉 2차 산업 인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 3차 산업 인구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1985년에는 드디어 3차 산업 인구 비율이 2차 산업의 그것을 넘어선다. 1985년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43.3%에 머문 데 비해,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54.7%로 치솟았다. 이후로 안양의 2차 산업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3차 산업 비율을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아울러 전통적 굴뚝산업이 대거 이전하면서 산업구조도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안양의 산업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적 제약이었다. 수도권의 급팽창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안양에는 공장의 신증설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주거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결과 1990년대 신도시가 조성된다. 인구 약 17만 명의 평촌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안양시의 인구가 급팽창하면서 도시공간도 대폭 확장된다. 평촌신도시 조성과 함께 이전된 공장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게 되면서 안양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떠맡게 되는 등 애초의 공업도시 성격이 크게 희석되었다.

크게 보면 안양의 산업구조 조정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통적 굴뚝산업은 해외로 이전되거나 사양산업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벤처산업 열풍이었다. 테헤란로 등 서울의 벤처산업이 포화상태가 되자 인근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위성도시 안양의 이점이 작용하게 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정부가 나서 정보화 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펴기 시작했고 정보통신(IT)은 한국 산업의 새로운 미래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붐을 타고 안양도 정보통신 관련 벤처산업이 중요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안양은 더 이상 전통적 공업도시가 아니었고 정보통신, 전자 등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상주인구가 급증해 최대 60만 명을 넘나들게 되면서 이들을 주요 소비시장으로 삼는 각종 도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미 1980년대 중반이면 3차 산업 비중이 2차 산업을 넘어선다. 1990년대 이후 도시화 바람을 타고 대형마트가 등장했고 평촌농수산물시장이 설립되었는가 하면 대규모 공구상가도 조성되었다. 음식점을 비롯해 전통적 서비스업종은 물론이고 평촌의 학원가는 인근 지역의 대표적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였다.

동안벤처센터(안양시청 제공)





안양국제유통단지



이러한 과정은 곧 노동의 분화를 의미한다. 전통적 공장노동자 외에 다양한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대거 확장되었다. 산업화와 산업구조 조정은 노동력의 공급과 재편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화는 먼저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공급으로 시작된다. 이를 보통 루이스 곡선으로 설명한다. 즉 한국의 경우 루이스 곡선이 하강선을 그린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이 시기부터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공급은 서서히 줄어들고 대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속화된다.

미국의 경우 대략 197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실질노동임금이 하락하는 것과 겹쳐진다. 다시 말해 실질임금 하락에 따라 더 많은 노동력을 판매해야 가계 유지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대거 확대된다. 요컨대 본격적인 맞벌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식은 이주 노동력의 활용이다. 농촌과 가정으로부터 최대한의 노동력을 추출했음에도 부족한 노동력을 국내에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즉 국내 노동력의 한계선을 넘어서선 필요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주 노동자가 급증하게 된 배경이다. 이른바 노동력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는 사실 자본의 세계화와 짝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 3. 노동 현실과 노동운동의 전환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이 노동자의 대량 형성을 초래했다면, 이는 노동운동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근대 이후 노동운동은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는다. 안양의 노동운동은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935년 안양 인견공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파업이 시도된 것이나 이듬해인 1936년 조선직물주식회사 염색가공부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표적이다.

물론 안양 노동운동의 성장은 산업화와 직결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후후발 산업화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자본과 기술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었던 한국의 기업들은 주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였고, 이는 결국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의미하였다.

산업화시기 안양 노동자들의 삶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88년 그린힐 봉제공장 화재 참사 합동 위령제(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1970~1980년대는 산업과 야근이 일상화되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으며, 여가생활이나 소비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980년대 후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중하류층 또는 하류층으로 인식하였고, 가구 주 임금만으로는 최저 생계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일터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 열악한 노동 현실은 잦은 산업재해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8년 3월에 발생한 ‘그린힐 봉제공장 화재 참사’였다. 이 사고로 기숙사에서 잠자던 22명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들은 3.7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생활했으며, 공장 측이 폭력배 침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쇠창살과 잠금장치 때문에 대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여성 노동자들의 참혹한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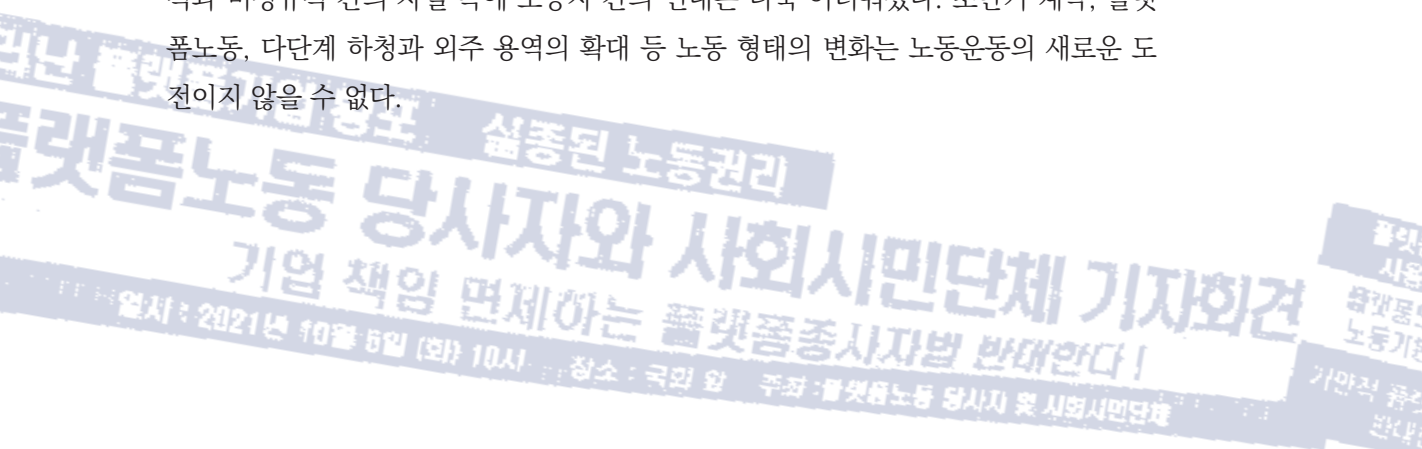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19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하여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돕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들은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자들을 교육하며 투쟁을 지원했고, 회



플랫폼노동 당사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7740&inflow=N)

사와 정부의 탄압에 맞섰다.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은 안양에서도 폭발적으로 노동조합 결성 투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어용노조 퇴진, 약덕 관리자 해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치열하게 투쟁하였다.

1990년대 이후 안양의 노동운동도 커다란 전환에 직면하였다.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 형태의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다. 특히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이 대거 증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속에 노동자 간의 연대는 더욱 어려워졌다. 초단기 계약, 플랫폼노동, 다단계 하청과 외주 용역의 확대 등 노동 형태의 변화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 수 없다.



## 4. 21세기 기술혁명과 노동의 미래

근대적 노동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은 대규모 기계제 공장의 등장이다. 근대 이후 수백수천의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놀라운 풍경이 만들어진다. 수많은 노동자가 한 장소에 집결해 있기에 조직화도 수월했고 집단적 생활을 통해 공통의 의식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손쉬웠다. 그러나 현대의 노동자는 개별화와 원자화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와 같은 노동자의 단일한 집단적 정체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노동의 변화는 20세기의 그것을 능가할 것처럼 보인다. 20세기의 노동이 근대적 산업노동을 만들어냈다면 21세기 기술의 발전은 근대적 노동의 소멸을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로봇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을 재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여 준다. 인간의 근골격을 대신할 로봇과 인간의 머리를 대신할 인공지능의 개발, 그리고 양자의 결합은 결국 인간의 노동을 결정적으로 변모시킬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대규모 굴뚝산업은 환경 파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지방 이전이 촉진되는 대상이 되었고 안양의 공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굴뚝산업이 빠져나간 자리는 상당 부분이 주거용지로 전환되어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값싼 공장 부지가 고가의 아파트로 변신한 셈이었다. 이는 토지가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즉 공장 부지로서의 토지는 기본 생산요소의 하나로 사용가치적 의미가 큰 것이었지만, 아파트는 주거용 사용가치보다 시장의 화폐로 환산되는 교환가치가 더 크고 중요하다.

이는 노동을 통한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는 단적으로 더 이상 월급쟁이가 저축을 통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임금 인상 속도와 부동산 가격 인상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면서 이제는 어지간한 월급쟁이가 자신의 봉급을 저축해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더욱 심각해 그 정도가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노동을 통한 임금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생활비가 치솟게 되자 너도나도 투기성 자산 취득방식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하였다.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노동의 미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471220>)

산은 현재 한국의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자산 형성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 소득을 보장하는 노동이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노동과 삶이 더 이상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힘들게 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비롯한 각종 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의 흐름이 부가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기존 노동을 변모시킬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노동의 변화는 물론 아예 노동의 소멸을 재촉하는 놀라운 기술이다. 인간의 노동은 두뇌의 관리와 손발의 실행이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뇌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게 된 것이다. 벌써 사라지게 될 직업이 운위되는 등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에 가히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예컨대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개발은 수많은 운전 관련 직업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며 범용 AI의 개발은 어지간한 지적 노동을 대체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 직종의 대표적 영역인 의료와 법률도 인공지능 개발로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사실상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대거 디지털화되면서 빅데이터가 구축되었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

는 개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의 지식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벌써 언론계에서 간단한 기사는 인공지능이 작성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작성한 소설이 문학상을 수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결합은 더 큰 노동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미 인간의 근골격계를 대신하는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어지간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을 이용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더 많은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경우도 많다. 산업 자본주의 발생 초창기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안양 100년의 근대적 산업노동과 그에 따른 노동운동은 이제 커다란 전환 국면에 처해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이것은 안양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터이다.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한 이래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는 찾기 힘들다. 불투명한 미래를 앞둔 전환의 국면일수록,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 성찰의 자세로 돌아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노동과 노동운동의 문제를 산업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즉 어느 하나의 문제를 고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과 상황 속에서 다층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근대적 산업노동이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해 왔는지, 또 그 속에서 노동운동은 어떠한 불가피한 정세와 조건 속에서 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산업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노동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역으로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 제2장

# 식민지시기 안양의 공장노동과 노동운동

---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1. 조선직물주식회사의 설립

근대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은 서울과 안양 사이의 접근성을 증진시켰고, 이를 배경으로 안양은 서울의 배후도시로 점차 발달해 왔다. 1870년 경부 간 국도가 안양을 통과하였고,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역이 생기게 되어 철도역을 중심으로 안양은 점차 성장해 나갔다. 포도밭과 밤밭이 대부분이었던 시골 마을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12년 안양이 속했던 시흥군 전체의 공장수는 10개였는데, 이때 안양에 설치된 공장은 일본인 오히라 타메스케(大平多女助)가 1905년에 건립한 와공장이었다. 1920년대 시흥군의 공업시설이 늘어나면서 1924년 당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업해 있던 노동자수는 1,193명으로 남자는 944명, 여자는 249명이었다. 시흥군 소재 공장 노동자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요업이 324명, 방직업 295명, 피혁제조업 282명, 연와제조업 123명, 토관제조업 69명, 제작공업 46명, 도기제조업 33명, 정미소 11명, 축산공장 10명 등이었다.<sup>1</sup>

안양에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회사는 안양산업사였다.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에 있던 이 회사는 자본금 10만 원으로 안양 지역민 20명이 발기하여 설립한 농축업 관계회사로, 자본 부족과 경영 미숙 등으로 설립된 지 3년 만에 도산하였다.

경인공업단지에 속하는 안양에는 1930년대부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는데, 식민지 시기 안양의 대표적인 대형 공장은 1932년 설립된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인건공장이었다. 일제는 1930년대 초 방직공장 건설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안양 박달동에 있는 ‘어수(御水)물’이 가장 우수해서 안양 ‘양짓말’(현 안양공업고등학교



다카세농장 자리에 설립 예정인 조선직물주식회사(『매일신보』 1932년 8월 17일)

북쪽, 대농단지 일원)에 조선직물주식회사 건립을 추진하였다.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은 담장의 길이가 ‘십 리’에 이를 정도로 광대한 부지를 자랑하였다.

1932년 8월 13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양 시가지와 전답은 거의 전부 다카세농장(高瀨農場)의 소유로, 그 면적이 약 67만 평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인 모씨의 계획에 따라, 다카세농장이 소유한 토지 중 안양역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300만 원의 자본을 들여 1만 2,000평 규모의 조선직물주식회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sup>2</sup> 이에 조선직물주식회사는 1932년 11월에 안양역 앞인 서이면 안양리 872-1번지 일대에 건립되었다.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가 박승직(朴承稷, 두산그룹 창업자) 등과 합작

하여 창립한 공익사(共益社)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 설립자는 다카이 헤이사부로(高井兵三郎)였다.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경영하였으며, 조선인은 감사로 박승직만 참여하였다.<sup>3</sup> 조선직물주식회사 공장 건물은 1932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33년 2월에 준공되었고, 그해 3월부터 조업을 개시하였다.<sup>4</sup>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은 1934년 11월 기준 직기 168대와 염색가공설비를 갖추고 쌍인견물(雙人絹物)을 제직(製織)하였다. 이 무렵 조선직물주식회사는 자본금 16만 5,000원을 100만 원으로 증자하여 공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다.<sup>5</sup>

## 2. 조선직물주식회사의 노동운동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이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직물주식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1935년 4월 13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산



조선직물주식회사 노동자 동요(『동아일보』 1935년 4월 13일)

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안양인견공장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동료가 사망하자 위험수당 지급과 사망 유족 부조료 지급 등을 요구했는데,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주동자 방태권을 검거하여 취조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파업하려는 형세를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동료 노동자의 죽음에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의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흥군 안양에 있는 안양인견공장에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반경 정경부 직공 박윤석(20)이가 종업 중에 잘못되어 벨트에 휘감기어 즉사한 사건이었다. 이에 기인하여 동 공장 직공 방태권 등 20명은 회사 측에 대하여 위험수당의 지급과 지하실의 설치, 사망 유족 부조료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파업을 하려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관 영등포서에서는 방태권을 검거 취조하는 동시에 오히려 불온한 형세가 농후하므로 엄중 취조 중이라 한다.

〈『안양인견공장 직공들이 동요』, 『동아일보』 1935년 4월 13일〉



조선직물주식회사 염색가공부 직공 70명의 동맹파업(『동아일보』 1936년 7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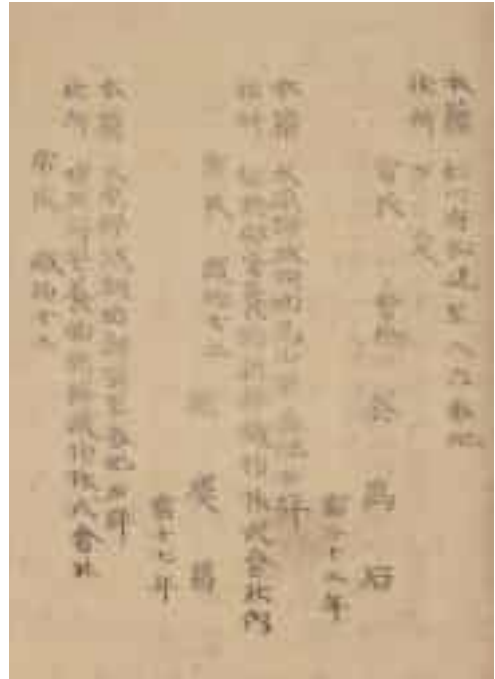
1936년 7월에는 조선직물주식회사 염색가공부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1936년 7월 1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조선직물주식회사 염색가공부 노동자 70여 명은 9일 아침 ① 금년 상반기 상여금을 지불할 것, ② 일급을 인상할 것, ③ 제반 대우를 개선할 것 등 3개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돌연 파업하였다. 이 파업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6개월 지급하던 상여금을 주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사측이 거절하여 불만이 폭발하였다.<sup>6</sup> 당시 언론에 보도된 파업 직공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요즘 쌀값 기타 일용품품 값은 무척 올라서 우리들의 생활에 여간 위협받는 바 아는데 식전은 삼 년 동안 한 번도 올려주지 않고 그냥 60전밖에 안 주고 또한 식사도 너무 나쁘니 부득이 파업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3항요구를 제출코 파업단 의연 강경, 『조선일보』 1936년 7월 11일〉



최경창(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최경창 재판기록』(국사편찬위원회 제공)

1936년 7월 12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조선직물주식회사 염색가공부 직공 70명의 동맹파업 결과 상여금은 10일 오전 7시 교대시간을 기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직공 355명에 대하여 최고 7월 최저 50전의 비레로 지급하고, 일급 인상과 식사 개선 및 기타 대우 개선 요구에는 사측이 응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자들은 10일 정오까지 강경한 태도로 파업을 계속하였다. 기리타(桐田) 공장장은 파업단 대표 인물인 김석재, 최완목, 최이선, 변효옥, 변효선 등 5명을 한 사람씩 따로 불러 면회하고 “지금부터 성실히 취업하여 준다면 요구조건을 충분히 고구(考究)하여 주겠다.”고 하여 쟁의 확대를 면하고 전부 취업 복귀하였다고 한다.<sup>7</sup>

한편 1934년 7월 19일 최경창(1918~?)과 홍화순(1919~?)은 김만석의 권유로 조선직물주식회사에서 공산주의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sup>8</sup> 김만석은 인천지방 적색노동조합 및 조선공산당재건운동사건으로 검거된 인물이었다. 이어 1935년 8월 24일 당시 언론에는 호의를 통해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이 보도되었다.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1933년 가을에 검거되었으나, 서대문경찰서가 뒤늦게 신문기사 게재 금지 해제를 발표하면서 이 시점에 보도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경선(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사건의 핵심은 중국에 망명 중이던 안광천과 김원봉 등이 조직한 조선공산당재건동맹에서 파견된 권오훈 등이 강릉에서 공산당 조직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사건의 관계자였던 이재유 일파가 조선공산당 조직을 목표로 산업별 적색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비밀리에 활동했다는 점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산업별 노동운동을 이끌던 이재유 계열 가운데에는 안양에서 활동한 인물도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경선이였다. 이경선은 1932년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당시 이 학교 독서회 멤버였던 박진홍, 이순금, 이종희, 이효정 등이 모두 공장으로 들어간 것과 달리, 그는 이화여전에 입학했다가 곧 제적당하고 이후 안양에 위치한 조선직물주식회사에 들어갔다.<sup>9</sup> 이경선은 조선직물주식회사에 여공으로 들어가서 여공들 사이에 파묻혀 있으면서 동지규합에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한다.<sup>10</sup>

1935년 산업재해 사망사건에 대해 파업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점,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경찰이 주동자를 체포하는 과잉 대응을 한 점, 1936년 염색가공부 노동자들이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에 침투한 노동운동가 그룹들이 1935~1936년 조선직물주식회사 노동운



조선직물 공장 확장(『조선일보』 1937년 6월 23일)

동에 깊이 간여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제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조선직물주식회사는 동양방적주식회사와 함께 징발되어 조선비행기주식회사로 전용되어 비행기 제작에 활용되었다. 조선의 자본가 박흥식이 주도했던 조선비행기주식회사는 당시 직원이 650명, 공장 노동자가 1,700여 명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sup>11</sup>

註

- 1 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 20년사』, 1990, 13쪽.
- 2 「조선직물회사 안양역전에 설치, 300만원 자금으로」, 『동아일보』 1932년 8월 13일.
- 3 「조선직물주식회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4 「조선직물조합 3월부터 개시」, 『조선일보』 1933년 1월 28일; 「조선직물회사 안양인건공장」, 『조선일보』 1933년 3월 17일.
- 5 「신흥, 확장 계획 등 공업계 다사지추(多事之秋), 조선제조공업근황(3)」, 『조선일보』 1934년 11월 12일.
- 6 「안양역 조직(朝織) 염색공 70명 동맹파업」, 『동아일보』 1936년 7월 10일.
- 7 「회사측 양보로 파업단 전부 취입」, 『조선일보』 1936년 7월 12일.
- 8 「鄭甲溶 외 2명(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형사 제1심 소송기록』(1933 刑 3012/1934 豫 3803/1934 刑公 1645, 1646).
- 9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7쪽.
- 10 「시내 적색노조 조직 경과, 경성중심 산업별 노조운동」, 『조선일보』 1935년 8월 24일.
- 11 「조선직물주식회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제3장

# 해방 후~1960년대 안양의 공업 성장과 노동운동

---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해방 후~1960년대 안양의 공업 성장

해방이 되자 안양의 공장을 관리하던 일본인 공장주가 떠나면서 공장은 공동화되었다. 일본인 사장들이 떠나고 일제에 적극 협조했던 조선인 관리지들도 공장을 버리고 도피한 사이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스스로 공장을 접수하여 공장을 경영하였다.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안양은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점점 갖춰 나갔다. 1949년 무렵 안양 지역의 인구는 2만 3,000여 명이었고, 안양에는 조선직물, 삼덕제지, 조선경직, 고려석면, 제일방직, 금성방직, 안양직물, 남해산업바이루직물, 조선특수자기 등 16개의 공장이 조업하고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날로 팽창일로에 있는 공도(工都) 안양”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sup>1</sup>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3년간의 전쟁으로 안양도 경제기반과 공업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안양 내 기업체와 공장의 전파(全破) 또는 반파(半破)된 곳이 19개소에 달하였다.<sup>2</sup>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안양의 공장을 재건하기 위해 1953년 7월 1일 안양읍 회의실에서는 관내 기관장들이 모여 ‘안양읍부흥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전쟁 중에 수립된 안양읍부흥대책추진위원회는 ‘공도(工都) 안양’을 급속히 재건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되었으며, 위원장에 김대근, 부위원장에 김두용과 조한구가 각각 선임되었다.<sup>3</sup>

전쟁 후 공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안양은 국가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되었는데, 1955년에 함태영 부통령이 안양의 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1956년 10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안양에 신설될 수도영화주식회사 안양촬영소 정초식에 참석한 후 안양 지역 공장 시찰에 나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안양브리스트콘크리트공장, 삼덕제지주식회사 안



1954년 유엔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재건된 금성방직 안양공장(국가기록원 제공)



1955년 유엔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증개축된 금성방직 안양공장(국가기록원 제공)



1954년 유엔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재건된 금성방직 안양공장(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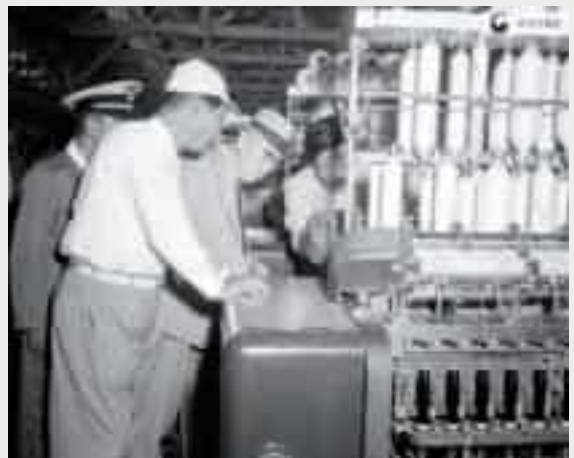
양공장, 금성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 등을 시찰하였다.<sup>4</sup> 또한 1959년에는 동면 안양리(현 석수동)에 유한산업(유유계약)주식회사 안양공장이, 안양읍 안양리에 삼영하드보드공업주식회사 안양공장이 설립되었다.

〈표 1〉 1950년 안양의 공장과 노동자 현황

명칭	소재지	설립연도	공장 면적 (평)	생산물	종업원수 (명)
제일방직공사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46년	10,810	모직물	117
금성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48년	5,600	면사	138
안양직물공장	안양읍 안양리	1945년	351	본건, 인건물	36
조선바이루직물업유한회사	안양읍 안양리	1950년	700	시루, 메리야스	12
낙랑실업공사	안양읍 안양리	1946년	61	본건, 인건물	37
조선건직주식회사	동면 안양리	1945년	1,026	본건, 인건물	165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읍 안양리	1945년	5,853	본건, 인건물	298
삼덕제지주식회사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45년	4,784	모조지, 선화지	103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	안양읍 안양리	1945년	5,741	석면시트패킹, 방직용 고무롤, 긱동패킹	77
조선제함(製函)공업합자회사	동면 안양리	1937년	1,200	제재	9
남해산업공사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47년	10,529	건축공업 텍스, 철도침목	43
삼길양산제작소	안양읍 안양리	1945년	400	양우산	6
조선특수자기주식회사	안양읍 안양리	1948년	240	도자기, 제품일반	12
삼신제도(製陶)공업사	안양읍 안양리	1949년	120	도자기, 제품일반	15

자료 : 시흥군, 『금천지』, 1950, 146~1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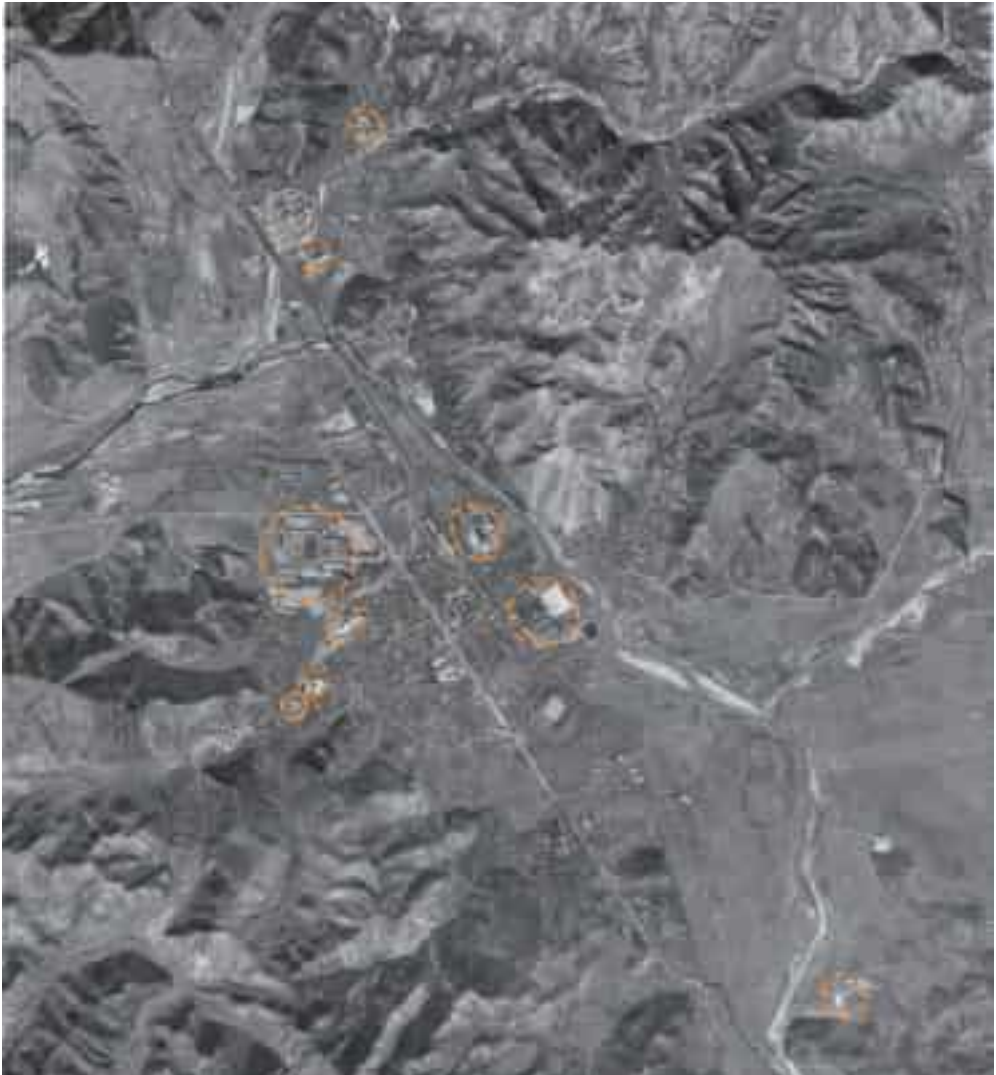
1960년대 초반 안양은 인구 2만여 명의 소읍이었으나, 서울과 인천을 잇는 지리적 조건과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힘입어 안양은 공업도시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지리적



1955년 함태영 부통령의 금성방직 시찰(국가기록원 제공)



1959년 삼영하드보드공업주식회사 기공식(국가기록원 제공)



1960년대 중반 안양의 주요 공장

측면에서 보면, 1963년 서울시 영역의 확장에 따라 안양읍과 서울시 사이에 놓였던 시흥군 동면이 서울시 시흥동으로 편제되면서 안양읍과 서울시는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인구 팽창으로 부도심인 영등포에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지가 형성되었고, 지가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공장지대는 안양 방면과 수원 방면으로 확장되었다. 안양에 공장이 집중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여 안양은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57년 안양시 인구는 2만 2,000여 명이었는데, 1959년에 3만 명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1962년 유유산업 안양공장(국가기록원 제공)





① 고려석면



② 삼덕제지



⑤ 태평방직



⑥ 한국제지

1960년대 안양역 일대 공업지역(최창선 제공)





③ 삼영하드보드



④ 삼진알미늄



⑦ 금성방직



⑧ 현대양행



1963년에 4만 명대로, 1965년에 5만 명대로, 1967년에 6만 명대로 각각 진입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였다.<sup>5</sup>

〈표 2〉 1961년 안양의 주요 공장과 노동자 현황

업체명	소재지	설립연도	공장 면적 (평)	생산품	종업원수(명)		
					계	남	여
금성방직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48년	16,051	면사포	2,844	506	2,338
태평방직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53년	3,406	마직물	328	84	244
삼덕제지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45년	5,817	모조지, 선화지	130	107	23
한국특수제지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60년	12,018	모조지	180	154	26
고려석면 안양공장	안양읍 안양리	1945년	1,635	석면, 고무제품	113	78	35
유한산업 안양공장	동면 안양리	1959년	405	제약	92	18	74
계			39,332		3,687	947	2,740

자료 :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62.

비고 : 고려석면 안양공장과 유한산업은 안양공장 설립 시기는 수정함.

섬유공업은 1960년대 안양 공업의 핵심축이었다. 섬유공업은 안양에 자리 잡은 제조업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금성방직주식회사와 태평방직주식회사가 대표적 기업이었다. 금성방직주식회사는 1961년 기준으로 공장 면적 1만 6,051평, 종업원 2,844명(남성 506명, 여성 2,338명)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특히 1954년 출시한 ‘은하’ 면사 브랜드는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했고, 1963년에는 자체 축구단까지 창단할 정도로 기업 규모가 확대되었다. 태평방직주식회사는 마직물 생산을 담당했으며, 1961년 말 기준 공장 면적 3,406평에 종업원 328명을 고용하였다. 이 두 방직공장은 3,00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안양 지역 최대 고용원 역할을 했다.

연도별로 안양에 진입한 사업체들을 살펴보면, 1960년에는 안양읍 박달리에 동국물산주식회사와 안양리에 한국특수제지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61년에는 콘크리트 침목을 생산하는 우림산업, 포도주를 제조하는 경향포도조합, 한국아트제지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안양에서 창립되었다. 1962년에는 대륙석면주식회사, 삼진알미늄주식회사 등이, 1963년에는 삼양펠프주식회사와 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64년



1969년 금성전선(미살로프 제공)



1969년 호계동 공업지역(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금성전선과 락희화학이 가동하고 있고 금성통신이 건설되고 있다.



에는 동양나일론주식회사와 태진연탄공장, 안양읍 박달리에 농약을 생산하는 성신농약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65년에는 공장 건설이 활기를 보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양행(만도기계주식회사의 전신)이 창립되었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안양은 공업도시의 면모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삼풍섬유공업주식회사(1966년), 락희화학주식회사(1967년), 금성전선주식회사(1967년), 오리온식품공업주식회사(1968년), 대항지공주식회사(1969년), 동일방직주식회사(1969), 삼아알미늄주식회사(1969년), 태흥무역주식회사(1969년) 등이 안양에 공장을 설립하였다.<sup>6</sup>

1960년대 안양의 공업 성장 추세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업은 1961년 2개 업체에서 1971년 8개로 증가했고, 제지업은 1961년 2개에서 1971년 13개로 늘어났으며, 식료품 제조업은 1961년 전무한 상태에서 1971년에는 9개로 증가했다. 의약업은 1961년 1개에서 1971년 4개로 늘어났으며, 화학업은 1966년 2개에서 1971년에는 13개로 증가했고, 기계·금속과 전기·전자는 1966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4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타 제조업은 1966년 3개에서 1971년 7개로 늘어났다.<sup>7</sup>

## 2. 해방 후~1960년대 안양의 주요 공장

### 1) 금성방직주식회사와 태평방직주식회사의 설립과 성장

해방 이후 안양의 대표적 공장이었던 금성방직주식회사는 1948년에 설립되었는데, 쌍용그룹 창업자인 김성곤은 귀속 기업체였던 조선직물주식회사(1932년 설립)를 1952년에 불하받아 금성방직주식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한국전쟁기에 방직시설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원조기관과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설비로 재건되었다. 1953년부터 유엔한국재건위원단(UNKRA)이 추진한 면방직 복구사업으로 면방직 산업부흥자금에 금성방직주식회사에도 배정되었다.

유엔한국재건위원단의 복구사업에 힘입어 금성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은 1953년 8월에 1만 2,000추(錘)와 직기 1,000대 설치를 목표로 착공한 5,000평 규모의 공장 건물과 부속건물 약 2,000평을 신축 또는 보수하였다. 복구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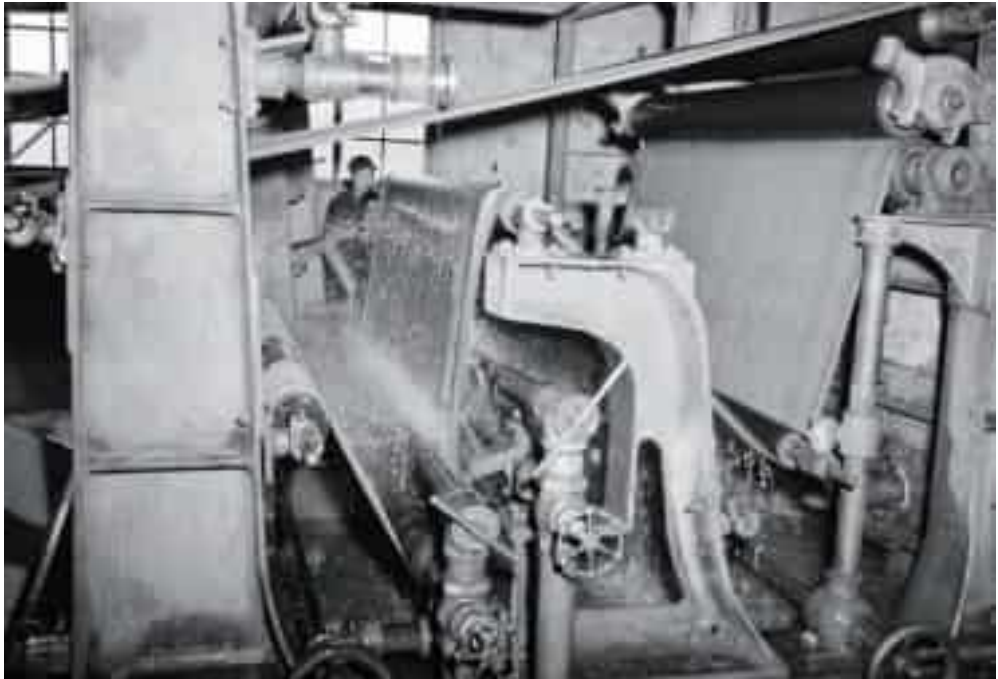
1956년 10월 17일 금성방직 공장을 시찰하는 이승만 대통령(국가기록원 제공)



1960년대 태평방직주식회사 공장 전경(안양시청 제공)

1954년 5월 2일부터 성능이 우수한 근대식 방직기 1만 2,000추 운전을 개시하였다.<sup>8</sup> 금성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은 모직물 생산공장으로 전환한 태평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의 방기와 직기까지 추가 매입해 대공장으로 성장하였다.

1953년에 자본금 1억 환으로 안양읍 안양리 97번지 일대에 설립된 삼흥방직주식회사는 방기 1만 추, 직기 50대를 구비하고 1954년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1956년 금성방직주식회사에 인수되면서 태평방직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태평방직주식회사와 금성방직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김성곤은 쌍용양회공업회사의 대단위 동해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두 방직회사를 1967년 10월 대한농산에 매각하였다.<sup>9</sup> 금성방직주식회사와 태평방직주식회사는 1967년 대한농산에 인수된 이후에도 상호명을 유지하다가 1973년에 주식회사 대농(大農)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1977년까지 운영되었다.<sup>10</sup> 1977년에 대농은 안양의 방직공장을 폐쇄하고 청주공장으로 이전하였다.



1954년 삼덕제지주식회사 공장(국가기록원 제공)

## 2)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와 삼덕제지주식회사의 설립과 성장

1945년 안양리에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미국의 대외 원조기구인 대외사업처(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FOA)에서 제공하는 원조 30만 불이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와 조선석면 두 회사 공장에 자금이 제공되어 파괴된 공장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충당되었다.<sup>11</sup> 1956년 11월 27일 『동아일보』에는 ‘산업부흥상(産業復興相) 현지보고’라는 연재기사에서 안양의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가 소개되었다. 이 공장은 일제 식민지시기 일본석면공장을 모체로 하여 건설된 것이었는데, 한국전쟁기 공장 건물이 전파(全破)되었다. 미국의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원조 자금 30만 5,000불을 획득하여 약 6,000평 규모의 공장 건설에 착수, 1954년 12월에 공장이 준공되었다.

이 공장은 1955년 1월부터 석면사, 석면포, 조인트 시트파킹, 브레이크라이닝 석면판, 석면슬레이트, 석면고무호스 등 화학, 조선, 전기, 기계 및 건축 등 각 공업에 필요한 제품을 출하하였다. 이 공장은 생산시설이 12동의 건물에 분리되어 이 분리된 건물에서



산업부흥상 현지보고리는 연재기사에 소개된 안양의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동아일보』 1956년 11월 27일)



1959년 고려석면주식회사 공장(안양시청 제공)

상호 간에 밀접하게 연락하며 일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생산과정은 서독 기술자와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석면공업에 종사하였던 3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 등 2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특히 기술을 중요시하여 제일교포 학생 중 현재 석면 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차 귀국 후에는 이 공장의 기술을 맡도록 했다. 이 공장은 농업창고와 주택건축에 필요한 슬레이트를 연간 5,000톤, 기타 석면제품을 연간 약 1,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sup>12</sup>

삼덕제지주식회사는 1941년 고토우(後藤庸視)가 설립한 제지공장인 삼왕제지주식회사로 출발하였다. 해방 후 귀속기업체로 미군정에 접수되었다가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되었다.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기존 관리인이었던 조경묵(曹庚默)에게 174만 환에 불하되었다. 조경묵은 사명(社名)을 삼덕제지(三德製紙)로 바꾸었고, 운크라(UNKRA) 원조자금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여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하였으나 회사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1961년 조경묵은 전재준(全在俊)에게 경영권을 넘겼다.<sup>13</sup>

### 3. 1950~1960년대 안양 노동계의 동향과 노동운동

#### 1) 안양 노동계의 동향

1960년 4·19혁명은 1950년대 내내 억눌렸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에 일어난 5·16군사쿠데타로 노동운동은 다시 군사정부에 의해 억압되는 형국을 맞이하였다.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는 모든 노동단체를 해산시키는 조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8월 3일 노동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고 9인으로 구성된 전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9인위원회에 섬유노조는 금성방직 출신 김광수가 책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61년 8월 17일 산별노조인 전국섬유노동조합 창립대회를 서울시 노동회관에서 열었다. 섬유노조 위원장으로는 금성방직 김광수가 당선되었다. 1960년대 초 금성방직은 섬유노조 내에서 최대 조합원수를 보유한 사업체였다.

1961년 8월에는 한국노총이 창립되었는데,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이 지부 조직에 나서면서 안양에서도 1961년 9월 1일 고려석면에 분회(48명)가 결성되고, 삼덕제지 지부(115명)가 9월 3일, 한국특수제지에도 지부가 결성되었고 1962년 4월 21일에는 삼영하드보드에 지부(47명)가 결성되었다. 1961년 말에 총 6개 업체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었다.<sup>14</sup>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이윤 확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저임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 발전 전략은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하였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에,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크게 제한하며 노동운동을 강력히 탄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양 산업계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저임금 정책과 노동력 활용 전략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해되었다. 이는 안양의 노동조건이 국가적 경제개발 모델의 축소판이었음을 시사하였다.

1960년대 중반 안양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속하는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들이었다. 1960년대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두 지역의 노동자 구성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은 이들이 낮은 협상력과 제한된 대안으로 특히 착취에 취약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업이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이들은 다른 선택지가 적었기 때문에 "형편없는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기업이 노동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 2) 삼덕제지 체불임금 청산 투쟁

1950년대 안양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사례 중 알려진 것은 삼덕제지 공장에서 노동운동이었다. 삼덕제지 공장은 1958년경부터 불황에 빠져들어 운영이 부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갔다. 회사는 폐쇄 상태에 놓이고 체불임금은 많이 누적되었다. 당시 이 회사 노동자들은 총 120명에 일단 1,000~3,000환이었으며, 체불



삼덕제지 노동조합 정기총회 개최(『동아일보』 1959년 8월 12일)

1960년대 삼덕제지주식회사 공장(안양시청 제공)



임금 총액은 약 700만 원이었다.

이에 삼덕제지 노조는 1958년 10월경 노조가 공장을 자치적으로 운영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자치운영관리 노조 위임안을 회사 측에 건의하였다. 회사 측은 노조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노조는 사장에게서 잠정적인 자치운영권을 위임받게 되었다. 노조의 자치관리로 노동자들은 스스로 원자재를 구입하였고 생산 제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조의 자치운영은 6개월간 지속되다가 새로운 경영주를 맞이하여 회사 운영권은 다시 사용주 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sup>15</sup>

1959년 8월 10일 삼덕제지 안양공장에서 제4차 대한노총 삼덕제지 노동조합 정기 총회가 열려 위원장(박영성)과 부위원장(이성환, 김기) 등 새 임원진을 선출하였다.<sup>16</sup>

### 3) 고려석면 안양공장 노조 투쟁

고려석면 안양공장은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혹사했던 회사였다. 1963년 당시 임금 수준은 남성 노동자 일당 75원, 여성 노동자 일당 35원이었는데, 1963년 6월 무렵 쌀 한 가마니에 3,000원이 넘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노동자들의 일당은 너무도 적은 것이었다. 이렇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1963년과 1965년에 노동자들은 파업을 일으켰다. 고려석면 노조는 1963년 5월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파업을 결의하였다.

- ① 퇴직금제도 개선(정식 채용일자 즉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근속연수 매일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선할 것).
- ② 임금 인상(남자 일당 50원 인상하고 여자 일당 30원 인상하여 1963년 4월 26일부터 인상 지급할 것).
- ③ 상여금제도의 확립(매년 통상임금 1개월분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정할 것).
- ④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 ⑤ 병무 소집자에 대하여 소집기간 중 전례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
- ⑥ 신규 채용자와 구 종업원 간의 차별 대우를 시정할 것.

사용자 측은 노조의 이러한 제안을 받고서 이 노동위원회에 알선 의뢰하였다. 이 알선에서 사용자 측은 노조의 결의 내용을 전면 거부하고 남자 75원, 여자 35원을 받는 일당 노동자에 대해 일당 4원씩 인상하여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정면으

로 거부하였다.

1963년 6월 8일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시 조정을 시도했는데, 조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사는 1963년 5월 23일 현재 전 조합원 84명에 대하여 기본 임금을 남자(68명) 12월, 여자(16명) 6원씩 1963년 6월 10일을 기하여 각각 일률적으로 인상 실시할 것.
- ② 퇴직금의 기산일자에 관하여는 보사부 당국의 견해에 따를 것.
- ③ 월급자의 연장근로수당, 병무 소집자의 수당 지급 및 신규 채용자와 구 종업원 간의 차별 대우 금지에 대하여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분 고려할 것.



고려석면 노조 파업(『경향신문』 1963년 6월 13일)

이와 같은 조정안에 대하여 노사 쌍방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쟁의는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노동조합은 1963년 6월 13일 9시 30분을 기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회사 측의 반성을 촉구하였다.

- ① 밥은 못 먹어도 죽이라도 먹게 해 달라.
- ② 하루 품삯 31원이 웬말이나, 사장 담배 한 갑 값도 안 된다.
- ③ 배고파 일 못 하겠다, 우리 품삯 올려라.

고려석면 노조의 파업으로 중재에 나선 경기도노동위원회는 1963년 6월 22일 다음과 같은 중재판정을 내렸다.

- ① 회사는 1963년 5월 23일 현재 전 종업원 156명의 월 기본급에 대하여 1963년 6월 26일을 기하여 7만 5,000원을 인상 실시할 것.
- ② 병무소집자에 대하여는 소집기간 중 기본 임금의 60%를 지급할 것.
- ③ 퇴직금의 산출 기산일자에 대하여는 보사부장관의 견해에 따를 것.
- ④ 월급자의 연장수당 지급, 상여금제도의 개선, 신규 채용자와 구 종업원 간의 차별 대우 금지 등에 대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안양근로자회관 제공)

하여 회사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분 이를 고려할 것.

⑤ 본 판정은 196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노사 양측이 중재판정을 수락하여 1963년 쟁의는 종결되었지만, 이 판정으로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석면 노조는 1965년 4월 1일, 95명의 조합원 중 84명이 모인 자리에서 “폭리를 보고 있는 회사 측은 현행 임금의 100%를 인상하라.”는 요구조건과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는 쟁의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어 4월 3일로 경기도노동위원회에 신고된 이 쟁의는 4월 7일 적법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때부터 법정 냉각기간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정 냉각기간 중 경기도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공원 20원, 임시공 16원의 인상 조정안은 노사 쌍방에 의해 거부되었다. 원래 이 쟁의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1962년부터 요청해 온 단체협약의 심의를 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거부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서 1965년 4월 26일 법정 냉각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다음 날인 4월 27일 노동자들은 일제히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맞서서 회사 측에서는 파업이 시작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28일 상오에 직장을 폐쇄하였고 파업에 대한 보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 노동자(안양근로자회관 제공)

복조치로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였다.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이러한 조치에 격분하여 노조 사무실 간판을 거꾸로 걸고 그 위에 조기를 내건 채 체불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장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여성노동자 4명이 졸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화학노조에서는 고려석면 노조지부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화학노조 조합원 1만 5,000명으로부터 1인당 50원씩의 쟁의성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였다. 이같이 파업과 직장 폐쇄로 긴장이 조성된 와중에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산별 노조 차원의 지원대책을 모색하자 회사 측에서는 회사의 연명을 위하여 물품반출을 기도했고 이를 조합원들이 저지하자 업무방해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 당국이 조합의 물품반출 저지를 준폭력행위로 단정하고 입건수사를 지시하자 화학노조에서는 노동청장에게 쟁의 중 물품 반출행위의 적법 여부를 문



1965년 고려석면 쟁의 중 폐업(『경향신문』 1965년 5월 5일)



1969년 3월 14일 남북진 경기도지사 금성전선 안양공장 시찰(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의하였다. 노동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물품반출 저지는 가능한 것이며 부분파업에 대하여 전 직장을 폐쇄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했다. 화학노조 본부에서는 1965년 5월 12일 고려석면 노조지부의 투쟁을 지원하는 성명을 다시 발표했고 또한 각 노조 지부의 정성 어린 성원과 경인지구 지부 간부들의 잇따른 현지 방문과 격려가 이어지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노조는 고려석면 안양공장 사장 박응철을 근로기준법 제6조와 제42조, 제56조 위반으로 경기도 근로감독관실에 고발하였다. 고발의 내용은 조합원에 대한 폭행한 사실, 근로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강제한 점, 야간작업에 연소자와 부녀를 근로시킬 수 없음에도 위법한 강제노동을 강요한 점이였다. 5월 19일 근로감독관실은 고려석면 사장을 정식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했고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파업이 시작된 후 25일째에 접어들자 화학노조 본부는 5월 21일 다시 지원의뢰 성명을 발표했고 각급 노조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성금·식빵·쌀·국수 등을 보내 왔다. 점점 궁지에 몰린 회사 측은 5월 25일 경기도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파업 30일 만에 이 쟁의는 종결되었다.<sup>17</sup>



1969년 금성전선 안양공장 노동자(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 4) 금성전선 노조 결성

1966년 3월부터 시험 생산이 본격화된 금성전선은 보조작업 임시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술직 간부들은 대한, 국제, 광화, 대원 등 타 경쟁 업체에서 영입된 경력사원들이 많았는데, 이들 중에는 노동조합 경험이 있는 인물들도 있었다. 이러한 기능직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노조 결성 시도는 회사 측의 방해 공작에 의해 곧 좌절되었다. 회사는 자율적인 노조 결성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가 기업의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비록 국가가 통제된 형태의 노조 결성을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자율성을 가진 조직이 생겨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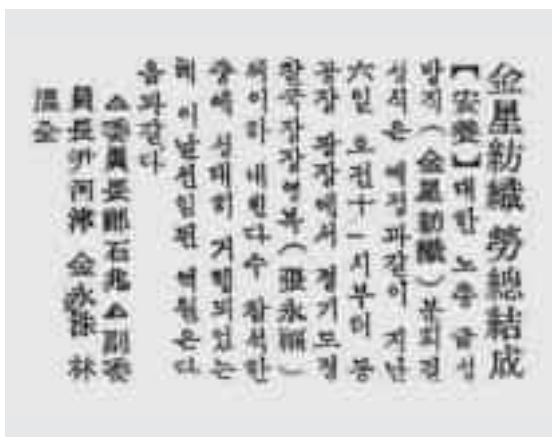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노조 결성 시도를 봉쇄한 회사 측은, 어차피 노조 결성이 대세

라는 판단하에 방향을 전환하였다. 김용승 공장장과 금성사지부 최종규 지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노사 화합’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였다. 1967년 4월 21일 여명구 외 15명의 노조 결성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고, 금성사 최종규 지부장으로 부터 여명구, 오희택, 김희석 등 3명이 노조 조직에 대한 위촉을 받았다.

이후 1967년 4월 25일 발기인 재적 16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성사지부 안양분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약 20일 후인 5월 12일에는 결성대회를 갖고 여명구가 초대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결성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10명 중 8명이 참여했으며, 전국금속노조위원장, 김용승 공장장, 최종규 금성사 지부장, 사무장 외에 정보계 직원 1명과 방첩대 직원 1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회사 주도로 노조가 설립되었지만, 국가 정보기관이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감시하고 통제했음을 명백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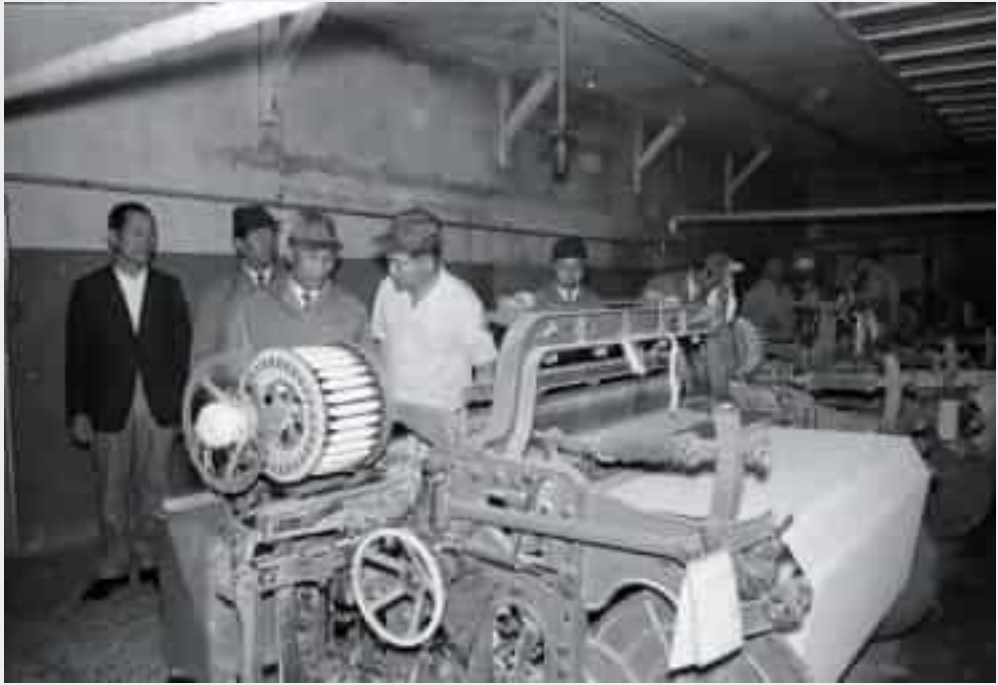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여명구 분회장이 안양 지역 내 6개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임금 인상, 노사 협의 시 자료 교환 등을 위해 ‘안양읍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다.<sup>18</sup> 이 협의회는 훗날 한국노총 안양시협의회의 전신이 되었다. 비록 회사와 국가의 통제하에 결성된 노조였지만, 그 안에서도 노동자 대표가 지역 내 다른 노조들과 연대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통제된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요구와 연대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5) 1969년 면방총파업 :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의 총파업



금성방직 노조 결성(『경향신문』 1949년 4월 13일)

안양은 일제강점기부터 방직공장이 설립되었고, 해방 후에 설립된 금성방직, 제일방직 등 노동집약적 대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해방 후 안양 단위 사업장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노조는 1949년 4월 6일에 결성된 대한노총 금성방직 분회였다. 이날 결성식에서 선임된 임원은 위원장 정석조, 부위원장 윤하진·김



1969년 7월 남봉진 경기도지사 금성방직 안양공장 시찰(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69년 금성방직 노동자(안양시청 제공)



1969년 금성방직 작업장 풍경(안양시청 제공)

영수·임은전이였다.<sup>19</sup>

한편 1969년 5월 26일, 섬유노조는 16개 면방회사에 '먹고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며 본공 임금을 일당 253원에서 325원으로, 양성공은 125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당시 노동자들의 생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섬유노조는 대한방직협회(방협)와 중앙 교섭에 나섰고, 교섭은 6월 30일부터 방협 회의실과 호텔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방협은 금융 비용 부담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간을 끌며 교섭에 진전이 없었다. 이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저항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이었다.



1969년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의 총파업(『조선일보』, 1969년 9월 13일)

교섭이 난항을 겪자, 섬유노조는 7월 1일 노동쟁의 발생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7월 20일에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투표에는 2만 3,406명이 참가하여 2만 3,244명(99.3%)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쟁의 행위를 결의하였다. 이처럼 높은 찬성률은 당시 면방업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광범위한 불만을 나타낸다. 방협은 법률적 판단에 의존하여 파업을 막으려 했지만, 법원에서도 방협의 문제 제기를 기각하여 파업 저지 계획은 무산되었다.

8월 23일 섬유노조는 행정관청에 쟁의 발생 신고를 내고,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영등포, 인천, 안양, 대구, 광주, 천안, 대전, 수원 등 전국 9개 도시에 산재한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교섭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노동자들을 독려했다. 8월 28일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 휴식시간 이행'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돌입하여 사용자 측을 압박하였다.

파업은 9월 9일 오후 2시, 섬유노조 위원장



1969년 9월 9일 태평방직과 금성방직 노조 파업(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6쪽)

(이춘선)의 소속 사업장인 서울 방림방직과 안양의 태평방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파업은 식당, 전기, 보일러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작업을 중단하는 시한부 2시간 파업이었다. 이는 전면파업으로 가기 전 사용자 측에 경고를 보내는 전략적인 조치였다.

당초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었던 금성방직지부에서는 안용완 지부장이 파업 돌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노조 내부의 갈등이나 회사 측의 압력, 지역 노조 간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했을 수 있다. 이에 섬유노조는 9월 10일 중앙위원회와 쟁의대책위원회를 현지에서 소집하고, 금성방직 지부장 안용완과 부지부장 김용배를 무기정권에 처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다음 날인 9월 11일, 섬유노조 간부들과 금성방직 조합원 400여 명은 회사 정문 밖에서 농성을 벌이며 파업 참가를 호소하는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 9월 12일 정오에는 회사 정문을 열고 회사 운동장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에 금성방직의 전 노동자들이 공장을 뛰쳐나와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마침내 전면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중앙노조의 강력한 지도력과 현장 노동자들의 연대 의지가 결합하여 내부의 저항을 극복하고 파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한 사례이다.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은 즉각적인 직장폐쇄로 맞섰다. 방림방직, 태평방직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금성방직에서도 작업장 출입을 봉쇄하였다. 이후 방협은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업장에도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자신들의 임금 인상을 수락하라고 압박하였다. 이는 사용자 측이 파업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굴복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조직적인 대응이었다.

사태가 전면 대립 양상으로 발전하자, 중앙정보부가 조정에 나섰다. 9월 17일 대한방직협회장 김용주와 전국섬유노조 위원장 이춘선은 협정서에 조인하였다. 협정 내용은 ① 일당 302원 선으로 인상하며, ② 실시 일자는 8월 1일로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협정서에 중앙정보부 김성락이 입회로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이다.<sup>20</sup>

이처럼 1969년 면방 최초의 전국적 노동쟁의는 중앙정보부의 직접적인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당시 군사정권이 대규모 노동쟁의를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및 경제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인여 준다. 중앙정보부의 개입은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동시에, 국가가 최종적인 조정자로서 노동관계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비록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라는 일부 성과를 얻었지만, 이는 국가의 개입과 통제로 이루어진 제한적인 승리였다는 점에서 당시 노동운동의 한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60년대 안양의 노동운동은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은 국가 정보기관의 감시와 통제에 놓였고, 주요 간부들은 정부의 입김 아래 선출되거나 길러졌다. 이는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노동쟁의는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대규모 파업은 결국 중앙정보부의 개입으로 종결되는 등 노동운동의 자율적인 협상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표가 우선시되는 구조였다.

그렇지만 1960년대 안양의 노동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열악한 노동환

경과 임금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표출되었고, 이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도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1969년 면방총파업의 압도적인 찬성률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연대 의지를 대변한다. 둘째, 비록 국가의 통제에 있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틀이 존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달하는 최소한의 통로가 되었다. 안양읍협의회 결성 시도에서 보듯이, 통제된 노조 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제한적이거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노력하였다. 셋째, 대규모 노동쟁의가 결국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점은, 노동 문제가 단순한 노사관계를 넘어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한국 노동운동이 국가 권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1960년대 안양의 노동운동은 군사정권의 성장 지상주의 정책이 낳은 사회적 모순과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끈질기게 저항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려 했던 투쟁의 역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註

- 1 「공도안양의 기업, 16공장 모두 조업」, 『경향신문』 1949년 4월 21일.
- 2 안양시, 『안양시지』, 1992, 239쪽.
- 3 「공도안양재건부흥위원회를 결성」, 『조선일보』 1953년 7월 4일.
- 4 「안양공장시찰 이대통령」, 『조선일보』 1956년 10월 18일.
- 5 안영숙, 「안양공업지역의 현황」, 『녹우연구논집』 10, 이화여대 사범대 사회생활과, 1968, 121쪽.
- 6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72.
- 7 황병주, 「공업화 과정과 안양」, 『안양시사 : 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298~299쪽.
- 8 「방직공장 복구 순조, 금성방직 조업 단계」, 『조선일보』 1954년 4월 29일.
- 9 「금성-태평방직을 매각」, 『동아일보』 1967년 10월 11일.
- 10 「조선직물주식회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1 「총량 1천 27톤, 87년도 석면 수요량」, 『조선일보』 1954년 5월 15일.
- 12 「산업부흥상 현지보고 (원), 고려석면 편」, 『동아일보』 1956년 11월 27일.
- 13 「40만불로 제지공장 재건」, 『조선일보』 1953년 6월 19일.
- 1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2~44쪽.
- 15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화학노조 20년사』, 1987, 72쪽.
- 16 「임원단을 선출, 삼덕제지 노조」, 『동아일보』, 1959년 8월 12일.
- 17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화학노조 20년사』, 1987, 215~218쪽.
- 18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5쪽.
- 19 「금성방직 노총결성」, 『경향신문』 1949년 4월 13일.
- 2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5~47쪽.

## 제4장

# 1970년대 안양 공업지대의 확산과 산업화의 그늘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1. 1970년대 안양 공업지대의 확산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안양시는 섬유, 제지, 의약 등 제조업 위주의 공장 밀집지역으로 급성장하였다. 안양과 군포 지역은 '제2의 영등포'라고 불릴 정도로 공업 지대로 성장하였다. 1973년 안양의 시 승격은 공업 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공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안양의 공업 발전은 1970년대 내내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안양의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1960년에 3만 1,790명, 1970년에 9만 1,876명, 1972년에 10만 4,515명, 1977년에 16만 2,926명으로 17년 사이에 5.1배에 달하는 급증의 추세를 보였다.<sup>1</sup>

석유 파동의 충격 속에서도 안양의 공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제2차 석유 파동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의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공업 입주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 기업체의 성장 추이를 보면 기계·금속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업, 섬유업, 화학업 등이 급성장하였다. 연도별 기업체 입주 현황을 보면 1971년 64개이던 기업체가 1973년에는 129개로 2배가량 증가했고, 1975년에는 169개로 늘어났으며, 1977년에는 239개로 늘어났고, 1979년에는 369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1981년에는 안양 기업체수가 409개가 되었다.<sup>2</sup> 1971년 64개에서 1981년 409개로 10년 사이에 안양 기업체가 6.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 안양에 공장이 급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 서울의 공장 입주 억제정책으로 서울 인근인 안양으로 공장들이 대거 이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3</sup> 수도 서울의 공업기능 분산정책으로 서울에 인접한 안양이 교통이나 용

### 신안양리

동국실업(주), 동아제약(주),  
삼흥유지공업(주), 영등포화학공업사,  
영림상사, 유유산업(주),  
일신섬유공업사

### 박달리

대원식품, 대황지공(주),  
동국물산(주), 삼아알미늄(주),  
삼아제면공업사, 삼진팔프(주),  
삼협무역(주), 성신농약(주),  
중앙유리공업(주), 현대양행(주),  
효성농장(주)

### 호계리

경남제지(주), 금성전선(주),  
금성통신(주), 동양나이론(주),  
락희화학(주), 세광유지화학공업사,  
안양단미료사료공장, 영창가공지(주),  
월계유지공업사, 중앙제지(주),  
지구유지공업사, 창도제지공업사,  
한국파라핀

### 미상

삼성아세치렌공업(주)





### 비산리

대원기업사, 진양화학연구소

### 이동리 · 일동리

동일방직(주), 안양단푸라에이스,  
영림화학공업(주)

### 안양리

경용산업, 공화휠터공업,  
금성방직(주), 대륙석면고무공업(주),  
덕성화학공업, 동공업(주),  
동아공업(주), 문화제재소,  
미주산업사, 삼덕제지(주),  
삼양팔프(주), 삼영하드보드공업(주),  
삼진알미늄(주), 삼풍섬유공업(주),  
서울섬유공업(주), 수다전자산업(주),  
시흥군축산협동조합, 안양갈모공업사,  
오리온식품공업(주), 유림유지공업사,  
장안산업, 중앙금속공업,  
태평방직(주), 태흥무역(주),  
한국제지(주), 한만식품공업(주),  
헤인중기(주)



① 박달동 현대양행



②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③ 호계동 동양나이론



④ 호계동 금성전선





⑤ 석수동 동아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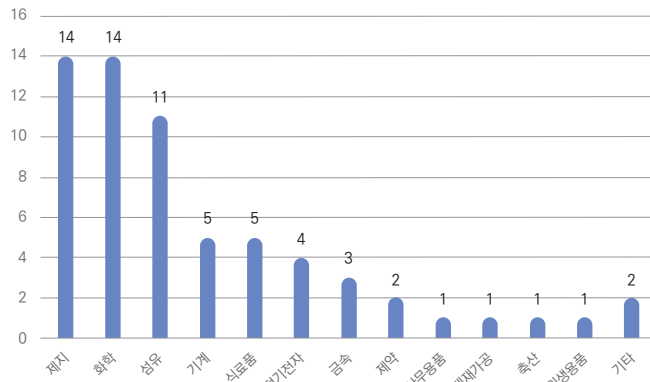
⑥ 안양동 동화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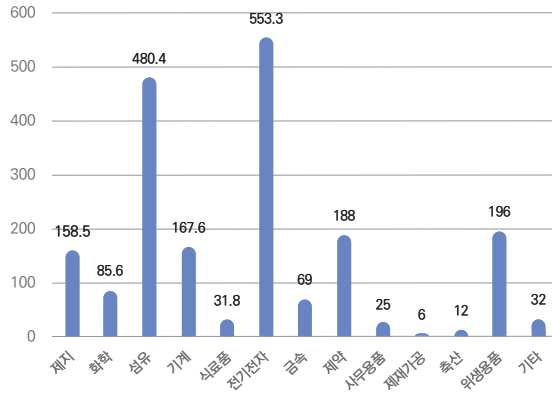
⑦ 호계동 락희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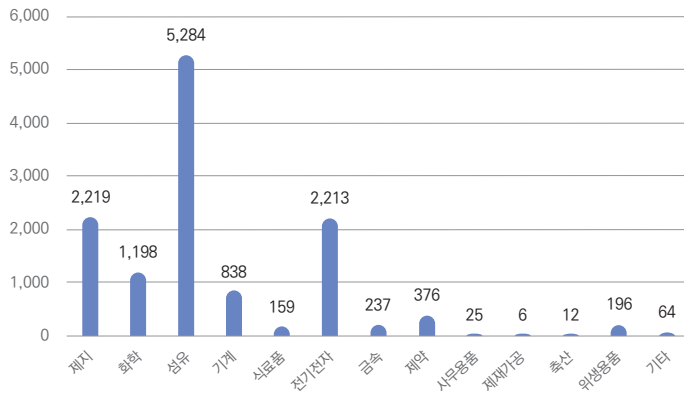
⑧ 호계동 금성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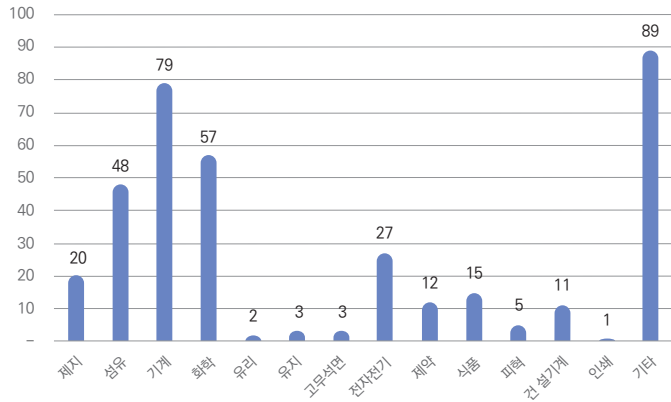
1971년 업종별 기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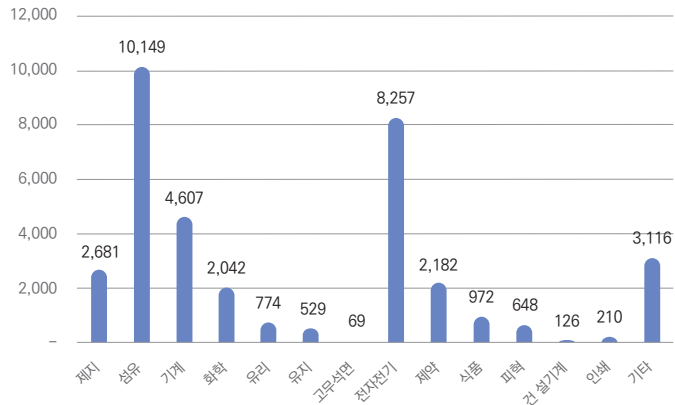
1971년 업종별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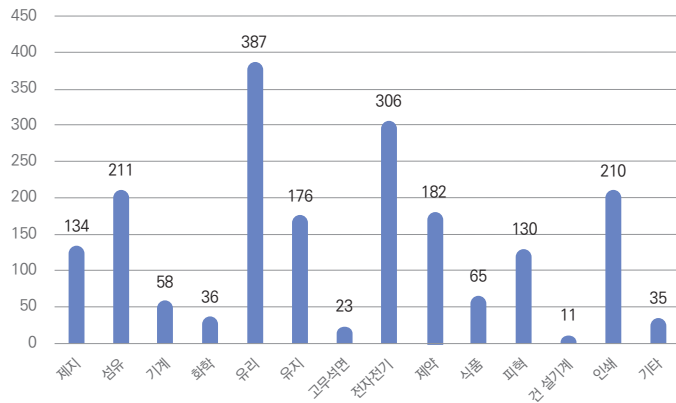
1971년 업종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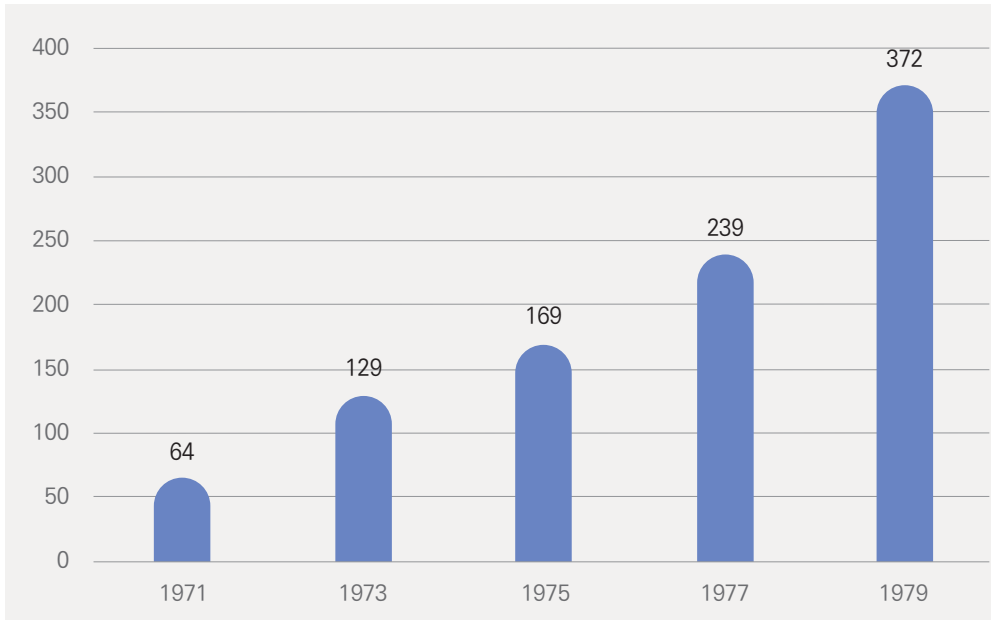
1979년 업종별 기업체수



1979년 업종별 종사자수



1979년 업종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1970년대 안양 기업체수의 증가

수 등 여러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안양으로 공장 설립이 몰렸다.

1970년대 안양의 공장 분포를 보면 안양7동과 호계동 그리고 박달동에 공장들이 밀집되었다. 1970년대 10년간 안양에서 창립된 기업이 가장 많은 동은 안양7동이 62개, 호계동이 47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박달동이 42개였다. 평촌동은 창립기업이 33개로 좀 적었지만 기업 규모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규모가 큰 기업을 보면 호계동의 동양나일론, 평촌동의 동일방직, 동양섬유, 안양1동의 대농, 안양2동의 삼풍, 안양7동의 태흥무역 등이 있었다. 1960년대 말까지는 안양1동과 안양2동이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 식료품과 제약업은 서울과 근접한 지역인 석수1동과 석수2동에, 유리공업은 박달동에, 섬유공업은 평촌동에, 전기·전자공업과 화학공업은 호계동에 각각 치중된 상황이었다.

1970년대 안양에 공장을 신설한 대기업으로는 금성통신을 들 수 있다. 당시 국내 최대의 통신기 메이커인 금성사는 1970년 11월 18일 서독 지멘스 회사와 일본의 후지전기(富士電機)회사와 3사 공동으로 자본금 12억 원의 통신기 범용전기기기 합작공장 건설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으로 금성사는 3사 합작공장을 안양에 신설하고 부산에 있는 전기통신기 제작시설을 안양공장으로 옮겨 1971년 3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구상을 갖



1974년 공업용지(박달동) 조성사업 결정도(안양시청 제공)



1974년 관양동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부지(안양시청 제공)



1975년 평촌동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부지(안양시청 제공)

고 있었다.<sup>4</sup> 금성통신은 총 8억 6,500만 원을 투자해 호계동에 부지 4만 3,000평, 건평 6,0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통신기 제작시설을 갖추었다. 초기 주력 생산제품은 자동전화교환기로 독일 지멘스사에서 제작한 주요 부품을 인수받아 국산화율 65%로 완제품 교환기를 제작하였다. 이후에는 기술개발을 통해 전자식키 전화기, 이동식 자동교환기, 캐비닛형 사설구내교환기 등 신제품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금성통신 안양공장의 가





1973년 호계동 금성통신 안양공장 전경(경기도청 제공)



1973년 금성통신 안양공장 내부(경기도청 제공)



1973년 금성통신 안양공장 노동자(경기도청 제공)



1978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국가기록원 제공)

동 해인 1971년 당시 생산목표액은 45억 원이었고, 수출목표액은 100만 달러였다.<sup>5</sup> 1975년에는 총 150억 8,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 수출액은 560만 달러였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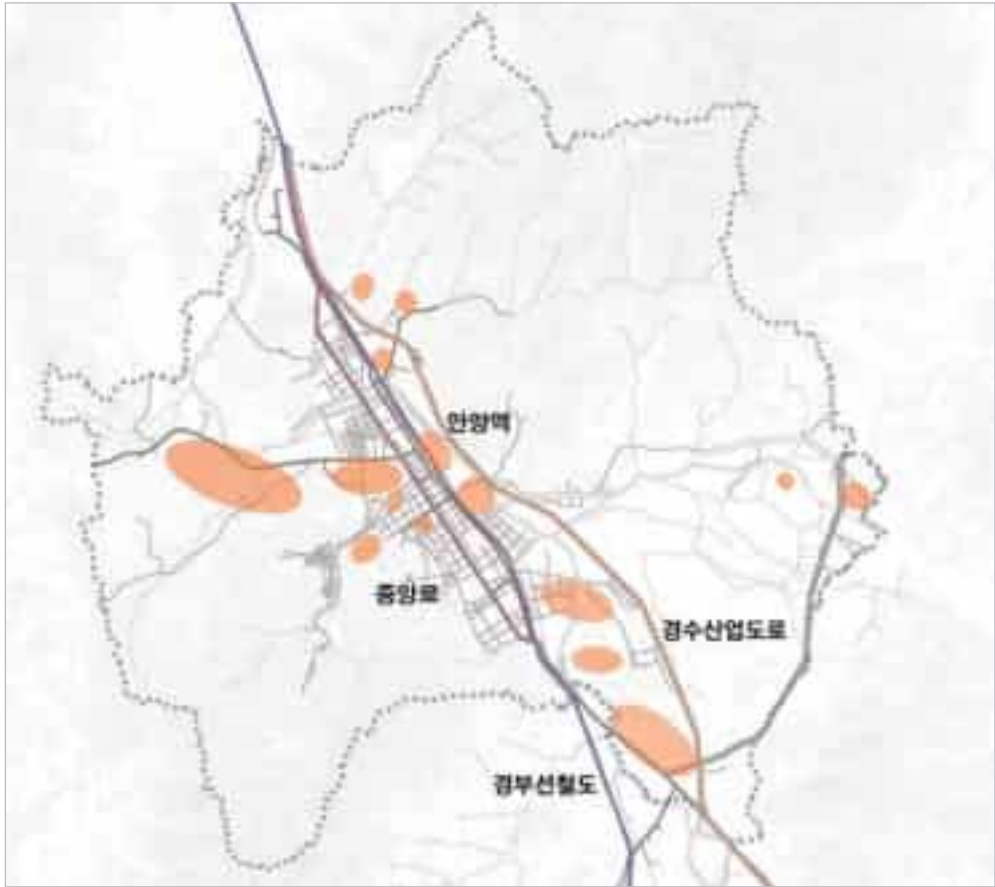
또한 1970년대 안양에는 금성통신훈련소가 있었는데, 이 훈련소는 기능공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sup>7</sup> 금성통신 소속 기능공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곤 했는데, 1971년 스페인에서 열린 제2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성통신 소속의 김치현이 기계조립 분야에서 금메달을, 엄광주는 정밀기계제작 분야에서 대회장 특상을 수상하였다. 1973년 서독 뮌헨에서 열린

제21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성통신

소속 기능공 정재근은 기계조립 부문에서 금메달을, 박수명은 정밀기계제작 부문에서 대회장 특상을 수상하였다.<sup>8</sup> 1975년 제22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성통신 소속 기능공 김영상은 기계제도 분야로 대회장 특상을 차지하였다.<sup>9</sup> 1977년 제23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성통신 소속 기능공 이흥우는 기계제도 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다.<sup>10</sup> 1978년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유영호가 기계제도 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다.<sup>11</sup> 1979년 제2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는 정밀기계제작 김종원이 금메달을 수상하였다.<sup>12</sup> 금성통신은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공원(工員)에서 사원(社員)으로 특진 발령하는 인사정책을 펴기도 했다.<sup>13</sup>

한편 종업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1971년 1만 2,975명에서 1976년에는 2만 6,914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1979년에는 3만 7,069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경제불황으로 말미암아 1981년에는 3만 4,308명으로 약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노동력의 감소 경향에 설비 자동화 등이 기인한 바도 컸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한편, 안양 공업의 특징은 수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가



1970년대 중반 안양의 공업지대

급속한 수출 증대를 통해 19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안양도 이러한 흐름에 조응하여 1973년부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였고, 연평균 성장률은 11.9%에 달하였다. 1973년 29개였던 수출업체수는 1977년에 34개, 1983년에 53개로 증가하였다. 수출실적은 1975년과 1982년, 1990년에만 감소 추세를 보였고 나머지 연도에는 지속적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1976년과 1978년에는 50%의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금액별로 보면, 1973년에 8,984만 6,000달러로 시작해 1978년에는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81년에는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출상품의 구성도 1970년대에는 주로 경공업 제품인 섬유제품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중화학 공업 제품이 증가하기 시작해 화학,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제품의 비율이 증가하는 대신 섬유류 제품의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평촌동 통일방직



1970년대 관양동 대한전선



1970년대 안양동 동화약품



1970년대 박달공업지대

1970년대 말 안양 소재 37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판매가 50% 이상인 기업이 17개사로 전체 응답사의 46%를 점하고 있고, 30% 이상 50% 미만인 기업이 8개사이다. 이것은 소비지 입지적인 기업이 68%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대기업보다는 인근 지역을 판매 대상 지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1976년경부터는 종업원수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현상이 원인이었다.

또한 서울과의 인접성은 안양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확충에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보인다. 1976년 기준으로 안양의 공업집적도(Degree of Industrial Agglomeration)를 보면, 먼저 공업의 대인구 집적도에서 안양시는 전국 173개 시군 중 울산(12.34), 수원(7.27), 포항(6.34)에 이어 4위(4.7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 안양의 공업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 줌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및 상업적 서비스 부문이 미흡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sup>15</sup>

## 2. 1960~1970년대 안양의 산업재해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했는데, 안양도 예외가 아니었다. 1964년 3월 5일 안양 인근에 있는 한국탄약공업사 공장에서 화약 분해작업 중 탄약저장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폭발로 사고지점에서 500미터가량 떨어진 안양교도소의 수감자와 간수 등 71명이 날아온 고철 파편 등에 맞고 중경상을 입었다.<sup>16</sup>

1966년 1월 31일에는 안양의 삼영하드보드 안양공장에서 시운전하던 증자기(蒸餾機)가 부주의로 폭발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1973년 6월 26일에는 안양읍 석수동 소재 일신섬유공업사 안양공장에서 불이 나 300평 공장 건물 1동과 수입원사 기계시설 등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점심시간으로 직원들이 식당으로 나가 인명피해는 없었다.<sup>17</sup> 1977년 3월 19일에는 태흥산업 안양공장 염료가공실 반응조 탱크가 폭발해 노동자 이종서 등 19명과 서진산업 노동자 3명 등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sup>18</sup>



한국탄약공업사 공장 탄약저장고 폭발 사고(『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안양과 시흥 등지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각종 사업장들이 안전관리시설도 매우 허술한데다가 작업을 시키면서도 산재보험에 들지 않고 있어 종업원들이 작업 중 공상을 입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안양과 시흥 등지에는 약 3백 개의 크고 작은 각종 생산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가 허술한 작업환경 속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규모가 적은 S공장 등 1백여 개에 이르고 있다.〈「근로자들 피해보상길 아득, 백여 사업장 산재 가입 안 해」, 『경기신문』 1975년 8월 11일〉

안양 지역 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는 상당히 허술하였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험의 사각지대로 재해 발생 시 법정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작업 도중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삼양펠프 안양공장과 인접한 미군부대 내 폭발물(1968년, 마살로프 제공)



0M 0U 0H 0I 0J 0K 0L 0M 0N 0O 0P 0Q 0R 0S 0T 0U 0V 0W 0X 0Y 0Z

4

4

EXPLOSIVE  
폭발물  
NO SMOKING  
STAY 50 FT  
DO NOT ENTER

# 安養三榮하드보드工場서 蒸煮機爆發

## 4名即死·4名重輕傷

【安養 崔學漢·李光石 特派員·朴有善 駐在特派員】 31일 밤 11시 30분 안양의 삼영하드보드工場에서 蒸煮機가 폭발하여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左)「동아일보」의 崔學漢, 李光石, 朴有善(右) 駐在特派員, 朴有善(右) 駐在特派員, 朴有善(右) 駐在特派員.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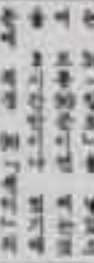
▲(左) 朴有善 ▲(右) 朴有善



▲(左) 朴有善 ▲(右) 朴有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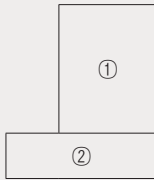
▲(左) 朴有善 ▲(右) 朴有善



▲(左) 朴有善 ▲(右) 朴有善

사망한 4명은 「동아일보」의 崔學漢(31), 「동아일보」의 李光石(31), 「동아일보」의 朴有善(31), 「동아일보」의 朴有善(31)이다. 중경상을 입은 4명은 「동아일보」의 朴有善(31), 「동아일보」의 朴有善(31), 「동아일보」의 朴有善(31), 「동아일보」의 朴有善(31)이다.

삼영하드보드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들(『동아일보』 1966년 1월 31일)



- ① 안양일신섬유공업사 화재사건  
(『경향신문』 1973년 6월 27일)
- ② 태흥산업 폭발사건(『조선일보』  
1977년 3월 20일)



### 3. 1970년대 안양의 공업화와 환경오염

안양 공업의 급속한 성장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였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후반부터 안양에서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안양 일원에 공장이 급격히 늘어난 1967년부터 공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1970년에는 안양천을 흐르는 물이 공장의 독성폐수로 오염되는 현상이 심각해졌다.

농업지대와 공업지대가 혼재되어 있던 지역적 특성으로 농민들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당하였다. 1970년 4월 21일 시흥군 서면 일직리 김종완 등 안양천 주변 몽리 농민 대표 12명은 안양 일대의 각 공장에서 버린 폐수의 농도가 짙어져 파종한 못자리가 발아도 하기 전에 썩어 버리는 등 1,200만 평의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고 각 공장과 관계기관에 몰려가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다. 안양천 하류의 유목정보(낙차공)에서 하천수를 끌어들이며 경작하고 있는 이들은 1,000여만 평에 심을 4,000평의 못자리 뽕씨가 짙은 농도의 독성폐수 때문에 발아와 활착을 못해 썩어 버렸고 나머지 파종해야 할 못자리 7만 평도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농민들의 항의로 안양의 일부 공장에서는 발동기를 동원해 지하수를 퍼 올려 못자리에 대주고, 군 당국은 긴급 비상대책으로 양수기를 동원하는 등 노력했으나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sup>19</sup>

1973년 4월 25일에는 안양읍 북부동과 박달리 일대 1,000여 주민들이 인근 대농 동공장(태평방직)에서 마을 한복판 개천으로 흘러내리는 폐수로 우물물이 오염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고 심한 악취 때문에 방문도 열 수 없다고 시흥군에 시정을 호소하였다. 안양읍 북부동에 사는 주부는 “시커먼 기름과 함께 흐르는 인분 폐수가 우물물에 스며들어 수돗물을 사다 마시는 형편이며 악취가 온 마을을 덮어 방문을 열 수 없다.”고 했다. 박달리에 사는 신진성은 작년 여름 아들이 개천에서 놀다가 피부병에 걸려 고생한 일이 있다며 다른 전염병이 번질까 두렵다고 말하였다.<sup>20</sup>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안양, 영등포를 관류하는 안양천은 안양공단과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영등포 일대의 공장폐수와 도시하수를 받아들이면서 한강으로 들어간다. 안양천 하류에서부터 안양공단까지에 이르는 안양천 본 지류는 1천 5백여 개의 각종 공장에서 마구 쏟아내는 폐수와 도시하수, 오물 등으로 물고기는 물론 수초마저 자라지 못하고 있다. 천변에는 내다버린 쓰레기와 오물투성이로 악취가 심하다. 안양공단의 경우 호계동 일대의 공장지대는 생선 썩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이곳을 흐르는



태평방직 폐수 방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읍민들의 사정을 보도한 기사(『조선일보』 1973년 4월 27일)

개천은 대양제지, 대한판지, 경원제지 등 10여 개의 제지공장과 국제전선, 유한김벌리 등 각종 공장에  
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로 마치 검은 원유를 부은 듯 검게 물들어 악취를 뿜고 있었다.

안양공단에서 구로공단을 거쳐 오류동, 신정동, 목동에 이르는 안양천은 여러 지류에서 흘러드는 이같은  
폐수를 받아들여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죽어가는 한강, 시꺼먼 오염 물줄기 3km〉, 『동아일보』 1975년 6월 30일



안양 하천을 오염시키는 공장들(동아일보, 1975년 9월 18일)

안양의 공업지대에서 나오는 폐수는 안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안양천은 안양 공단,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영등포 일대의 공장폐수와 도시의 하수를 그대로 받아들여 오염이 심각하였다. 안양천은 한강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신생 안양시의 중심가를 흐르고 있는 안양천 변에는 크고 작은 1백여 개의 각종 공해업체가 자리 잡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거의가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한편 폐수도 많이 배출하는 제지업체들로 하루 폐수의 배출량은 무려 2만여 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공해업체 가운데 특히 K제지공장 등 많은 공해업체가 공해방지법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운영비 지출의 과다를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폐수를 그대로 인접 개천이나 안양천에 버려 흘러내린 각종 폐수와 오물은 안양천 중·하류 지점에 고여 여름철과 함께 썩어 악취를 풍기는 등 비위생지대로 변해 요즈음 뇌염경보가 내려진 이때 뇌염과 이 밖에 수인성 전염병 등을 유발시키는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

〈비위생지대 안양천변〉, 『경기신문』 1975년 8월 26일

공해방지법은 이미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제정 당시의 공해방지법에는 특별유해물질의 배출에 대한 공해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1971년 개정 이후 공해방지법에는 조업정지 명령에 더해 개선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의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명령 위반 시 취소할 수 있도록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만 해 놓고 운영비 지출 과다 등의 이유로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안양천에 방류하곤 했다.

1977년 무렵 안양천과 그 지류에 자리 잡고 있던 안양과 시흥의 공해공장은 200여 개였고, 이들은 폐수정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관리 당국의 눈을 피해 하루 20여만 톤씩의 폐수를 안양천에 버리고 있었다. 당시 연세대학교 공해문제연구소가 조사한 안양천 오염도 조사 보고에 따르면 안양천에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1CC당 3,000마리에서 4억 마리가 넘게 들어있었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도 200ppm이 넘고 오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21</sup>

1977년 여름 안양은 큰 수해를 입었는데, 폭우로 침수된 지역 주민들은 폐수로 오염된 안양천 물이 몸에 닿아 피부병을 앓았다. 1977년 7월 19일 대한약사회 새마을위원



1977년 안양천 수해 현장(경기도청 제공)

회는 안양1동에서 700여 명의 수재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었는데, 그중 300여 명이 접촉성 피부병 환자였다.<sup>22</sup>

註

- 1 한홍렬, 「안양시 공업지역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지리』 제2호, 1981, 47쪽.
- 2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261쪽.
- 3 「안양의 근대화와 노동자·노동운동: 한무리교회를 중심으로」, 『만안의 기억』, 안양문화원, 2012, 126쪽.
- 4 「금성, 독·일사와 합작」, 『매일경제신문』 1970년 11월 18일.
- 5 「사명도 개칭, 금성통신전기 주총」, 『매일경제신문』 1971년 7월 8일.
- 6 「금성통신 총 150억 매출」, 『매일경제신문』 1976년 3월 22일.
- 7 「기능공이 되려면 (19) 금형공」, 『동아일보』 1974년 8월 27일.
- 8 「서독 원천 제21회 국제기능올림픽서 한국, 종합순위 2위」, 『매일경제신문』 1973년 8월 13일.
- 9 「세계에 떨친 한국의 숨씨」, 『매일경제신문』 1975년 9월 22일.
- 10 「23회 국제올림픽 기능한국 제패」, 『경향신문』 1977년 7월 11일.
- 11 「한국, 기능올림픽 2연패, 사상 처음 전종목 입상」, 『경향신문』 1978년 9월 11일.
- 12 「에이레대회서 한국, 국제기능올림픽 3연패」, 『매일경제신문』 1979년 9월 15일.
- 13 「기능올림픽 입상자 사원으로 특진, 금성사·금성통신」, 『매일경제신문』 1975년 9월 27일.
- 14 황병주, 「안양의 공업화와 노동자들의 삶」, 『안양근대사 산책』, 안양문화원, 2017, 143~144쪽.
- 15 황병주, 「공업화 과정과 안양」, 『안양시사 : 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307쪽.
- 16 「탄약분해공장 폭발, 어제 하오 안양 부근」,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 17 「일신섬유, 수입원사 등 태워, 안양공장에 큰 불」, 『경향신문』 1973년 6월 27일.
- 18 「염료공장 탱크 폭발, 공원 22명 중화상」, 『동아일보』 1977년 3월 21일.
- 19 「안양서도 대책호소, 공장폐수로 못자리 썩어」, 『조선일보』 1970년 4월 23일.
- 20 「우물에 공장폐수, 안양 천연 주민 식수난, “악취 … 방문도 못 열어”」, 『조선일보』 1973년 4월 27일.
- 21 「(안양) 말뿐인 폐수정화시설」, 『동아일보』 1977년 5월 23일.
- 22 「안양지방, 수재지에 피부병, 폐수탕? … 심한 가려움증」, 『동아일보』 1977년 7월 20일.

## 제5장

# 1960~1970년대 안양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노동자 문화

---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1. 1960년대 말 안양 노동자 실태

1968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김영숙 외 15명이 안양읍 내 4개 리 222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안양읍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실태’라는 항목이 있어 주목된다. 당시 안양의 공장은 방직업 등이 대규모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1968년 당시 금성방직의 경우 전체 노동자 3,400명 중 여성 노동자가 2,892명이며, 태평방직의 경우 1,380명의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가 1,104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출신 지역으로는 안양이 20%로 1위였으며, 나머지 80%는 경기도, 서울, 충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순으로 대부분 만 18~20세의 미혼 여성이다. 일반사무원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서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안양으로 발령받은 경우였으며, 이들은 주로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공장노동자는 모 집 공고나 추천인의 추천으로 선발되었다. 노동자들의 교육 정도는 고졸이 15% 정도이며, 중졸이 가장 많았고, 국민학교 졸업자도 많았다. 공장 측에서는 중졸 정도의 교육받은 사람을 원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이직이 심한 관계로 인력 충당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학교 졸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성방직, 태평방직, 한국특수제지, 삼영하드보드 등 조사된 모든 공장은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였으며, 24시간 3부 교대로 운영하였다고 했다. 태평방직의 경우는 오전 6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22시까지 22시부터 6시까지이며, 한국특수제지의 경우 7시 30분에서 15시 30분까지, 15시 30분에서 23시 30분까지, 23시 30분에서 다음 날 7시 30분까지로 약간의 배당시간의 차이뿐 3부 교대 8시간 노동제를 지키고 있다고 했





안양 노동자들의 출근길(1968년, 마샬로프 제공)





안양4동 장내동성당과 노동자 거주지(1968년, 미살로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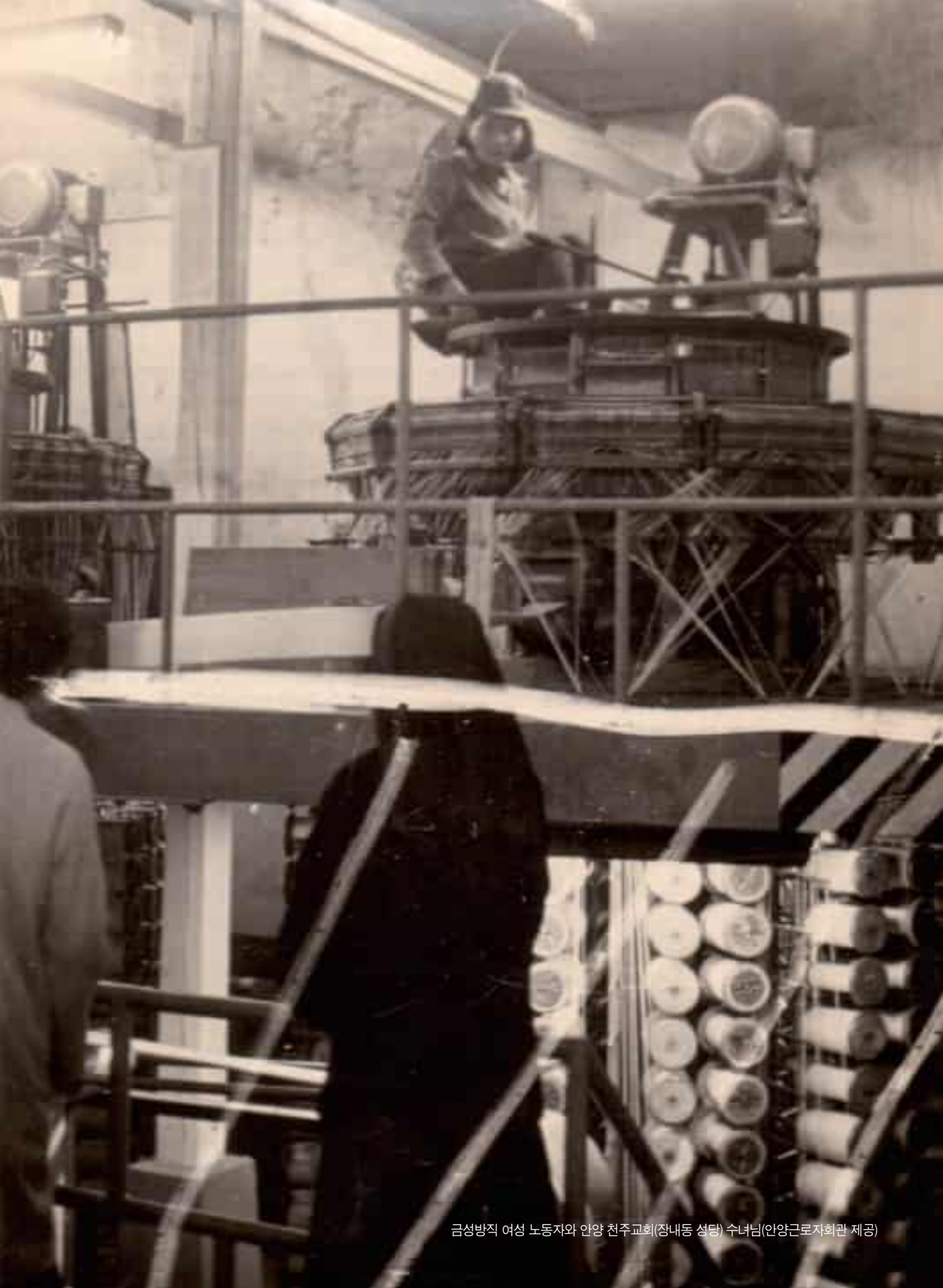
다. 그러나 8시간 노동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이 조사 내용은 8시간 3교대로 24시간 내내 공장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실제 노동시간과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당시 잔업 근무와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 등으로 대부분의 공장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교육 정도에 따라, 남녀에 따라, 근무 연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국민학교 졸업자가 일당 125원인 데 비하여 중졸 학력자의 일당은 150원 정도가 되고 했다. 남성 노동자는 여성 노동자보다 2.5배가량 임금을 더 받았고, 정기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였다. 야근 시에는 일당의 5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은 일당 253원이며 공장 측에서 점심을 제공하였다. 삼영하드보드의 경우 일당 315원에 점심값을 공장 측과 노동자 측이 반반 부담하고 있었다고 한다.

1968년 당시 안양에 설립된 공장에서 문제가 되던 현안은 여성 노동자 기숙사 부족 문제였다. 수천 명에 달하는 많은 여성 노동자 중에서 약 80%가 타지에서 올라와 2~3명씩 짝을 지어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공장 초기에는 여성 노동자의 숫자도 적고 공장의 규모도 작아 기숙사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에게 제공했으나, 여성 노동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의 생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동이 많아지는 등 관리가 어려워지자 공장들이 기숙사를 폐쇄하곤 했다. 당시 금성방직은 기숙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고, 한국특수제지 안양공장은 기숙사가 있으나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는 따로 생활하고 있었고, 여성 노동자 100명에 반장 1명씩을 배치하여 반장이 멘토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금성방직 여성 노동자 A양은 평택에서 이종사촌 언니의 소개로 취업하게 된 19세 여성이었다. 금성방직에 들어온 지 11개월이 된 A양의 월급은 7,500원 정도이며 혼자 하숙 생활하고 있었다. 월급 7,500원에서 하숙비 3,000원을 제하고 2,000원 정도 저축을 하며, 나머지 2,500원 중에서 타자학원에 다니고 약간의 잡비로 사용하며 생활비 지출을 하고 있었다. A양의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였고, 외지에서 안양에 온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조사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정서와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공장 측에서도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히 안양의 교회들이 이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1968년 당시 안양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12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한다. 안양 천주교회 신부와 안양감리교회 목사의 전언에 따르면, 신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객지 생활의 고독감에서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당시 안양 천주교회에서는 노동자 기숙사를 신축 중이었다. 이 노동자 기숙사



금성방직 여성 노동자와 안양 천주교회(정내동 성당) 수녀님(안양근로자회관 제공)



금성방직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수녀님(안양근로자회관 제공)

는 안양 시민이나 관의 협조 없이 오지리 부인회의 도움을 받아 여성 노동자들에게 기숙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 정서 생활, 윤리 생활을 지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었다.<sup>1</sup>

## 2. 공장 취업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지방 출신 여성 노동자들은 대체로 가난한 가정 상황으로 도시로 이주해서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촌향도를 한 여성들에게 공장노동은 특정한 기술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지방 출신 여성 노동자들의 공장 취업은 자기희생 정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자신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취업하거나 몸이 아픈 부모님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취업

하는 사례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였다.

1960~1970년대 경제 성장으로 공장이 늘어나면서 공장들은 구인난에 시달렸다. 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거의 다 공장에 채용되는 분위기였다. 이촌향도해서 식모로 지내다가 공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장의 경우 급여 등이 식모 생활보다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녀'로서 모멸당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공장이라고 이들 여성은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일을 해내는 만큼의 대접이 없는 곳이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이기도 했다. 원공인 숙련공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 양성공 혹은 견습공 생활을 해야 한다. 1970년 무렵 일당이 괜찮다는 곳이 150원, 형편없는 곳은 90원까지도 있었다고 한다.<sup>2</sup>

1974년 2월 11일 『동아일보』에는 방학 중에 공장에 취업한 여대생 한은숙의 노동 체험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은숙은 스웨터를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한다는 Y편물공장에 1974년 1월 1일에 취업하였다. 그는 공장에서 낮 작업시간 10시간과 밤 작업시간 3시간을 합해 13시간 근무를 했고, 일당 250원을 받았다. 근무시간 동안 휴식시간이라고는 낮 12시 반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의 점심시간과 오후 6시 40분부터 7시까지 20분 동안의 저녁시간뿐이었다. 이러한 공장의 시간규율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15~18세 전후였고,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노동 대가가 너무 값싸다는 사실을 알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노동자를 다룬 기사(『동아일보』 1970년 10월 23일)



1970년 금성방직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안양근로자회관 제공)



1970년 금성방직 작업환경(안양근로자회관 제공)



안양의 봉제공장(안양상공회의소 제공)

서도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으며 할 수도 없었다. 또한 이들은 일에 너무 지쳐 여가를 즐긴다든지 집안의 다른 일을 도울 여유도 없었다. 작업환경의 경우 편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실먼지가 작업장 안의 공기를 짙게 메우고 스웨터를 말리기 위해 방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호흡기에 큰 위협을 주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힘들여 일한 한 은숙이 받은 임금에 6,575원이었다. 이는 일요일과 설날 휴일의 일급을 모두 공제한 순수한 일급의 합계였다.<sup>3</sup>

대규모 공장의 경우 기숙사가 있지만 잘된 곳은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도 다다미 썩는 냄새가 나고 쾌적하지 않았다. 기숙사는 외출과 외박에 대한 통제가 심하여 보통 4명 정도 그룹을 지어 공장 근처에 10만 원 정도의 전세방을 얻어 공동자취를 하기도 했다. 식생활은 간장과 소금이 평상의 반찬이고 김치와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생존을 위한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빈혈과 영양실조, 소화불량 등에 시달렸다.

노동자가 작업장에 들어가면 거대한 기계가 마치 벽처럼 버티고 서 있다. 낡은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여성 노동자는 땀을 뒤집어쓰게 되고, 덜커덕거리는 소음 속



안양의 전자회사 계전기조정실(안양상공회의소 제공)

에서 힘들게 일해야 했다. 온종일 온수에 손을 넣어 실을 뽑아내야 하는 생사공장에서는 손이 물에 붙어 하얗게 해지고 진물이 났으며, 알루미늄 공장에서는 납독이 들어 얼굴이 파래지고, 포르말린을 접착제로 쓰는 합판공장과 고무공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일해야 했다. 전자 부문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전자기기를 다루면서 빛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3교대 근무 중 밤일(밤 10시부터 새벽 6시)에 걸리면 졸음과의 사투를 견뎌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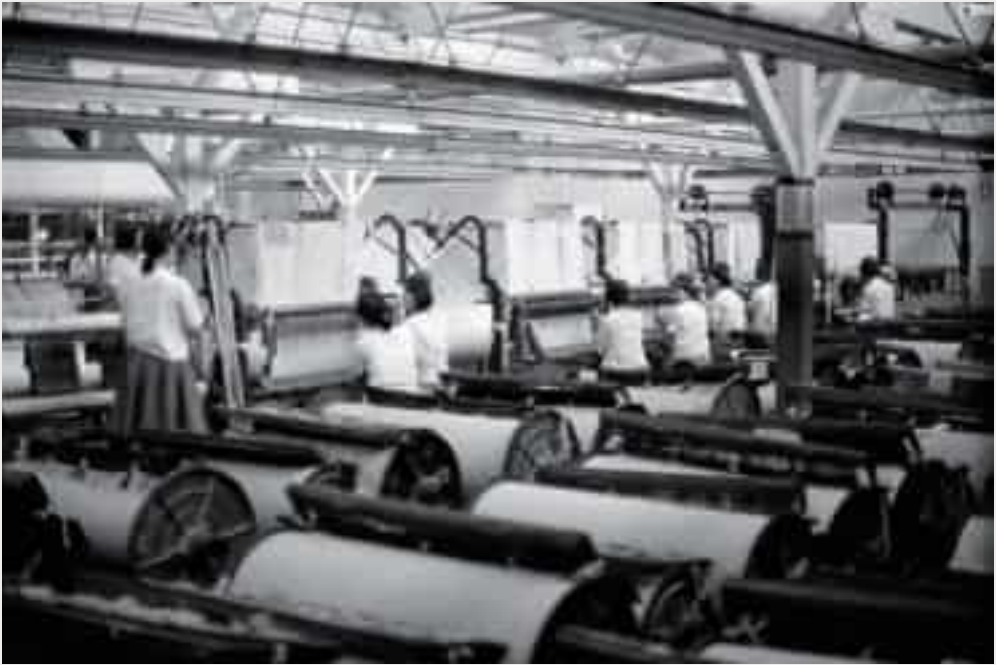
생산라인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줄게 되면 반장이나 조장이 귀밑에서 호루라기를 불어대고, 모욕적인 언설을 퍼붓곤 했다. 반장이나 조장은 휘하의 노동자들을 장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를 돋우는 전략을 쓰는 경우도 많았다.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거나 자취를 같이하면 서로 비슷한 노동자 처지라는 동질감에서 오는 동료의식이 형성되어 ‘언니-동생’과 같은 일종의 유사가족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작업장 가운데서는 기계 돌아가는 데 맞춰 노동할 뿐,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쌓는 것도 거의 없었다. 1년간 함께 근무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였다.<sup>4</sup>



노동 체험기와 여성 노동자 성도덕에 대한 기사(『동아일보』 1974년 2월 11일)

### 3. ‘공순이’라는 비하와 ‘문란한 성’이라는 딱지 붙이기

금성방직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는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농촌지역에서의 가부장적 삶에서 벗어난 이들은 공장에서의 고통스러운 노동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다. 도시의 공기는 시골이 제공할 수 없는 자유의 냄새를 진하게 풍겼던 것도 사실이었다. 안양에서도 1970년대 이후 음악다방, 나이트클럽 등이 젊은 노동자들이 주로 찾던 유흥공간이었다고 한다. 중앙시장 청바지 골목 지하에 처음 생긴 나이트클럽은 안양 청년층이 애용하던 곳이었다. 새로운 청년문화의 공간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사회의 문화적 취향과는 뒤섞이기 힘든 젊은이들의 감수성과 감각이 구성되고 있었다.<sup>5</sup>



1969년 금성방직 노동자(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70년대 박달공업지대



1969년 락희화학 노동자들의 노동현장(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고된 노동 사이에 잠시 휴식을 갖는 대왕지공 노동자들(1973년, 박성배 제공)



자매애로 뭉친 대왕지공 노동자들(1973년, 박성배 제공)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 가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던 당시의 가부장적 관념 아래에서 가정 밖으로 나온 여성 노동자들은 그 자체로 ‘위험한 성’으로 간주되곤 했다. 당시 흥미 위주의 일부 주간지에는 “공순이 공돌이들의 숨결로 안양 독방 일대가 뜨겁다.”는 식의 선정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자 했다. 이러한 시선에 대해 당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은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곤 했다.

우선 ‘공순이’라는 호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영등포 어느 모방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승혜 노동자는 “이 판국에 노동자들을 존경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하필 부를 명칭이 없어 공순이 공돌이라고 부르느냐.”고 항변하였다. 그는 “지방에서 갓 상경한 신출내기들이 간혹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청소년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해 애쓴다.”면서 언론이 여성 노동자를 ‘타락하고 문란한 존재’로 묘사하는 데 대해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다.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단의 공장들에서는 어느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남녀문제로 남에게 알려지면 가차 없이 해직시키는 구실로 삼기 때문에 “스캔들이 나면 곧 일자리를 잃는다.”는 불문율이 있었고,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언론 보도 등과 달리 보수적으로 자기통제에 임해야 했다.<sup>6</sup>

#### 4. 배움에 대한 열망과 사무직 전환의 꿈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여성 노동자들은 배움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타의로 진학을 포기하는 경험을 한 이들은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학업이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이에 따라 학업과 진학에 대한 갈망을 키웠다. 노동자들은 자기 또래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고, 불평등의 감수성을 키우기도 했다. 이들은 공장노동을 하면서도 학업을 병행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동자들의 강렬한 향학열로 고된 노동을 마치고 학원이나 야학, 야간고등학교 등으로 나가 공부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요구하는 잔업과 야근 부담으로 결석하는 경우도 많았고,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도 했다.<sup>7</sup>

동일방직 노동자 이재선은 ‘노동자 문인’으로 사내에서 인정받고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라 이채롭다. 이재선은 충남 청양의 어느 가난한 집 셋째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직후 상경하여 가정부로 생활하다가 1974년부터 동일방직 안양공장에



배움에 대한 강한 열망이 컸던 여성 노동자들(안양상공회의소 제공)

취직하였다. 그는 월급 3만 원 중 1만 6,340원을 적금하고, 1만 원은 고향에 송금, 나머지 3,000여 원으로 생활비를 했다고 한다. 약척같이 저축하여 1977년 재무부에서 수여하는 저축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신협에서 주최한 ‘근로자 생활수기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어둠을 헤치고」라는 수기로 1977년 제1회 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공모전 수상으로 서울에 있는 동일방직 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동일방직 사장은 이재선을 1급 사무원으로 특별 승진시켰다. ‘기능공’이 되어 보겠다는 꿈을 꾸던 이재선은 글쓰기를 통해 사무원으로 전직하는 동시에 승진까지 이루었다.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조치 배경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동조합운동으로 시끄럽던 동일방직 내부 사정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선은 1급 사무원으로 승진하는 동시에 ‘새마을지도자’로 임명되었다. 동일방직은 이재선을 ‘모범근로자’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그로 하여금 공장새마을운동의 전도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었다. 회사는 공장 강당에서 ‘이재선 생활수기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공장장은 이재선에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가족주의적 공장 문화를 조성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재선은 사무직 전환에 만족하지 않고, 못다한 학업을 주경야독으로 이어가며 ‘실력 향상’에 매진하였다.<sup>8</sup>

## 5. 안양근로자회관의 노동자 지원 활동

안양근로자회관은 1969년 만안구 장내로 113로 설립된 노동자 지원 시설로, 장내 동성당(현 중앙성당) 주임신부였던 정원진(루까) 신부가 지역사회의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시설 건립을 천주교 수원교구에 건의함으로써 설립이 추진되었다. 천주교 수원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신념하에 이 건의를 수락하였고, 장내동성당 안양유치원이 있던 땅을 회관 부지로 제공하였다. 1963년 서울대교구에서 분리 설정된 비교적 신생 교구였던 천주교 수원교구가 지역사회의 시급한 문제인 노동자 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다는 점은, 교회가 종교적 역할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자 대안적 주체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회관 건립에는 국제가톨릭형제회(AFI)가 큰 역할을 했는데, 독일인 선교사인 서정림(말가리다)와 한성인(벨파)를 파견하여<sup>9</sup>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에서 해외 원조 및 후원금을 유치하도록 했다. 안양근로자회관의 설립 과정을 보면 천주교가 국내적 차원을 넘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1969년 9월 10일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독일대사, 남봉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근로자회관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이 시점은 1970년 전태일 노동자 분신사건 등 노동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기 직전으로, 당시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을 띠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천주교가 노동운동의 격화 이전에 이미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안양근로자회관 설립의 주요 목적은 객지에서 저임금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 특히 섬유와 제지 등 경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안양의 사회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다. 1976년 증축을 통해 남성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도 마련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2,000여 명의 근로자가 기숙사를 거쳐 갔다. 회관은 숙소 제공을 넘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천주교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선교라는 이념적 사명이 결합된 결과였다.

안양근로자회관은 인간적 성숙을 위한 공동체 생활 교육,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양 교육, 그리고 신앙 교육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서예, 꽃꽂이, 포크댄스, 그림교실, 판화교실, 탈춤,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안양근로자회관 개관식(안양근로자회관 제공)



안양근로자회관 개관식에 참석한 독일대사의 강연(안양근로자회관 제공)



안양근로자회관 건물(안양근로자회관 제공)



안양근로자회관 교육에 참여한 노동자들(안양근로자회관 제공)



안양근로자회관 기숙하는 여성 노동자(안양근로자회관 제공)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생활하는 여성 노동자(안양근로자회관 제공)



1970년 안양근로자회관 노동자들의 소모임(안양근로자회관 제공)





1970년 안양근로자회관 여성 노동자들의 등산(안양근로자회관 제공)

으로써, 노동력 재생산을 넘어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였다. 특히 노동교실, 노동법 강좌 등의 ‘노동 교육’을 통해 정부에게 탄압받던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고취하였고,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197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저항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양근로자회관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근로 청소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생계를 돕고 학업 지속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노조 창립, 워크숍 및 세미나, 교육 등 옥내외 행사가 어려웠던 시기에 지역사회 단체들과 노동 조합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거점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민주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말에는 안양 내 노동자 소모임이 만들어졌다. 1978년 대한전선노조 기획실에 상근하던 신금호가 중심이 되어 대우전자부품 등 몇몇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소속 사업장을 비밀로 하고, 김민기의 노

래 등을 배우며 의식을 높여 갔다. 이들은 1978년과 1979년 전태일 열사 추모식을 간 현휴게소 근처 산속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당시 추모식에는 동일방직, 원풍모방, 룬 코리아 노동자 등 40~50명이 참석하였다. 이는 안양의 노동운동이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흐름과 연대하려는 시도를 보였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소모임 활동은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며, 연대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註

- 
- 1 김영숙 외, 「안양읍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이화여대 문리과 대학 사회학과 사회학회, 1969, 99~101쪽.
  - 2 「가날픈 산업농자군, 35만 여공의 어두운 현실」, 『동아일보』 1970년 10월 23일.
  - 3 「방학동안 여공된 여대생의 증언」, 『동아일보』 1974년 2월 11일.
  - 4 「가날픈 산업농자군, 35만 여공의 어두운 현실」, 『동아일보』 1970년 10월 23일.
  - 5 황병주, 「안양의 공업화와 노동자들의 삶」, 『안양근대사 산책』, 안양문화원, 2017, 149쪽.
  - 6 「'공순이'는 과연 타락했는가」, 『동아일보』 1974년 2월 11일.
  - 7 이상록, 「불평등 속의 노동자들, 능력주의적 열망과 좌절의 응얼거림」, 『역사비평』 140, 2022년 가을호, 167~168쪽.
  - 8 이상록, 「불평등 속의 노동자들, 능력주의적 열망과 좌절의 응얼거림」, 『역사비평』 140, 2022년 가을호, 173~174쪽.
  - 9 「안양의 근대화와 노동자·노동운동: 한무리교회를 중심으로」, 『만안의 기억』, 안양문화원, 2012, 134쪽..

## 제6장

# 1970년대 안양 노동운동의 태동

---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1. 안양 노동운동과 ‘외부 세력’의 역할

1971년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안양지구협의회가 창립되었지만, 노동운동에서 이렇다 할 성과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한국노총이 유신체제의 ‘시녀’로 전락하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집행부를 배제하는 어용화 정책을 취하면서 강한 반발을 불렀던 맥락과 일치하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였다.

1960년대 이후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기세를 억누르기 위해 사측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지도자들을 포섭하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차단하려 했다. 1970년 10월 23일 『동아일보』에는 안양에서 사측이 노조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려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안양의 어느 공장에서는 여공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여 노조를 한담시키고 날뛰는 자들이 얼마나 회사에 불성실했던가를 역설하고 노조 탈퇴서를 받아냈다. 불응자치고 파면 안 된 이가 없었다. 입만 벅긋해도 상부에 다 알려지는 치밀한 조직도 있어 노조는커녕 어떤 불만도 터뜨릴 수가 없다. 불만이 있으면 ‘나가면 그만일 것 아니냐.’는 것. 그 소리에 대항할 만한 여공은 하나도 없다.

〈「가날픈 산업농자군 : 35만 여공의 어두운 현실, 17개 공장의 현장 답사기」, 『동아일보』 1970년 10월 23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사측에 의해 봉쇄당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은 사측과 체제에 협조적인 어용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972년 안양근로자회관 노조교육(안양근로자회관 제공)

1970년 3월 28일, 금성전선 분회는 금성사지부에서 분할하여 금성전선 지부로 개편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금성전선 지부는 10월 23일 ‘10월 유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계몽 활동에 나섰다.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 간부들은 10월 유신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하였다. 1972년 11월 2일에는 금성전선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국금속노조 본조 위원장의 “10월 유신 지지 강연”이 열렸다.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 13일에는 금성전선 노조 간부들이 금성통신에서 열린 10월 유신 좌담회에 참석했고, 11월 14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실시하는 계몽 강연회에 동원되었다.<sup>1</sup> 이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보다는 정부의 통제와 선전 활동에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공식적인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의식화는 비공식적인 채널, 특히 종교단체와 같은 외부 지원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후반 도시산업선교회가, 1969년에는 안양근로자회관(현 가톨릭복지회관)이 설립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산업선교회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와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기독교단체였다.



1972년 안양근로자회관 노조교육(안양근로자회관 제공)

1960년대 후반에 도시산업선교회가 안양에도 존재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산업선교회는 도시빈민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빈민선교 활동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9월 1일 개신교 주요 교단 성직자들은 초교파적 선교기구인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의 활동 지역 안에는 안양(담당한성인)도 포함되어 있었다.<sup>2</sup>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했던 조승혁 목사에 따르면 1978년 3월 1일 기준 안양에는 4명의 도시산업선교 실무자가 있었다.<sup>3</sup> 유신체제에서 직접적인 노동운동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교육, 상담, 기숙사 제공 등 '복지'와 '교양'의 형태로 노동자들을 지원한 것은 주목할 만한 '우회적' 전략이었다. 이는 직접적인 투쟁이 어려울 때, 노동자들의 의식을 함양하고 연대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활동은 단순히 개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시키고, 열악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안양근로자회관에서 활동하는 여성 노동자(안양근로자회관 제공)



1973년 안양근로자회관 사감 모임(안양근로자회관 제공)

## 2. 1970년대 안양의 민주노조운동<sup>4</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양나일론, 삼풍섬유, 유유산업 등에서는 노조 결성 투쟁이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동일방직 등 1970년대 대표적인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했던 사업장의 해고자들이 취업했다가 해고당하는 등 민주노조운동의 싹이 곳곳에서 움트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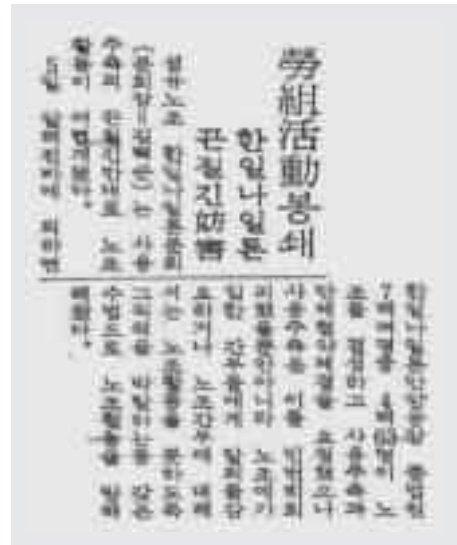
### 1) 동양나일론 노조 결성 투쟁

동양나일론(현 효성)의 전신인 한일나일론에서는 1969년부터 운영 적자를 이유로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 이에 1970년 4월 26일 섬유노조 한일나일론 직할분회가 결성되었고, 46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였다. 회사는 경비원을 투입해 노조 간부와 열성 조합원들을 감시했으며, 사소한 트집을 잡아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강등시켰다. 또한 일부 공원과 준사원을 사주하여 노조 탈퇴서를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노조는 1970년 5월 19일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분회 간부와 조합원 23명(여자 5명 포함)

은 본사와 공장에서 임금 인상,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회사는 단식투쟁에 대한 보복 조치로 6월 말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23명을 무더기로 출근을 정지시켰고, 7월 13일에는 16명을 해고하였다. 노조는 7월 2일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했으나, 절차미비로 각하되었다. 결국 회사의 탄압과 노동위원회의 일방적인 판결, 본조의 지원 미흡 등으로 노조 조직은 마비되었다.

1970년 9월 회사가 동양나일론으로 인수되자, 이듬해 1월 고참 사원들을 주축으로



한일나일론 사용자의 노조활동 분회(『매일경제』, 1970년 6월 5일)



호계동 동양나일론 안양공장(안양시청 제공)

노조수습 재건운동이 벌어졌다. 2월 7일 열릴 예정이던 수습대회는 회사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2월 8일 수습위원 10여 명에게 울산과 서울 등지의 방계회사로 소급 전보 발령이 내려졌지만, 수습위원들은 예정대로 수습 대회를 열어 분회 임원(분회장 김신웅)을 선출하였다. 2월 15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접수한 시흥군은 임원진이 전출 발령 받은 것을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았다. 시흥군은 이들의 전출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서를 받아와야만 신고필증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섬유 본조는 1971년 3월 11일 위원장 명의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분회장 등 10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고, 5월 12일 지부장 등 3명의 구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시흥군은 여전히 신고필증 발급을 미루었다. 그동안 회사의 협박과 회유, 그리고 생활고로 간부진 6명이 회사 측과 타협하여 울산으로의 전출을 수락하자, 분회는 와해되었다. 나머지 간부 및 핵심 조합원들은 사표를 내거나 해고당함으로써 노조는 결국 와해되었다.

## 2) 삼풍섬유 노조 결성 투쟁

삼풍섬유주식회사는 신사복 제조업체로 방계회사까지 있는 대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각종 휴가나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임금도 1975년 기준 10시간 근무에 양성 초임이 일당 300원, 2년 이상 근무한 숙련공이 일당 460~480원의 저임금이였다.

이 회사에서 1975년 7월 9일 섬유노조가 종업원 약 1,700명 중 418명을 동원하여 관계기관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노조(지부장 박귀만)를 결성하였다. 회사 측은 노조 결성 후인 7월 10일부터 회사 간부들을 동원하여 노조에서 배부한 가입 원서를 압수했으며, 기숙사생의 외출 금지와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기도 했다. 또한 회사 간부가 노조 간부나 열성 조합원들의 모임에 따라다니며 감시했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노조 결성을 방해한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지부에서 7월 12일 경기도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자, 경기도는 회의록 허위 기재와 신고서 미비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설립 신고서를 기각하였다. 조합에서 재접수시키자 규약 미채택과 조합원 명단 미제출 등을 이유로 다시 기각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했다. 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삼풍섬유주식회사 사장 입건(『조선일보』 1975년 8월 3일)

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조합원 명단까지 제시했으나 3차에 걸쳐 이를 기각하였다. 그동안 회사는 연합노조(위원장 김기우)와 야합하여, 1975년 7월 19일 설립하지도 않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했고, 이를 접수하여 같은 해 8월 7일 설립 신고서를 교부하였다.

섬유 본조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한국노총에 연합노조의 조직 관할권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으나, 1976년 6월 14일 기준 미해결 상태였다.

### 3) 유유산업 노조 결성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유유산업에서 1975년 5월 4일, 37명의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노조(지부장 김재만)를 결성하자 회사는 즉각 노조 파괴 작업에 들어갔다. 회사 간부들은 지부장에게 노조 탈퇴 압력이 통하지 않자 호텔에 감금하고 계속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였다. 회사 간부들은 노조에서 탈퇴하면 금전적인 보답은 물론, 과장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해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나서 감금에서 풀어주는 대신 휴가를 내도록 강요하였다. 회계 감사 홍의선, 조직부장 장현욱, 부녀부장 박순자에게도 전무, 공장장 등이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이에 불응하자 돈을 주려 하거나 해고한다고 위협했으며, 탈퇴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기도 했다. 조합원 남정애는 야간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도 못 가게 작업을 시키면서,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할 사람은 직장을 옮기라고 협박하였다.

이렇게 회사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지부장을 강제 휴가 조치하고, 노조 간부를 매수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일이 계속되자, 조합원들은 5월 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회사의 노조 방해 활동을 규탄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한층 강화하여 지부장을 이유 없이 해고한 뒤, 홍의선과 장현욱을 구실을 대어 해고하고, 박순자는 5월 16일 총무과에서 포장실로 부서 이동시켰다가 5월 19일에는 다시 본사 청소부로 부당 전출시켰다. 본조는 5월 20일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자의 복직과 전출자의 복귀, 그리고 단결권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기하였다. 유유산업 지부는 회사의 탄압 속에서도 조합원 수가 늘어가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하태석을 지부장으로 선출하려 했으나 경찰서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1969년 남봉진 경기도지사의 유유산업 방문(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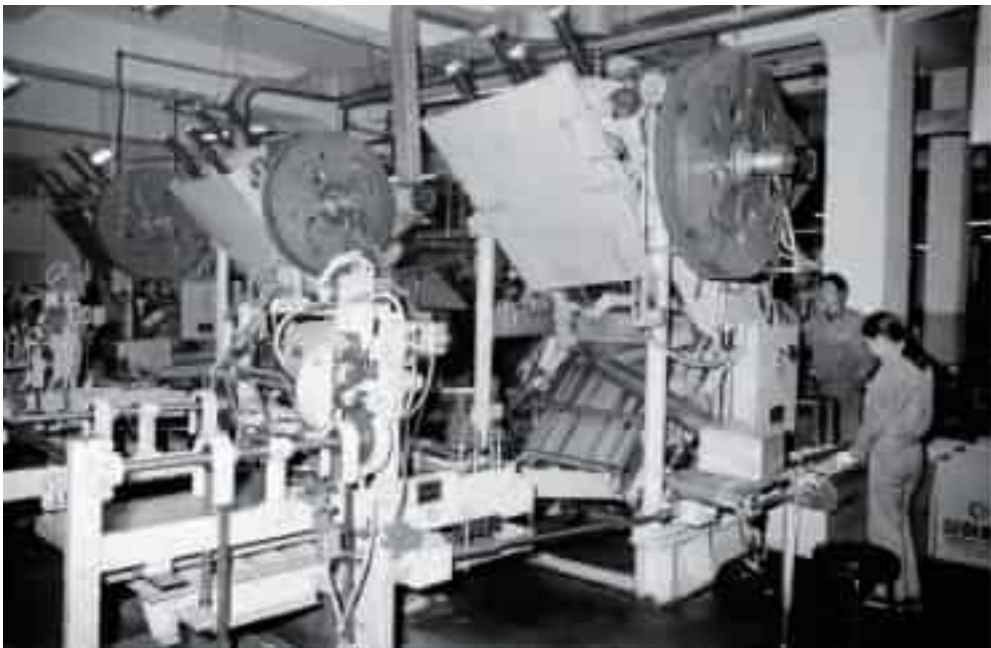


1969년 유유산업 노동현장(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화학 본조의 직접적인 관여와 노동위원회의 대화 주선으로 주춤했던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6월 5일 학생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변경과 지부장 개선 서명 운동을 전개하자 재개되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노조 가입 방해 중지’, ‘해고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 사태로 하태석 지부장을 비롯하여 6명이 경찰서에 연행됐다. 두 차례에 걸친 조합원들의 농성사태를 계기로 회사는 6월 20일 해고자와 부서 이동된 조합원들을 복귀하고 조직은 정상화되었다.

#### 4) 삼화왕관 노조 결성 투쟁

국세청 지정 납세 병마개를 제조하는 삼화왕관에서는 1976년 12월 21일 전국화학노조 삼화왕관 직할 분회(분회장 강영근)가 결성되었다. 회사에서는 여용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섭을 회피하면서 노조 해산을 종용하였다. 이에 노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1977년 2월 9일 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였으나, 3월 17일 간부 9명을 해고, 출근 정지, 감봉 처분하고 조합원 6명을 잡역부로 전출시켰다.



1973년 삼화왕관 공장 내부(국가기록원 제공)

삼화왕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을 보면, 회사 측은 분회장 강영근이 무단결근, 명령 불복종 등으로 3번의 시말서를 쓰고도 반성이 없고, 1977년 2월 19일에 있었던 화재사건에 대한 책임, 3월 1일 노조 간부 11명과 다방에 모여 잔류를 사장에게 직접 건의하기로 하고 3월 2일 잔류 납세 병마개 2상자를 가지고 집단으로 비서실에 모여 농성한 주동자이므로 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노동위원회 판결은 분회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다른 간부들은 분회장의 지령으로 해고된 것이므로 이들을 해고·정직한 것은 노조 간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해고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문에 노조 간부들의 항의 농성을 집단 단동으로 표현하는 등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성격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결국 삼화왕관 노조는 1978년 해산하였다.

## 5) 중앙유리 노조 체불임금 청산 지급 요구 투쟁

안양에 자리한 중앙유리 소속 노동자 202명은 1971년 9월 8일 노조를 결성하였다. 결성 직후 노조는 경영부실로 휴업상태에 빠진 회사 측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청산 지급을 요구하였고, 9



중앙유리 노조 결성(『매일경제』, 1971년 12월 7일)

월 9일에는 회사 측과의 교섭에서 9월 20일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측이 9월 15일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전체 체불임금 1,500만 원 중 9월 20일까지 지급된 것은 7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안양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본사로 몰려가 농성을 벌였고 다시 노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1971년 7월분까지의 체불임금은 9월 30일까지 사측이 청산 지불하며 나머지는 10월 10일까지 완전히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9월 30일이 되어도 7월분 체불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에서는 체결된 노사협정에 따라 회사의 생산제품, 회사물품 등을 인수받아 이를 처분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sup>5</sup>

## 6) 블랙리스트에 가로막힌 생존 -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끝나지 않은 해고

1978년 4월 1일부로 동일방직 인천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취업을 시도했지만, 가는 곳마다 ‘블랙리스트’에 의해 거둬들여 해고당하였다.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 만들었던 『동지회보』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안양의 사업장에 취업했지만, 짧게는 보름, 길어야 두어 달 만에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다.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6~7명은 안양의 대농에 다시 취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단으로 해고당하였다. 다음은 대농에서 해고당한 문현란이 동일방직 해고자들의 소식지인 『동지회보』(1980년 1월호)에 기고한 글이다.

안양에 있는 대농방직에 경험자 모집하니 가자고 했다. 늘 일손이 모자라 사시사철 모집 광고가 붙어있 다시피 한 곳이었으므로 우리는 대환영을 받았다. 용자·순애·영순 모두 일들도 잘한다며 여간 좋아하지 않았고 임금도 높게 책정되었다. 현장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고 모두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래오래 다니겠다고 100만 원짜리 적금 들 계획과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다는 계획까지를 알차게 세웠다. 우리는 모두 기숙사로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일손이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니어서 경험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사정을 하다시피 하니 설마 이곳에서는 동일방직 해고자라는 걸 알아도 필요하니 써 줄 것 같았다. 해고자라도 실을 잇고 기계를 보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웬걸 15일째 되는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영순이가 오더니 울면서 “우리 다 해고당했어.” 한다. 세상에 이럴 수가 ...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게 딱 주저앉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부르르 견잡을 수 없이 떨린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얼 어쨌다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손으로 일을 하지만 마음은 깨지고 부서지며 끓어올랐다. 잠시 후 담임이 왔다. “왜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냐.”며 위에서 한 대 깨져 골이 아파 약 사먹고 왔단다. 동일방직 다닌 걸 속였기 때문에 사무서위조니까 나가 달라고 했다. 일 잘할 테니 그냥 다니게 해 달라고 사정하자 일은 기차게 잘하지만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단다.

이번엔 잡아 끌어내도 절대 끌려가지 않고 기계를 꼭 잡고 놓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스펀지만 뜯었더니 잠깐 나가자고 한다. 무슨 긴 애길 하려 보다 싶어 따라 나가니 바깥이었고 담임은 가보라고 하며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 아닌 웃음이 실실 흘러나왔다. 우리로 인해 긴급 회의를 열고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이 문제는 저 높은 곳에서 풀리지 않는 한 어렵다는 말을 우리 뒤에 대고 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높은 곳의 높은 놈들, 죽일 놈들.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꿈을 안은 채 달팽이 집 같



블랙리스트에 오른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문현란의 대농에서의 부당해고를 다룬 기고(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지회보』 1980년 1월호)

은 보따리 하나씩 끌고 복잡한 안양역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까짓 며칠 살자고 이 거지 같은 보따리를 끌고 왔었다니!

안양행 열차는 늘 이렇게 미어터지도록 복잡하다.

이 글에는 동일방직 출신 노동자 문현란이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후 다른 직장을 찾아 안양 대농에 취업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시 해고당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문현란은 19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생존의 위협, 부당해고, 그리고 노동운동 탄압의 현실을 고발하였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려 해도, ‘블랙리스트’와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암울한 사회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 7) 경원제지 분회 결성

1978년 8월 20일 7명이 경원제지 분회를 결성하였다. 회사 측은 21일 분회장의 출근을 정지시키고 조합원 6명을 잡역부로 전출시켰다. 이에 투쟁 끝에 4월 25일 원직 복직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6월 1일 회사가 조합 간부 박평선을 앞세워 분회 간부를 매수하고 분회장을 사퇴시켰다.

## 3. 1970년대 안양 노동운동의 특징

개별 사업장 투쟁들은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단순히 경제적 요구를 넘어선 '생존권'과 '자유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 주었다. 특히 유명 노조에 맞서 싸우거나, 부당한 처우에 단식농성으로 대항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근로자회관 노동절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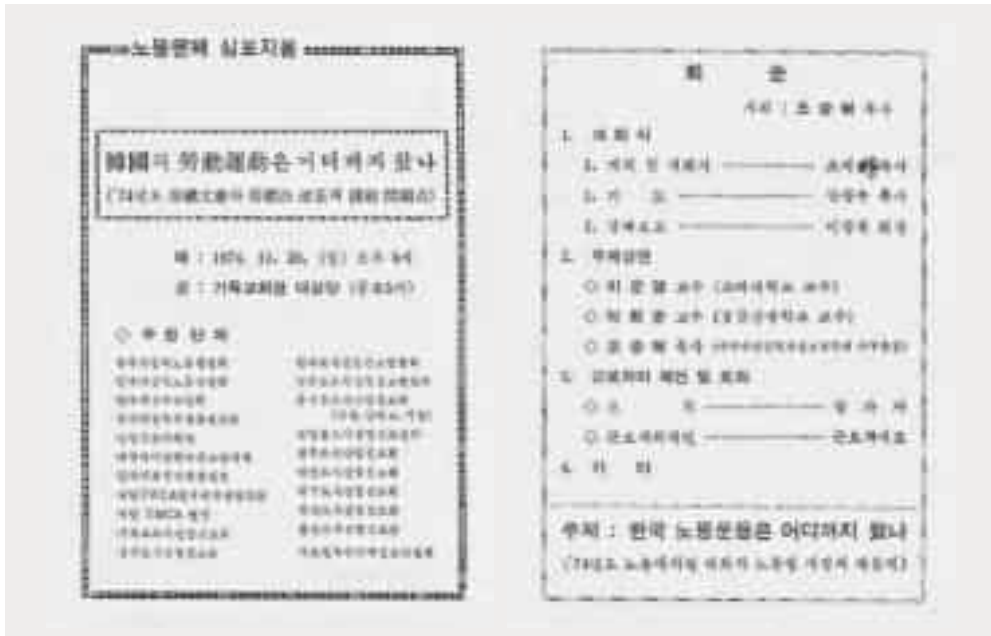
또한 1970년대 노동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성 노동자가 노조 활동의 선두에 섰다는 점이었다. 경공업 중심인 서울·인천 지역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 대종을 기반으로 진보적인 종교세력과 결합하여 여성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의 중심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안양을 포함한 1970년대 경공업 중심지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에 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은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놓여 있었고, 이는 불만을 표출할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어용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덜 된 여성 노동자들이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1970년대 안양 노동운동은 초기에는 ‘불모지’로 불릴 만큼 미약했으며, 한국노총 안양지부의 활동도 제한적이었다.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탄압은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같은 수단으로 민주노조 활동가들의 재취업을 막고 감시 대상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러한 억압적인 환경은 노동운동의 가시적인 성과를 제한하는 주요인이었다.

하지만 안양근로자회관,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 종교단체와 외부 세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실시된 전국섬유노동조합의 노조교육(안양시청 제공)



1974년 안양근로자회관 등 노동자 지원 종교단체에서 개최한 노동문제 심포지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력의 지원은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소모임 활동을 통해 조직화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기숙사 제공, 교육, 상담, 의식화 활동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일깨우고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섬유산업 중심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의 선두에 서서 저항을 이끌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 경제적 요구를 넘어, 인간적 존엄성과 자유권을 지향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양상을 띠었다. 비록 대규모의 성공적인 파업은 드물었지만, 개별 사업장과 소모임 단위에서 꾸준히 저항의 불씨를 지폈다.

안양이 197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불모지였다는 상황과,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시작되는 '기반'이 되었다는 상황 사이에는 명확한 전환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종교단체와 외부 세력의 끈질긴 의식화 및 조직화 노력,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안양에서 종교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조용한 활동들(노동법 강좌, 노동자 상담, 의식화 교육 등)은 안양권 노동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들의 의식, 계급 정체성, 연대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 노동계급 형성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토대가 되었다.

1970년대의 억압과 침체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잠재되어 있었으며, 이

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폭발적인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안양의 본격적인 민주노조 건설 지원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은 1984~1987년에 전개되었는데, 이는 1970년대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노동운동이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이나 가시적 성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내면적 각성과 연대 의식을 함양하는 ‘준비 기간’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1970년대 안양의 경험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침묵 속의 성장’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註

- 
- 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8쪽.
  - 2 『만안의 기억』, 안양문화원, 2012, 133쪽.
  - 3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反)역사』, 이매진, 2005, 476쪽.
  - 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9~53쪽 참조.
  - 5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화학노조 20년사』, 1987, 214~215쪽.





## 제1장

# 1980년대 안양 도시화의 심화와 노동자 일상의 재구성

---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1. 1980년대 안양 도시화의 심화

1980년대 안양은 인구 증가를 포함한 도시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결정적인 전환기였다. 1973년 시(市)로 승격한 이후 안양은 1960~1970년대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정체성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안양은 서울의 인구 집중과 주택난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역할이 부각되면서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도시성장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안양 도시공간의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 개발전략의 이원화에 있다. 기존 구시가지(현 만안구 일대)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며 도시의 물리적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당시 농촌지역이었던 평촌(浬村) 일대에서는 국가 주도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발맞춰 거대한 신도시 개발의 서막이 올랐다. 이처럼 한 시기에 공존했던 두 가지 상반된 개발 모델은 안양의 도시공간에 ‘계획도시’와 ‘자연발생적 도시’라는 이질적인 두 영역을 공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1989년 만안구와 동안구의 행정구역 분할로 공식화되었다.

안양시의 인구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시기는 1975년 이후였다. 이는 1973년 시 승격과 1974년 전철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증대되며, 공업기능이 최고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취업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이었다. 안양시의 인구 증가율은 1983년까지는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경기도 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sup>1</sup>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의 자연증가보다는 전출과 전입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심한 변동을 보였으며, 전



1974년 제6지구 택지조성공사(안양시청 제공)

체적인 인구 증가는 인구의 사회적 변동에 따라 좌우되었다.

1980년대 안양시의 인구는 1980년 25만 3,541명에서 1990년 48만 668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1.9배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주거 수요의 증가와 수도권 확장, 서울의 과밀인구 해소 정책과 안양시의 도시개발 등이 맞물린 결과였다.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첫째는 교통수단의 발달이다. 안양시는 1973년 시 승격 이후 서울과 수원을 잇는 경수산업도로와 전철이 1974년에 개통되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증진되었다. 또한 다수의 서울 시내버스가 안양에 기·종착점을 두고 있어 서울과의 연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안양 시내버스의 일부 노선도 서울의 강남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서울 남부를 경유하여 운행되었으며, 수원 시내버스 등도 안양을 경유하는 노선이 운행되었다. 이 같은 교통수단의 확장은 안양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 줌으로써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켰고, 안양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는 공업기능의 확대이다. 안양은 영등포·인천시·수원시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제 1의 공업지대 내 위치한 입지 조건의 유리함으로 1970~1980년대 이전보다 더욱 급속



1980년대 안양1동과 안양5동(안양시청 제공)

히 공업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제조업체들은 안양 지역민들에게 고용과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증가의 동력원이 되었으며, 동시에 안양시 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다.

셋째는 거주기능의 확대이다. 안양은 서울과의 통근·통학 생활이 가능한 1시간 대의 생활권으로 서울의 침상도시 성격이 짙다. 이는 서울 주택보급률의 절대 부족과 택지개발의 한계성이 서울 주변 경기도의 주택 공급 확대와 거주공간 확산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안양시의 주택수는 1975년 기준 1만 2,569동이었으나, 1985년에 8만 6,658동으로 증가했고, 1995년에 이르면 16만 717동으로 증가하였다.<sup>2</sup>

이와 같이 서울 시내버스의 연장 운행과 자가운전의 증가 등으로 안양은 서울 및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더욱 증진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안양시는 서울과의 통근 및 통학 생활이 가능한 1시간대 생활권으로 수렴되었고, 서울의 인구와 거주기능을 분담하는 수도권 대표적인 거주 교외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였다.<sup>3</sup>

안양시의 동별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에는 안양6동과 석수동에 인구가 각각 1만 8,435명, 1만 6,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양3동, 박달동, 비산동, 안양5동, 안양1동, 안양2동, 안양4동 등의 순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하여, 안양의 중심지가 안

〈표 1〉 1980~1990년 안양시 인구수·가구수·가구당 평균 가족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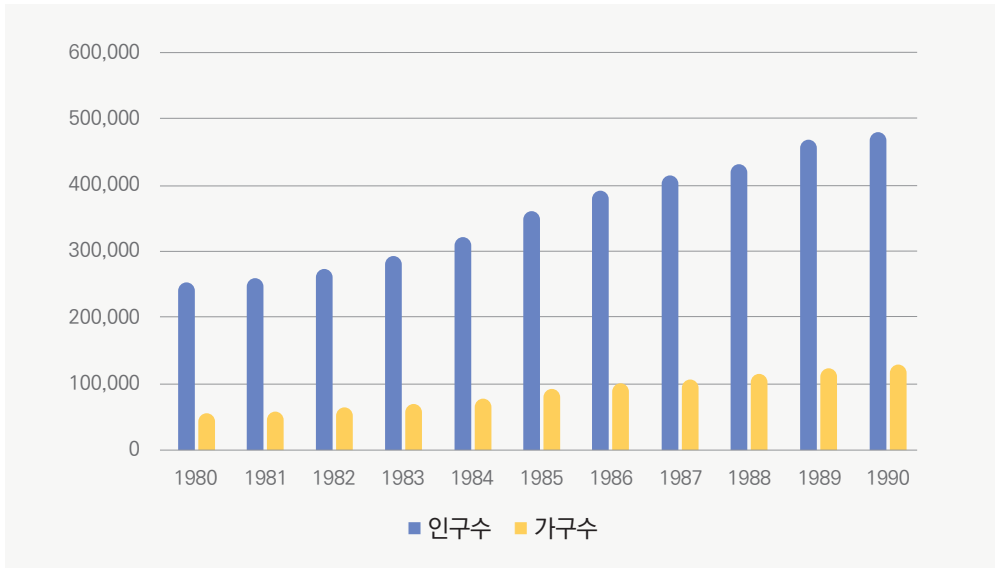
연도	인구수	가구수	가구당 평균 가족수
1980	253,541	55,587	4.6
1981	258,480	59,299	4.4
1982	274,093	64,351	4.3
1983	291,919	70,734	4.1
1984	322,572	79,008	4.1
1985	361,530	92,632	3.9
1986	392,808	101,160	3.9
1987	413,656	106,690	3.9
1988	433,088	114,562	3.8
1989	468,101	124,582	3.8
1990	480,668	129,164	3.7

자료: 안양시, 『안양 통계연보』, 1981~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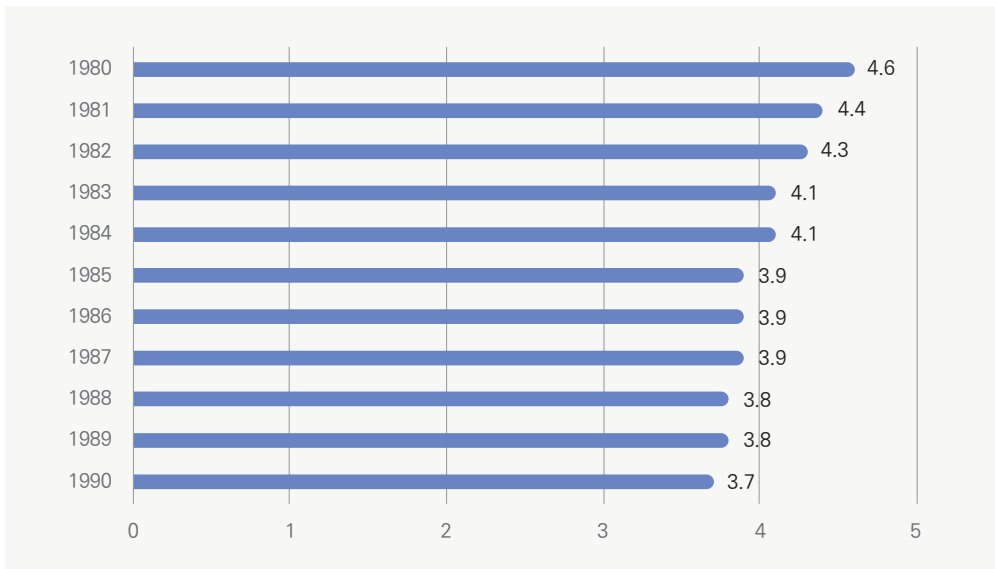
양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는 비산동이 4만 491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았으며, 그다음은 안양6동이 2만 5,670명이었다. 1985년에는 박달동, 안양7동, 비산2동의 인구가 각각 2만 7,312명, 2만 6,715명, 2만 6,206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였다. 행정동 분동에 따라 동별 인구가 재배치되었고, 1985년 당시 가장 적은 인구수를 지닌 안양4동의 인구가 1만 515명으로 전체적으로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고른 성장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는 박달동과 안양3동의 인구수가 각각 3만 6,996명, 3만 6,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지역 인구의 증가는 안양시 서남부 지역의 발달과, 1980년대 초에 폐쇄된 공업시설을 주택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아파트가 건설된 것의 여파에 따른 것이었다.<sup>4</sup>

1980년대 초 정부는 수도권외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 분산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안양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를 확장하고 있었다. 1973년 착수된 제6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산2동 일부와 안양7동 공장지대, 호계동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경수산업도로가 개설되고 도로 주변이 대지화되었다. 이 사업은 1979년 11월에 완료되어 1980년대 초반 도시공간



1980~1990년 안양시 인구수·가구수 추이



1980~1990년 안양시 평균 가구수

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진행된 제7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의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공간을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안양에서 처음으로 폭원 60m의 광로



1981년 5월 관양동 제7지구 구획정리지구 공사현장(안양시청 제공)

가 개설되었는데, 이는 도시의 현대적 위상을 상징하는 동시에 향후 평촌신도시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기존 안양 구시가지의 도시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물리적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마치 구도심의 '마무리 공사'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 즉, 1980년대는 전통적인 도시 개발 방식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의 외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기존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시기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도로와 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점차 확충되면서 도시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1970년대 조성된 공단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던 안양은 이러한 도시개발과 함께 서울의 인구 분산 정책의 수혜를 입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1980년대 후반 안양은 성남, 부천, 광명 등과 함께 '서울 밖의 서울'로 불리고 있었다. 서울의 인구 팽창과 주택난 때문에 조성된 수도권 외곽생활권에 살고 있는 안양 시민은 '낮에는 서울 시민, 밤에는 안양 시민'으로서 서울과 안양을 오가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안양은 학교, 병원, 시장 등 거주 편의시설이나 문화생활 등에서 인근 시흥과 과천 등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주택단지 개발



1980년대 비산동 주공아파트(안양시청 제공)

등이 1980년대 후반 진행되어 관양동 일대의 야산과 3개 자연마을 등 50여만 평을 주택부지로 개발해 3만여 명의 인구가 늘게 되었다.<sup>5</sup> 1988년 건설부는 안양시 평촌지구(평촌동·비산동·호계동·관양동 일원)의 155만 평을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평촌지구에는 25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만 가구분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sup>6</sup>

안양은 지리적으로 철도와 간선도로가 도시 중심부를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전철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로가 외곽지대로 확산되면서 거주지가 도시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대체로 전철 주변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거주지가 확대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안양은 교통지향형 주택개발의 패턴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거주지역으로 호계동, 비산동, 관양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의 주택이 크게 늘어났다. 이곳은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을 제외하면 안양 도심에서 벗어난 주변 지역에 해당되며, 중심지가 아니지만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이었다. 1980년대 비산동의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와 연립주택이었다. 호계동은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이 주택지로 개발되었는데, 호계동은 공업지역의 배후주거지역으로



1988년 8월 비산1동 인근 안양천(안양시청 제공)

확장되는 특성을 보였다. 관양동의 주택 증가는 1980년 이후 관양동 일대의 야산과 3개 자연마을 등 50여만 평을 주택 부지로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관양동은 과천과 인접해 있어 과천을 통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공간적 특성으로 주거지역 확대가 진행되었다.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은 1973년 시 승격을 계기로 시청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들이 이 지역에 들어섰고, 중앙대로와 전철역 주변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서 주거지역이 일찍부터 형성되었다.

1960~1970년대에 형성된 안양천 주변 공장지대(경공업 중심)와 안양역 일대 상권이 기존의 구도심 축을 만들었고, 1980년대에는 이 축이 유지되는 가운데 평촌 일대 신규 주거지가 계획·조성되며 도시 중심이 양분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안양시 최대의 공간 변화는 평촌신도시 건설로 초래되었다. 안양시 평촌동, 비산동, 호계동, 관양동 일원 152만 8,000평의 지역에 건설된 평촌신도시는 그 이전까지의 점진적인 거주기능 분화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파생시켰다. 평촌신도시의 입지는 안양시 거주지역 분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

평촌신도시 개발은 대규모의 주택단지 개발로 서울 대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졌다. 평촌신도시 개발은 1988년 9월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발표로 시작되었고, 1989년 수도권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확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수도권 전반의 인구 구조를 재편하고 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하려는 거시적 목표를 담고 있었다.

분당·일산 등의 신도시가 자족적 도시개발을 목표로 한 것과는 달리 평촌신도시는 안양시의 중심 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한 신시가지 개발의 성격으로, 안양시의 외연적 확장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평촌신도시 건설이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안양시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지구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택지로 조성할 지역은 안양시 호계, 관양, 평촌동 일원의 자연녹지 57만 4천 평과 비산, 관양, 평촌동 일대 절대농지 97만 5천 평 등 모두 154만 9천 평.

안양시는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평촌지구의 절대농지 97만 5천평은 공영개발 형식으로, 자연 녹지 57만 4천 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시가 평촌지구의 일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현재 안양시의 연간 인구증가율이 10%로 주택보급률은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거용지 확보가 시급하고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경수산업도로의 노폭 확장 및 도시기반시설 용지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sup>7</sup>

평촌 일대는 1986년에 수립된 ‘안양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개발 용지로 지정된 상태였다. 이는 국가 주도의 신도시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전 구상이 평촌신도시 개발이라는 형태로 수렴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촌신도시는 네모반듯한 격자형 도로망을 기본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기존 구시가지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또한, 신도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계획함으로써 구시가지에 편중된 도시구조를 균형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평촌신도시의 건설은 주택공급이라는 표면적 목적을 넘어, 안양을 서울의 ‘위성도시’를 넘어선 독자적인 기능을 갖춘 ‘자족적 도시’로 도약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 2. 1980년대 안양 산업구조의 변화

안양은 1970년대 이전부터 공업시설 집중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도시였다. 안양은 특히 서울의 공업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급속히 공업지대로 변화되었다. 안양시의 제조업체는 서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서울에 본사나 지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업체 수는 1990년 기준 안양시 제조업체 중 약 1/7에 달하였다. 이는 전체 제조업체의 13.2%에 불과하지만, 종사자 수로 보자면 전체의 50%를 차지해 규모가 큰 공장들이 서울과의 관련하에 안양에 입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1970년대 안양은 섬유, 화학, 금속, 전자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다. 안양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 환경 관련 법제 추진으로 공업 입지 개발에 영향을 미쳐 안양지역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다



대한전선(안양시청 제공)

소 약화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안양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이 구조 개편 속에서 답보 상태에 머문 반면, 서비스업종의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안양시 1차산업 인구 비율은 7.0%, 2차 산업 인구 비율은 64.0%, 3차 산업 인구 비율은 29.0%였다. 그런데 1985년에 이르면 안양시 3차 산업 인구 비율은 54.7%에 이르게 되어 2차 산업 인구 비율인 43.4%를 능가하였다. 2차 산업 인구 비율의 감소는 1979년 공업배치법으로 중화학공업의 신·증축이 허가되지 않아 2차 산업 고용효과가 감소하였고, 수도권인 인구 유입에 따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지역의 팽창으로 지가가 폭등하였으며, 공업용수와 상수도의 수원 부족 등의 연유로 공업기능이 약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땅값이 치솟으면서 기존 공장부지의 효용가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3차 산업 인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안양시가 제조업 기능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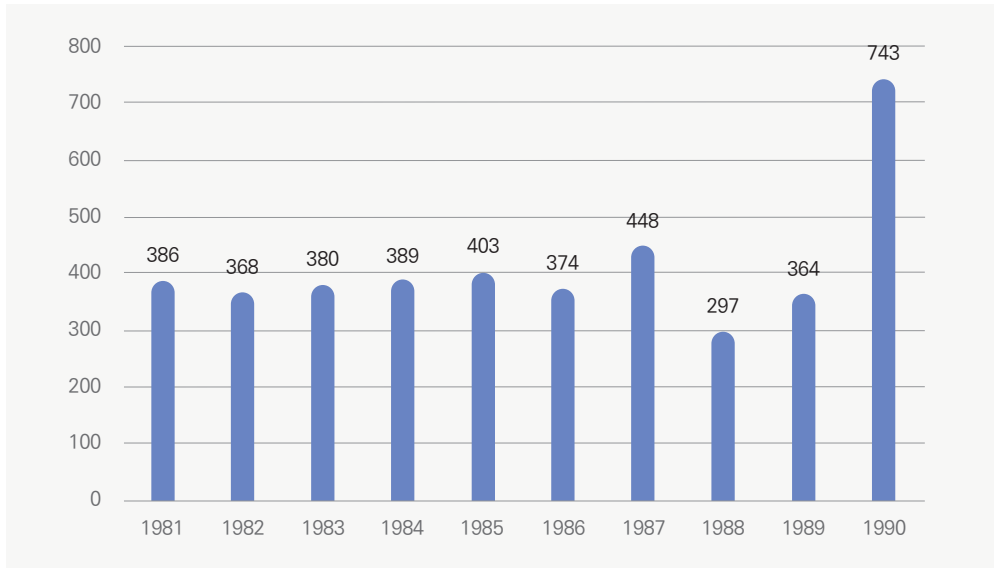
〈표 2〉 1981~1990년 안양시 제조업 공장수 및 종업원수

연도	공장수	종업원수	연도	공장수	종업원수
1981	386	30,836	1986	374	35,542
1982	368	27,825	1987	448	37,709
1983	380	30,505	1988	297	33,990
1984	389	32,334	1989	364	40,858
1985	403	32,408	1990	743	48,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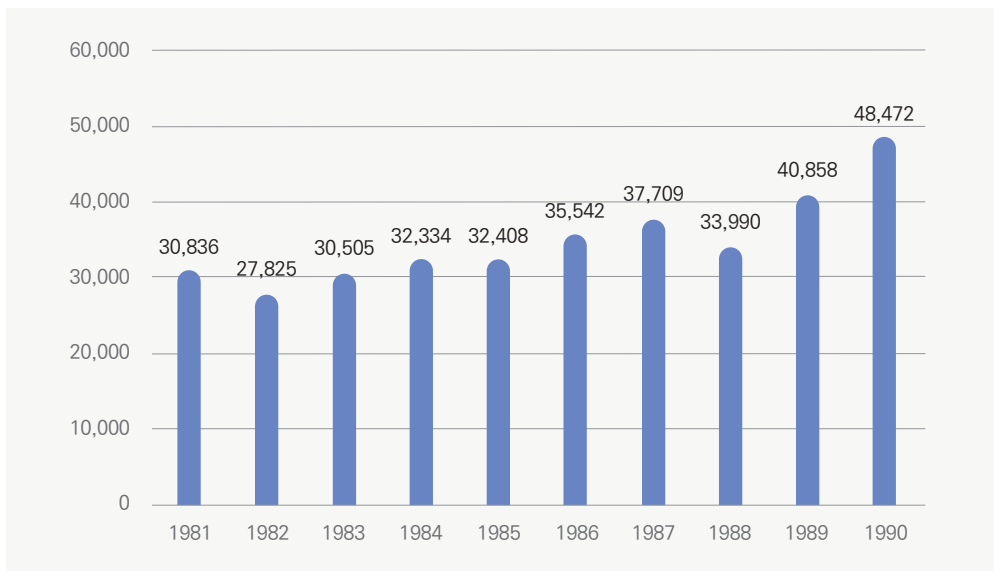
자료 : 안양시, 『안양 통계연보』, 1982-1991.

안양시의 제조업 공장 추이를 보면 1981년 386개에서 1985년 403개, 1987년 448개로 1981년부터 1987년 시기는 공장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도 3만 명대 초반에서 3만 7,000명 대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1988년에는 공장수가 전년 448개에서 297개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34%가 감소한 숫자였다. 1988년 공장수 급감 원인은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수도권 공장 분산 및 재배치 정책과 지가 상승으로 공장 임대료가 오르면서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폐업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안양과 창동에 공장을 두고 있던 아세아제지는 1987년 청주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장 이전을 추진하였다.<sup>8</sup>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1987년 이후 급증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 신고로 맞서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9</sup> 1988년 7월 11일 안양시에 있던 안양전자 노동자 80여 명은 안양지역 노동자 200여 명과 안양전자의 회사 이전을 반대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는데, 노동자들은 안양전자가 회사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원들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화성군 오산읍(현 오산시)으로 위장 이전을 계획하고 이미 일부 시설을 옮기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이전 철회를 요구하였다.<sup>10</sup>

1989년 안양시 공장수는 364개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종업원수는 4만 858명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공장수가 743개로 급증했고 종업원수도 4만 8,472명으로 크게 늘었다. 공장수가 급증한 이유는 1989년 상공부가 수도권 무허가·무등록 공장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9년 9월 상공부는 당시 6,000~7,000개로 추정되던 수도권 내 미등록 공장을 최대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방침을 세웠다.<sup>11</sup> 기존 통계에 잡히지 않던 공장수가 이 조치 이후 통계에 잡히면서 공장수가 늘어난 것이 급증의 원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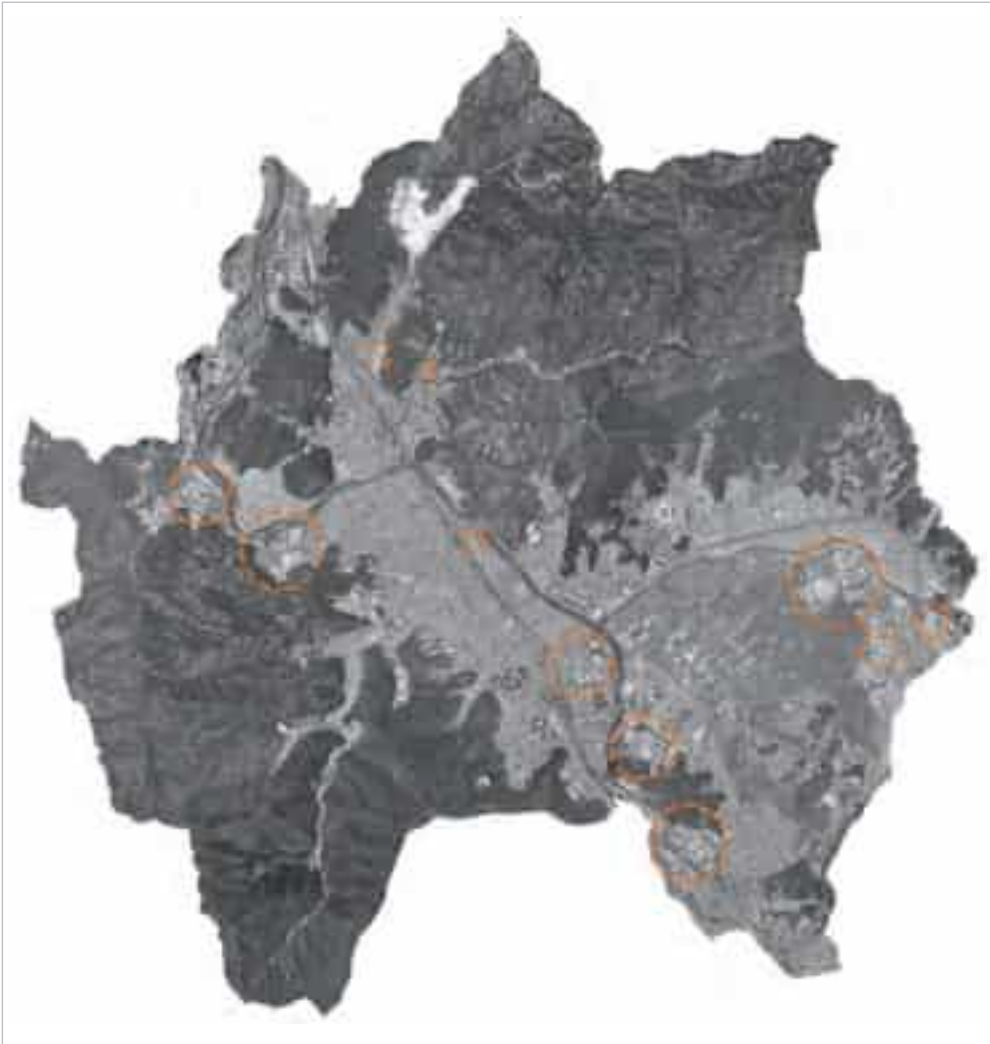


1980~1990년 안양시 공장수 추이



1980~1990년 안양시 종업원수 추이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후반 일부 대기업과 공해성 공장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산업기능이 안양으로 이전하는 흐름이 1990년대 초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1989~1990년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1983년 안양시 공업지대

공업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공장의 입지가 공업용수의 이용 쉬운 안양천 주변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나, 점차 공업용수의 필요뿐만 아니라 넓은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며, 지가가 낮고 원료나 제품의 이송이 편한 경부선 주변이나 경수산업도로 가까운 곳, 과천을 통해 서울에 이르는 도로 주변에 공장을 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즉 비산1동, 안양7동, 관양2동에 두드러지게 집중되어 있었다.

안양의 공장 분포를 울산과 비교해 보면 매우 분산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석수·박달 지역, 평촌·관양 지역, 명학역 주변 지역, 군포·의왕지역 등 안양천 변을 중심으로 전 시

가지에 걸쳐 널리 공장이 분포하였다. 1986년 안양시 총인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8%를 차지해 경인 지역에서는 안산(40.5%), 부천(17.8%) 다음으로 높았다.<sup>12</sup>

업종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보면, 1975년에는 섬유·의복과 가죽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율이 43.18%로 가장 높았으며,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이 19.74%, 조립금속, 기계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이 18.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무렵 안양에서 고용 흡수력이 가장 큰 업종은 여전히 섬유·의복과 가죽 업종이었다. 호계동의 동양나일론, 평촌동의 동양방직 등 대규모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5년에 이르면 섬유·의복과 가죽 업종 종사자 수의 비율은 21.8%로 1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비율이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부문은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 종사자로 그 비율이 42.2%였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은 12.5%를 차지하였다.<sup>13</sup>

### 3. 도시화가 빚어낸 안양 노동자의 일상

안양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촌향도(離村向都)로 도시로 이주한 이들은 새로운 주거환경과 열악한 노동 현실에 직면하며 생계의 고난을 겪었다. 산업화 시기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이촌향도’ 현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서울은 이미 인구 폭증과 높은 생활 비용으로 새로운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안양과 같은 인접 위성도시들이 노동자들의 새로운 거주지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도시 외곽의 허허벌판이나 기존 자연마을 주변에 판자촌, 즉 ‘달동네’를 형성하였다. 비산동과 박달동 등지의 기존 취락이나 불모지가 달동네로 변모하며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으나, 이 지역들은 1980년대 말 평촌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거되거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며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근대화의 역군’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었다. 이는 울산, 마산 등 다른 공업도시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열악한 작업 환경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으며, 인권 유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불법 재하도급과 유명무실한 작업 계획서 아래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표 3〉 1975~1987년 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노동일수 및 노동시간 추이

연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주당 근로시간수
1975	25.4	219.2	50.5
1980	24.8	230.6	53.1
1982	24.9	233.4	53.7
1984	25.0	235.8	54.3
1986	25.0	237.7	54.7
1987	25.0	234.6	54.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86~1990.

1980년대 전반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1970년대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산업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일수는 1970년에 25.2일, 1975년에 25.3일에서 1980~1982년 24.6일로 줄어들었으나 1983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24.9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월평균 노동시간도 1970~1975년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198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87년에는 1970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도 1975년 50.0시간에서 매년 늘어나 1987년에는 51.9시간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는 이보다 더 길어서 1980년에 24.8일이었던 월평균 노동일수는 1987년에는 25.0일이 되어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 결과 주당 노동시간은 해마다 늘어서 1975년 50.5시간에서 1987년에는 3.5시간이나 늘어난 54.0시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노동자들에게는 법정 기준인 1일 8시간, 주당 48시간을 넘어 초과근로가 일상화하였다. 1980년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는 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에 밀도는 저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비를 보충하기 위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사용자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좀 더 적은 인원으로 장시간 작업을 강요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욱이 노동법령상 ‘당사자 간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에 주력한 나머지 노동시간 단축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노동시간 연장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1980년대 안양의 화천프레스에서 일했던 노동자 이시정은 1987년 노조 결성 이전까지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강제 잔업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잔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불만을 말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고, 잔업을 안 하면 관리자로부터 곧바로 회사를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한다. 잔업수당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계산도



1988년 호계동 화전프레스(이정범 제공)

영터리로 하여 수당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는 증언하였다.<sup>14</sup>

금성통신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금성통신 공장에는 아침마다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 대신 흥겨운 경음악이 울려 퍼진다. 근로자들도 연신 콧노래를 부르며 작업장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이 회사는 작년 여름부터 일과 시작 전인 아침 8시 20분에서 50분까지 30분간 전 직원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흥겨운 경음악에 맞춰 리듬체조를 실시하고 있다. 음악과 춤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셈이다. 아침 리듬체조를 실시한 이후 근로자들의 조퇴율이 10분의 1로 줄었고 불량제품 발생률, 안전사고 등이 눈에 띄이게 적어졌다는 회사관계자의 자랑이다.

월급만 제때 준다고 해서 작업능률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사소한 동기로 직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다.<sup>15</sup>

노동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



1976년 4월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금성통신 신공장 직원 체육대회(안양시청 제공)

주고 리듬체조를 추도록 하는 것에 정말로 보도기사처럼 노동자들이 “연신 콧노래를 부르며 작업장에 들어서는 모습”만 보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사 내용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의 다채로운 태도들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일상을 회사에 의해 ‘강요된 흥겨움’으로 채우는 시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안양의 도시공간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 정체성과 집단 의식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서울의 공장들이 안양으로 이전하며 대규모 노동력이 유입되었고, 이들은 도시 외곽의 달동네에 모여 살며 지리적 근접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집적은 노동자들에게 공통의 주거 불안과 열악한 삶의 조건을 경험하게 했으며, 이는 개인의 고통을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공유된 경험은 지리적 근접성과 결합하며 노동자들을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묶어 주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동질성은 노동상담소 설립과 같은 초기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가능했던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결국, 도시화가 낳은 주거 불안과 열악한 노동 현실은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삼영운수 안내원 생일파티(안양시청 제공)



1986년 동일방직 기숙사 반상회(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80년대 안양의 산업 생태계는 금성방직, 동일방직과 같은 대규모 굴뚝 공장과 함께 덕천마을 일대에 밀집된 봉제공장, 전자부품 조립 공장 등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 공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활력 뒤에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1988년 5월 21일에는 안양시 평촌동 소재 삼화왕관 인쇄과 노동자 정낙현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씨는 사장에게 보내는 유서에서 “17년간을 생산현장에서 불평 없이 근무했는데도 일급직으로 직급이 바뀌는 바람에 급여가 월 12만 5,514원이 줄어 들었다.”면서 회사 간부들에게 이같은 사정을 호소하자 “자꾸 그렇게 하면 청소부를 시키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유서에선 “회사가 막대한 순이익을 내면서도 종업원들에겐 이윤 배분이 전혀 없었다.”며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들의 불만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회사 측의 처사를 자세히 살펴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sup>16</sup>

그는 사장과 노동부장관 앞으로 유서를 보내서 열악한 노동자의 삶을 고발하였다. 그는 유서에서 “삼화왕관이 지난해 33억 원의 순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 대한 대우는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형편없다.”면서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시도했으나 회사 측의 적극적인 저지로 실패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이 1971년 입사한 이후 17년간 근속해 왔는데도 1987년 12월 1일 월급직에서 일급직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월 급여가 12만 5,000원이나 낮게 책정되었다면서 이는 회사가 인력 활용만을 목적으로 약자에게 횡포와 착취를 일삼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7</sup>

안양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뚜렷하게 보여 준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그린힐봉제공장 화재사건이었다. 1988년 3월 25일 안양시 비산1동 소재 그린힐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참혹한 삶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화재로 일에 지쳐 기숙사에서 잠들었던 22명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120평짜리 복합상가건물이었고, 건물 3층에 소재한 남성점퍼류 전문생산업체 그린힐섬유는 1986년 10월에 이 빌딩에 입주해 130여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연간 20만 장의 점퍼를 생산해 일본과 프랑스로 수출하는 회사였다. 사측은 30평의 면적에 8개의 기숙사방을 만들었다.<sup>18</sup> 노동자들이 생활하던 공간은 3.7평 남짓한 좁은 방으로 한 방에서 5~8명이 새우잠을 자던 불법 기숙사였으며, 폭력배의 침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쇠창살이 내려지고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 아침에 경비원이 문을 열

좁은복도 3層까지 원단더미

# 1시간불에 끔찍한 人命被害



화수리(경) - 좁은복도 3層까지 원단더미로 붕괴된 복도. 복도사이에 화염은 1시간 만에 확산되어 1시간 만에 3層까지 원단더미로 붕괴되었다. (경향신문 1988년 3월 25일)

## 대피하다 有毒가스 질식 非常口 잡겨 못 빠져 나와



【경향신문 1988년 3월 25일】 화수리(경) - 좁은복도 3層까지 원단더미로 붕괴된 복도. 복도사이에 화염은 1시간 만에 확산되어 1시간 만에 3層까지 원단더미로 붕괴되었다. (경향신문 1988년 3월 25일)

그린힐봉제공장 화재 현장(『경향신문』 1988년 3월 25일)

어 주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애초에 이 공장은 건물주로부터 사무실로 임대받아 공장으로 탈바꿈한 불법공장이었다. 사고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위법 건축물로 고발되었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그대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화재사고를 당했던 것이다.<sup>19</sup>

이 사건은 서울 구로공단의 '별집'과 유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여 주며, 당시 영세 제조업체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불법 운영을 자행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공장 내부 계단에는 인화성 물질인 케시미론 섬유가 쌓여 있었고, 유일한 출입구는 철재셔터로 닫혀 있어 여성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 없었다. 이처럼 안양이라는 도시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현대화'를 꾀하는 동안에도, 기존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악의 노동환경에 방치되었다.

우리 모임이 이러한 '직장 내 폭력 추방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접한 '안양 그린힐봉재 화재' 사건은 분노와 허탈감마저 안겨준 충격적 사건이었다. 스물두 명의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참혹함도 그러려니와 문이 밖으로 잠겨진 채 감금상태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그 처절함은 어찌 말로 표현이 가능하겠는가. 빛 3만 원을 갚을 길이 없어 국민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13세 때부터 이 공장에서 일해왔다는 15세의 이미영 양. 한창 뛰어놀고 책가방을 들고 다녀야 할 나이에 밤 10시까지 작업하고 지친 듯 빠진 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우리 사회를 무어라고 변명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단면과 노동현장의 전형을 보여 주며 또 '집 단살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인재(人災)임을 깨달았다.

〈최영희(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목인이 빛은 간접살인-안양 그린힐봉재 화재사건을 보고」, 『조선일보』 1988년 4월 12일〉

이 사건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한 기숙사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장 기숙사 외에도 노동자들은 '사글세'나 '월세' 같은 주거 형태에 의존하였다. 사글세는 계약 기간의 월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는 방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었다. 이는 당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없었을 보여 준다.

註

- 1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34쪽.
- 2 권용우·박지희, 「안양시의 도시화와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2집 4호, 1998, 31쪽.
- 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1권, 2008, 55쪽.
- 4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37쪽.
- 5 「달라지는 서울변두리(6) 급성장 위성도시 안양, 부천, 성남」, 『동아일보』 1987년 7월 2일.
- 6 「안양 시흥 272만 평 택지 개발」, 『경향신문』 1988년 9월 16일.
- 7 「안양 평촌지구에 대규모택지」, 『동아일보』 1986년 4월 2일.
- 8 「아세아제지 청주 대단위공장 건설」, 『매일경제신문』 1987년 1월 6일.
- 9 「직장폐쇄·폐업 부쩍 늘어」, 『한겨레신문』 1988년 5월 20일.
- 10 「회사 이전 반대 철야농성 안양전자 노동자 등 2백명」, 『한겨레신문』 1988년 7월 12일.
- 11 「수도권 무허가 공장 최대한 양성화 방침」, 『동아일보』 1989년 9월 16일.
- 12 박동, 「한국노동운동의 리더십 형성에 관한 연구-87~89년 울산, 안양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19쪽.
- 13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54쪽.
- 14 「이시정 2차 구술녹취록(2024년 9월 19일)」, 『안양지역 노동 관련 구술조사 결과보고서』, 2024, 72~73쪽.
- 15 「즐거운 직장 만들어 능률 올린다」, 『동아일보』 1985년 1월 19일.
- 16 「월급근로자 돌연 일급제로, 40대 항의 자살」, 『경향신문』 1988년 5월 23일.
- 17 「삼화왕관 근로자 목매 자살」, 『한겨레신문』 1988년 5월 22일.
- 18 「좁은 복도 3층까지 원단 더미, 1시간 불에 끔찍한 인명피해」, 『경향신문』 1988년 3월 25일.
- 19 「사설: 인간존중의 산업환경을」, 『동아일보』 1988년 3월 26일.

## 제2장

# 1980년대 안양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소비·여가 생활

---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1. 1980년대 안양 노동자의 임금소득 변화

1980년대 한국경제는 1970년대 고도성장의 연장선상에서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압축 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장기간 고성장을 유지한 사례로 평가되며, 한국이 선진 공업국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성장은 가구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 또한 분명히 존재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2~2008년에 가구당 평균 실질 가처분소득은 3.6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는 경제 호황과 수출 증가, 3저(저유가·저달러·저금리)현상의 결합으로 가계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986년에 약 122만 원에 불과했던 가구 소득은 1994년 241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민 생활의 물질적 기반을 일정 부분 강화시켰다. 또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도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연평균 22.1%라는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여 명목상으로는 ‘임금의 고도성장기’로 불릴 만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 지표가 모든 노동자에게 균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거시 경제 통계가 보여 주는 전반적인 성장 이면에는 여전히 열악한 현실이 존재하였다. 일부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노동자 계층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의 수혜를 불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다양한 집단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거시적인 경제지표와 미시적인 개별 노동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데



1987년 (주)삼풍(안양시청 제공)

필수적이다.

1980년대 한국의 경제는 초반의 불황과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계속 확대되었고 산업구조는 고도화하였다. 아울러 자본의 집중과 집적도 보다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금노동자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노동자 내부 구성도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1차 산업 취업자의 비중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조업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1980년 14만 6,684원에서 1987년 32만 8,696원으로 통계로는 2.2배 상승하였으며 연평균으로는 13.6%씩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임금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은 1980년, 1981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1980~1987년에는 연평균 5.0% 증가에 그쳤다.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1980~1987년 소비자물가는 매년 8.9%씩 상승하였다. 1983년 이후의 물가통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강력한 가격 규제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물가보다 낮게 평가된 한편 같은 기간에 노동생산성은 매년 12.8% 증가함으로써 실질임금

상승률보다 매년 7.8%나 웃돌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실질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7.2%보다 2.2%나 낮았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전반기 명목임금의 상승률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실질임금은 1980년과 198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그 후로는 매년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실질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돌면서 노동의 성과는 노동자들에게 재분배되지 못했고, 자본은 이를 원천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표 1〉 1980~1987년 임금 및 관련 지수 추이(전 산업)

연도	명목임금			소비자물가	
	금액(원)	지수	상승률(%)	지수	상승률(%)
1980	146,684	100.0	22.7	100.0	28.7
1981	176,176	120.1	20.1	121.3	21.3
1982	202,117	137.8	14.7	130.1	7.3
1983	226,790	154.6	12.2	134.5	3.4
1984	245,261	167.2	8.1	137.6	2.3
1985	269,652	183.8	9.9	141.0	2.5
1987	294,485	200.8	9.2	141.2	2.3
1987	328,696	224.1	11.6	145.6	3.1
연평균	-	-	13.6	-	8.9

연도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경제 성장률(%)
	지수	상승률(%)	지수	상승률(%)	
1980	100.0	-4.6	100.0	10.7	-5.2
1981	99.0	-1.0	118.1	18.1	6.6
1982	105.9	7.0	127.3	7.8	5.4
1983	114.9	8.5	144.6	13.6	11.9
1984	121.5	5.7	159.8	10.5	8.4
1985	130.4	7.3	171.1	7.1	5.4
1987	142.2	9.0	194.4	18.0	12.5
1987	153.9	8.2	262.6	16.5	12.9
연평균	-	5.0	-	12.8	7.2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8-1991. 통계라는 점에서 실질임금 증가율은 지수의 그것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이 전년보다 12-15% 인상된 안양 노동자(『안양상의보』 1982년 5월 1일)

1980년대 임금노동자수는 1970년대에 비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1970년대 말 50%를 웃도는 수준에서 1980~1982년에는 47% 수준으로 떨어졌고, 1983~1986년에도 49%대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임금소득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1980년대 전반기 내내 노동력의 재생산마저 어려운 적자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표 2〉 1980~1987년 노동자 임금과 생계비 비교(전 산업)

구분	1980	1982	1984	1986	1987
명목임금(A)	176,058	245,981	296,907	350,965	386,536
가계지출(B)	183,578	255,416	312,415	369,366	425,151
가구당 최저생계비(C)	321,408	434,527	501,767	538,774	600,086
가구당 취업자수(D)	1.31	1.27	1.28	1.36	1.4
임금의 가계지출 총당률(A/B)	95.9	96.3	95	95	90.9
가구당 최저생계비 총당률(A×D/C)	71.8	71.9	75.7	88.6	90.2
가구원수	4.54	4.39	4.24	4.11	4.04

자료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경제론』, 1991, 375쪽.

전체 산업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75년 4만 6,019원에서 1980년 17만 6,058원으로 올랐고, 1987년에는 38만 6,536원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도시노동자 가계지출은 1975년 5만 9,480원에서 1980년 18만 3,578원으로 올랐고, 1987년에는 42만 5,151원으로 치솟았다. 1987년까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가계지출액에 항상 못 미쳤다. 명목임금이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총당할 수 있는 비율을 보면 1975년 57.2%에서 1980년에 54.8%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다시 높아졌지만 1987년까지 그 비율은 64.4%에 머물고 있다. 이를 가구당 취업자수로 보정한 가구당 최저생계비 총당률을 보면 1980년 71.8%에서 1984년 75.7%로 소폭 증가했다가 1986년 88.6%, 1987년 90.9%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계획 정책의 효과로 가구원수는 줄어들고, 3저 호황 등에 힘입어 가구당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1980년대 전반기 노동자 가계는 가구주의 임금으로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총당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가계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가족들이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였다. 그 결과 가구당 취업자수는 가구원수의 감소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는 줄어들지만 198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1987년 1.4명으로 늘어났다.



동일방직 생산직 여자사원 모집 공고(안양박물관 제공)

이와 같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마저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은 피폐한 생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기에 노동자들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 전월세값 폭등으로 주거난에 시달려야 했고 내구소비재의 독점가격 인상이나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 시행에 따른 지출 증가로 가계의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결여된 상황에서 정년퇴직, 산업재해, 질병 등에 나타난 노동력 상실을 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값싼 상품을 구입하여 생활해야 했고, 많은 경우 소비 자체를 줄이고 문화생활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이정묵은 1986년 8월부터 9월까지 안양 제조업체 중 표준업체에 해당하는 25개 사업체의 생산기술직, 단순노무직, 사무직 근로자 576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여 노사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생활 수준에 관한 인식을 질문했는데, 중·하류층(40.6%)과 하류층(35.1%)에 속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5.7%로 대다수 노동자들이 중류 이하의 생활 수준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답변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고, 중·상류층이라고 답변한 노동자는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6%를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53.6%가 월평균 30만 원 이하의 수입이고, 월 30만~40만 원인 노동자가 30.4%인 점에 비춰볼 때 이러한 인식은 수입 수준과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급여별로 자세히 보면 10만 원 이하의 수입을 받는 이들은 모두 자신을 중·하류층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만~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자신의 생활 수준이 중하류층이라는 응답이 74%를 나타내었다. 3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 가운데 72%가 중하류층이라고 응답하였다.<sup>1</sup> 또한 생산기술직 노동자 377명 가운데 응답자의 7.8%인 297명이 중하류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들이 임금수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문항 중에는 저축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주택 마련이 30.4%, 자녀 교육이 27.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급여 수준에 따른 저축의도를 살펴보면,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에 생활필수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녀교육과 노후 및 생활보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 급여 수준이 20만~40만 원인 경우 주택 마련을 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이 이들의 커다란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수입에 대한 저축 비율을 살펴보면 안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26.7%가 자신의 수입 가운데 30~40%를 저축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성실한 노동자들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2</sup> 그러나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저축을 하고 있었고, 대체로 노동자들의 저축 수준은 월 급여의 30%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월급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노동자들의 저축률을 직종별로 보면 생산기술직은 30~40%를 저축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이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들의 급여 수준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사무직의 경우 응답자의 90% 이상이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반증한다.

문항 중에는 월정 수입 이외에 특별수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현상은 소비성향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금 월급 이외의 거액의 수입이 생겼다면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몇 가지 소비대상을 제시하였다. 가장 높은 답변률을 보인 것은 ‘주택 구입 및 부동산투자(46.4%)’였고, 그다음은 ‘은행예금·증권투자’로 27.1%였다. 주목되는 것은 세 번째 많은 응답이 ‘취미와 기타’에 사용(13.0%)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부채의 정리나 자동차·가전제품 구입보다 앞서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의식구조는 생활을 즐기는 데 관심을 크게 기울이기 시작하여 보다 많은 여가를 위한 취미활동 등에 특별수입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빚을 정리하겠다는 응답도 8.9%로 나타나고 있는데, 월정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들이 다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이를 직종별로 보면 생산기술직은 주택 구입, 은행예금, 취미의 순으로 응답자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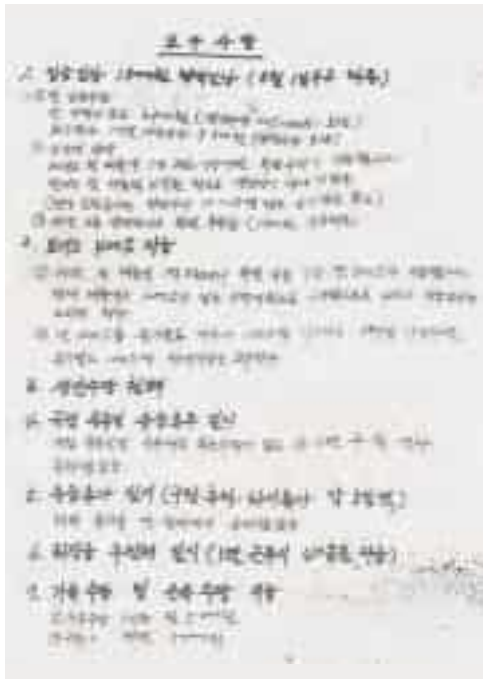
타났으며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주택 구입, 은행예금, 빚 정리의 순으로 나타나 단순노무직 노동자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1986년 무렵 안양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종별·급여별 분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임금’이 20.7%인 반면, ‘여가 즐길 여유 없다’가 36.5%에 달하였다. 이는 하루 표준노동시간인 8시간을 상회하는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종별로 나눠서 보면, 생산기술직의 경우 여가시간 부족, 내 집 마련 어려움, 저임금, 작업환경 악화 순으로 고충을 표현하였다. 단순노무직은 작업환경 악화보다는 저임금과 내 집 마련 어려움이 큰 고충이며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도 단순노무직과 비슷하나 여가시간 부족이 가장 큰 고충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었다.

급여별로 보면 40만 원 이상의 급여자들에게는 여가시간 부족이 가장 큰 고충이며, 30만~40만 원의 급여자들은 여가시간 부족과 내 집 마련을 꼽고 있었다. 20만~30만 원의 급여자들은 저임금을 가장 큰 고충으로 여기고 있으며 여가시간 부족, 내 집 마련도 같은 고충으로 표현하였다. 20만 원 이하의 급여자들은 여가시간 부족과 저임금, 내 집 마련의 순으로 고충을 느꼈다.<sup>4</sup>

임금 인상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도 있었는데,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견해는 “임금 인상은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 간에 자율 조정될 문제”로 인식하는 것(51.9%)이었다. 이는 개별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산성 임금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 수준으로는 생활이 곤란하므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33.7%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생활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임금이 인상되어야만 생활이 가능하며, 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심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제 발전과 물가안정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10.9%의 응답이 있었다.

이를 직종별로 보면 생산기술직이 “임금 인상은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 간에 자율 조정될 문제”라는 생산성 임금제를 53% 지지했고, “현 수준으로는 생활이 곤란하므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34% 지지하였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생산성 임금제에 대한 지지와 임금 대폭 상향 조정에 대한 지지가 비슷했으나 생산성 임금제 지지가 약간 더 높았다.<sup>5</sup> 사무직의 경우에도 생산성 임금제를 59%나 지지해 직종별 구분 없이



1988년 유신중전기 노사 간 임금인상 합의서

생산성 임금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별로 볼 때도 같은 분포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급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성 임금제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업적이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뚜렷하게 무언가 성취한 일이 적다고 느끼는 견해도 있었다.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타협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라는 대답이 17.9%, “존재가치를 못 느끼며 정책적 참여이다.”라는 응답이 16.5%에 달하였다.<sup>6</sup> 노동조합에 대한 직종별 견해를 보면, “꼭 필요하며 그 조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생산기술직의 60%, 단순노무직의 52%, 사무직의 40%가 각각 응답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임금수준인데, 전 산업 월평균 임금 총액은 1987년 38만 7,000원에서 1990년 64만 2,000원으로 3년 사이에 1.66배가량 증가하였다. 물론 이 기간에 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명목임금 증가가 곧바로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개선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물가상승률

은 1988년 7.1%, 1990년 8.5%에 달할 만큼 1980년대 전반기의 물가안정 기조가 깨지면서 이 시기 명목임금 증가율 대비 실질임금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2. 1980년대 노동자들의 소비문화

소득 증가는 노동자들의 소비 패턴에 질적인 변화를 촉발하였다. 과거의 생존형 소비에서 벗어나, 미래 소득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는 ‘과시적 소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토지와 주택 등 자산 가격과 임금의 상승이 가계 소득 수준을 크게 높였고, 이는 소비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소비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6년 신용카드 제도의 도입 등 소비자 금융이 확대되면서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증가가 아니라,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의 소비는 ‘얼마를 벌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도성장이 개인의 경제 행위에 부여한 새로운 동력을 보여 주며, 1980년대 후반 소비문화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안양은 수도권 공업벨트 남측 거점이자 노동인구가 밀집한 산업도시로서, 공장지대와 구도심 상권, 그리고 안양유원지로 대표되는 휴식공간이 한 생활권 안에서 맞물려 있던 도시였다. 공단노동자들의 소비와 여가는 공장 근무 형태와 임금·주거 조건, 도심 상권의 발달, 노동자 조직문화의 성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전후로 해 노동조합·상담·야학과 같은 조직적 문화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노동자의 일상과 여가도 집단적 성격을 띠고 공적 공간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도드라졌다.

공장지대-구도심-유원지가 맞물린 구조 1970년대 이후 서울 제3공단의 포화와 함께 각종 제조업이 안양으로 이전했고, 1980년대 안양은 제지·전기·전자·기계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혼재한 공업도시 위상을 굳혔다. 이러한 환경은 역세권 상권(안양역-안양1번가)과 재래시장(중앙시장·명학시장) 활성화, 그리고 주말·여름철 가족 단위로 몰리는 안양유원지라는 삼각형의 일상 동선을 만들었다. 특히 안양유원지(현 안양예술공원)는 1950년대부터 계곡 수영장과 위락시설이 들어서며 수도권 시민의 피서지로 성장했



1970년대 안양백화점(안양시청 제공)

고, 1970~1980년대에 교통 접근성을 업고 가족·직장 단위 나들이가 집중되는 여가 허브로 기능하였다. 도심 쪽에서는 안양1번가가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았고, 명학시장은 1979~1980년 분양 광고가 일간지에 여러 차례 실릴 정도로 상업적으로 부상하며 생활 필수품과 식재료, 소소한 오락과 외식을 감당하는 저렴한 소비 거점이 되었다.

안양 노동자의 소비생활을 확인하기 전에 안양 유통업의 성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안양시 유통업의 성장을 상업지역의 확대에서 살펴보면, 1972년 상업지역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안양1동과 안양4동에 집중 분포하고, 주요 교통로를 따라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1981년에는 중앙대로와 전철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안양1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으로 확장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안양시의 도·소매업 점포수를 보면, 1973년 도·소매점수는 1,187개에서 1981년 4,199개로 연평균 31.8%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크게 증가한 동은 관양동, 안양6동, 평촌동, 박달동으로 주변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 지역은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강화되는 곳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도·소매업의 성장이 크다. 반면에 안양1동과 안양4동은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이지만, 1973년 이전에 이미 상업기능이 집적되어 있었다. 남부시



1980년대 안양 중앙로(안양시청 제공)

장과 안양중앙지하상가가 밀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백화점의 설립으로 상업활동이 누적되어 핵심 상업지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도시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자본과 시설이 투자 축적되고, 그에 따른 집적이익이 커짐에 따라 안양시 상업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안양의 생활 소비는 중앙시장·명학시장과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명학시장은 1979~1980년 분양 공고가 연달아 실릴 정도로 상업 기능을 확장했고 (이는 1980년대 초중반 상권 성숙으로 이어짐), 서민 지향 점포들이 밀집해 노동자 가구의 일상 소비를 떠받쳤다. 전자·의류·잡화 등 상품 구매와 간단한 외식, 간식 소비가 결합한 '시장형 여가'는 장보기와 소규모 오락이 뒤섞이는 노동자 생활의 기본 장면이었다.

1980년대 안양에는 안양본백화점(1983년)과 벽산쇼핑센터(1985년)가 차례로 개점하며 현대적 소비공간을 제공하였다. 안양본백화점은 개점 당시 전국 백화점 매출 순위 10위권에 들 만큼 인기가 많았으며, 서울로 쇼핑을 가던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한 장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현대식 시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안양에는 관양시장, 박달시장, 안양중앙시장 등 전통적인 시장도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관양시장



1980년대 중반 안양역전(안양시청 제공)

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와 과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며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였다.

1980년대 안양의 소비 지형은 백화점과 대형 쇼핑센터로 대표되는 현대적 소비문화와 전통시장으로 대변되는 서민적 소비문화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였다. 이는 노동자 계층이 구매력에 따라 서로 다른 소비공간을 이용하며 삶의 양식이 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안양은 전통적인 생산 도시에서 소비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삶에도 새로운 소비 욕구와 경제적 한계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역세권의 안양1번가는 안양역 유동인구를 흡수하며 음식문화와 오락 업종이 번성했고, 이는 퇴근 후 짧은 시간대 소비와 친구·동료 모임을 소화하는 “저녁형 상권”으로 작동하였다. 안양의 노동자들은 고단한 노동의 현실 속에서 여가와 소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다. 그 중심에 바로 안양1번가가 있었다. 안양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안양1번가는 1980년대부터 떡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안양의 대표 상권이였다. 1978년 개장된 안양중앙지하상가와 1982년 개장된 안양역전지하상가는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로 연결되며 상업활동의 중심을 형성하였다.



1980년대 안양중앙시장 일대 상권(안양시청 제공)

안양1번가는 활기와 동시에 불안정한 치안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1988년 안양1번가 앞 벽산사거리에서 조폭들이 공기총 총격전을 벌인 사건은 당시 안양1번가의 치안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지 못하는 과도기적 혼란이 낳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었다. 노동자들은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을 영위하는 도시공간에서 언제든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었다.

가계 소비구조의 '질적 변화'를 대표하는 엔젤계수(식료품비 비중)는 1980년 43.2%에서 1990년 35.0%로 하락하였다. 1980년대 한정으로도 10년 사이 식료품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은 노동자 가계의 가치분소득 여력이 커지고, 교통·주거·교육·문화·오락 등 비식료·서비스 지출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안양처럼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높고 서울·수도권 소비권역에 접한 도시의 경우, 1987~1989년 임금 레벨업과 결합하여 내구재(가전·가구) 구매, 교육투자, 주거 상향 이동(전세 전환과 주택 마련) 및 외식·대중문화 소비가 동시에 늘어났다. 시·군 단위의 품목별 보급률을 특정해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앵겔계수의 하락 폭과 수도권 소득·물류 접근성을 감안하면 ‘소비의 서비스화’와 ‘생활의 광역권화’가 동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생활의 ‘단백질 구성’과 외식문화 1980년대 한국인의 식생활은 곡물 중심에서 동물성 식품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1980~2005년 시계열 자료를 보면, 1인 1일 단백질 섭취량 중 동물성단백질 비중은 1980년에 28.7%였고 1990년에는 39.8%로 상승하였다. 이는 소득 증가와 도시 생활 양식의 확산, 외식·가공식품의 침투로 설명된다. 동 시기 총열량, 총단백질, 동물성단백질 수치도 함께 늘거나 구성 변화를 보이며 ‘고단백·다양화’ 경향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식생활 변환은 가계지출 구조에서 식료품 내 구성과 외식·서비스 지출의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나 노동자의 소비 범주를 넓혔다.

소득 상승과 함께 ‘빠른 식사’에 대한 수요가 늘며 패스트푸드·프랜차이즈 외식업이 도시권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정확한 체인별 수치가 본 분석의 사료 범위에는 제한적으로 남아 있으나, 1980년대 중후반 ‘간편한 식사·간식’의 도시 보급은 노동자의 교대·잔업 패턴과도 결합해 접근성 높은 소비공간을 형성하였다. 식생활 자료의 구조 변화(동물성 비중 상승)는 이 같은 외식·가공식의 생활 침투를 가리키는 지표로 함께 읽을 수 있다.

가전·미디어 소비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파급 전국적으로 1980년대는 대중 소비와 매스미디어 문화가 본격 확대된 시기였다. 1980년대 노동자들의 소비생활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킨 요인 중 하나는 1980년 12월 1일 시작된 컬러텔레비전 방송이었다. 1979년에 이미 전체 가구의 78.5%에 보급되었던 TV는 1981년에는 80%를 넘어설 정도로 필수 가전이 되었다. 이러한 TV 보급 확산과 맞물린 컬러 방송의 등장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컬러TV의 등장은 광고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식품, 화장품, 패션 등 색상 효과가 중요한 분야는 컬러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신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촉진하였다. 나이키 광고는 상품 정보보다 세련된 영상과 감성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며 ‘신세대’의 소비 패턴을 공략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통제를 목적으로 시작된 컬러 방송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본주의적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새로운 소비문화와 욕망을 창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 컬러TV 방송 개시 이후 TV 보급의 확산과 시청 환경의 변화는 노동자의 여가를 ‘가정 내 스크린’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컬러 전환은 가족공동체의 여가를 TV 중

심으로 모으는 데 결정적이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VCR 보급과 '비디오방'의 등장까지 이어지면서 영상콘텐츠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안양도 수도권 공업도시라는 조건상 이러한 소비재·오락의 침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었고, 노동자 가구의 가전·오락 소비가 생활의 질과 위신을 가늠하는 상징 자본으로 작동하였다. 1980년대 대중 소비 확산이라는 거시적 추세가 안양 상권을 통해 지역 생활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양1번가·명학시장 인근의 전파상·가전점, 그리고 비디오·오락 관련 점포는 노동자 임금 성장과 상호 작용하며 주말·월말 소비와 맞물렸다. 특히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전국적 매체·오락의 발달은 지역 상권 업종 재편과 야간·주말 유동량 증가로 직결되었다.

1989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2/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소비동향'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한 가구(평균 인원 3.98명, 취업인구 1.42명)의 월평균 소득은 76만 4,900원으로 1년인 1988년 2/4분기보다 26.2%(15만 8,700원) 늘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5.8%를 뺀 실질소득은 19.4%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9년 2/4분기 중 월평균 가계 지출은 60만 1,800원으로 1988년 2/4분기의 44만 9,400원에 비해 33.9%나 증가하였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가계 흑자율'은 1988년 2/4분기의 28%에서 1년 사이에 23.2%로 떨어졌다.

가계수지가 나빠지는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고 사들이고 즐기는 데 쓰는 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1989년 2/4분기의 승용차 구입 및 수리유지비는 1988년 2/4분기보다 327.5%, 외식비는 72%, 교양오락비(비디오 및 오디오 구입 등)는 58.8% 증가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방진료비가 117% 증가했고 자녀교육비도 53.1%나 증가하였다. 월평균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액은 17만 3,100원으로 1988년 2/4분기보다 23.8% 증가했으며, 이것도 주식(主食)보다는 주로 부식, 과일, 생선 등의 구입 확대와 외식비 증가 때문이었으며 전체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는 32.1로 1988년 2/4분기의 34.7보다 2.6포인트 낮아진 것이었다.<sup>7</sup>

1980년대의 소비생활은 다양한 상징적 품목들로 정의된다. 흔히 '가전 3신기'라 불리는 TV, 냉장고, 전화기는 이제 더 이상 사치가 아닌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패션에서는 통이 넓은 나팔바지나 항공 점퍼 같은 복고풍 스타일이 유행하며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먹거리에서도 흥미로운 소비 양상이 나타났다. '분홍 소시지'와 같은 저렴한 가공식품은 여전히 서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보편적인 음식이었지만, '참치캔'의 사례는 소비가

계층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참치캔은 초기 생산 비용이 높아 고가였기 때문에, ‘선진국형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중상류층을 집중 공략하는 고급화 전략을 취하였다. 특히 명절 선물 세트의 절대 강자로 등극하며, 소비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행위를 넘어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상징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화려한 소비문화와 물질적 풍요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미성숙한 소비사회의 어두운 이면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고춧가루, 위해 콩나물, 가짜 한우 꼬리 등 저품질 및 불량 식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된 병과류 또한 유통되었다. 이는 1980년대가 경제적으로는 고도성장기였지만, 식품 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은 아직 미비했던 과도기였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이다.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운 소비생활과 그 이면에 감춰진 불량상품의 존재는 1980년대 소비문화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고도성장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음을 입증한다.

노동자들의 여가시간 확보와 관련해 노동시간의 감소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 1989년 법정근로시간이 주 48→44시간으로 단축되며(사업장 규모별 단계 시행) 장시간 노동의 구조가 균열을 보였다. 1980년대 후반 노동시간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86년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734시간, 월간 227.8시간, 주당 52.5시간을 나타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여 1989년 이후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대로 접어들었다. 이는 1987년 이후 초과근로의 선택권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고 초과근로 시에 기업은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로 노동시간은 1986년 주52.5시간에서 1990년 주48.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 3. 1980년대 노동자들의 여가 생활

도시화는 노동자들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 공동체 문화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여가 공간과 문화 활동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S 정책은 정식 명칭이 아닌 통칭으로,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에 대한 반발을 ‘우민화’하려 했다는 비판적 맥락에서 쓰인다. 스포츠(프로야구 출범과 프로스포츠 활성화),

스크린(검열 완화·소극장 허용), 섹스(성인영화 범람과 비디오 시장 확대)가 결합된 문화 환경은 노동자의 여가 선택지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다만 ‘정권 의도’와 ‘대중 행위’ 간에는 간극이 컸고,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화는 오히려 해방감과 결사 의지를 복돋우기도 했다. 즉, 3S는 억압과 개방의 혼재 속에서 ‘소비되는 여가’의 대중적 인프라를 형성했고, 이는 노동자의 일상 여가를 규칙적으로 지지하는 시설·콘텐츠로 축적되었다.

1980년대 여가는 남성 대공장 노동자에게 프로스포츠, 회식, 오락실, 당구장 등 ‘집단적·외향적’ 경향을, 여성·청년에게는 TV, 비디오, 동네오락실, 소규모 문화공간 등 ‘가까운 여가’ 경향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보였다. ‘청소년 보호’ 프레임은 오락실 규제와 낙인을 강화했고, 여성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으로 여가시간 확보가 제약되는 경향이 컸다. 그럼에도 TV와 비디오 같은 가정 기반 미디어는 성별·연령별 여가 격차를 완화하는 ‘문턱 낮은 접근성’을 제공하였다. 제도·담론의 층위에서는 3S와 검열 완화가 대중문화의 보편화를 이끌었고, 노동자층 내부의 차등 접근과 동시에 ‘공유 레퍼토리’를 형성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문화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까지 호계동과 만안교 등지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답교놀이’와 같은 마을 축제가 성행했으나, 급속한 도시화는 이러한 지리 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약화시켰다. 박달동에서는 1970년대까지 ‘산신제’가 지내지기도 했지만, 이 역시 도시의 확장과 함께 점



차 사라져 갔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도시형 여가공간이 부상하였다. 1980년대 노동자들의 여가 활동은 소득 증대와 함께 더욱 다양해졌다. 가장 보편적인 여가 활동은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이었으며, 도시 젊은이들에게는 음악다방과 만화방이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음악다방은 가정에 오디오 시설이 없던 시절, 음악을 공유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살롱’ 역할을 했다. 만화방은 “1980년대 청년들의 PC방이자 노래방”으로 불리며 중요한 소통의 장 역할을 했다. 1980년대에는 다방, 커피숍, 전통찻집이 구분되기 시작하며 다방이 주간의 주요 만남의 장소로, 야간에는 술집이 주요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안양1번가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음악다방’이 젊은이들의 주요 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끌었다. 통기타, 장발, 나팔바지가 유행하던 시절, 음악다방은 인기 DJ의 멘트와 신청곡을 들으며 획일화된 공장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성을 나누는 곳이었다.

1980년대 후반 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흐름은 ‘휴무의 정례화’와 ‘소득 여유’라는 두 축을 통해 근교여가(계곡물놀이·등산·공원 산책), 도심 문화소비(극장·시장)로 이어졌다. 안양시는 이후 2000년대 중반 공공예술프로젝트(APAP)를 도입하며 유원지의 정체성을 ‘안양예술공원’으로 재구성했는데, 이 변화는 1970~1980년대 축적된 생활권 여가의 기억과 공간적 자산이 문화도시 전략으로 승화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989년 주 44시간제 도입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실제 노동시간이 장기적으로 감소세에 들어서면서(주 50시간 내외로의 수렴) 주말·저녁 시간대 문화소비의 보편화가 가속화되었다. 안양의 경우, 철도·도로망을 통한 서울·수도권 문화권 접근성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안양은 1980년대 제조업 집적지이자 수도권 소비·문화권역과 밀접히 연결된 도시였다. 공업벨트의 숙련 노동자·기술자층과 서비스·상업기능의 확대는, 임금상승 이후 ‘직장 인근 내구재·교육·교통·외식·문화’ 소비의 복합적 확대를 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행과 관광이 새로운 여가문화로 부상하였다. 단체 관광은 1980년대 초부터 경주, 한려해상국립공원, 서울, 제주도 등 전국 각지로 이어지며 큰 인기를 얻었다. 안양유원지(현 안양예술공원)은 계곡·수영장·위락시설이 확충되며 수도권 대표 피서지로 기능했고, 1960~1980년대 여름철이면 서울·안양·수원 등 근교 시민이 대거 몰렸다. 안양유원지(현 안양예술공원) 같은 생활권 여가 거점은 임금 상승과 주 44시간제 도입 이후 ‘근거리 짧은 여가’의 수요를 흡수했고, 철도·도로 접근성은 서울

중심의 대중문화(영화·공연) 소비와 주거·교육의 상향 이동과 동시에 작동하였다. 교통 접근성(전철·열차·버스)이 편리해 가족 단위 피서지로서 인기를 누렸고, 인근에는 관광호텔·방갈로, 식음료·매점 등이 촘촘히 들어서 '놀이-휴식-소비'가 한 장소에서 순환하는 전형적 여가 경계를 이루었다. 1980년대 안양관광호텔 수영장은 안양유원지 수영장과 함께 대중적 이용이 활발하였다.

여가 퇴근 이후·주말의 근거리 여가는 역세권과 재래시장 인근의 다방·만화방·당구장·목욕탕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안양 고유 업소명·주소를 체계적으로 모은 목록은 제한적이지만, 1980년대 대중목욕탕은 전국적으로 급증했고(연간 인허가 400건 내외, 1982년 2,000곳, 1984년 3,000곳 수준) 도심·주거지 인근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안양 역시 구도심·역세권 상권과 공장지대 사이에 '마을탕' 형태의 대중목욕탕이 성행하며 노동자의 피로를 풀고 동료 간 교류를 도모하는 생활 커뮤니티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방·만화방·당구장은 저렴하고 체류시간이 긴 공간으로서, 임금일·주말에 맞춰 이용 피크가 형성되는 전형을 보였다.



1980년대 노동자들의 음악 모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그러나 모든 여가 활동이 모두에게 열려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여가 활동은 이제 계층적 지위를 드러내는 사회적 표지가 되었다. 저소득 계층은 휴식, TV 시청, 전통적인 오락과 같은 여가에 머물렀지만,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스키, 골프, 해외여행과 같이 '높은 소비성과 사치성이 내포된 여가 양식'을 추구하였다. 이는 1980년대의 경제 성장이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불평등을 낳았음을 시사한다.

노동자들의 여가에 대한 보수적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4년 안양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여가 활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해 본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총 219명 중 “아직 우리에게 맞지 않다.”가 62명(28.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창조적인 활동, 의욕 고취”가 48명(21.92%),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43명(19.63%), “휴식을 취하는 것” 37명(16.8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1명(0.46%)으로 가장 적었다.<sup>8</sup> 여자의 경우에는 총 317명 중 “아직 우리에게 맞지 않다”가 89명(28.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창조적인 활동, 의욕 고취가 79명(24.92%), 나들이 여행을 하는 것 60명(18.92%), 휴식을 취하는 것 55명



1980년대 안양관광호텔 풀장(이정범 제공)

(17.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2명(0.6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아직 우리에게겐 맞지 않다.”를 많이 선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가라는 것 자체를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sup>9</sup>

이 조사에서 안양시에 근무하는 제조업체 노동자들은 평일에 실시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 남자는 총 219명 중 라디오, TV 시청이 81명(36.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과의 시간 47명(20.55%), 각종 스포츠 18명(8.22%), 장기, 바둑 17명(7.83%), 동료와 친구의 대화 16명(7.31%), 독서 15명(6.85%)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총 317명 중 라디오, TV 시청이 86명(27.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독서 80명(25.24%), 가족과의 시간과 잠을 자거나 사색 27명(8.52%), 음악, 미술 감상 24명(7.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일에는 라디오 및 TV 시청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독서, 잠을 자거나 사색,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 등 주로 실내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

안양시에 근무하는 제조업체 근로자의 토요일 실시 여가 활동은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 536명 중 라디오 및 TV 시청이 102명(19.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동료 및 친구와의 대화 83명(11.38%), 가족과의 시간 58명(10.82%),



1982년 삼영운수 야유회(안양시청 제공)

연극, 영화, 음악회 56명(10.45%)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연극, 영화, 음악회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지쳐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앉아서 하는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휴일의 경우는 1위가 바뀌게 되는데, 총 536명 중 종교 활동이 73명(13.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라디오, TV시청 69명(12.87%), 영화, 연극, 음악회 55명(10.26%), 가족과의 시간 50명(9.32%), 등산 48명(8.95), 쇼핑 44명(8.20)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0</sup>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지쳐서 대체로 동적인 여가 활동보다 정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는 노동자가 대다수이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이후 주어지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절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못함을 의미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회사 측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여가 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안양 지역의 경우 45개 업체에서 발생했던 분규가 모두 끝나고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분규 기간 중 380만 달러의 수출 감소와 함께 가동률도 급격히 떨어졌다. 수치상의 타격은 다른 지역에



1987년 유신중전기 노동자들의 등산(진승일 제공)

비해 덜한 편이지만 생산성 저하·채산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전례 없이 혹독한 홍역을 치르고 난 이 지역 생산현장은 요즈음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고 보다 활기찬 직장을 만들겠다는 의욕에 넘쳐 있다.

근로자들은 분규 기간 중 밀렸던 일을 하느라 야간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좀 더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도처에서 엿보인다.

“일감만 있으면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을 스스로 연장하자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분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열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여 일간 심한 분규를 치렀던 만도기계 안양공장 황창배 생산관리부장의 얘기다. 이 같은 근로자들의 진지한 작업 태도에 맞추어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복지·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즘에는 부서별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 등산대회나 체육대회를 갖도록 하고 있지요.” 회사 측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각종 서클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만도기계 안양공장 생산관리부장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등산대회나 체육대회를 갖도록 하고 각종 서클 활동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측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자들의 여가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이었다.

1980년대 노동자들의 여가 생활은 단순한 소비나 휴식에 그치지 않았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이 노동현장으로 투신하면서, 노동운동은 변혁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문화는 투쟁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본과 권력이 제시하는 상업적 여가 문화에 맞서 스스로의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중가요가 상업화되는 흐름 속에서 민중가요와 노동가요는 억압된 사회 내부의 욕구를 분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마당극도 노동운동의 예술적 표현으로 기능하며, 대중 집회에서 정치적 선전과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노동자들에게 단순한 유희를 넘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집단적 연대 의식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노동자 문화패와 같은 단체들은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으로 문화운동을 자리 잡게 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안양근로자회관은 가톨릭노동청년회(JOC) 교육, 노동상담과 공간 대여를

제공하는 합법적 거점이었고, 1986년부터는 ‘사랑방학교’라는 야학을 운영하며 한자·노래 배우기 등 생활·교양 프로그램을 꾸렸다가 1987~1988년 민주교사연합과 연계한 문화행사로 확대되었다. 1985년 이후 노동상담소·민중교회(한무리·돌샘 등)도 공개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 노래패·미술패와 같은 문화운동이 싹텄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이후 안양에서는 ‘안양민요연구회’, ‘안양독서회’, ‘우리그림’ 등 지역 문화 단체들이 활발한 노동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88년에 ‘안양문화운동연합’으로 발전하며 이 지역의 문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안양문화운동연합은 ‘① 음악, 미술, 극, 문학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예술 한마당을 기획함으로써 올바른 민족문화를 보급할 것, ② 민족문화학교와 노동자문화학교 등 다양한 강좌를 열어 민족의식과 민주의식을 고취시킬 것, ③ 안양의 문화 활동을 연구, 분석하여 자료집 및 대중문화신문 등을 발간함으로써 문화운동의 과학적 전망을 제시할 것, ④ 지역 내 민주 제단체와 연대 투쟁함으로써 투쟁의 실천적 지평을 넓힐 것’을 표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인물·걸개그림·노동문화 잔치’와 같은 문화 실천은 노동 대중의 집단적 여가와 정치적 배움을 결합하였다.

<p><b>설립목적</b></p> <p>안양지역 노동자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동자문화학교</li> <li>2.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li>3.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li>4.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li>5.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li>6.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li>7.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li>8.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li>9.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li>10. 노동자문화학교의 운영 및 지원</li> </ul> <p><b>활동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안양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li>●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li>●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ul>	 <p><b>활동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li>●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li>●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li>●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li>●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li>안양교구 - 『노동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li> </ul> </li> </ul>
---	---	--

1980년대 안양근로자회관 기숙사 전단지(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1988년 안양근로자회관의 휘모리(최병렬 제공)

87년 이후 급속히 조직된 노조들은 그동안 노동운동 가요나 율동 등 투쟁을 위한 조합원 선동의 필요에 따라 문화 활동을 벌여 왔으나, 최근 들어 노조가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조합 일상 활동으로서의 문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작업을 마친 뒤 시나 소설을 쓰면서 잊었던 문학소녀의 꿈을 다시 키우거나 그림을 그리고 주말이면 산악회 동료들과 함께 산을 찾아 나선다. 노조의 상급단체에서도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수련회 등을 주선, '노동문화'가 꽃피도록 돕고 있다.

특히 문학 분야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 구로, 부산, 부천, 마창 참굴, 광주의 글맥 등 5개 지역에 노동자문학회가 이미 결성돼 있으며, 인천, 안양, 영등포, 대구 등에서도 '노동자문학회 준비위'가 발족되어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들 문학회 회원 120여 명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경성대 강당에서 '전국노동자문학회' 모임을 열어 백일장과 문학의 밤 행사를 갖는 등 전국 조직의 창작모임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들 노동문학의 특징은 집단창작을 위주로 한다는 점, 따로 시나 소설 등을 쓰는 법을 배워 온 게 아니고 일을 마친 뒤 과외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함께 토론했고 자료를 수집, 글로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처럼 글을 좋아하는 노동자들끼리 함께 모여 문학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각 단위 노조에서도 조합 일상 활동으로 문예반이나 노래반, 그림반 등을 운영, 조합원들의 단결을 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략)



문화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노동자들(진승일 제공)

안양의 유유산업 노조는 산악회를 조직, 매주 조합원들이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 조합원들의 수필, 시, 콩트 등을 모아 매달 '신새벽'이란 문예지도 내고 있다.<sup>12</sup>

노조 차원에서 문화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학회, 문예반, 노래반, 그림반, 산악회 등을 운영하면서 노조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노동자들이 문화 활동으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 1990년 8월 당시 안양에서는 노동자문학회 준비위가 발족했고, 안양 유유산업 노조에서는 산악회와 문예지 간행 등의 서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상담소, 야학, 그리고 이러한 문화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을 넘어, 노동자로서의 주체의식을 함양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문화 활동은 1970년대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의 3천 궁녀가 안양을 먹여 살린다.”는 말처럼 단순히 경제적 주체로 인식되던 노동자들이 문화적·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註

- 1 이정목, 「합리적 공장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자의 의식 조사연구: 안양지역공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업경영 전공, 1986, 33~35쪽.
- 2 이정목, 「합리적 공장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자의 의식 조사연구: 안양지역공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업경영 전공, 1986, 35~37쪽.
- 3 이정목, 「합리적 공장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자의 의식 조사연구: 안양지역공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업경영 전공, 1986, 39~40쪽.
- 4 이정목, 「합리적 공장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자의 의식 조사연구: 안양지역공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업경영 전공, 1986, 40~41쪽.
- 5 이정목, 「합리적 공장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자의 의식 조사연구: 안양지역공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업경영 전공, 1986, 54~55쪽.
- 6 이정목, 「합리적 공장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자의 의식 조사연구: 안양지역공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업경영 전공, 1986, 56쪽.
- 7 「도시근로자 씬씀이 해퍼져, 소득 26% 증가에 소비 34% 늘어」, 『동아일보』 1989년 10월 2일.
- 8 김원명, 「산업체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안양시 소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6쪽.
- 9 김원명, 「산업체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안양시 소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7쪽.
- 10 김원명, 「산업체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안양시 소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1~24쪽.
- 11 「분규후 생산현장 지금은 (5) 안양·반월」, 『매일경제신문』 1987년 10월 2일.
- 12 「노동계: 근로자 문화활동 "풍성"」, 『조선일보』 1990년 8월 2일.

## 제3장

# 1980~1986년 안양 노동운동의 새로운 경향

---

이동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신군부의 등장과 억압적 노동정책의 실시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 정치적 억압이 이완되면서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1980년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대학생들은 학원 민주화투쟁을 거쳐 점차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갔다. 같은 기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어용노조 퇴진 등을 요구하며 법률상의 제약을 넘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중·후반 평균 100여 건에 머물던 노사분규는 급속히 늘어나 정부의 공식 집계로도 1980년 407건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 10월 28일까지 1,807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노동청도 5월 1일까지 80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1</sup> 1980년 노동쟁의의 대부분이 1~5월 중순에 발생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정부의 집계보다는 훨씬 많은 건수의 노동쟁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노동쟁의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체불임금 정산이었고, 임금인상, 휴·폐업 및 해고 반대, 노동조건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정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과 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의 조업단축과 휴·폐업이 속출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 유형에서는 농성이 가장 많았고, 작업 거부, 시위 등도 주요한 투쟁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잔업 거부, 중식 거부, 퇴근 거부 등 1970년대에 흔히 나타났던 방식을 비롯하여, 방화, 파괴, 지역 점거, 경찰과의 대결 등 격렬한 투쟁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sup>2</sup>

1970년대 노동운동은 주로 섬유업종 등의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이



1980년대 안양7동 공업지대(안양시청 제공)



1988년 호계동 공업지대(안양시청 제공)

시기에는 남성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사건은 ‘사북사건’이다.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지역에서는 당시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인 동원탄좌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퇴진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사북읍 시가지를 장악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북사건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누적된 결과가 폭력적 양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인천제철, 일신제강, 동국제강, 강원산업, 원진레이온 등에서 노동쟁의가 이어졌다.<sup>3</sup>

그러나 서울의 봄을 맞이하여 분출하였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함께 막을 내렸다. 5·18광주민중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고 정권 장악 작업에 나섰다. 국보위는 ‘숙정’과 ‘정화’라는 미명하에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부문의 비판 세력을 제거하고 억압적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기존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청산, 민주노조의 파괴, 노동관계법의 개악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국보위는 노동청을 앞세워 6월부터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에 대한 업무감사에 착수하였고, 7월에는 신규노조 결성 금지 및 연합단체 활동 유보를 지시하는 한편, 노동운동가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어 노동청은 1980년 8월 21일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한국노총에 전달하였는데, 산별노조 위원장급 12명의 즉시 사퇴, 산별노조 산하 모든 지역지부 폐지, 노동조합에 정화위원회 구성 및 지속적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노총 및 산별노조 위원장급 간부 1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간부직에서 떠났다. 또한 신군부는 노동조합 간부 등 노조 활동가 191명을 정화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조 간부직을 사퇴하고 현장에 복귀하도록 강요하였다. 1970년대 민주노조 간부들이나 정화조치에 반발한 활동가의 경우에는 계엄사로 연행되었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지부 해체 지시로 9월 15일까지 105개 지역지부가 해산되었고, 조합원도 17만여 명이 급감하였다.<sup>4</sup>

이어 신군부는 1980년 12월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고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설치, 노조설립 요건의 강화 등 노동조합 활동은 노조 결성에서부터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약을 받았다. 또한 노동대책회의 설치, 블랙리스트 배포, 위장취업자 색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등을 통해 노동운동



과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고자 하였다.<sup>5</sup>

군부는 노동관계법을 개악하고 민주노조들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로 민주노조들이 해산되었고, 1981년 9월 원풍모방을 마지막으로 1970년대부터 이어진 민주노조운동은 일시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노동운동은 극심한 침체기로 접어들어, 조합원 수와 노동쟁의 횟수는 급감하였다. 1979년 현재 조합원수는 108만 8,061명, 노조 조직률은 24.4%를 기록했으나, 1980년 조합원수는 94만 8,134명으로, 노조 조직률은 21.0%로 줄어들었다.<sup>6</sup>

〈표 1〉 1980~1985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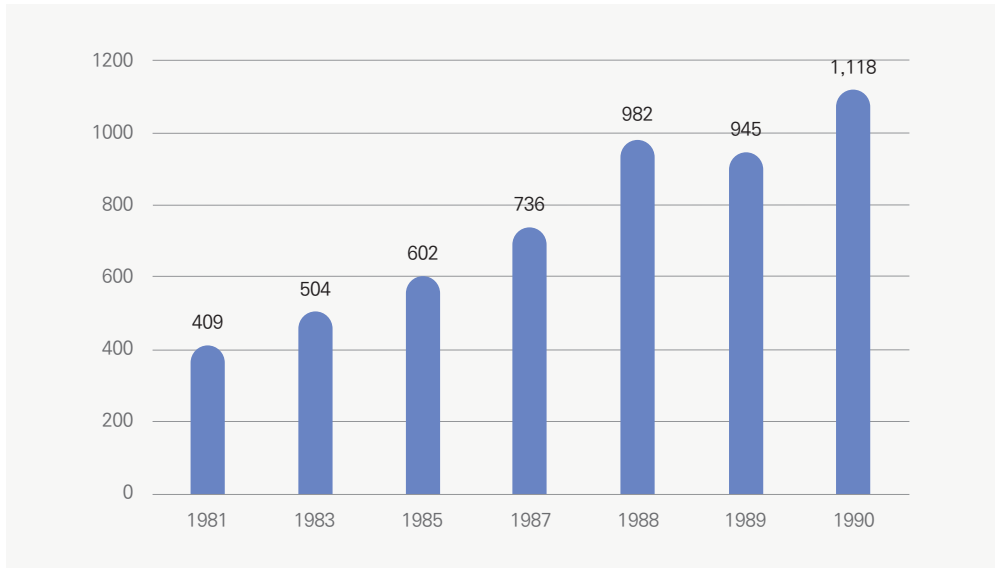
연도	노동조합수(개)	조합원수(명)	조직률(%)
1980	2,618	948,134	21.0
1981	2,141	966,738	20.8
1982	2,194	984,136	20.2
1983	2,238	1,009,881	19.4
1984	2,365	1,010,522	18.1
1985	2,534	1,004,398	16.9

자료 :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earch/search.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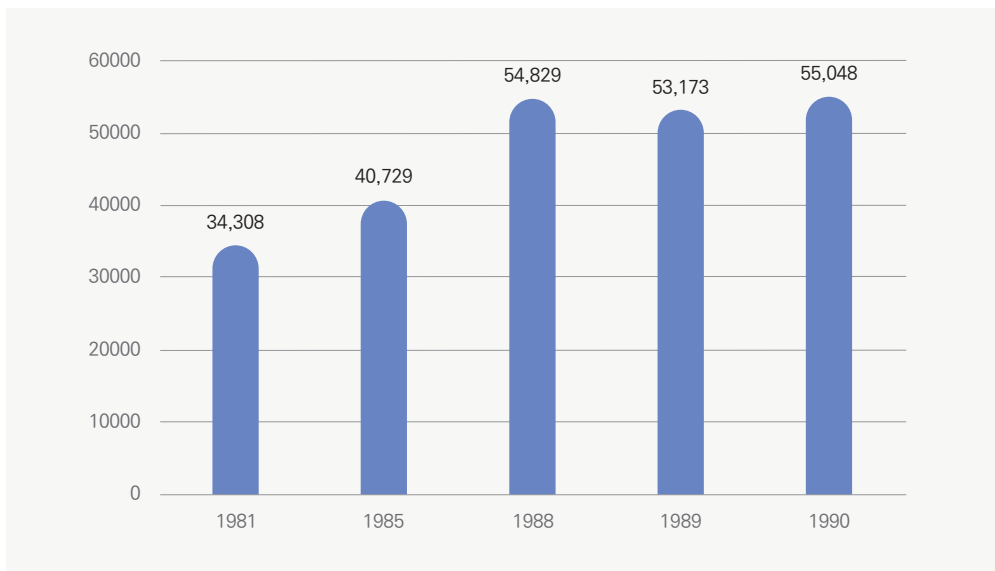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노동쟁의 등을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1980년대 초반 노사분규는 급감하였다. 1979년 105건에서 1980년 407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하였던 노사분규는 1981년 186건, 1982년 88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노동운동에 탄압 속에서도 새로운 노동운동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노사분규는 198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3년 98건, 1984년 113건, 1985년 265건으로 점차 늘어났다.<sup>7</sup>

## 2. 1980년대 안양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는 제2차 오일쇼크, 10·26사건, 신군부의 등장 등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였다. 한국 경제는 1980년에는 미곡 흉작까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른바 '3저 호황'을 거치면서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안양의 제조업도 1980년대 내내 꾸



1980년대 안양시 기업체수



1980년대 안양시 종업원수

준히 성장하였다.

안양 지역의 기업체수는 1981년 409개에서 1983년 504개로 늘어났고, 1985년에도 602개로 100개 가까이 증가하였다. 1985년 이후 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이 활발하

여 기업체 수도 크게 늘어났다. 제조업체수는 1987년 736개에 이르렀고, 1988년에는 982개로 증가해 1년 동안 2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새로 입주하여, 안양시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89년에는 945개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1990년에는 1,118개로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도 1980년대 내내 꾸준히 늘어나, 1981년 3만 4,308명에서 1985년 4만 729명을 기록하였다. 이어 1988년에는 5만 4,82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89년 5만 3,713명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1990년 5만 5,048명으로 증가세를 회복하였다.<sup>8</sup>

안양의 제조업은 1980년대 후반까지 기계, 화학, 섬유, 전기·전자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그 성장세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한국 전체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더불어 안양 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은 변화하였다. 그동안 지역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던 섬유·의류 등 경공업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전기·전자, 화학·고무, 기계·금속 등의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안양시의 경공업 비중은 1981년 46.8%에서 1991년 31.0%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53.2%에서 69.0%로 증가하였다.<sup>9</sup> 1970년대 시작된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안양 지역에서도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1980년대 이후 안양의 산업구조는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그것은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이었다. 산업 인구에서 2차 산업 비중은 1985년 43.6%로 줄어든 반면, 3차 산업은 54.9%로 빠르게 성장하였다.<sup>10</sup> 이는 안양의 도시 기능이 경인공업지대의 공업도시에서 주거와 생활을 중심으로 한 소비도시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1980년대 안양 노동운동은 같은 시기 한국 노동운동의 흐름이 그러하였듯이, 1980년 ‘서울의 봄’ 시기에 일시에 분출하였으나, 신군부의 집권으로 침체하였다가 1984년 이후 서서히 회복하였다. ‘서울의 봄’ 시기 안양에서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80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이전까지 안양에서도 노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노력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양통상, 현대양행, 티엔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양통상은 나이키를 생산하는 신발제조업체로 1978년 당시 1,400명의 사원을 고용한 대기업이었다. 삼양통상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한 인물은 1970년대 대표적인 민주노조 중의 하나였던 삼원섬유 지부장이었던 유동우로, 그는 1978년에 삼양통상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였다. 삼양통상 노동조합 결성 당시 사무장을 맡았던 임석

순의 증언에 따르면 삼양통상에는 유동우 외에도 학생 출신의 박용훈,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 입사해 있었다고 한다. 삼양통상 노동조합은 1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1979년 10·26사건 직전에 안양근로자회관에서 결성되었다. 삼양통상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화학노조에 인준증을 요구했으나, 화학노조는 인준증을 내주지 않았다. 삼양통상 노동조합은 1980년대 초 10여 명이 화학노조 위원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인준증을 요구하며 이틀에 걸쳐 농성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양통상 내에 이미 반장들로 구성된 유명노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유명노조 무효화를 요구하며 화학노조위원장을 압박하였으나 인준증은 발급되지 않았다.<sup>12</sup> 노동조합은 1980년 초 300여 명이 참여하여 파업을 전개하였다.<sup>13</sup> 회사 측에서는 깡패를 동원하여 파업을 방해하였고, 삼양통상 사무장이었던 임석순은 경찰에 연행되어 인천대공분실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였고, 결국 해고되었다.<sup>14</sup>

현대양행 안양공장 노동자들도 1980년 3일간 파업을 하면서 스크럼을 짜고 공장 현장을 뛰어다녔다고 전한다. 노동조합의 결성도 이어졌는데, 티엔디노동조합이 1980년 5월 13일에 설립되었다.<sup>15</sup> 대일제지와 제일피혁 등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학노조 40년사』에는 4월 10일 안양 지역 대일제지분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철야농성 투쟁, 4월 28일 안양 지역 제일피혁분회 준법투쟁 및 퇴근 거부 농성 등의 기록이 간략하게 실려 있다.<sup>16</sup> 이런 사례를 볼 때 1980년 초 안양 지역의 더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분규 등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강력한 노동통제 속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대한전선 계열사인 대한제작소에서는 1980년 11월 7명으로 노동조합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1981년 1월 13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217명의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초대 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당시 위원장 직선제는 대단히 드문 사례였다. 대한제작소 노동조합 설립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열악한 근로조건이었다. 당시 대한제작소는 전 직원이 기능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한전선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대한제작소에서 민주 지향의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제작소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해고하고 싶었지만, 수출 클레임 등에 따른 우려와 기계조립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소지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한전선 노동조합이 경찰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 노동조합을 지켜낼 수 있었다.<sup>17</sup>

대한제작소와 같이 일부 노조 건설 움직임이 있기는 하였지만,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노동 통제를 강화하면서 노동조합은 사실상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3년 이른바 ‘유화조치’ 이후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였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조직을 정비하며 노동운동의 활로를 모색하였고, 학생운동 진영에서도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노동현장으로 투신하여 노동운동에서 전망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 3. 유화국면 속 안양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로 모색

전두환 정권은 1983년부터 이른바 ‘국민화합조치’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유화조치를 추진하였다. 정치활동 규제자에 대한 해금 조치를 펴는 한편, 구속자 석방 및 사면, 제적생 복교, 학원 상주 경찰 철수, 해직 교수 복직 등의 학원자율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자신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집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이 유화조치로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세력은 새로운 집결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노동운동 진영도 유화국면 속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시작은 1983년 말부터 전개된 블랙리스트 철폐투쟁이었다. 당시 전북 이리, 인천 지역의 해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철폐투쟁이 시작되면서 이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1984년 3월에는 민주노조 해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결성되어,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노동운동이 새롭게 활성화되면서 1984년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쟁의가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는 1984년 6월 대구와 부산 택시 노동자들이 파업시위를 전개하면서 전국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85년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요구 파업과 ‘구로동맹파업’으로 널리 알려진 구로 지역 민주노조들의 연대파업 등이 벌어져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안양에서도 1985년 이후 안남운수 등 택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비롯하여, 금강개발, 화천프레스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내건 노동자들의 쟁위행위가 이어지며, 노동운동이 새롭게 활성화되었다.

유화국면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 중의 하나는 학생 출신들

의 노동 현장으로의 투신이었다. 학생운동 출신들은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학생운동 중심의 정치투쟁론과 노동현장에의 투신과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현장론’ 또는 ‘준비론’이라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학생 출신들은 노동현장에 들어가 현장 노동자를 조직하여 소그룹을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18</sup> 학생 출신들은 대거 노동현장에 들어가 노동야학, 소그룹 활동을 벌이면서 노동조합 결성, 노동쟁의 등을 적극 조직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에서는 1984년 하반기부터 다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정책으로 전환하여, 대량 해고, 노동운동가에 대한 비방선전, 블랙리스트 강화, 노조 설립 봉쇄, 휴·폐업, 형사처벌 강화, 구사대 설치 등 각종 강압정책을 구사하였다.<sup>19</sup>

안양에는 1983년 이전에도 소수의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안양의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다. 일찍이 1970년대 말 삼양통상에 학생 출신 활동가가 들어와 있었고, 1982년에는 안양 출신인 노세극이 공장에 입사해 노동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1984년 금성전선에도 직업훈련원 과정을 거쳐 입사한 이들이 있었고, 만도기계에도 여러 명의 학생 출신들이 취업해 있었다. 금성전선과 만도기계 등에 취업한 학생 출신들은 대우자동차 파업 이후 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등이 강화되면서 신분이 드러나 해고되기도 하였다.<sup>21</sup>

1984년 하반기 이후에는 학생운동 출신들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현장에 진입하였다. 초기에는 대학별로 집단적으로 현장에 들어왔고, 1985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는 운동진영 내의 노선별로 조직적인 현장 이전이 시도되었다. 학생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던 서울의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운동 출신들이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 단위로 노동현장으로 들어왔다. 1984년에 현장에 들어온 학생 출신들은 대체로 대학 내에서 학습, 지역 조사, 공장활동 등 이전 준비훈련을 거쳐 현장에 취업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생운동 출신들의 현장 투신은 1985년에 접어들어 더욱 폭넓게 진행되었다. 학생운동 출신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들고 나기를 거듭하였는데, 지역 내 학생 출신 수는 적게 잡아도 수백 명은 족히 되었다고 전한다.<sup>22</sup>

학생운동 출신자들은 대학생 출신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업하는 이른바 ‘위장취업’의 사례가 많았다. 학생운동으로 구속 등으로 신분 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위장취업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였다. 학생 출신 여성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전과기록 유무에 관계없이 가명으로 입사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 전자업체나 섬유업체의 경우, 미혼 입사자 대부분이 20세 전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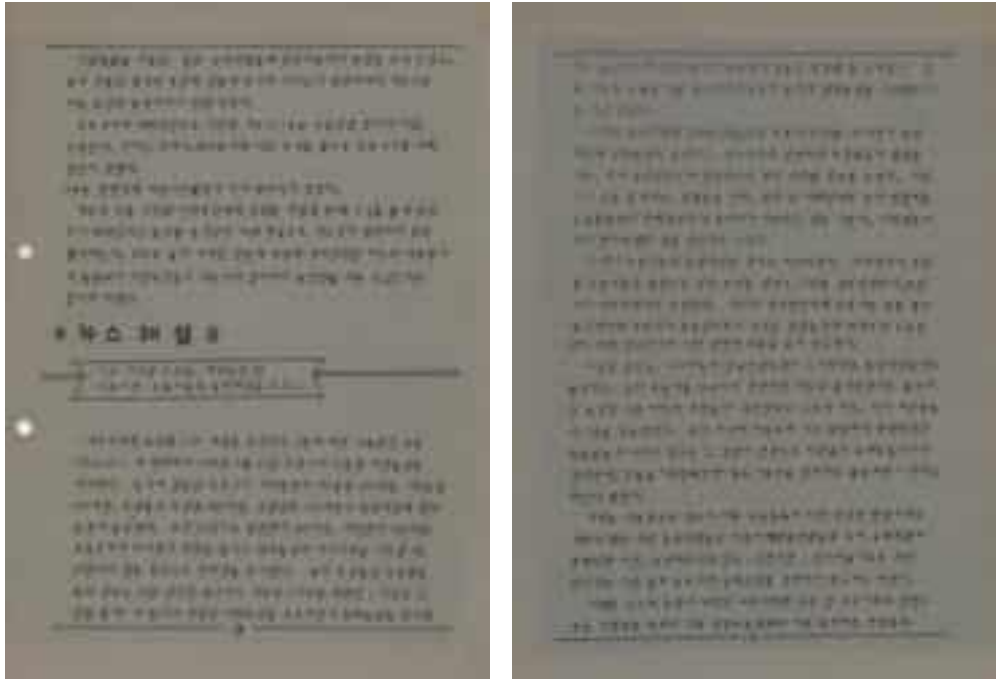
이가 많은 학생 출신들은 동생이나 동생 친구의 이름을 빌려 입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양 지역의 경우 1985년까지는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 비해 신원조회가 덜 까다로웠다고 한다. 취업 시 지문 조회, 주민등록증 확인도 일상화되지 않아서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본인 이름으로 입사가 가능한 경우도 많았다.<sup>23</sup> 1980년대 초반에 안양 지역에서 취업한 학생운동 출신자들의 구술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과가 있는 신분이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과 조회하고 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큰 데는 일단은 없었어요. 그래서 85년도 화천 프레스는 내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중략) 87년도에 이제 위장취업으로 투쟁하다 구속됐었는데, 85년도에는 내 이름으로 들어갔죠. 큰 데는 아니었으니까. (중략) 당시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우리 투쟁이 있고 나서, 85년 투쟁이 있고 나서 안양도 이제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죠.<sup>24</sup>

대학 자퇴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졸이잖아요. 제 이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우전자에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작은 전자회사는 이제 인력이 모자라니까 엄청 까다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다우전자, 안양전자, TND 이런 데가 있었는데 다우전자에는 이미 본인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sup>25</sup>

1985년에 화천프레스에 입사한 이시정은 학생운동으로 구속 경력이 있었지만, 입사 시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도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경력만을 밝히고 취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으로 제적당한 경험이 있었던 정금채는 대졸 사실을 숨기고 1985년 본인 이름으로 만도기계에 입사하였다. 1985년에 국제전기에 입사한 정성희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만 기록하고 본인 이름으로 취직하였고, 대학을 중퇴하고 1986년 다우전자에 입사한 이영희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경력만을 밝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취업하였다고 한다.<sup>26</sup>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분 확인이 까다롭지 않았고, 3저 호황으로 인력 확보가 급했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사 과정도 까다롭지 않아서, 대부분 형식적 서류 검토와 면접을 거친 후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5년 대우자동차파업, 구로동맹파업 등을 거치면서 노동통제가 강화되고



1985년 구로동맹파업(대우어패럴 조합원 파업) 소식을 전하는 『안양노동소식』 창간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입사 시에 위장취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까다로운 식별 지침이 마련되었다.<sup>27</sup> 1986년경부터 안양에서도 취업 시에 주민등록증 내용 및 가족사항 암기 여부, 전 직장 근무 여부 철저 확인, 손가락 마디 확인, 지문 조회, 출신 고등학교에 대학 진학 여부 확인 등이 일상화되었다.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동맹파업 이후 정부는 위장취업자에 대한 해고 규정을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명문화하도록 하여 학생운동 출신들을 노동현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노조의 결성과 해산, 노조 가입과 탈퇴, 노사 분규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경대응 원칙을 밝혔다.<sup>28</sup> 대우자동차 파업 이후 학생 출신의 취업자에 대한 색출이 본격화되었다. 안양 지역에서도 학생 출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만도기계, 금성전선, 한국제지 등에서 해고가 속출하였다.

대우자동차 파업을 거치고 안양 최초로 학생 출신 노동자들의 주도로 화천프레스에서 파업투쟁이 전개된 1985년 10월 이후에는 안양의 중소기업장에도 학생 출신들에 대한 색출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파업투쟁 등으로 학생 출신이 노출된 경우에는 해고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 측에서 위장취업 의심자에 대한 신원



노조 분규를 위장취업 대학생들이 주도했다고 보고하는 기사  
 (『매일경제』 1985년 7월 3일)

조회를 해서 신분이 발각되기도 하였다.

학생 출신 위장취업자에 대한 정권의 색출작업이 강화되고, 현장투쟁 등으로 신분이 드러나면서 학생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적발되었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1986년 10월 말 위장취업자는 전국적으로 373개 업체에서 37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5개 업체 321명에 비해 기업체수가 배가 늘었다. 지역도 경인 지역 중심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로 확산되는 등 학생 출신들의 위장취업은 전국적인 광범위한 현상이었다.<sup>29</sup> 정부의 위장취업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노사분규를 선동하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전면 축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0</sup>

학생운동 출신자들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불순분자, 빨갱이라는 정부와 회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심지어 자발적으로 구사대가 되거나 학생 출신 활동가를 경찰에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례들도 있었다. 당시 뉴스에서 위장취업자 얘기가 나오면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판

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sup>31</sup> 1985년 화천 프레스 파업을 조직했던 이시정도 비슷한 경험을 전한다.

당시에 이제 좀 이쪽 공장 다니면서 학생운동이 이런 막 시작되고 현장 막 들어갈 때니까 위장취업이라는 게 조금씩 이제 사람들 우리는 우리 공장에는 왜 위장취업이 없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sup>32</sup>

현장에 입사한 활동가들은 부서 중심으로 친목모임을 만들어 관계를 형성하였다. 남성 노동자들은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여성노동자들은 떡볶이 등을 자주 먹으러 다녔다고 한다. 친목모임을 바탕으로 소모임을 만들어 등산이나 야유회를 다니면서, 친목과 함께 현장의 불만을 나누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신분을 밝히고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집회현장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85년 이후 지역에 한무리교회, 돌샘교회 등 민중교회들이 생기면서 학습과 모임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다. 교회 공간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은 학습을 진행하기도 하고, 노동 현실을 다룬 촛극을 통해 노동 현실을 공유하고 현장 조직화의 계기로 삼기도 했다.

안양 지역에 이제 민중교회가 한무리교회, 돌샘교회, 나중에 이제 박달교회, 한무리교회 목사님한테 노동자들 문화행사를 할 레니가 공간을 빌려 달라. (중략)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에다가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가사를 작성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촛극을 많이 했어요. 노동자들 혹독하게 다루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촛극을 하나씩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어요. 시 낭송 그리고 라이프 스토리라고 땡 둘러앉아 가지고 촛불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살아온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sup>33</sup>

소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들 소모임 성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가 기획되기도 하였다. 1985년 말에는 군포사거리 성락유치원에서 지역의 노동자들이 ‘문학의 밤’ 행사를 갖고 박노해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86년에 접어들면 노동자 출신 활동가들이 늘어나면서, 투쟁과 함께 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들 해고자들은 복직투쟁, 새벽 유인물 배포,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sup>34</sup>

#### 4. 안양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조건 개선투쟁

1980년 노동조합 정화조치, 노동관계법 개정 등으로 침체되었던 노동자들의 신규 노조 결성이 1984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노동부장관은 1984년 10월 14일 국회에서 9월 말까지 104개 사업장에 5,127명이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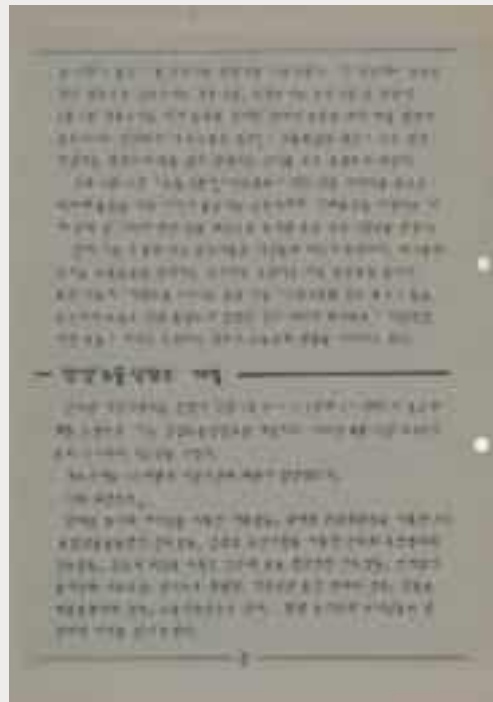
노총은 같은 해 12월 현재 134개 노조에 1만 7,091명을 새로 조직하였다고 한다.<sup>35</sup> 노동운동이 새롭게 활성화되면서, 1985년에 접어들어 안양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왕제지, 한일악기, 금강개발, 화천프레스, 안남운수, 삼양통상, 신한애자, 대한섬유 등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해고 반대 등을 내걸고 투쟁하였다.

대왕제지는 군포 소재 사업장이었는데, 1984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 측의 탄압에 맞서 단체행동을 전개해 화학노련의 지원하에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군포 소재 한일악기에서도 1984년 10월에 파업투쟁을 통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였다. 1985년에는 오투기식품과 택시업계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5년 3월 31일 오투기식품 노동자 38명은 자주적으로 오투기식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화학연맹에 가맹하였다.<sup>36</sup> 회사 측에서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전국연합노련으로부터 가맹인증을 받고 노조를 파괴하려 하였다. 이에 4월 10일 자주노조 측에서는 노조원 150여 명이 점심과 잔업을 거부하며 노조 인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노동부가 중재로 다시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등 노조 간부를 선출하고, 상급단체 가맹은 다음에 하기로 하였다. 안양시청에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았으나, 상급 연맹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회사 측에서는 노조 무력화 시도를 계속하였다. 1985년 유유산업에서도 노동자 80여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했다고 한다.<sup>37</sup>

1984년 서울, 대구, 부산 등지의 택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납금 인하 등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였다. 특히 4월 말부터 시작된 대구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사납금 문제점을 전면에 드러내어, 전국적인 택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38</sup> 1985년 안양의 택시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의 노조 탄압과 어용화 기도에 맞서고 있었다. 택



삼영운수 노조사무실(안양시청 제공)



1985년 안양 노조 활동 소식을 전하는 『안양노동소식』 제1호(1985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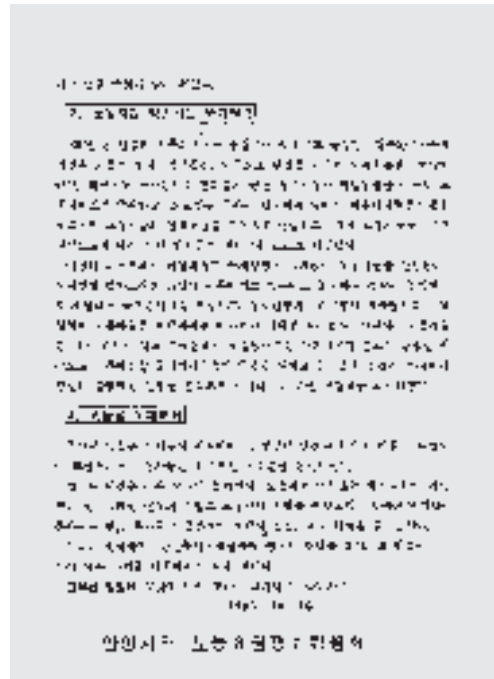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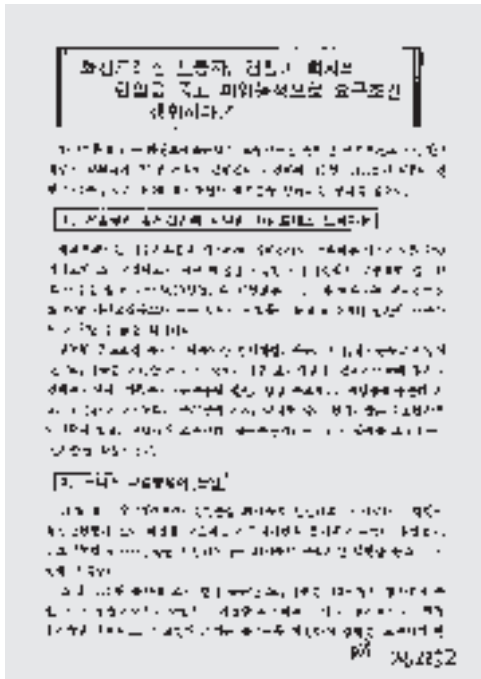
시 노동자들은 1985년 5월 23일 영진교통을 비롯하여 삼양교통, 태광운수, 성진운수 등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고 어용화를 기도하였다.<sup>39</sup> 영진교통의 경우 노조 간부들이 해고되고 노조는 어용화되었으며, 태광운수와 성진운수도 회사의 압력으로 힘을 잃어 갔다.<sup>40</sup>

금강개발, 화천프레스 등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각 사업장의 투쟁도 이어졌다. 이들 사업장에서의 투쟁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결성한 투쟁위원회 등을 통해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는 1985년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국면이 전개되면서 노동조합 결성보다는 ‘투쟁위원회’ 등을 만들어 투쟁하는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안양 평촌동 소재 금강개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금강개발은 현대그룹 계열사 봉제공장으로, 약 300명에 이르는 현장 노동자 중에서 80% 정도가 10대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금강개발의 현장 노동자들은 1일 8시간 노동에 2시간 잔업, 1주 60시간의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기본급에 생리 및 월차 휴가도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1985년 8월 무분별한 연장근로, 상여금 차별, 임금 체불, 휴가 미보장, 사무직과의 차별 등 노동환경 악화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당시 금강개발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서 현장 활동가였던 김경숙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sup>41</sup>

날이면 날마다 미싱에 붙박인 기계처럼 시달리지만,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기본급에 생리 및 월차 휴가도 보장되지 않고 1일 걸근하면 3일 치 일당이 깎이는 열악한 현실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잔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강제로 시키면서도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중략) 사무직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 사이의 차별도 극심해서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이 높은 데다가 각각 250%, 300%로 현장과 사무직의 상여금도 차등 지급하였다. 또한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월차휴가가 보장되고, 사무직 노동자 1일 걸근 시 1일치 일당만 공제하는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차별이 만연해 있었다.

금강개발 노동자들은 임금 17% 인상, 상여금·잔업수당·식대 현실화, 생리휴가 보장 등 8대 요구안을 내세워 집단행동을 조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협박에도 잔업 거부, 점심 거부 등을 통해 단결력을 유지하며 협상을 진행해, 임금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안양지역 노동3권쟁취위원회의 화천프레스 소식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지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sup>42</sup>

1985년 10월, 화천프레스공업사 생산직 노동자 70여 명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반발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파업농성을 벌였다. 화천프레스공업사는 월매출액이 27억에 달하는 호황을 누렸으나, 생산직 초임이 일당 4,000원에 2년 차도 일당 4,200원으로 임금인상이 거의 없으면서도 잔업이 강요되어 매달 사원모집 공고가 붙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곳이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은 ‘화천프레스 근로조건개선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호봉제 실시, 강제잔업 철폐, 연월차 휴가 실시 등 16개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조직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교섭 회피와 경찰 개입에도 불구하고 점거와 집회를 이어갔으며, 회사의 탄압과 강제 해산 시도에도 단체행동을 끝까지 유지하였다. 결국 회사는 16개 요구안 전체를 수용하여 합의를 작성하고, 파업은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화천프레스 근로조건 개선투쟁위원회의 「아 뜨거운 단결의 승리여!」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요약한 것이다.<sup>43</sup>

화천 형제 여러분! 우리는 11, 12일 양일간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자 측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따로 흩어져 한숨만 쉬고 신세만 한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날마다 지옥 같은 작업장에서 기계부속품이나 가죽처럼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빈껍데기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11, 12일 양일간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단결할 수 있고 굳센 단결 만이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우리 근로자의 어려움에 서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이 우리들의 권리주장을 짓밟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서 그 악마적 몽둥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개인'이 아닌 똘똘 뭉친 '우리'로서 보다 나은 직장을 만드는 데,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나누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의 단결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인격적·정치적 장벽을 깨뜨리고 끝내 우리들의 힘을 온누리에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투합시다.



화천프레스 파업과 안양노동상담소장 송윤학 재판 소식(안양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 『단결과 전진』 제2호, 1985년 10월 2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화천프레스 파업은 현장에 취직한 학생 출신 활동가들이 노동자 활동가 활동가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up>44</sup> 이들은 6~7월경부터 부서별 친목모임을 진행하며, 술자리와 야유회 등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하였다. 화천프레스근로조건개선투쟁위원회의 이들에 걸친 파업투쟁은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후 현장 활동가들은 1986년 초까지 회사로부터 차례로 해고되었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화천프레스 출신임이 드러나면 해고되는 등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sup>45</sup>

1985년 말에는 안남운수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해고 철회,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

다. 안남운수는 자율버스를 운행하면서 안내양 110명을 부당해고시키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들을 혹사시켜 왔다. 기사와 안내양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영차회’를 결성하고, 노동조합 민주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영차회가 평소 노조 민주화에 앞장서 온 박기평을 부조합장 후보로 내세우자, 회사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연맹, 모 기관 등이 개입하여 노조 선거 공고를 폐지시키고, 박기평 등 핵심 인물을 해고시켰다. 이에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대책위원회’, ‘체불임금대책위원회’ 등을 결성하고 투쟁을 벌여 왔고, 이듬해 1월 중순에는 노동부 안양출장소를 점거하여 체불 임금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회사 측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탄압을 계속하였다.<sup>46</sup>

위에서 말한 박기평은 노동자 시인으로 유명한 박노해이다. 박기평은 1984년 6월 안남운수에 입사해서 영차회를 조직하고 노조 민주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회사 측에서 그를 수상히 여겨 신원조회에 나서 출신학교를 속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sup>47</sup> 안남운수의 활동으로 수배 중이던 박기평은 『신동아』 1990년 12월에 기고한 「이 땅에 자식으로 태어나」라는 글에서 안남운수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48</sup>

하루 운전이 끝나고 나면 동료들은 포장마차로 몰려들었다. 내가 단골로 다니는 포장마차에는 어느덧 젊은 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포장마차는 하루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루의 고된 노동과 긴장을 풀었다. 나는 그날 하루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과 신문 뉴스에 얽힌 올바른 인식을 걸논 상담과 함께 얘기하곤 했다. 어느덧 고정 멤버가 형성되었고 ‘포장마차 대학가’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많을 때는 30여 명까지 모여들었다.

우리는 승차 순번을 바꿔 타고 근무 날짜를 변경하면서 전 조합원에 대한 조사 작업에 착수하여 가장 진취적인 노동자 30명을 선발하여 접촉에 들어갔다. 드디어 ‘영차회’가 조직되었다. 우리는 ‘생활훈’을 정하여 실천하기로 결의하고 안전하게 다니기 운동과 신문 읽기와 토론회 등을 전개했다. (중략) 그러나 이제 우리는 노동자끼리의 단결의 맛을 알아 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영차회원들만이 아니라 전 조합원으로, 전 노동자계급으로, 마침내 이 사회 전체가 피를 나눈 동지처럼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집단적 운명체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삼양통상 현장에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적 희롱 중지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고, 신한애자에서는 1985년 말에 연말 보너스 150% 지급

을 요구하는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1986년 2월에는 안양교통에서 부당하게 정직당한 노동자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회사에 맞서 싸웠다. 3월에는 반월공단에서 부당 해고된 8명의 노동자가 안양에 있는 신민당 국회의원 이택돈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당해고 철회, 구속 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sup>49</sup>

## 5. 안양 지역 노동 탄압과 해고 반대투쟁

유화국면을 맞이하면서 노동운동이 새롭게 활성화되었으나, 1985년 4월 인천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이후 정부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돌아섰다. 안양에서도 노동현장에서 활동가에 대한 해고 바람이 휘몰아쳐, 만도기계, 금성전선 등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대공장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해고가 속출하였다. 1985년 한국제지, 티엔디, 화진음향 등에서는 주로 학력, 경력 등의 허위 기재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서일산업사, 삼양통상, 해태제과 등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노동자들을 각종 이유를 달아서 징계 등을 통해 해고하였다.<sup>50</sup>

해태제과 안양공장에서는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을 해고하였다. 해태제과는 12시간 맞교대, 아이스크림 제조 과정에서의 동상, 과자 가루로 인한 건강 위협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1979년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어, 다른 식품회사들도 12시간 맞교대를 8시간 3교대로 바꾸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sup>51</sup> 그러나 어용노조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 탄압이 계속되었고,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1985년 3월 해태제과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노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해태제과 안양공장은 노조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의원대회 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추진위원회 편에 섰다는 이유로 1인을 징계하더니, 그와의 친분 또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을 해고하거나 강제 사직시켰다.<sup>52</sup>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파업 이후 위장취업자들에 대한 색출이 강화되면서 학생 출신 활동가들의 해고가 이어졌다. 만도기계에 취업한 정금채는 취업 3개월 만에 신분이 드러나 해고되었었다.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 출신들도 이후 해고되었는데, 정금채는 해고 당시에는 이들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정금채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 만도소식

1980년 7월 21일 창간호 1호



**창간호의 취지**  
 이 창간호는 만도기계 노동자가 창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창간호는 만도기계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 창간호는 만도기계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 창간호는 만도기계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창간호 1호

## 『노동조합법』의 의의

1. 노동조합의 정의, 설립, 구성, 운영, 해산, 기타

2.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구성, 운영,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호

노동조합의 정의, 설립, 구성, 운영, 해산, 기타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  
 이 법은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  
 이 법은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임의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노동조합법』의 의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구성, 운영, 해산, 기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호

만도기계 해고자들이 만든 소식지 『만도소식』 창간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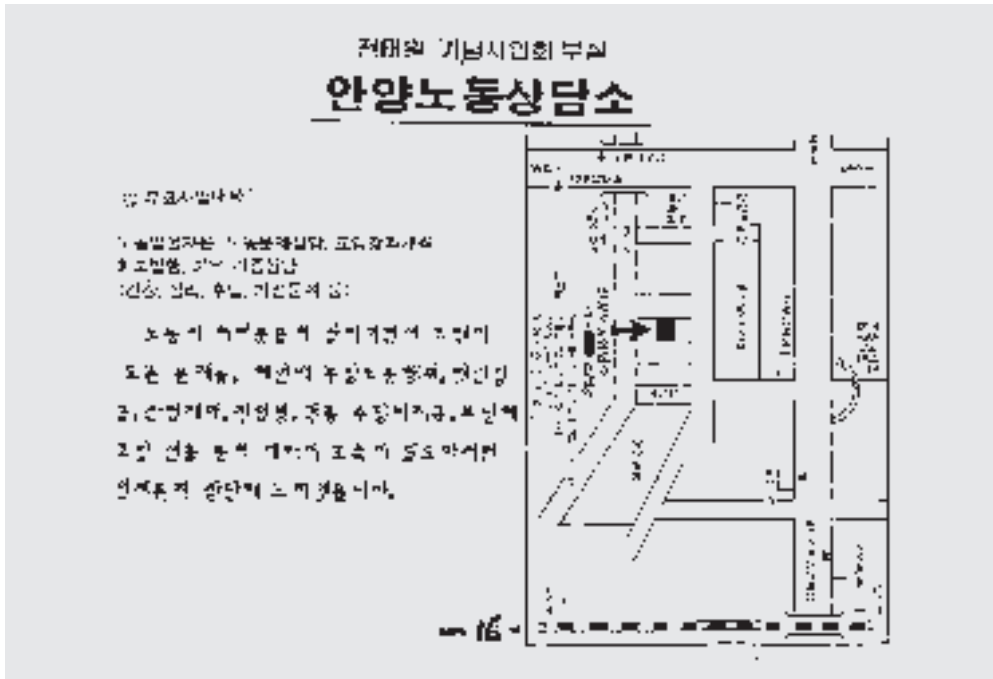
만도기계에 한 3개월 있다가 드러났는데, 85년도에 있었던 대우자동차 투쟁 투쟁이 굉장히 대규모 항쟁으로 벌어졌잖아요. 대우자동차가 터지면서 그 시위의 중심에 워킹취업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대공장에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나는 더구나 내 이름으로 들어갔으니까, 만도기계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고가 되고. 내가 해고되고 나서 그래도 그냥 나가는 게 억울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회사 근로조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출근 시간에 배포하고. 결국은 안에 들어와 있던 다른 친구들이 또 해고가 됐어.<sup>53</sup>

만도기계, 한국제지, 금성전선 중기공장 출신 해고자들은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만도기계 해고자들은 『만도소식』이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창간하였다. 1985년 6월 10일에 발간된 창간호는 안양에서 가장 먼저 제작된 해고자 소식지로 알려져 있다. 8쪽 분량의 필사본 창간호에는 ‘『만도소식』을 내면서’라며 다음과 같이 창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요즘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운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것보다 임금도 많이 올리고 근로조건도 개선하였습니다. 단결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노력들이 모여질 때 큰 힘으로 단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만도소식』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현장 내부의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자 합니다. 둘째로 노동법 등 우리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셋째로 다른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알리겠습니다.

창간호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현장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노력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간호의 주요 코너는 5개로, ‘체불임금을 받아내자!’, ‘이번 임금인상의 결과를 보고’, ‘해고자로부터의 편지’, ‘초대시’, ‘좋은 책 안내’ 등이었다. 당시 해고자들의 소식지 단골 메뉴의 하나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근로기준법에는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도, 당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체불임금 관련 내용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해고자로부터의 편지’는 주로 회사 측에서 해고자들을 불순분자로 몰아 노동자들과 분리시키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한울타리』 창간호에 실린 안양노동조합 약도와 연락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것이였다.<sup>54</sup>

‘초대시’ 코너의 단골시는 노동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의 시였다. 당시 해고자 소식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각종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낭송되는 것이 박노해의 시였다. 창간호는 박노해의 ‘휴일특근’이 실려 있었고, 한국제지 해고자 소식지 『한울타리』 창간호에는 ‘진짜노동자’가, 금성전선 해고자 소식지 『새별』 창간호에는 ‘노동의 새벽’이 실려 있었다.<sup>55</sup>

한국제지 해고자 소식지인 『한울타리』는 1985년 8월 14일에 창간되었다. 창간호는 16쪽, 2호와 3호는 20쪽으로, 타자체로 발행하였다. 창간호의 목차는 발간사, 사보 85호의 기만성을, 초대시, 노동교실, 알려드립니다 등이었다. 『한울타리』 창간호에서는 한국제지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과 비인간적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의 한울타리는 강요된 침묵을 거부하고, 한국제지 노동자의 불만과 요구의 소리가 정상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제지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비인간적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종락) 가난하고 힘없고 짓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산업사회의 그늘에서 인간의 권리를 빼앗긴 채 자



1985년 6월 22일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 헌판식(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1985년 6월 22일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 개설식에 참석한 이소선 여사(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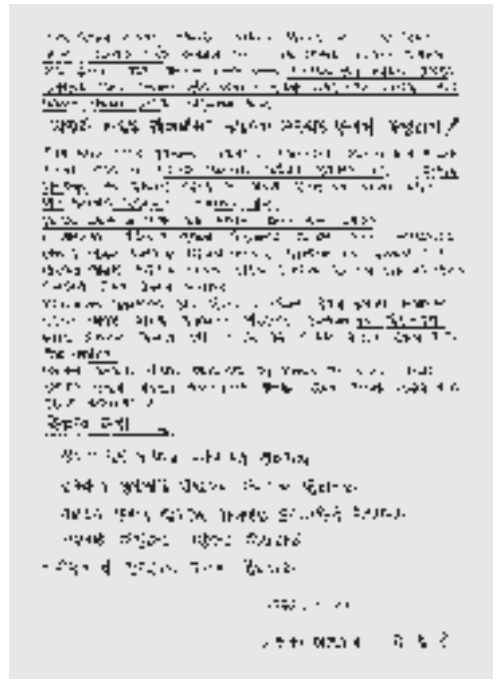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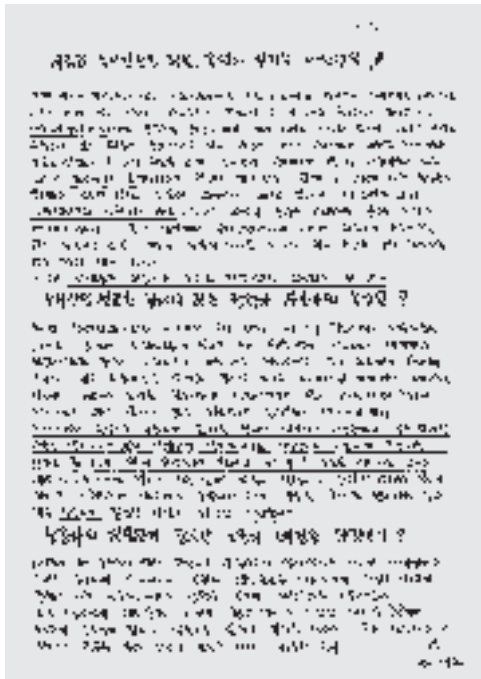
신의 목소리마저 잃어가는 노동자들 편에 서서, 우리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끝까지 지향할 것입니다. 『한울타리』를 통하여 노동자의 참권리를 알고, 그 권리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시 군포에 위치한 금성전선 증기공장 해고자들도 소식지 『새별』을 창간하였다. 창간호에 일자가 없으나 1985년 8월경으로 추측된다. 소식지 『새별』에서는 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당시 금성전선 본조인 안양공장과 구미공장에는 노조가 있으나 군포공장에만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노조 결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도소식』 창간호의 연락처는 정금채의 집 주소와 전화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울타리』와 『새별』은 안양노동상담소가 연락처로 기재하고 있다. 안양노동상담소가 개소하면서 해고 노동자들의 공식적인 연락처이자 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소식지는 출근시간에 정문에서 배포되기도 하고, 현장 활동기들에게 은밀하게 배포되기도 하였다. 소식지는 현장 내 조직화의 매개이기도 하였고, 노동자 교육역 역할도 수행하였다. 소식지의 책 소개란을 통해 당시 노동자 교육용으로 어떤 책자가 통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소개된 책들은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노동자와 노동3권』 등 역사와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진보적인 대중서와 노동관계서 등이 주를 이루었다.<sup>56</sup>

1985년 현장에서의 파업 등 투쟁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해고가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화천프레스공업사의 파업투쟁 이후 현장의 주요 활동가들은 차례로 해고되었고, 해고 노동자들은 이후 취업에 불이익을 당했다. 안남운수에서도 박기평을 비롯한 주요 활동가들이 해고되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 정문에서 유인물을 나눠 주며 복직을 요구하는 이른바 ‘출근투쟁’을 벌였다. 노동수기 『서울로 가는 길』의 저자였던 송효숙은 안양2동에 있는 세한섬유에서 1986년 1월 해고되었는데, 세한섬유 해고노동자 송효숙이라는 이름으로 필사 유인물을 제작하여 살포하였다. 당시 유인물에 출근투쟁이 다음과 같이 담겨있다.<sup>57</sup>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에 있는 세한섬유에서는 86년 1월 26일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대치근무를 시키자 이에 다수의 노동자가 대치근무를 거부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 회사에서는 대치근무 거부 선동자라고 송효숙을 해고시켰다. 너무나 부당한 회사의 처사에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과장과 반장이 합세하여 개처럼 끌어냈다.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출근을 하자 남자들과 합세하여



송효숙이 쓴 「저임금, 장기간노동, 체불, 폭력이 판치는 세한섬유」(1986년 1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현장의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뺏아버려 집어던져”라고 하면서 회사 밖으로 끌여냈다. 이에 다른 동료들이 항의하여 선동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회사는 갑자기 해고 이유를 바꿔 도시산업선교회 회원이라고 해고시켰다고 하였다. 분명히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그동안 정부에서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하여 왜곡되게 거짓선전을 하고 기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권리주장을 하는 노동자를 마구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처사이다.

1985년 이후 각 사업장에서 해고자들이 속출하였다. 위장취업자를 비롯한 학생 출신들만이 아니라 화천프레스 파업투쟁과 같은 현장투쟁이 벌어지면서 노동자 출신 해고자들도 점차 늘어났다. 해고 노동자들은 출근투쟁을 전개하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대공장 해고 노동자들은 소식지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교육의 매개로 삼기도 하였다. 1985년 안양노동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안양노동상담소는 해고 노동자들의 공개적인 활동 공간 역할을 수행하였다.

## 6. 안양에서의 공동투쟁 시도와 지역연대의 확장

1986년 접어들어 노동운동 진영은 더욱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안양 노동운동 진영은 각 사업장 간의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연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활동가들의 정치집회와 가두시위를 조직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1986년 임금투쟁을 준비하면서 4개 사업장의 공동임투가 준비되었다. 동전산업, 한국열기, 한샘, 국제전기 등 4개 사업장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1985년 11월경부터 공동임투 준비를 위한 모임을 시작하였다. 공동임투의 기초는 파업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8시간 노동, 최저생계비(생활임금)를 공동 슬로건으로 내걸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샘에서 어용노조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주요 인물들이 해고당하면서 참여하지 못하고, 국제전기와 동전산업만이 실제 공동투쟁에 돌입하였다.<sup>58</sup> 당시 국제전기에서 공동투쟁을 조직했던 정성희는 공동투쟁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86년도 3월이 되면은 이제 임금인상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 전에 85년도에 이미 내년 임단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잔업 끝나고 나면 9시 반쯤 되는데 그 사업체의 활동가들 대표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내년 3월에 크게 공동투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숙의를 하죠. 공부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86년도 3월에 이제 국제전기를 포함해서 동전산업, 항공열기 등 해서 이제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는데, 몇월 몇일 모시에 일제히 들어가는 시기를 맞추고 그다음에 공동적인 구호를 맞추고, 8시간 노동제 쟁취하라든지 생활임금 보장하라든지 공동투쟁 개념에 넣어서 했는데 다른 데는 이제 못 하거나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못 하거나, 아니면 금방 잡혀 버렸거나 이랬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국제전기는 12시간 파업을 했죠.<sup>59</sup>

변압기와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인 국제전기는 전년도 200%에 이르는 성장률에도 회사 측은 3월 17일 노사협의회에서 적자를 가장하여 임금동결을 선언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임금 23% 인상, 상여금 200% 인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19일 정오까지 회사 측에서 반응이 없자 노동자들은 2시부터 식당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국제전기 파업 상황을 당시 『월간 말』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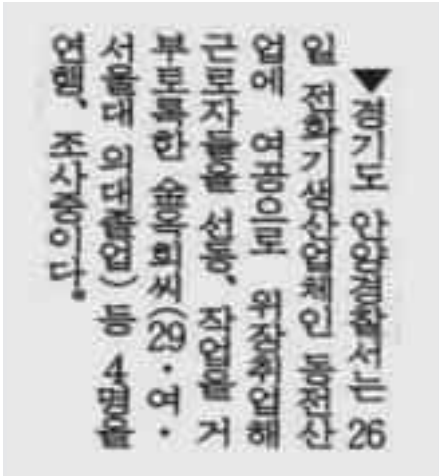
국제전기는 변압기와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로 작년 200%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3월 17일 노사협의회에서 적자를 가장하여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임금 23% 인상, 상여금 200% 인상 지급'을 요구하는 서명 작업에 착수, 전체 노동자 73%의 서명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19일 정오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19일 정오까지 회사 측에서 반응이 없자, 노동자들은 2시부터 식당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에 당황한 회사 측은 시장실에서 협상을 갖자고 통보한 후 미리 경찰을 대기시켜 대표자 오자마자 곧바로 연행하여 정성희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1985년 2월경 국제전기에 취업한 정성희는 친목모임 '동심회'를 조직하고, 1986년 3월 동심회를 근간으로 '임대위'를 조직하고 3월 19일을 결행일로 삼았다. 당일 제관반 현장에는 90% 이상의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였고, 노동자들은 식당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노동자들은 군가 '진짜사나이'를 '진짜노동자'로 개사해 부르면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경찰은 가족들을 동원하여 "불순분자에 놀아나지 말고 나와요." "삼민투 출신 정성희에 놀아나지 마라." 등을 방송하며 파업 노동자들의 해산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1~2차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12시간을 넘긴 새벽 2시쯤 경찰이 협상장에 난입하여 지도부는 연행되었고, 파업은 종료되었다. 파업을 주도하였던 정성희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sup>61</sup>

동전산업은 전자기 생산업체로, 현장 활동가들은 소모임 등을 조직하면서 일찍부터 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동전산업 내에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30~40명 규모로 조직하고 경기도 백마에서 자체 임투 전진대회까지 가졌다. 3월 말경 투쟁을 결행하기로 준비하였으나, 노동자 활동가 1명이 연행되면서 일정을 당겨 3월 25일 점심시간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다. 당시 상황을 『월간 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sup>62</sup>

동전산업은 전자기생산업체로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막기 위해 3월 초에 미리 일당을 3,2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시켰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만적인 조치에 현혹되지 않고, 지난 3월 25일 100여 명이 점심시간부터 4시간 동안 식당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임금추가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회사 측은 노동자 대표들과의 대표를 거부하면서 사복경찰과 함께 농성을 강제 진압한 후 50여 명을 해고하였다.

동전산업은 파업은 4시간 남짓 진행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마무리되었다. 구사대와 경찰이 파업 현장으로 들어와 파업 참가 노동자들은 전원 연행되었다. 경찰은 안양



동전산업 위장취업자 연행(『경향신문』 1986년 3월 26일)

경찰서에 연행된 50여 명의 노동자 중에서 학생 출신들은 격리하였다. 핵심 활동가들 3명이 구속되었고, 40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다.<sup>63</sup> 당시 신문에는 동전산업 파업과 관련하여 “동전산업에 여공으로 위장취업해 근로자들을 선동, 작업을 거부토록 한 김옥희 씨 등 4명을 연행,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sup>64</sup>

지역 내 노동운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노동운동 그룹들이 조직되면서, 지역 차원의 연대 활동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부평 대우자동차 파업과 6월 구로동맹파업을 거치

면서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는 그동안의 소모임 및 사업장 현장활동을 넘어서는 공개적인 정치투쟁과 지역통일체가 필요하다는 분위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대활동 시도는 그린파크 활동가대회와 포도원 투쟁으로 나타났다.<sup>65</sup>

1986년 10월에 열린 노동자 집회는 ‘용주사 모임’, ‘그린파크 활동가대회’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집회는 1986년 8월 10일 8·15광복절을 앞두고 안양권 노동운동 활동가 150여 명이 모인 노동자 정치집회였다.<sup>66</sup> 집회는 노동운동 그룹별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최되었는데, 야외공간인 용주사 옆 그린파크에서 진행되었다. 이 집회는 현장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려고 기획된 것이었다.

이 모임 참석자의 다수를 점하는 이들은 학생 출신 활동가들이었고, 여기에 일부 노동자 출신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안양에서 활동하는 이들이었으나, 일부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도 참석하였다고 한다. 당시 집회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정금채의 구술에 따르면, 당시 행사는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모여 노동 현실과 현장 활동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된 것이었다.<sup>67</sup>

노동자들이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특히 이제 현장에서 들어가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친해지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현실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자리, 현장 활동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관계들을 더 이렇게 좀 진전시

켜 나가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으로 행사를 준비한 걸로 기억이 돼요.<sup>68</sup>

당시 행사는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모여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이었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해방세력과 친일세력 간의 범정공방으로 다룬 촛극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정치현실에 대한 발언도 나왔는데, 일부 외부 참석자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정치적 선동을 하기도 했다. 원래 집회의 취지가 각 그룹의 정치적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노동 현장의 현실을 공유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견해의 적극적인 선동은 논란을 낳았고 집회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었다고 한다.<sup>69</sup>

1986년 10월에는 안양 최초의 노동자 가두시위인 ‘포도원 가두시위’가 진행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 아시안게임 반대와 전두환 독재 타도를 주장하며 포도원 앞에서 가두집회와 시위가 개최되었다. 당시 시위는 노동운동 그룹별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 실천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 저녁 시간에 300여 명이 집결하였고, 퇴근 시간인 관계로 차량 정체가 길어져 시위 시간도 길어졌다. 장기간 교통체증 등으로 예상외의 효과를 얻기는 했지만, 시위 후 퇴각하는 과정에서 혼선으로 다수가 체포되어 관련 조직은 큰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포도원 시위’는 안양 최초의 노동자 가두시위로 평가된다. 1985년 이후 해고자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대중투쟁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활동가들이 양산되는 시점에 벌어졌던 시위였기 때문에 이 시위에 지역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sup>70</sup>

-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2002, 634쪽.
-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2002, 635쪽.
- 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7쪽.
-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620-625쪽.
- 5 이원보, 「가중된 탄압 뚫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 1980년대 전반기의 노동운동」, 『노동사회』 98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76-178쪽.
- 6 자료에 따라 조합원수와 조직률 수치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국가통계포털의 통계를 따라 작성하였다. 정부 통계와는 달리 한국노총이 집계한 조합원 감소 추세는 더욱 크다. 1979년 108만 8,061명이던 조합원 수가 1985년 77만 5,94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86년 89만 8,921명으로 약간 늘어났다고 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2002, 641쪽).
-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2002, 644쪽.
- 8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263-1264쪽.
- 9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506-507쪽.
- 1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550쪽.
- 1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303쪽.
- 12 삼양통상노동조합 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중의 하나는 당시 섬유노조 간부였던 김승호였다. 김승호는 인준증을 받기 위해 이목희 등과 섬유노조 지도부와도 싸웠다고 한다(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8쪽).
- 13 『화학노조 40년사』에는 1980년 4월 26일 “삼양통상지부 임금 인상과 관련 220여 명 농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화학노조 40년사』, 2004, 782쪽).
- 1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8쪽. 임석순은 이후 신한애자에 입사했다가 해고되었고, 경원제지에 입사해 1987년 대투쟁 때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88년 경기노련 창립시 초대 의장에 선출되었다.
- 15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8쪽.
- 16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화학노조 40년사』, 2004, 782쪽.
- 1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9쪽.
- 18 이원보, 「가중된 탄압 뚫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 1980년대 전반기의 노동운동」, 『노동사회』 98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79쪽.
- 1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2002, 639쪽.
- 20 안양 출신의 노세국은 1982년 판지공지에서 취업 경험을 쌓은 후 1984년 범양냉방에 입사하였다. 그는 1985년 3월 경 신원이 드러나 해고되었으나 한국노총 시협의 도움으로 복직되었으나, 1986년 6월경 해고되었다(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1쪽).
- 21 금성전선에는 조영표, 김옥수, 남승완 등이 취업해 있었는데, 조영표, 김옥수가 신원조치로 해고되었다. 만도기계에 취업해 있던 정금채, 정희민, 정홍상 등도 신원이 드러나 해고되었다(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1쪽).
- 22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1-62쪽. 1984년 8월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들 7-8명이 집단적으로 들어와 현장 이전 준비활동을 했다. 안양 지역에는 성균관대학교 출신들이 다수 현장에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다. 1984년 하반기에만 30여 명이 노동현장에 들어왔다고 한다.
- 2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1-62쪽.
- 24 이시정 구술.
- 25 이영희 구술.
- 26 이시정 구술, 정성희 구술, 정금채 구술, 이영희 구술.
- 27 구로공단의 경우, 회사별 경험과 노동부의 수집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식별자침이 마련되었다. ① 이력서의 필체가 학력에 비해 좋거나 ② 안경을 쓰고 학생들이 즐겨 읽는 복장을 착용한 근로자 ③ 대학가의 속어를 쓰는 자 ④ 글씨 쓰는 손마디에 굳은살이 박혀 있는 자 ⑤ 노동법 등에 지식이 많은 근로자 ⑥ 이유 없이 동료들에게 선심과 친절을 베푸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한국일보』 1985년 10월 3일).
- 28 「노·학 연계 확산에 빼기, 위장취업 해고 명문화의 배경」, 『조선일보』 1985년 8월 21일.
- 29 「14개 노동단체 해산명령, 노동부」, 『조선일보』 1986년 11월 8일. 노동부는 1985년과 1986년 총 699명을 위장취업자 중 466명을 해고시키고 219명을 자진 퇴사시켜 현재 13개 업체에서 14명이 취업 중이라고 밝혔다.
- 30 「분규 선동 위장취업 전면 축출」, 『경향신문』 1986년 11월 7일.
- 3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3쪽.
- 32 이시정 구술.
- 33 정성희 구술.
- 3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8쪽.
-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2002, 640쪽.
- 36 『화학노조 40년사』에는 1985년 3월 31일 “오뚜기식품노조(750명) 설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화학노조 40년사』, 2004, 788쪽).
- 3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9-60쪽.
- 3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2002, 656쪽.
- 39 「안양택시업주 경찰과 손잡고 노조 탄압-영진교통, 태광, 선진운수 등」, 『월간 말』, 1986년 3월호(통권 5호), 1986, 68쪽.
- 4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0쪽.
- 4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82쪽.

- 42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81~84쪽.
- 43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자신문』 제17호, 1985년 10월 25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 44 당시 화천프레스 현장에는 이시정, 이응복, 이주하, 김대영 등 학생 출신 활동가와 노동자 출신 활동가인 김중주가 있었다.
- 45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84~87쪽.
- 46 「3저 호기론 속 격동하는 노동현장」, 『월간말』 1986년 3월호(통권 5호), 1986, 70쪽.
- 47 「검거된 박노해 그는 누구인가」, 『한국일보』 1991년 3월 12일.
- 48 박노해, 「이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신동아』 1990년 12월호, 356~357쪽.
- 49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92쪽.
- 5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2쪽.
- 51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까지 노동운동의 초점은 임금인상, 체불임금 해결, 노조 자율성 확보에 맞춰졌다. 1979년 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은 노동일 단축을 단독 요구사항으로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동일 업종의 기업들에게까지 확산시킨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조. 김보현,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제' 실현: 삶을 노동으로 환원하는 체제에 저항하다」, 『기억과 전망』 통권 45호, 2021.
- 52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2쪽.
- 53 정금채 구술.
- 5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3쪽.
- 55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3~74쪽.
- 56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5쪽.
- 57 송효숙, 「저임금, 장기간노동, 체불, 폭력이 판치는 세한섬유」, 1986년 1월 26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 58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97쪽.
- 59 정성희 구술.
- 60 「폭력탄압 속에 가열되는 임금투쟁」, 『월간 말』 1986년 5월호(통권 6호), 1986, 38쪽.
- 6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97~98쪽. 정성희 구술, 2024년 10월 15일.
- 62 「폭력탄압 속에 가열되는 임금투쟁」, 『월간 말』 통권 6호(1986년 5월호), 1986, 37~38쪽.
- 63 「『월간 말』은 해고자가 50여 명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안양지역 노동운동사』에서는 40여 명의 해고자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99쪽).
- 64 「위장취업 4명 연행」, 『경향신문』 1986년 3월 26일.
- 65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97쪽.
- 66 정금채는 학생 출신 약 100명, 노동자 출신 약 50명 등 150명 정도로 생각되며, 학생 출신 활동가들이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이 시기 안양 지역의 학생 출신 활동가들의 숫자를 150~200명 정도로 추측하기도 했다(정금채 구술).
- 67 이 집회는 정금채, 정성희, 신남희, 안중민 등이 기획하고 준비하였고 한다(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99쪽)
- 68 정금채 구술, 2024년 12월 25일.
- 69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99쪽.
- 7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00쪽.

## 제4장

# 1987년 안양의 노동자대투쟁과 노동운동의 확산

---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안양의 6월항쟁과 노동운동

전두환 정권의 비민주적인 억압적 통치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을 비롯한 저항운동은 더욱 넓게 확산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저항 세력을 억누리기 위해 고문 등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1986년 초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년) 전 의장 김금태에 대한 고문 사실이 폭로되었고, 7월에는 부천경찰서에서의 성고문 사실이 드러났다. 1987년 1월에는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하여 시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문하고 전두환 정권은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호헌조치’를 천명하였다. 전두환의 호헌조치는 전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져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1985년부터 안양권에서도 수원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집회나 시위가 시도되기도 했지만, 대중적인 호응은 없는 상황이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저항으로 2월 7일 ‘박종철군 국민추도대회’, 3월 3일 ‘고 박종철군 49제’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 집회로 이어졌다. 이 시기 안양권의 현장 활동가들은 모두 서울로 조직동원되어 집회 참가를 이어 갔다. 6월항쟁이 본격화하면서 안양에서도 6월 19일, 6월 23일, 6월 26일 모두 세 차례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날짜별로 각 시위 준비 주체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6월 19일과 20일은 노동운동 그룹이 공동으로 준비한 집회였고, 6월 23일 집회는 수원지역 대학생들 주도로 개최된 집회였다. 6월 26일 집회는 노동운동 그룹의 주도와 대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sup>1</sup>

노동운동 그룹이 사전에 공동으로 준비한 19일 집회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노동운동 그룹들은 현장 선동자와 동원 인원수를 정해서 조직적으로 결



1987년 6월 안양시 중앙로 거리를 행진하는 시민들(최병렬 제공)

합하였다. 그룹별로 대략 100여 명이 조직되어 동원되었고, 그룹별 유인물이 제작되어 뿌려지기도 했다. 『월간 말』의 당시 기록에 따르면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집회가 시작되었고, 밤 늦게까지 경찰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전한다. 나중에는 경찰에 진압에 대응해서 시민들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휘발유를 빼내 화염병을 만들어 경찰과 격전을 벌였다고 한다.<sup>2</sup>

6월 19일 저녁 8시 30분 주로 노동자로 구성된 시위대 50명가량이 안양의 변화기인 1인가 인도를 따라 구호를 외치며 나가기 시작하자 (중략) 경찰은 시민들이 합세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기에 바빴다. (중략) '9시 30분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도로에 앉아 대중집회가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의 상황보고가 있었고 노점상인은 안양 시민이 도로를 막고 시위하기는 처음이라 신기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 노동자는 노동자의 처지를 말하고 이렇게 모여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니 민주라는 것이 실감 난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중략) 약 2시간 가까이 집회가 계속된 후 시위 초기에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자는 주장이 나와 "경찰서장 나오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마침내 전경대에 달려들어 투구와 방패를 빼앗는 등 몸

싸움이 벌어졌다. 당황한 경찰은 최루탄을 있는 대로 쏘아대기 시작했고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벽산쇼핑 앞에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다. 도로변 공사장에서 자갈과 나무, 경유를 날라와 불을 붙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보도블록을 깨 부분적인 무장을 했다. 경찰이 타고 온 버스에 불을 붙여 뒤에서 밀며 전경대에 접근했으나 최루탄 경험에 없는 안양 시민들은 또다시 흩어졌다가 자정쯤 우체국앞 사거리에 1천 명가량이 집결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1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다. 집회를 계속 하자는 주장, 다음날 다시 모여서 하자는 주장, 지금 싸우자는 세 가지 주장이 나왔으나 안양이 생긴 이래로 것처럼 많은 시민이 모인 일은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간단히 무너진 데 대한 아쉬움이 강해 일부는 무장을 시작했다. 공사장에서 자재를 날라오고 길가에 서 있는 봉고차에서 기름을 빼 40여 개의 화염병을 만들어 500명가량이 전진하면서 화염병과 최루탄이 나는 격전이 계속되는 동안 안산으로 지원 갔던 경찰이 새벽 2시경 시위대 뒤로 나타나 협공을 시작하자 군중들은 흩어져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다가 잠잠해졌다.

6월 23일은 수원 지역 학생들이 조직한 시위로, 수원 지역 대학생 연대모임에서 사전 결정된 것이었다. 집회 주최 명칭은 ‘군부독재타도 민주화추진위원회’였다. 시위 당일에는 집회를 위해 안양시장 일대를 돌면서 동참자를 모았고, 학생들이 한 줄로 서서 본백화점 앞 대로를 차단하면서 집회가 시작되었다. 한신대, 경기대 학생 200여 명과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대중집회가 3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으나, 10시경 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해산되었다. 해산 시까지 시위는 대체로 비폭력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산 이후에도 11시 30분까지 산발적 시위가 이어졌다.<sup>3</sup>

안양의 노동운동 그룹은 6월항쟁이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운동본부가 선포한 ‘6·26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였다. 집회는 안양 지역의 3개 노동운동 그룹이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집회를 앞두고 노동운동 그룹에서는 유인물을 제작하였고, 화염병도 다량 준비했다고 한다. 6·10대회 이후 수도권 경찰은 서울로 집중되어 지역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허술한 상태였다. 8시에 시작된 시위는 시민들의 참여로 급격히 불어나, 안양1번가 대로변은 시위대와 시민들로 가득 차 일종의 해방구로 변하였다. 시위대가 준비한 메가폰의 상태가 좋지 않자, 노점상인들이 즉석에서 주머니를 털어 메가폰을 사 올 정도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월간 말』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sup>4</sup>

6월 26일 민주화대행진을 앞두고 안양 지역에는 노동자 거주지역과 공장 일부 거리에서 26일 오후 8시 삼원극장 앞으로 모미자는 전단이 뿌려지는 한편 경찰은 경찰차에 앰프를 달고 시내를 돌면서 “폭력시위가 있을 것이니 시민들이 모이지 말고 일찍 귀가하라.”는 방송을 했었다. (중략) 긴장이 쌓인 오후 8시에 한 사람이 나와 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구호를 선창하면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합세했으나 어설픈 시작으로 선뜻 시민들이 모여들지 않았다. 경찰차가 접근해 와 시민은 일찍 귀가하라고 협박방송을 해대는 가운데 시위대는 전경이 쫓으면 시장 안으로 숨고, 가면 거리로 나서는 숨바꼭질을 계속했다. 시장 안에서 즉석으로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하며 집회를 유도하자 10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다. 스크럼을 짜고 골목을 돌아 뒤를 따르는 시민이 급격히 불어났고 이에 자신을 얻은 시위대가 9시경 인도에 늘어선 경찰을 뚫고 도로로 뛰어들자 인도를 메운 시민들은 “와!”하는 환호성을 올렸다. 시위대 일부는 스크럼을 짜고 거리를 도는 가운데 시민들은 지난 19일처럼 도로에 앉아 집회가 시작되었다. 준비한 메가폰의 성능이 나빠 뽁뽁거리자 노점상인 한 사람이 즉석에서 주머니를 털어 메가폰을 사 왔고 위세에 눌린 경찰은 멀찍이 물러서서 차단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 공장 노동자는 “내가 다니는 공장은 종업원이 10명인데 모두 같이 왔다. 동료들이 나더러 나가서 아무거나 한마디 하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해 폭소를 일으켰으며 “잔업 특근, 철야작업 없이도 노동자가 먹고살 수 있게 힘 쓰자.”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주로 상인과 노동자가 발언을 했는데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감격스럽다.”는 공통의견이었다.

안양우체국사거리까지 시위는 확대되었고, 안양시청과 안양경찰서 방향으로 시위대는 이동하였다. 성난 시위대는 전투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고자 했고, 노동자와 시위대는 공분이 대상이 되었던 민정당 안양지구당사, 노동부 안양출장소, 안양경찰서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경찰 병력이 새벽 2시경 되돌아오자 시위는 점차 마무리되었다. 『월간말』이 전하는 다음 상황이다.<sup>5</sup>

10시 30분경 시민들이 전투경찰을 무장해제 시키자는 주장을 해 전경대열에 돌격을 감행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으나 19일의 시위에서 단련된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달려 나갔다. 놀란 전경들은 도망을 쳤고 성난 시위군중들은 “민정당사로 가자.”고 외쳤다. 이때부터 시위대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 거대한 투쟁의 물결을 이루었다. 투석과 화염병 세례에 민정당 안양지구당사가 불타고 맞은편의 경찰 초소가 불길에 휩싸였다. 미국계 은행인 한미은행에 돌이 날아갔으며 “시청으로 가지”는 함성과 함께 삼시간에 안양시청을 에워쌌다. 시청을 지키는 경찰도 없었다. 일부는 시청 입구 철문을 흔들기 시작했고 돌멩이 세례를 퍼붓고는 안양경찰서로 방향을 돌렸다. 가는 도중에 노동부 안양

출장소를 향해 화염병을 던져 불태웠다. 이는 그동안 노동부 안양출장소가 노동자 편이 아니라 회사 측을 편들어 온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탓이었다.

11시 20분경 시위대는 안양경찰서에 육박했다. 무려 2만 명의 시민들이 경찰서에서 우체국에 이르는 거리를 가득히 메웠다. 경찰은 시위대열을 겨누고 직격탄을 쏘았으며 3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맹렬한 시위대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경찰이 수세에 몰리고 경찰서가 함락될 직전에 화염병이 바닥났다. 시민들 일부가 경찰서 벽돌담을 넘어뜨리자 바로 앞에서 쏜 경찰의 직격탄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시민들은 빵과 우유를 사와 시위대열에 나누어 주었다. 경찰의 지원 병력이 도착해서 시위대를 협공했으나 불이 붙은 싸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차도에서 서 있는 차량들의 휘발유를 뽑아 시민들이 사다 준 사이다병에 넣어 700~800개의 화염병이 즉석에서 만들어졌다. 경찰은 화염병과 함께 돌멩이를 집어던져 수많은 시위대가 부상했다. 경찰 방패를 뺏아든 한 청년은 경찰에 바짝 다가와 전투를 벌였으며 시민들 중 일부는 뒤에서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시민들은 경찰서를 함락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었으나 주춤거리면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새벽 2시경 경찰서가 함락될 상황에 다급해진 경찰은 각지에서 지원병을 급파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진압에 시위대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2시 30분경 100여 명의 시위대가 안양역으로 몰려왔다. 이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역전파출소를 불태웠으며 부근 상가로 불길이 번지려 하자 소화기를 찾아 진화작업을 벌였다. 200~300명의 시민은 시내에서 연좌를 벌이다가 경찰에 쫓기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무려 새벽 4시까지 산발적인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평소 민주화의 구심점이 없어 잠들어 있던 안양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지는 한번 불이 당겨지자 폭발적인 양상을 보여 주었다. 특히 집회에서의 호응은 어느 곳보다도 뜨거운 것이었다. 그들의 의사를 시원스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억눌려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시민들의 가슴 속에 엉어려져 있었는가를 보여 준 시위며 집회였다.

6월항쟁 기간 안양의 집회에서는 최대 1만~2만 명이 모일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6월항쟁의 전국적 열기에 힘입은 것이지만, 안양 나름의 특성도 존재하였다. 안양의 대규모 시위는 노동운동 그룹이 중심적으로 참여하여 전개되었다. 노동운동 그룹은 공동으로 집회를 기획하고 구체적인 투쟁전술을 마련하였다. 실제 시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화염병을 제작하고 투척하는 등 격렬한 양상으로 벌어졌다. 당시 경찰 병력이 모두 서울로 차출되어 경찰의 통제가 거의 없었던 점도 시위 확산의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6월항쟁 기간 안양 대규모 시위의 동력은 노동자, 빈민 등의 누적된 불만이였다.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등 노동현장의 불만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1987년 7·8·9월 대투쟁을 통해 분출하였다.

## 2. 1987년 안양 노동자대투쟁의 발발과 전개

1987년 상반기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결성, 임금 인상, 노조 민주화 등의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1986년에 이어 10여 개 사업장에서 공동임투가 모색되었지만, 결국에는 창화공업과 한전사를 중심으로 공동임투가 논의되었다. 미장 골판지를 생산하는 한전사에서는 3월 21일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 측의 노조 탈퇴 압력에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잔업거부 등을 실행하였다. 창화공업에서는 활동가들이 3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5월에 파업을 조직하였다. 파업 이후 노동자들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학생 출신 3명은 구속되었다. 창화공업 파업 과정에서 회사 측은 구사대를 동원하였는데, 구사대에 참여하였던 노동자는 양심선언을 하고 구사대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는 “구사대는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제1의 적입니다.”라고 구사대의 위험을 경고하였다.<sup>6</sup> 이 외에도 후지가 대원, 삼화왕관, 금성전선 증기공장, 안남운수 등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었다. 후지가 대원에서는 지부 설립을 준비하였던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삼화왕관에서도 노조 결성에 앞장선 노동자 3명이 해고되었다. 금성전선 증기공장에서는 잔업시간 문제로 파업을 벌여 승리하였다. 안남운수에서는 조합원들이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벌여, 체불임금 지급, 사고 시 권고사직 철회 등 9개 조건에 합의에 이르는 승리를 얻었다.<sup>7</sup>

전국적인 6월항쟁을 거치면서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이 폭발하였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3,000건이 넘는 투쟁이 발생했고, 이는 지난 수십 년간에 벌어진 그것보다 많은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거의 하루에 평균 40건씩 발생한 셈이었다. 7월 5일 울산 현대엔진노동조합의 결성은 7월 15일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고 현대그룹 전체로 확산되었다.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투쟁은 마산, 창원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대공장에서 중소 공장으로, 금속에서 서비스업으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지역과 전 산업으로 퍼져나갔다.

1987년 이전까지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대다수 노동 현장에서는 무노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격적 노무관리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종의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노동현장은 누군가 불쏘시개만 던지면 타오를 수 있는 폭발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 7·8·9월 노동자대투쟁 직전 상황을 정금채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sup>8</sup>

열악한 임금만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만이 아니라 그런 부당한 대우, 비인격적인 대우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일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와서 입바른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이 분기땡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당시에 노동자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권력이 무너지고, 시위 경험도 생기고, 민주화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가졌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대공장부터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짓놀리고 암울한 그리고 전혀 돌파구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쏘시개가 던져지면 아무 때나 이렇게 확 번지는 이 상황이 7·8·9월 투쟁 직전의 상황이었다.

『안양지역 노동운동사』에는 7·8·9월 노동자대투쟁기 투쟁 사업장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안양, 군포, 의왕 지역 등 안양권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대투쟁 기간 안양권에서 75개 이상의 업체에서 쟁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1986년 11월 말 현재 안양권의 전체 제조업수는 937개, 제조업 노동자수는 약 8만 명을 헤아린다. 안양권 전체의 8% 정도의 사업체에서 쟁의가 발생하였고, 제조업 노동자수로는 20% 정도가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기업체수 대비 전국 평균 3.5%, 경기 6.5%, 가장 높은 인천의 7%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로, 안양권에서 7·8·9월 대투쟁이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sup>9</sup>

〈표 1〉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 시기 안양 지역 투쟁 사업장 현황

시기	사업장명	사업장수
7월	금영택시, 해성공업, 삼원교통, 한국제지, 태광산업	5
8월	삼덕제지, 대우중공업, 부전공업, 만도기계, 서진산업, 경원제지, 금성전선 안양공장, 금성전선 군포공장, 동창제지, 건설화학(제비표페인트), 삼아정공, 신한애자, 유신중전기, 국제전선, 뉴욕제과, 동일방직, 삼풍, 오투기, 농심, 대한전선, 창화, 우신심지, 선창하드보드, 신라명과, 신성정공, 신아화학, 대창그랜드, 코롬 방제과, 대림콘크리트, 오아시스레코드, 풍강금속, 동양섬유, 유일산업, 다우전자, 화성전자, 아세아레미콘, 안양19개 택시총파업, 안남운수, 부강교통, (주)화진정, 안양전자, 에너콘, 대양금속, 금성전동, 동양나일론, 대한제적소	64
9월	유한김벌리, 화천프레스	2

자료 :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참조.

비고 : 행정구역으로는 안양, 군포, 의왕을 포함한 안양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월별로는 7월 2일 금영택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시작으로 7월에 5개 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8월에는 64개 사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투쟁이 8월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그중에서도 8월 10~20일에 전체 투쟁의 75%가 이 기간에 발생하였다. 이 기간에는 2차 파업을 전개한 사업장도 상당수 있었다. 1차 파업 후

충실한 준비를 거쳐 2차 파업을 진행한 경우이거나, 회사 측의 합의 위반이나 탄압에 대응해서 2차 파업을 전개한 것이었다. 9월에는 2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지역 내 투쟁은 점차 잦아들었다. 월별 투쟁사업장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시기 노동자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노동조합 결성이었다.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노동자들은 파업을 주요한 무기로 사용하였다. 많은 사업장에서 파업 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 노동자들의 저항이 조직된 투쟁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저임금과 비인격적 노무관리에 대한 불만이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금채가 말했듯이 ‘불쏘시개만 던지면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법적 제약에 상관없이 곧바로 현장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직화되어서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투쟁하면서 조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결성 후 전개한 파업도 당시 노동법에 규정된 냉각기간 등을 무시한 불법파업이었고,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과 함께 곧바로 점거, 철야농성에 나섰다. 한국제지, 만도기계 등에서는 기존의 어용노조를 무력하고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창화공업에서는 회사의 탄압으로 노동조합에 실패하였다. 1987년 5월에 파업 이후 구사대의 집요한 감시와 탄압이 지속되고 있던 창화공업에서는 위장 취업자들을 색출하여 해고하고 노조설립을 철저히 방해하였다. 그해 11월에 노조가 결성되었으나, 회사의 탄압으로 노조간부들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노조 결성 투쟁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sup>10</sup>

<표 2>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 시기 안양권 노동조합 결성 투쟁사례

유형	사업장명
노조 결성 후 파업(6개소)	금영택시, 경원제지, 코롬방, 오아시스레코드, 유일산업, 유한컴벌리
파업 후 노조 결성(14개소)	해성공업, 유신중전기, 태광산업지부, 삼아정공, 신라명과, 신아화학, 부전공업, 금성전선 중기공장, 대림콘크리트, 에너콘, 화천프레스, 다우전자, 안양전자, 화성전자, 택시노조
어용노조 무력화 후 노조 결성(2개소)	한국제지, 만도기계
노조 결성 과정 중에 탄압으로 실패(1개소)	창화공업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어용노조 퇴진 요구가 많았다. 또한 반장직선제, 악덕관리자 해고, 해고자 복직, 노동시간 단축 등의 요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노동자대투쟁 시기 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국의 노동현실을 그래도 반영

Handwritten notes and a stamp at the top of the page. The text below is a dense, multi-paragraph report in Korean, detailing the activities and financial status of the company during the period of the labor dispute.

Continuation of the report from the previous page, containing several paragraphs of text in Korean. The handwriting is consistent with the first page.

Continuation of the report, showing further details of the company's operations and the impact of the labor dispute. The text is organized into several distinct paragraphs.

Continuation of the report, concluding with final remarks and possibly a signature or date. The text is dense and covers several paragraphs.

1987 한국제지 주식회사 노조투쟁 경과 보고서(민주화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전까지 한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압적 노무관리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및 노조 활동의 권리는 정부의 공안적 노동통제로 철저히 억압되어 있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노동자들은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 특근을 통해 부족한 임금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상화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을 위한 여가생활이나 소비 활동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임금의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주요한 임금 격차는 대기업 중소기업보다도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격차가 컸었고, 특히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규모에 관계 없이, 대공장 노동자들이 좀 낫기는 했지만,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기업의 요구,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7·8·9월 대투쟁 때 한 100명 되는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겠다고 왔는데, 자기들 임금이 낮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잔업이 거의 매일 2시간, 하루에 10시간 노동은 거의 일상화돼 있었고, 거기다가 주말 특근하고, 그러면 평일 날은 돈 쓰러 나가지도 못하고 (중략)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저임금 정책이 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시간 노동하고 연결되어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sup>11</sup>





1987년 유신중전기 노동조합 결성 투쟁(진승일 제공)

투쟁 형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점거농성, 철야 투쟁 등이 기본적 형태일 정도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금성전선, 만도기계, 대한전선 등의 대기업 노조는 가두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금성전선 중기사업부는 8월 파업 시 300여 명이 가두로 진출하여 군포사거리까지 행진하였고, 대한전선도 파업 시 지게차를 몰고 가두에 진출하기도 했다. 만도기계 노동자들도 시내로 진출하여 한라건설 안양사무소를 점거하고 경찰에 맞서기도 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매우 전투적인 양상의 투쟁이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업장의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노동자 가족들이 지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8월 경원제지 파업에는 가족들이 조를 짜서 식사를 지원하기도 했고, 군포의 금성전선 중기사업부의 농성에는 가족들이 회사 앞에서 아유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전선 파업에서는 가족들까지 합류하여 가두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투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창화공업, 오아시스레코드, 화성전자, 코롬방, 삼아정



1987년 유신중전기 노동조합 결성 투쟁(진승일 제공)





1987년 유신중전기 노동조합 결성 투쟁(진승일 제공)

공, 금성중기, 서진 등에서는 구사대가 결성되는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sup>12</sup>

8월 20일을 경과하면서 정부의 탄압과 여론조작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8월 20일 전국公安부장 검사회의에서 검찰은 노동부, 경찰 등 유관부서와 함께 ‘중앙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검에도 합동수사본부를 두기로 하였다. 다음 날인 8월 21일에는 전두환이 기자회견을 통해 “좌경문제의 실체와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질 때”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치안본부는 ‘좌경척결을 위한 3대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위장 취업자와 외부세력의 개입을 색출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부 좌경 세력에 의한 문제로 몰아가며 탄압을 본격화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8월 22일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안양에서도 22일부터 대거 연행과 구속 사태가 벌어졌다. 학생 출신의 위장 취업자에 대한 구속이 줄을 이었고, 금성전선 중기공장에서는 91명이 연행되어 12명이 불구속, 5명이 구속되었다. 좌경 불순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도 심해졌다.<sup>13</sup>

지역 내 7·8·9월 노동자대투쟁에는 노동운동단체들의 지원도 컸다. 지역의 노동운동 조직 및 그룹들은 울산 현대엔진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노조 결성 준비 등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다. 경수노련은 유인물에 공식적으로 조직 명칭을 사용하면서 울산 현대엔진 등의 투쟁소식을 알리고, 8월 9일에는 안양근로자회관에서 경수노련 주최의 노동자 권익쟁취 전진대회를 2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경수노련은 8월에 접어들어 투쟁이 본격화하자 8월 13일자로 『경수지역노동자투쟁속보』 1호를 발간하고 8월 25일까지 5호를 발간, 배포하였다. 낮에 공단 지역에서 노동자투쟁 상황을 취재하여 저녁에 편집회의를 거쳐 마스터 인쇄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안양노동상담소도 한국제지와 만도기계를 필두로 7월 초부터 본격적인 노조 결성 준비에 들어갔다. 각 노동운동 그룹에서도 사업장에서 노조 결성을 지원하고, 활발한 홍보작업을 벌였다.<sup>14</sup>

노동자대투쟁이 확산되면서 지역 내 연대투쟁도 나타났다. 안양은 서울, 인천, 성남에 비해 지역 차원의 연대투쟁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 대기업 투쟁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데 비해서, 안양 지역의 경우 1,0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조합은 대부분 어용노조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이 개별분산적이고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냈다. 택시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전국적 현상이었는데, 안양의 택시 총파업 가두시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었다.<sup>15</sup>



1987년 8월 22일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열사 추모(안양근로자회관 제공)





1987년 8월 28일 고 이석규 열사 추모 집회에 모인 안양의 노동자들(안양시청 제공)

대투쟁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늘어나자, 해고자들의 연대조직이 결성되었다. ‘안양 지역 해고 노동자투쟁위원회’가 8월 16일 안양근로자회관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이 자리에는 해고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지역 내 회사들도 이 집회를 주시했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노동자가 신분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sup>16</sup>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 기간 중 안양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연대집회는 8월 28일 한국제지 파업현장에서 열린 ‘고 이석규 열사 추모제’였다. 안양의 5개 노조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한국제지 500여 명의 조합원과 지역의 노조원 및 활동가 5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집회는 노동조합이 주최가 되어 진행된 안양 최초의 연대 정치집회로 기록되고 있다.<sup>17</sup>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들은 정부와 자본의 다양한 공세에 맞서면서 노동조합을 정비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의 현판식이 줄줄이 이어졌다. 현판식에는 지역의 민주노조 위원장들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졌다. 10월 말에는 지역 최초의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가 개최되었

다. 이 수련회 이후 민주노조 위원장들의 모임(상록회), 부위원장 모임(소리회), 사무장 모임 등이 조직되면서 지역 내 노동조합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다졌다.<sup>18</sup>

### 3. 안양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대중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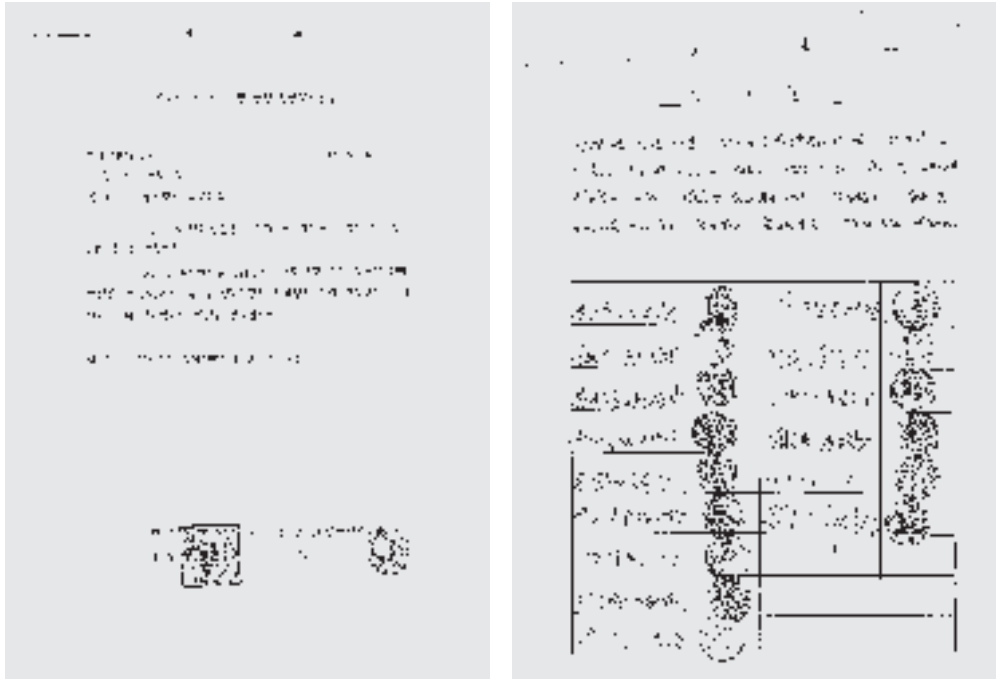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지역 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폭발한 노동조합 결성 노력은 1988년에도 이어졌다. 전국적인 노동조합 수는 1986년 2,658개에서 1988년 5,598개로 늘었고, 1989년에는 7,861개로 증가하였다. 조합원수는 각각 103만 5,890명에서 170만 7,456명, 193만 2,415명을 기록하였다. 불과 3년 사이에 노동조합 수는 거의 3배가 늘었고, 조합원 수도 배 가까이 노조조직률도 1986년 16.8%에서 1989년 19.8%로 높아졌다. 이 시기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1986~199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연도	노동조합수(개)	조합원수(명)	조직률(%)
1986	2,658	1,035,890	16.8
1987	4,086	1,267,457	18.5
1988	5,598	1,707,456	19.5
1989	7,861	1,932,415	19.8
1990	7,698	1,886,884	18.4

자료 :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이 시기 안양 지역 노조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안양시 통계연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추이를 통해 대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안양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0년 안양시의 노동조합수는 20개였으나, 1990년에는 90개로 늘어났다. 늘어난 상당수가 1987년 대투쟁 이후에 신규로 결성된 노조로 추측된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양의 노동운동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8년 접어들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이라는 기반을 마련한 노동자들은 지역 노동조합의 연대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1988년 말에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경기노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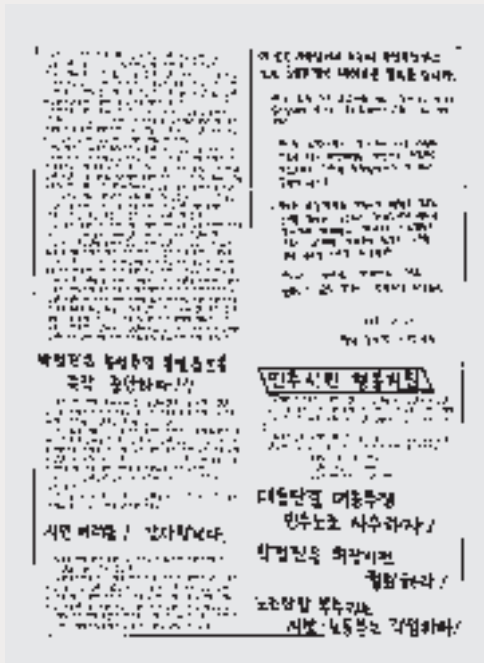


1988년 4월 안양 택시노조의 쟁의 발생을 알리는 신고서와 결의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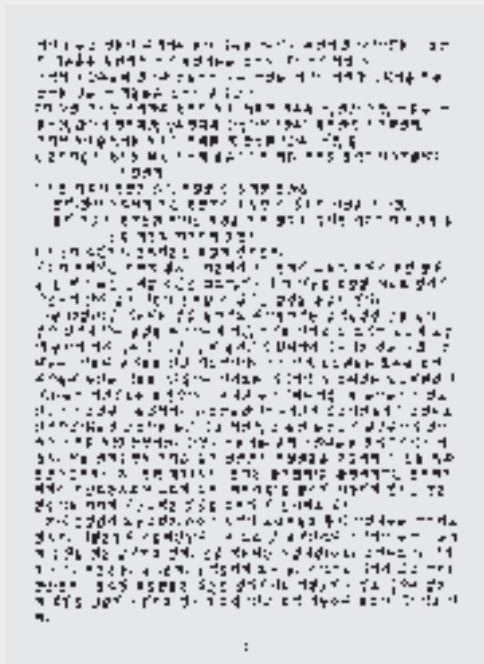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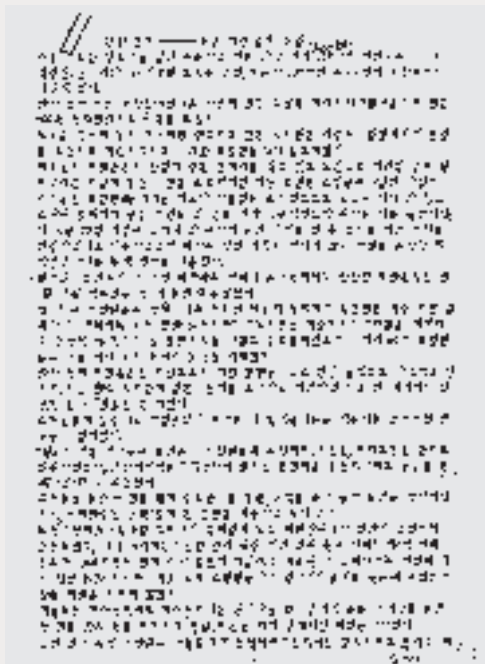
건설하였다. 또한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 인상, 신규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민주화, 지역연대투쟁 등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1988년 안양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한 주요한 사업장은 화천프레스, 혜성공업, 금성전기 중기공장, 정일공업 등이다. 1987년 8월 노동자대투쟁 때 동맹파업을 전개했던 택시노조는 관악택시의 노조 탄압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였다. 안양 제조업 노동조합은 택시 파업 지지대회를 택시노조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등 연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우사, 삼협정기 등에서는 신규 노조가 결성되었고, 삼덕제지, 한국제지, 동양나일론, 범양냉방 등에서는 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sup>19</sup>

이 시기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지역적 연대를 통해 지역 내 노동문제에 적극 개입하였다. 1988년 지역연대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린힐봉제공장 참사, 안양전자 위장이전 반대투쟁, 노동법 개정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안양 지역 최악의 노동참사로 기억되는 그린힐봉제공장 참사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속에 22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사건이다.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등은 공동대책위를 꾸려 책임자



『안양전자투쟁소식』 1(1988년 7월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안양전자 위장이전 철폐투쟁 추진과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차별과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촉구하였다. 안양전자는 생산직 노동자 130여 명의 자동차 도난 경보기 제조업체였다. 안양전자 노동조합은 1987년 8월에 결성되어 임금 인상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었다. 회사 측에서는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해 회사의 위장 이전을 꾀한 것이었다. 안양전자 노동자들은 회사 이전 시도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였다. 당시 상황을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sup>20</sup>

경기도 안양시 안양전자 노동자 80여 명은 안양 지역 노동자 200여 명과 11일 안양전자(대표 박정진)의 회사 이전에 반대하며 안양1동 삼원빌딩 안 본사 사무실과 건물 앞 인도에서 5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안양전자가 회사노조(위원장 백다례)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원들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으로 위장 이전을 계획하고 이미 일부 시설을 옮기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노조들은 지지 농성 등을 통해 안양전자노조를 지원하였다. 안양전자노조에 대한 지역 노조들의 광범위한 연대는 이후 지역노조 연대체 건설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하반기 들어서는 지역연대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지역노동조합들은 1988년 10월 전국노동자 등반대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당사 점거 농성 등에 참여하여 노동법 개정을 추구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하였다.<sup>21</sup> 이런 노력의 결과, 12월 28일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이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87년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확산되었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의 확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교사들의 움직임이었다. 1988년 초 경기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같은 해 8월 13일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안양지역 민주교사 연합회 추진위 한마당잔치’가 열렸다. 기념공연이 끝나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경찰 침탈 우려에 ‘우리그림’ 사무실로 옮겨 진행되었다.

경기교사협회에 참여하고 있던 교사 안명희가 주축이 되어 교사 모임을 조직하여 주 1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회원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9월에 경기교사협회 안양지회 창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안양지회추진위원회에서 11월 초 장내동 중앙성당에서에서 개최한 이오덕 선생 강연회에는 300~400명이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



①	②
	③

- ① 『안양관전교사속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 ② 『안양교사신문』 제2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 ③ 안양지역 학부모회 창립(『안양지회 소식』  
제4호, 1989년 10월 5일)





1989년 전국교사대회 참가 전교조 안양군포지회(최병렬 제공)

다. 이어 12월에는 안양교사협회의회가 800여 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으로는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의 문태순이 선출되었다.

안양교사협회의회는 창립 이후 지역과 전국 단위의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학내 분회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안양교사협회의회는 안양지회 이름으로 1988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하였으며, 경기도교사협회의회의 겨울연수에는 1988년 초부터 진행된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안양예고에서 전국 최초의 분회가 조직되었고, 양명고등학교, 관영여자중학교 등에도 교사협회의회가 만들어졌다.

1989년 5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었다. 전교조 결성에 대해 안양지회 내에서는 교사협회의회의 유지와 교원노조로의 전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안양지회도 전교조의 결성에 따라 1989년 6월 8일 안양·군포·의왕·과천지회를 결성하였다. 전교조에 대해 정부는 교원노조를 불허하고 참여교사들의 탈퇴를 종용하였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 등으로 맞섰으나, 정부는 탈퇴 거부교사들을 해직하였다. 안양에서는 6명이 1989년 9월 1일자로 해직되었다. 정부의 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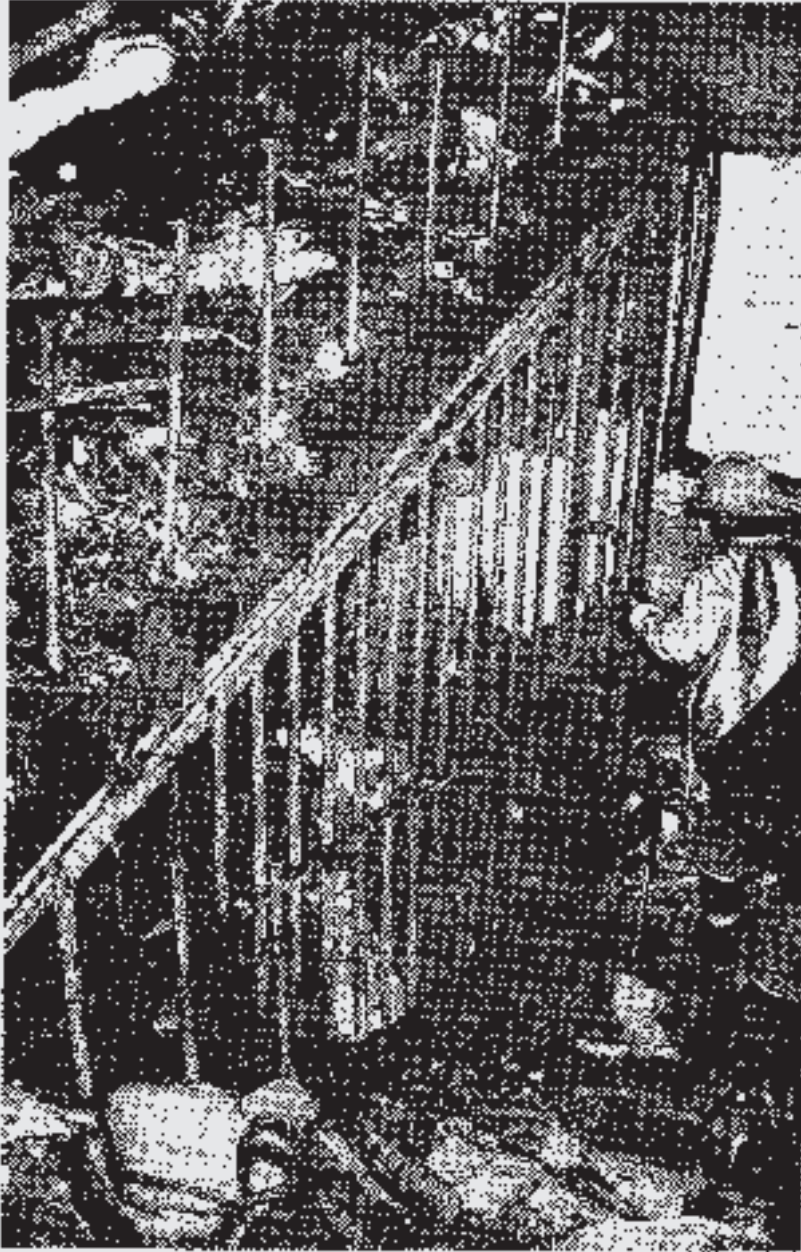
대응으로 전교조에서 탈퇴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후원회원 등을 해직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작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익명의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겨레신문』에 ‘안양에서 미가입 교사 7인’ 명의로 “교원노조교사의 불굴의 신념을 지지하며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작은 박스 광고 형식의 지지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2</sup> 전교조 탄압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1989년 9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결성되었고, 이에 발맞춰 안양에서도 9월 30일 안양지역 학부모회가 창립하였다.<sup>23</sup>

#### 4. 안양 최악의 노동참사, 그린힐봉제공장 참사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조금씩 개선되어 갔지만, 중소 규모 사업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빈번한 산업재해를 불러왔고, 역설적으로 참혹한 재해를 통해서 그 실상이 주목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이러한 열악한 현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1988년 3월 25일 발생한 그린힐봉제공장 참사였다. 신문 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25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그린힐섬유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기숙사에서 잠자던 19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태다. 불은 3층 공장 내부 200여 평 중 160평과 봉제용미싱 75대 등을 태워 1600여 만 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50분 만인 오전 3시 15분쯤 진화됐다. 불이 났을 때 기숙사 8개 방에 나누어 잠을 자고 있던 여성 근로자 28명이 잠 못 바꿈으로 뛰쳐나왔으나 불길, 연기와 함께 의류제품이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 속에 우왕좌왕하다가 목욕탕과 복도 등에서 대부분 질식사 사망했다. 그린힐섬유공장은 지난해 9월과 이달 초 등 두차례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을 지적당해 안양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2월 11일에는 수원지검에 고발까지 된 무허가공장인 것으로 밝혀졌다.<sup>24</sup>

이 사건으로 14세에서 26세에 이르는 여성 노동자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의 단체들은 안양노동상담소 정금채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린힐봉제공장 참사사건 안양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당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힐봉제공장 건물이 1981년 음식점, 병원, 다방 등의 건물 용도로 준공검사를



# 安養봉제공장 불 20명死亡

25일 새벽 京畿도安養市飛山 1동 비산종합삼가빌딩 3층에 불법 입주한 그린힐봉제공장에서 불이네 기숙사에서 잠지던 종업원 20명이 불에타 숨지는 참사를 빚었다. <安養=朴耕植기자>

1988년 3월 25일 발생한 그린힐봉제공장 화재 참사 현장(『동아일보』 1988년 3월 25일)



오열하는 그린힐봉제공장 희생자 유족(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1988년 그린힐봉제공장 희생자 영정(진승일 제공)



그린힐봉제공장 노동참사 합동위령소 및 발인(진승일 제공)



그린힐봉제공장 노동참사 합동위령제(진승일 제공)

받아 공장이 입주할 수 없으며, 그동안 무허가 조업으로 고발 조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조업이 방치되었다는 점, 둘째, 건물용도상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기숙사가 건립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바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 조업을 해 오다 수원지검에 두 차례 고발당한 적이 있었다는 점, 셋째, 화재 당시 공장으로 통하는 2층 계단과 3층 작업장 입구에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으며, 작업장 내의 비상구는 항상적으로 잠겨져 있어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탈출구라고는 세면장의 2m 높이의 비좁은 창이었다는 점, 넷째, 1~2층 계단은 공장에서 바깥 출입문으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화성이 강한 섬유로 쌓여 있어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 질식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이었다.<sup>25</sup>

이 사고는 무허가공장, 규정을 무시한 무단 용도 변경, 행정당국의 방치 등이 결합한 인재였다.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감독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특히 110명의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행정의 부재가 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린힐봉제공장 노동참사 합동위령제(진승일 제공)

이 비극적 사건으로 미성년 고용,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는데, 14세, 16세의 미성년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다. 그린힐봉제공장은 평일 하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의 노동에다,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강요받아 왔다. 사고 당일에는 밤 10시까지 작업이 있었다고 한다. 시다 초임은 월급 13만 원 정도였으며, 경력 3~4년이 되어야 22만~23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작업환경은 160평의 공간에 75대의 미싱이 50~60c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낮은 천장에 소음과 먼지가 가득 차 있었다. 노동자들은 3.7평의 좁은 방에서 3~4명씩 새우잠을 자야 했으며, 8개의 방 중에서 2개를 제외하고는 창문이 없었고, 그나마 있는 창문도 열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sup>26</sup>

그린힐봉제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가 주목받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3월 22일 ‘여성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긴급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섬유·전자·신발 등의 업종에서 저임금,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

동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숙사 시설의 부족과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숙사 시설의 현실은 기숙사 시설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 효율성과 노동자 통제를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되었다.<sup>27</sup>

## 5. 안양 노동조합 연대의 확산과 경기노련 창립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대중화되었다.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노력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87년 대투쟁을 거치면서 달라진 점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새롭게 결성된 노동조합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임금투쟁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개별사업의 투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과정을 거쳐 사업장을 뛰어넘는 연대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1988년 접어들어 안양 노동조합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임단투 준비를 위해 1월에 경기남부지역 임금인상대책위원회(경기남부임대위)를 구성하였다. 경기남부임대위는 안양의 경원제지 등 4개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소식지를 발간하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2월에는 안양노동상담소에서 임대위 주최로 3차례의 임투 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는 1970년대 말에 섬유노조의 교선부장을 역임했던 김승호가 맡았다. 공동임투 교육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중적인 차원의 ‘연대’를 수행하는 토대가 되었다. 1987년 대투쟁 이후 노조통합 간부들 중심의 교류와 연대는 공동임투교육을 통해 열성 조합원 차원의 연대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노동조합 간의 공동투쟁을 위한 노력과 연대가 확장되면서 문화제, 전진대회, 수련회 등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1988년 3월 10일 당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제1회 안양노동문화 큰잔치’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 문화제에서는 현장합동풍물팀을 비롯한 각 노조의 문화패들이 공연을 선보였다. 풍물길놀이, 촌극 공연, 노래공연 등이 펼쳐지고, 글모음 낭송, 강연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공연뿐만 아니라 걸개그림 등도 모두 노동자들이 준비한 것으로, 걸개그림은 대우전자부품 그림패 ‘까막고무신’의 작품이었다. 당시 문화제 풍경이 유신중전기 노보 『불길』에 전하고 있다.<sup>29</sup>

지난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안양중앙교회에서 제1회 안양노동문화 큰 잔치가 열렸다. 이날의



1988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노동문화제 길놀이(진승일 제공)

문화큰잔치는 유신중전기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우노조, 대우전자부품노조, 혜성노조, 신아화학노조 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었는데, 안양중앙교회의 식당에는 약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하여 이날의 노동문화 큰잔치를 빛내주었다. 작년 7~8월에는 수많은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이날의 노동문화큰잔치는 황폐한 노동문화의 참모습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노동자들의 숨은 장기와 현장의 고된 노동 속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가식 없이 펼쳐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0일 오후 5시 연합풍물팀(유신, 다우, 대우, 신아, 경원)의 길놀이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노래 배우기, 우리들 글모임,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강연, 촌극, 노래극, 뒤편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들 글모임에서 낭송된 글 중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슬픈 그러나 힘 있는 사연이 많았다. 노래 가사 바꿔 부르는 역시 흥겨웠고 대우 노조 부위원장님의 강연 또한 우리의 진실을 담고 있는 힘찬 강연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촌극, 노래극이었고, 유신중전기 노조에서 준비한 '흔들리지 않는 노조'가 공연될 때에는 이날 모인 노동자들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마지막 순서인 뒤편이에서는 전 노동자들이 어깨를 잡고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 노동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마음껏 과시했다. 앞으로 이런 문화제가 더욱 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안양노동문화큰잔치 걸개그림





1988년 3월 10일 제1회 안양노동문화 큰잔치 현장

상반기 임투를 거치고 1988년 6월 12일에는 13개 노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안양지역 임투보고 및 전진대회'가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신학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경원제지, 유신중전기, 안양전자, 코롬방제과의 임투보고와 협신전기, 반월 삼양금속의 투쟁사례 보고가 있었다. 2부 순서에서는 연합 풍물공연, 장기자랑, 마당극, 횃불공연,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1988년 여름에는 노동조합과 단체 등이 주최하는 수련회가 개최되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의 춘장대 해수욕장에서는 경원제지, 유신중전기, 대원후지카, 대우전자부품, 티엔디, 대한제작소, 삼협 등 8개 노조가 공동주최하는 수련회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같은 기간에 안양 한무리노동상담소와 수원 기노련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도 안양, 안산, 수원 노동자 120여 명이 참여하였다.

1988년 노동조합들의 하기 수련회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에는 적게는 150여 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열렸다. 1989년부터는 경기 노련 차원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여, 무노조 사업장이나 어용노조 사업장에서 개별로 참가하여 조직화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춘장대, 구례포, 지리산, 거제도, 태백산 등에서 여름휴가를 맞아 노동자와 가족들까지 참여하는 공동 수련회를 개최하였다.<sup>30</sup>

1987년 대투쟁 이후 지역노조들은 공동 임투 준비, 지역문제 개최, 연대 집회 등을 통해 연대를 확대해 갔다. 1988년 1월부터 '경기남부임대위' 조직하고, 공동 간부교육 등을 통해 지역연대를 도모하였다. 3월 10일에는 '제1회 안양노동문화제'를 열었고, 4월 안양 택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안양택시총파업 지지대회'를 개최하였고, 4월 30일에는 노동절을 기념하는 '노동절 기념 및 안양전자 투쟁보고대회'를 열었다. 안양 최초의 메이데이 연대집회였다. 6월 12일에는 임투보고 전진대회를 500여 명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지역 내 사업장 문제를 함께하면서 지역연대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안양전자 위장이전 저지투쟁은 경기남부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으로 연대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경기노련 사업장으로서 연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다우전자 노조위원장 이영희는 안양전자 투쟁을 연대의 기폭제라고 표현하였다.

안양 노동운동에 있어서 연대의 기폭제, (중략) 연대투쟁을 하는 데서 그런 연대투쟁의 역량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 (중략) 남자 사업장에서 유신중전기, 여자 사업장에서는 다우전자 이렇게 꼽을 만했죠. 유신중전기도 거의 매일 나왔고 다우전자도 거의 매일 나갔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들도 이제 계속 나왔고



안양전자 위장이전 철회투쟁 승리 축하대회

근데 (중략) 3차 개입 금지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합원들도 다른 사업장의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연대감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sup>31</sup>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차원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경기노협 추진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안양 노조만의 조직을 주장하는 입장과 경기 남부 차원의 연대들을 만들자는 주장이 맞서기도 하였다. 7월 22일 경기 남부 차원의 연대조직 건설이 결의되고, 7월 27일에는 경기노협 안양지구 추진위가 1차 회의가 17개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8월 17일 경기노협 안양지구 추진위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추진위 의장단을 구성하였다. 하기 수련대회, 간부 수련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대중적인 조직 결성을 위해 『경기노협』 소식지를 10월에 간행하여 11월까지 3호가 발행되었다. 11월 13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800명이 참여하였다. 그 해 말인 12월 28일 안양역 앞 원양



『경기노협소식』(1988년 10월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예식장에서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경기노련)이 결성되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창립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32</sup>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회 창립대회가 28일 저녁 7시 안양시 안양1동 원양예식장에서 수원 안양 안산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10개 시·군의 40여 개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1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경기남부지역노련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민주노조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에 탄압과 간섭에 맞서 공동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임석순(37, 안양 경인제지 노조위원장) 씨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경기노련은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여 “각 지구의 독자적인 활동과 운영을 인정하되 전 지역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조직 성격은 “협의회 수준을 인정하되 연합적 성격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연합’의 명칭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지구마다 독자적인 사무실과 집행체계를 갖추고, 경기노련에는 총무국과 선전국이라는 최소한의 조직만 두었으며, 경기노련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였다.





1988년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창립보고 및 임금인상투쟁 전진대회(경기도메모리 제공)

지구별 협의회는 안양·군포·의왕지구, 안산지구, 수원·용인·화성지구, 평택·송탄·안성지구를 조직하기로 했다. 경기노련 창립 당시에는 안양·군포·의왕지구 14개 노조, 안산지구 10개 노조, 수원·용인·화성지구 8개 노조 등 32개 노조 8,000여 명이 참가하였다.<sup>33</sup>

註

- 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01쪽.
- 2 「각 지역별 상황(6.10.~6.26.)」, 『월간 말』, 1987년 8월호(통권 12호), 1986, 51~52쪽.
- 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03쪽.
- 4 「각 지역별 상황(6.10.~6.26.)」, 『월간 말』, 1987년 8월호(통권 12호), 1986, 52~53쪽.
- 5 「각 지역별 상황(6.10.~6.26.)」, 『월간 말』, 1987년 8월호(통권 12호), 1986, 52~53쪽.
- 6 「구사대는 노동현장 제1의 적」, 『한겨레』, 1988.6.26. 당시 구사대원이 양심선언 후 구술한 내용이 「구사대, 어느 구사대원의 고백」(강대석, 형성사, 1998)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 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09~117쪽.
- 8 정금채 구술.
- 9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17쪽.
- 1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18쪽.
- 11 정금채 구술.
- 12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64~165쪽.
- 1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19쪽.
- 1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19~120쪽.
- 15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54쪽.
- 16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61쪽.
- 1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63쪽.
- 18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70쪽.
- 19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206~239쪽.
- 20 「회사 이전 반대 철야 농성, 안양전자 노동자 등 2백 명」, 『한겨레 신문』, 1988년 7월 12일.
- 2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243~276쪽.
- 22 『한겨레』, 1989년 7월 14일.
- 2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240~242쪽.
- 24 「19명 죽고 4명 중태, 안양 분제공장 불」, 『조선일보』, 1988년 3월 26일.
- 25 「그린힐 분제공장 참사사건 안양지역 공동 대책위원회, 「예정된 참사 안양 그린힐분제공장 화재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1988년 3월 29일.(자료참조코드 CDM003\_02\_C0005\_66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s://archive.history.go.kr>))
- 26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243~244쪽.
- 27 「아직도 비인간적 대우 여전」, 『매일경제』, 1988년 4월 11일.
- 28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91쪽.
- 29 유신중전기 노동조합, 『불길』 제9호, 1988년 3월 17일.(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92쪽에서 재인용)
- 3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93쪽.
- 31 이영희 구술.
- 32 「경기남부노련 창립」, 『한겨레신문』, 1988년 12월 29일.
- 33 유경순, 「노동운동의 흐름과 노동조합」, 『군포시사』 2,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10, 120쪽.

## 제5장

# 전노협·민주노총의 결성과 안양 노동운동의 분화

---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1990년대 안양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안양의 사회경제적 상황도 크게 변모하였다. 1989년부터 시작된 평촌 개발이 1995년 마무리되면서 안양시는 수도권 최대의 인구 밀집지역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신도시 건설과 교통망의 확충으로 안양의 인구는 더욱 늘어나, 1995년 59만 4,427명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도 안양의 제조업은 계속 성장하였으나,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 및 제조업 구성 등은 점차 변화였다. 한국 전체 제조업 내에서 안양 지역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 기업체수 기준으로는 1.28%,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1.32%를 기록하였고, 1990년에 그 비중은 각각 1.62%, 1.82%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200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1.46%, 1.27%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내에서는 그동안 지역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섬유·의류 등 경공업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전기·전자, 운수 장비, 기계·금속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sup>1</sup> 지역 내 기업체수와 종업원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였다. 기업체수는 1990년 1,114개, 1994년 1,331개, 1997년 1,551개로 늘어났다.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는 1970~1980년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0년 5만 4,782명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 중반 이후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1994년 4만 6,604명, 1997년 4만 1,151명으로 줄어들었다.<sup>2</sup>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체 산업구조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산업인구 중 2차 산업 비중은 1995년 38.4%, 2005년 19.7%로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로 변화하는 안양시 도시공간(1995년)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3차 산업은 60.9%에서 80.3%로 늘어났다.<sup>3</sup>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축소는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와 지가 상승으로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였고, IMF경제위기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위축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또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안양시의 전반적인 경제 기반이 공업 중심에서 상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생산도시적 기능에서 소비도시적 기능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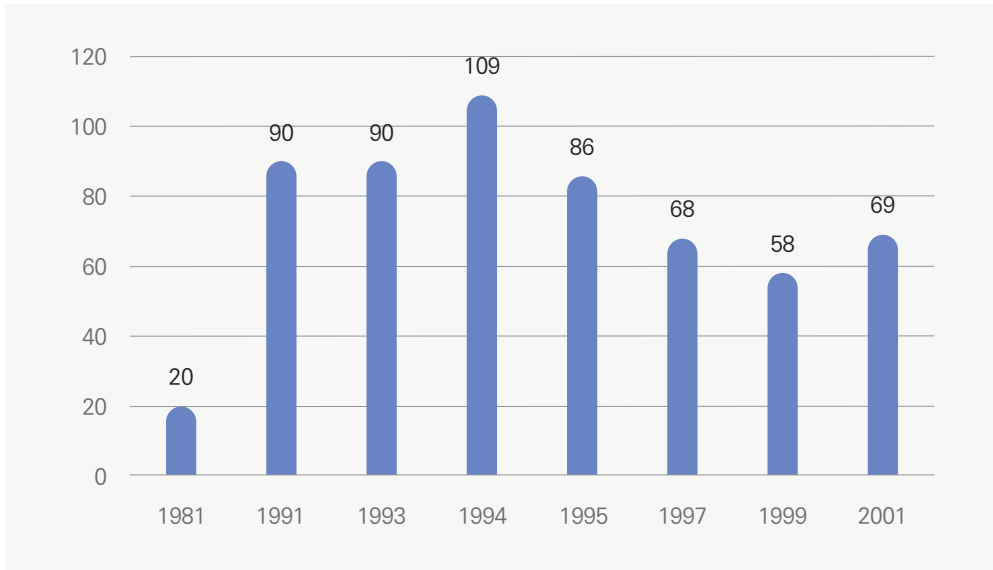
이러한 안양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한국 경제의 일반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89년 이래 제조업 부문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반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1989년 이후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였고, 기업도 노무관리전략의 변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노동조합운동은 양적 지표에서 침체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1990년대 전반기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9년 조합원수 193만 2,415명에 19.8%에 이르던 노조 조직률은 1991년 조합원수 180만 3,408명에 17.2%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표 1〉 1991~1995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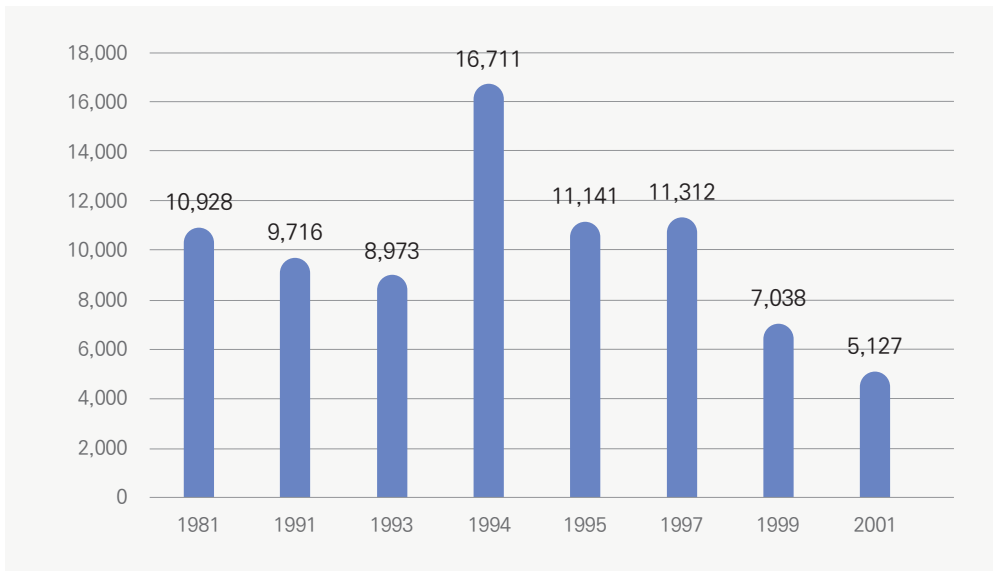
연도	노동조합수(개)	조합원수(명)	조직률(%)
1991	7,656	1,803,408	17.2
1992	7,531	1,734,598	16.4
1993	7,147	1,667,373	15.6
1994	7,025	1,659,011	14.5
1995	6,606	1,614,800	13.8

자료 :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1990년대 이후 안양에서도 노동조합운동의 침체현상이 확인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노동조합과 조합원 숫자가 1990년대 접어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안양 지역의 정확한 노동조합수는 알 수 없으나, 『안양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3년 90개 노동조합에 조합원은 8,973명으로 나온다. 1997년



1981~2001년 안양 노동조합수 추이



1981~2001년 안양 노동조합원수 추이

까지는 노동조합수 감소에도 조합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와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조합원수는 급감하였다.

〈표 2〉 안양 지역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 추이

연도	조합수	조합원수	연도	조합수	조합원수
1981	20	10,928	1995	86	11,141
1991	90	9,716	1997	68	11,312
1993	90	8,973	1999	58	7,038
1994	109	16,711	2001	69	5,127

자료 : 안양시, 『안양 통계연보』, 각 연도(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597쪽 재인용).

## 2. 공안정국 속 경기노련과 안양 노동조합의 대응

1989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sup>5</sup> 노태우 정부는 1월 2일 풍산금속 노동조합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그 결과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노동현장은 파업, 공권력 투입, 구속·해고가 되풀이되는 격전장이 되었다. 1988년 한 해 동안 구속 노동자가 80명 정도였는데, 1989년에는 61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어 정부는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이른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론’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도 강하게 펼쳐졌다.<sup>6</sup>

1988년 12월 28일 경기노련이 출범하면서 지역 내 노동조합의 연대와 활동의 폭을 더욱 넓어졌다. 1989년 상반기 노사분규에서 핵심적인 사업장은 금성전선이였다. 금성전선은 1988년 민주노조가 집행부가 들어선 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 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1989년 2월 파업을 결의하였다. 2월 28일에는 ‘금성전선 단체협약 완전쟁취 결의 및 지지대회’가 금성전선 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경기노련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 집회에는 금성전선 노동자와 지역 노동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기 남부 노동운동사상 최대의 노동자 집회였다. 군포공장에서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안양공장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sup>7</sup> 이 가두시위를 당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sup>8</sup>

금성전선 안양·군포·구미 공장 근로자 2천 1백여 명은 지난달 28일 하오 7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금성전선 중기소 앞 광장에서 단체협약체결 쟁취대회를 갖고 안양공장까지 1.3km 구간에서 횡불시위를



1989년 금성전선 파업 투쟁에서 사용된 만장(경기도메모리 제공)



금성전선 노조에 연대하는 경기 남부지역 노동법 개정 및 임금 인상 투쟁본부의 성명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1989년 티엔디워장폐업쇄, 노조사수결의대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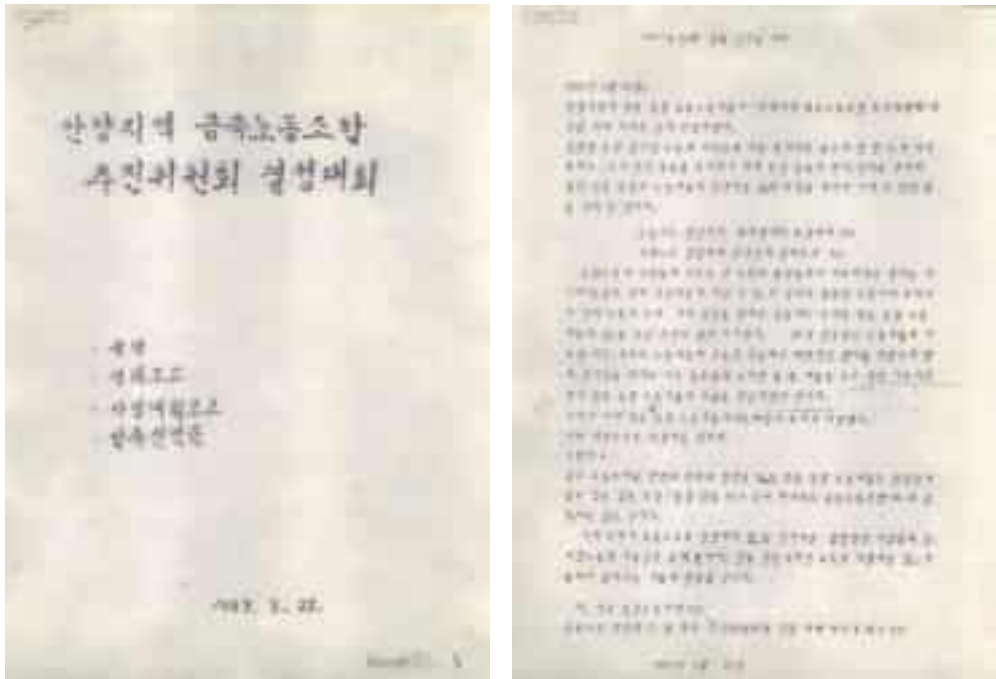
벌였다. 근로자들은 이날 15대의 컨테이너로 울타리를 치고 2시간 동안 대회를 가진 후 하오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햇불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근로자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자 돌맹이를 던지는 등 격렬하게 맞섰다.

금성전선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사수 등을 위해 노력이 전개되었다. 해성전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파업이 전개되었고, 한국원전자 노조는 34일간의 파업 후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회사 측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노조 간부들의 출근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노조원들의 출근을 돌샘교회 목사에게 구사대가 집단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sup>9</sup> 합동메탈 노조는 사측의 집요한 탄압에 맞서, 해고자 복직과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8개월에 걸친 싸움을 이어 왔다. 뒤이은 노조 간부 구속에 경기노련과 지역 노조는 부당하고 철회와 구속 간부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신문기사에 그 내용이 전한다.<sup>10</sup>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954-1 (주)합동메탈 해고 노동자와 안양 지역 노동자 등 1백 50여 명은 18일 저녁 7시 30분께 이 회사 정문 앞에서 부당하고 철회 및 구속 노조 간부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노조위원장 이중수 씨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징계 및 부당하고 철회 △지난달 23일 부당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 도중 폭행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송재영(노조 교육선전부장) 씨의 즉각 석방 등을 촉구했다.

유일산업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휴업조치와 무더기 해고, 구사대 폭력에 맞서 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티엔디, 유일산업 등에서는 위장폐업 철회투쟁을 전개하였는데, 티엔디노조는 일본 본사에 원정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안양전자에서도 폐업 철회투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신문기사에서 티엔디와 안양전자의 폐업 철회 요구 농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안양지역 (주)티엔디와 (주)안양전자 등 2개 사업장이 잇따라 폐업을 결정, 5백 6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폐업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카셋 테크 생산업체인 (주)티엔디(대표 신사쿠 다나카)는 지난달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누적된 적자, 수주량 감소 등을 이유로 법인해산을 결정하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김분중)는 회사 쪽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4일 현재 노조원 1백여 명이 회사 안에서 16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1989년 3월 22일 안양지역 금속노동조합 추진위원회 결성대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자동차 도난경보기 생산업체인 (주)안양전자(대표 박우진)도 지난 1일 주총을 열고 폐업을 결정, 노조에 일반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백다례)는 회사 쪽이 지난해 9월 (주)우림을 설립, 수주량의 70~80%를 빼돌리는 등 위장폐업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고 지난 2일부터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경원제지, 유신중정기, 삼협정기, 고려합섬, 신아화학, 농심 등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 외에도 삼덕제지, 다우전자, 태신 인쇄, 두산유리, 동전산업, 대우전자 부품, 대한제작소, 대한전선에서 임금 인상, 노조 사수 등을 위한 싸움이 전개되었다. 안양병원과 광성기업 등에서는 신규 노조의 설립도 이어졌다. 안양택시조합에서는 5일간 농성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지역 내 전자업종 노동조합은 7월 14일 6개 노조가 모여 안양 지역 전자업종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동종업종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꾀하였다.<sup>12</sup>

지역 내 영세 금속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지역 노조 건설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1987년 대투쟁의 결과, 노동법의 부분 개정으로 기업별 형태로 한정되었던 노동조합 설립 형태가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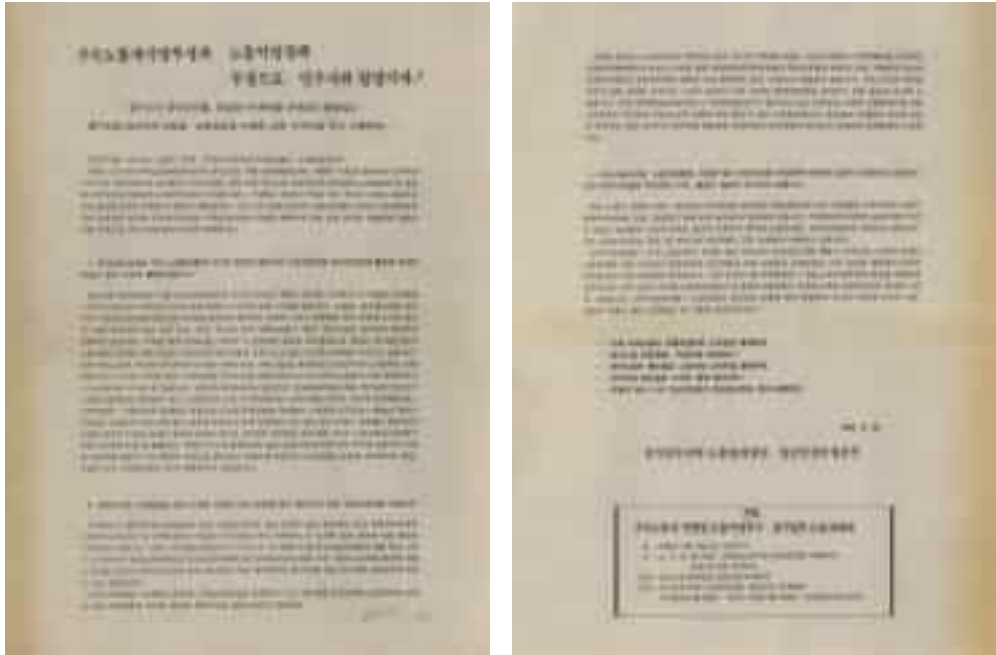
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청계피복노동조합, 서울 지역 제화공노조 등이 새롭게 합법성을 되찾거나 결성되면서, 다양한 직종의 소규모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부천, 성남 등지에서 지역 노조 결성 노력이 이어졌다. 다른 지역의 움직임에 고무받아 안양에서도 1988년 11월 안양노동상담소에서 열린 '지역 노조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사례발표회'에 참석했던 명학역 주변 공장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안양 지역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지역 노조 건설 추진모임을 구성했다.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모임에서는 연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이듬해 1~3월까지 수련회, 강연회, 기금모금을 위한 '일일찾집',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노조 결성 준비를 위한 '추진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3월 22일 '안양지역 금속노동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sup>13</sup>



안양노동상담소장 정금채 구속

경기노련 창립 이후 안양 노동조합운동의 지역연대가 확대되었다. 경기노련 안양·군포·의왕지구협의회는 1월 1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지구의장단을 선출하였다. 1989년 공안정국 조성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경기노련과 지역 노동조합은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정부는 4월에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안양 '우리자리'를 기습하여 5명을, 경기남부민련 부의장이자 안양노동상담소장인 정금채를 자택에서 연행하는 등 30여 명의 노동운동가를 연행하였다. 경기노련 안양지구협의회는 5월에 동전산업, 한국원전자 노조에 대한 공권력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공권력 개입 및 구사대 폭력 저지를 위한 안양지역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연대의 폭을 넓혔다. 8월에는 경기노련 임석순 의장이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경기노련은 9월 7일 항의집회를 조직하고 수원 시내에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11월 23일에는 경기노련 안양·군포·의왕 지구협의회 사무실과 노동운동 지원 단체에 경찰이 들이닥쳐 20명이 연행되었고, 그중 6명이 구속되었다. 경기노련은 안양지구협의회 침탈에 항의하며 11월 28일 경기노련 36개 조합원 5,000여 명이 1일 작업거



경기남부지역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에서 작성한 구속 노동자 석방투쟁과 노동악법 철폐 유인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부를 하였다.<sup>14</sup>

경기남부노동조합 연합 산하 36개 노조원 5천여 명은 28일 지난 23일의 안양·안산지역 노동단체 압수 수색에 항의해 파업 또는 작업을 거부한 채 사업장에서 총회를 열고 노조탄압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8시께 안산 동진기계, 안양 다우전자 등 3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낮 12시를 기해 안산 노도전자 등 3개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다. 또 오후 2시께부터 수원 한일전자 등 30개 노조가 작업을 거부한 채 노조 총회를 갖고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각 사업별로 다졌다. 경기남부노련 산하 58개 노조 중 36개 노조가 참여한 이날 파업 및 규탄대회에서 각 노조는 △구속자 석방 △노동악법 폐지 △공권력의 노조탄압중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직면한 경기노련은 창립 1주년 행사를 아주대학교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운동탄압 분쇄 결의대회’로 진행하였다. 1989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세력에 대한 정부 강경 대응이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20명 가까운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 단체 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sup>15</sup> 1989년 상반기

기까지 경기노련 안양지구협의회에는 1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정부와 회사 측의 탄압으로 6~7개 정도만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sup>16</sup>

### 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출범 후 안양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노동조합 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새로운 노조들은 기존의 한국노총과 스스로를 구분해 ‘민주노조’라고 불렀으나, 형식적인 상급 조직은 한국노총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조들은 교류와 연대를 확장하며 1987년 말부터 새로운 노동조합 연대조직을 추진하였다. 주된 경로는 지역, 업종, 그룹이라는 틀이었다.

먼저 제조업 노동자들은 지역노조협의회(지노협)로 결집하였는데, 1987년 12월 마산창원지역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 창립을 시작으로 1989년 말까지 11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안양을 포괄하는 경기남부노동조합연합도 1989년 12월에 출범하였다. 비제조업 민주노조는 1987년 11월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을 시작으로 이듬해 말까지 11개 업종별 협의체가 자리 잡았다. 대기업에서는 1987년 8월 현대그룹노조협의회가 출범하였다.<sup>17</sup>

지역과 업종으로 결집한 민주노조 진영은 1988년 임금인상 투쟁부터 적극적인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런 투쟁을 통해 1988년 15.5%, 1989년 21.1%의 임금인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민주노조 진영은 1988년 8월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결성하고 11월 13일에는 ‘전태일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민주노조 진영은 산업별 공동투쟁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2월 28일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전국회의)를 결성하였다. 전국회의는 결성 당시 550개 단위 노조, 16개 지노협, 4개 업종, 조합원 20만 명을 포괄하였다.<sup>18</sup>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1월 초부터 풍산금속 노조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공권력을 통한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 갔다. 전국회의는 노동운동 탄압 저지투쟁, 전교조 지원투쟁, 노동법 개정투쟁을 주도하며, 민주노조의 전국적인 중앙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1988년 12월



1989년 12월 17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 결성대회(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대회(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에 창립한 경기노련은 지역에서의 노조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적 연대활동과 지역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안양지구협의회도 1989년 10월 전국노동자 등반대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전노협 준비위원회 발족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전노협 건설을 결의하였다.

민주노조 진영은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출범하였다.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노협 창립대회는 경찰이 원천 봉쇄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회준비위원회는 경찰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 1월 22일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으로 대회 장소를 변경하여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의 감시를 뚫고 대회 개최는 성공했지만, 경찰의 대회 불허 방침으로 경찰과 노동자들의 공방전 속에서 창립대회는 진행되었다. 당시 창립대회에 안양 지역 노동자들도 다수 참가하였다. 전노협 창립대회의 생생한 분위기를 다음의 참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내가 성대에 도착한 것은 11시 50분, 정오 12시를 전후로 대의원들이 속속 도착하였고 빠른 걸음으로 대의원대회 장소인 소강당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미 전투적인 노동자와 애국적 청년학도들을 중심으로 한 선봉대 200~300여 명이 몇 개조로 나뉘어 급한 대로 교내에서 구한 각목과 나무막대기로 방어용 무장을 갖추고 정문, 후문, 쪽문과 대회장소 주변에 배치되었다. (중략) 대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벌써 약 500명의 대의원들이 ‘쟁취 전노협’ ‘노동해방’이라고 쓰인 붉은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채,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중략) 전노협 진군가가 장내에 쩡쩡 울려 퍼졌다. 이순간 선봉대원 한명이 소리높여 외쳤다. “닭장차가 정문 안으로 진입했다!” 일시에 선봉대원들은 후다닥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회장 입구의 5m 앞의 중간 차단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도 미덥지 않아 탁구대를 2층으로 쌓아 올려 막아 버렸다. 대회장 안에 있던 대의원들은 이내 냉정을 되찾고 원래 예정된 대회 시작을 15분 앞당겨 12시 45분에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창립대회를 신속히 진행해 갔다. 밖에서는 벌써 전경, 백골단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선봉대원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여러 명의 노동자, 학생들이 연행당하고 있었다. 대회는 민중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 의장 선출이 있었다. (중략) 단병호 동아건설 노조 창동지부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의장 선출이 끝난 후 참석한 내빈의 축사가 있었다. (중략) 전노협 창립을 열렬히 지지하는 축사가 막 첫머리를 넘어서자 이내 한구석에서 “단병호 위원장님이 오십니다.”는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순간 대회장은 뜨거운 동지애를 담은 기립박수와 “단병호” “단병호”라는 연호소리로 떠나갈 지경이 되었다. 단 의장은 말할 수 없는 감회와 저들의 극악한 탄압에 대한 이글거리는 분노로 상기된 얼굴을 보이며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취임연설을 하였다. 취임사를 마친 단 의장은 또다시 무사와 건투를 비는 장내를 떠나갈 듯한 박수소리

를 들으며 20~30명의 경호조에 둘러싸여 사라졌다.

취임사 도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백골단의 대회장 습격 시도가 있었으나 선봉대원들의 혼신의 방어로 번번히 퇴각하였다. (중략) “우리는 오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깃발을 높이 들어 이 땅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중략) 억압과 굴종의 세월, 어용과 비민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전노협의 깃발 아래 강철같이 단결하여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자!” 드디어 창립이 선포되자 전원이 기립하여 “전노협 만세”를 외쳤다.

전노협 출범식을 원천 봉쇄하려 했던 정부는 출범식 참석자들을 경찰을 동원하여 해산, 연행하였다. 안양에서는 대의원으로 출범식에 참석하려 했던 다우전자 노조위원장 이영희가 구속되었다. 이영희 위원장은 전노협 창립대회 참석 현장에서 연행되기는 했지만, 그의 구속 사유는 ‘업무방해’ 혐의였다. 1989년 12월 회사 사장의 노조 사무장에 대한 폭언에 항의해서 다우전자노조에서 3일간 임시총회를 개최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측에서 ‘업무방해’로 건 것이었다. 이영희 위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다.<sup>20</sup>

민주노조 진영의 전국적 중앙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1990년 1월 출범하자, 정부는 전노협 가입 민주노조 진영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하였다. 정부는 전노협 가입 노조에 대해 업무조사를 실시하고, 전노협화 지역 노조 간부들의 단위 노조 지원활동을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며, 전노협과 관련한 모든 행사를 원천 봉쇄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노협 자체를 와해하려 하였다.<sup>21</sup>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에 따라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침예한 갈등이 일어났다.

1990년 노동운동 탄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 8월 말 금강공업 노동자 집단 분신사건이었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휴업조치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시너를 붓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회사가 노조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사는 처음부터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 단체교섭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장의 기계와 자재를 빼돌리려는 회사 측에 항의해 노조원이 농성을 벌이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휴업을 공고하는 한편 노조위원장 등 6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것이었다.<sup>22</sup>

안양 노동자들은 금강공업 노조에 적극 연대하며,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의왕의 시



안산 금강공업 노동자 집단분신사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흥병원에서 집중적인 투쟁을 벌였다. 안양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금강공업 노동자 집단분신 유발한 살인적 공권력 분쇄 경기남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규탄대회, 모금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9월 12일 안산에서 열린 항의시위 중 경찰 간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를 빌미로 경찰은 경기노련 안산지구 사무실을 비롯한 노동단체를 급습하여 30여 명을 연행하고 다수를 구속하였다.<sup>23</sup>

경기노련을 비롯한 지역 노조들은 금강공업 투쟁에 적극 참여하며 정부의 계속되는 공세에 대응하였지만, 지역 내 노동운동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0년에 경기노련 안양지구에 신규 가입노조는 없었으며, 가입노조는 7개로 1989년에 비해 6개 노조가 줄었다. 노동쟁의 숫자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우전자는 노조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약식집회를 벌였고, 티엔디 노조는 일방적인 폐업에 맞서 일본 원정투쟁 등 위장폐업 철회투쟁을 계속하였다.<sup>24</sup>

전노협 출범 이후 민주노조 진영을 비롯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해 업무조사를 통해 탈퇴를 강요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업장의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옥중 사망사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노조가 전노협을 탈퇴하였다. 경기노련도 마찬가지였다. 1989년 안양지구협의회 사업장은 14개였는데, 1992년 1월 현재 5개 노조로 줄어들었다. 대우전자부품, 정심전자, 유신중전기, 삼화교통, 안양지역 금속노조 등이 그것이다. 감소 원인은 경원제지, 안양전자, 다우전자, 티엔디 등 사업장들이 폐업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전노협 탄압으로 탈퇴한 곳도 있었다.<sup>25</sup>

1991년은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1991년 4월 말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가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노태우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시점에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의 옥중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박창수 위원장은 1991년 2월 대기업 연대회의 모임에 참석해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부상을 입은 박창수 위원장이 안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6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양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문화단체, 청년단체 등이 안양병원으로 속속 집결하였다. 안양이 전국적인 노동자 투쟁의 중심이 된 것이다. 5월 7일 1,000여 명의 경



1991년 5월 7일 안양병원 벽을 뚫고 박창수 위원장의 시신을 탈취한 경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안산 금강공업 노동자 집단분신사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찰에 맞서 노동자들을 비롯한 지역운동세력은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였다. 경찰은 병원 영안실 벽을 해머로 부수고 박창수 위원장의 시신을 탈취하였다.

‘고 박창수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경기남부대책위도 조직되었다. 경기남부대책위에는 지역의 거의 모든 단체가 결합하였으며, 장례에 이르기까지 두 달여에 걸쳐 경기 남부 지역, 특히 안양 지역의 역량이 집결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매일 병원 영안실 앞 집회를 진행했고 선전 작업, 분향소 설치, 조문, 규찰, 모금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안양문화운동연합(안문연)을 중심으로 한 문화패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활동하였다.<sup>26</sup>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투쟁으로 구속자가 속출하고 수배가 잇달았다. 박 위원장 사망 직후인 5월 7일 검찰의 시신탈취 저지 과정과 10일 유족들이 안양병원 6층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나오는 과정에서 151명이 연행돼 19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5월 22일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진상규명 추구와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에서는 420여 명이 강제 연행되었는데, 집시법 위반으로 4명이 구속되었다.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추모집회

1991년 6월 29일 오후 6시 안양시 안양동 벽산쇼핑 앞 네거리에서 열린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추모집회에는 시민, 학생, 노동자 등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의문사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의 사인 규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경찰이 안양병원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1991년 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경기 남부 지역 노동자, 학생, 시민 등 1천 명은 22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안양시 안양6동 본백화점 앞길 등 시내 중심가 곳곳에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사인규명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안양역 광장에서 열려던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 살인 진상규명 촉구와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경찰의 대화장 원천 봉쇄로 무산되자 시내 중심가로 진출해, 최루탄을 쏘며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12개 중대 1천 5백여 명을 대화장 주변과 시내 곳곳에 배치, 대회를 원천 봉쇄하고 (종략) 노동자와 학생, 시민 4백 20명을 강제 연행해 안양·과천·광명·수원서에 분산, 조사 중이다.<sup>27</sup>

5월 한 달 동안 24명이 구속되고, 임석순 경기노련 의장 등 7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6월 8일 제5차 국민대회에서도 4명이 구속되는 등 구속·수배자가 속출하였다. 사망한 지 50여 일 만에 박창수 위원장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6월 29일 안

양병원을 떠난 운구는 벽산쇼핑 앞으로 향하였다. 오후 6시 10분 벽산쇼핑 앞 사거리에는 3만여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노제가 진행되었다. 고 박창수 위원장은 다음날 한진중공업에서 발인식을 거행하고, 부산시청 앞 노제를 지낸 후에 7월 1일 양산 솔밭산 공원묘지에 묻혔다.<sup>28</sup>

1992년에는 경기노련의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1992년 1월 대의원총회에서 3대 임석순 의장에 이어 대우전자부품 노조위원장 양규현이 새롭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sup>29</sup> 5월 임금투쟁을 앞두고 경기 남부 지역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구속이 이어졌다.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 규탄대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오던 임석순 전 경기노련 의장을 포함해 경기 남부 지역의 노동자 7명, 노동운동가 3명 등 모두 11명이 구속되었다.<sup>30</sup>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해고 사태도 이어졌다. 금성전선 군포공장에서는 노조 간부 39명이 징계를 받았고, 만도기계에서는 노조대의원 3명이, 안양 케피코에서도 1명이 해고되었다.<sup>31</sup>

노태우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고 해고되었다. 전노협 조사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가 등장한 1988년부터 1992년 말까지 3,226명의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1992년 10월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가 결성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권이 등장하자 전해투는 정부에 해고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해투는 단식, 점거농성, 출근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sup>32</sup> 1993년 4월 7일 경기 남부 지역 해고자들은 단식투쟁 때 ‘경기남부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이후 노동부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1차 농성이 끝난 후 2차 농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삼양금속, 롯데제과, 대우전자부품, 단암산업, 대원산업, 삼성전관, 광전자 등의 해고 노동자들이 결합하였다.<sup>33</sup>

1994년 1월 24일 경기노련 양규현 의장이 전노협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노조 진영이 결집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는 1994년 6월 연대파업을 조직하였는데, 안양에서는 현충련 계열의 안양케피코 노동조합이 6월 24일 “노조원 4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지협 공권력 투입 규탄 및 임투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고, 8시간 파업농성을 벌였다.<sup>34</sup> 정부는 전노대의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전노대 공동대표인 양규현·권영길에 대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수배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 갔다.

## 4. 민주노총의 출범과 복수 노총 시대의 개막

1990년 민주노조 진영은 전노협을 결성하였으나, 제조업의 대기업 노조나 비제조업 노조들은 별도의 연대조직을 건설하였다. 사무, 전문직,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1990년 5월 30일 ‘업종별 노동조합연맹회의’(업종회의)를 출범시켰다. 현대그룹, 대우그룹의 대기업 노조들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등 별도의 연대조직을 만들었다. 전노협과 업종회의로 결집한 민주노조 진영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추진하자, 자주적 단결권의 확보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 공대위)를 1991년 결성하였다. 국제노동기구 공대위는 국제노동기구에 한국정부를 제소하여 민주노조진영이 한국 노동조합의 일각을 대표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노동법 개정 권고를 이끌어내려 하였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민주노조 진영은 전국 중앙조직의 건설을 모색하였다.<sup>35</sup>

민주노조 진영은 1993년 ‘공동사업추진체’로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발족하였다. 전노대는 민주노조 진영을 결집하여 제2노총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여, 1994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연세대 대강당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창립 당시 민주노총은 15개 산업(업종) 조직과 10개 지역본부, 2개 그룹 조직이 가맹했고, 단위 노조 861개, 조합원은 41만 8,154명이었다.<sup>36</sup>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노동조합운동은 1980년대 후반까지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다. 특히 민주노조 진영은 전노협을 건설하고, 민주노조 진영을 결집하여 1995년 민주노총을 출범시켜 한국노총과 함께 복수 노총 시대를 개막하였다. 민주노총 출범하면서 전노협이 해산되고, 지노협도 민주노총 지역추진위로 이관되거나 지역본부로 전환하였다. 경기노련을 대신하여 1996년 12월 민주노총 경기남부 지역협의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이후 민주노동 경기본부 경기중부지구로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37</sup>

한편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유일한 노동조합 총연합 조직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노사협조적 노선을 견지한 한국노총은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을 지지하여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한 한국노총은 1988년 11월 ‘자주적 민주노조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창립대회(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운동'으로의 '제2의 탄생'을 선언하고 개혁을 다짐하였다. 이후 한국노총은 국가권력의 왜곡된 정책과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민주노조 진영에 대해서는 견제와 경쟁의 태도를 취하였다.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자 노동자 대동단결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을 노동계 통합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민주노총에 통합대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1996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한국노총의 타협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한국노총 개혁 시도에서 분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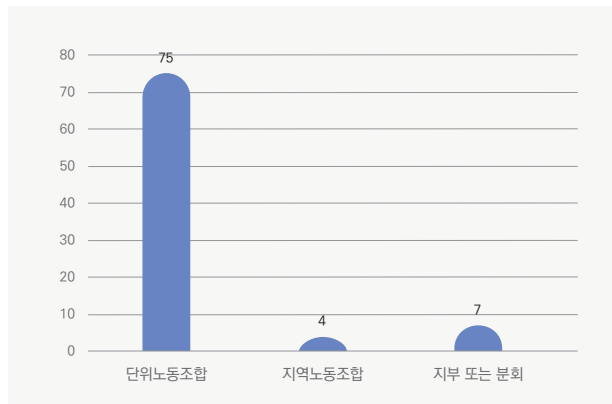
안양은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산하 경기도중부지역지부에 속해 있다. 중부지역지부는 1971년 창립된 한국노총 안양지구협의회가 그 시작이다. 1990년 한국노총 규약 개정으로 지구협의회는 지부로 개칭되었고, 운영규칙 개정으로 1995년 경기중부지역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sup>39</sup>

민주노총의 출범 등 노동조합운동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구조 조정, 정부의 탄압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와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안양도 노동조합수는 1991년 90개에서, 1994년 109개까지 증

가하였다가, 1995년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조합원수도 1994년 1만 6,7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95년 1만 1,141명으로 줄어들었다.<sup>40</sup>

1990년대 이후 국내 전체 노동쟁의 건수로 급감하였다. 1988년 1,873건, 1989년 1,616건에 이르던 노동쟁의 건수는 1990년 322건으로 줄어들었고, 1995년에는 88건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안양 지역의 노동쟁의 건수도 급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 통계연보』 등의 공식 통계자료에서 1994년 이전 노사분규 및 노동쟁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안양 통계연보』에서는 1995년부터 노사분규 발생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1995년 쟁의발생신고는 5건, 쟁의행위신고는 3건, 분규발생신고는 1건에 불과하였다. 1996년에는 쟁의발생신고 3건에 불과하였다.

1995년 현재 안양 노동조합의 현황을 보면, 조합원 1만 1,141명 중에서 남성은 1만 458명으로, 여성 조합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 형태는 전체 노동조합 중 75개가 단위노동조합을 취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택시 업종이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안양의 노동조합 현황

〈표 3〉 1995년 안양의 노동조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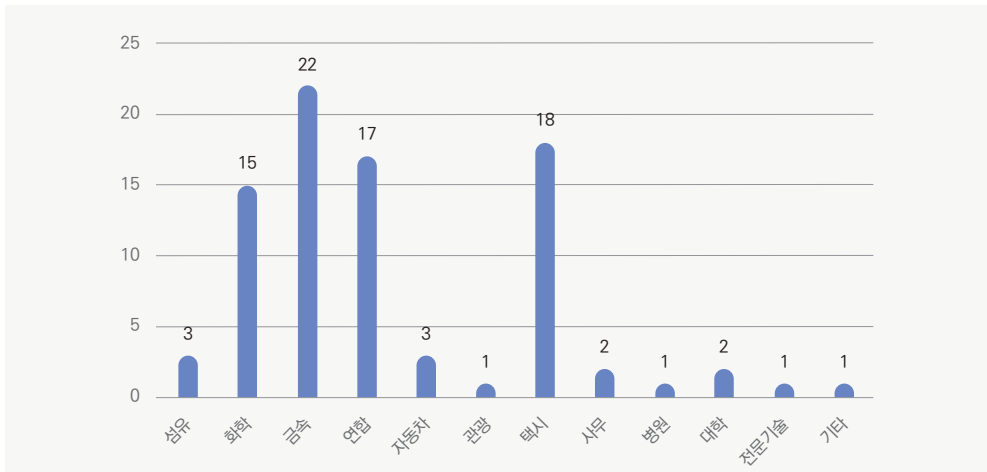
구분	조합수(개)	조합원수(명)		
		계	남	여
계	86	11,141	8,301	2,840
단위노동조합	75	10,458	7,648	2,810
지역노동조합	4	27	18	9
지부 또는 분회	7	656	635	21

자료 : 안양시, 『안양 통계연보』,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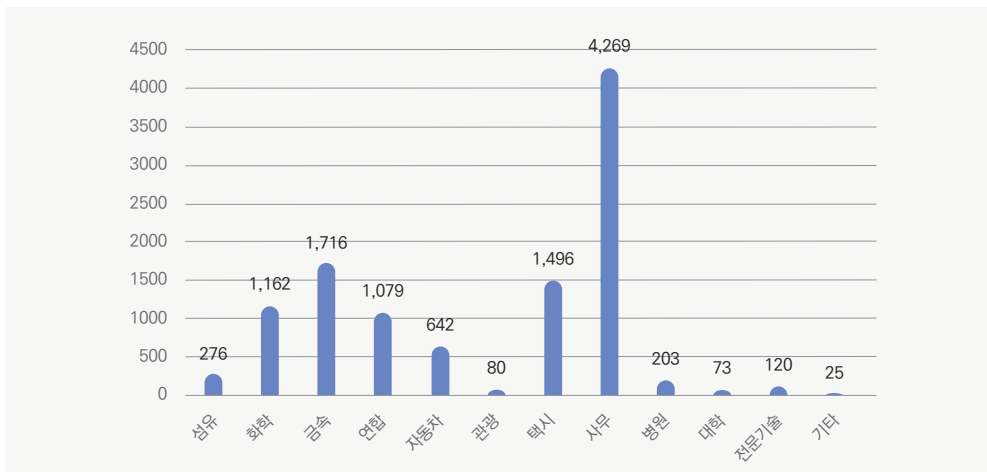
〈표 4〉 1995년 안양의 산업연맹별 노동조합 현황

산업	조합수	조합원수	산업	조합수	조합원수
계	86	11,141	택시	18	1,496
섬유	3	276	사무	2	4,269
화학	15	1,162	병원	1	203
금속	22	1,716	대학	2	73
연합	17	1,079	전문기술	1	120
자동차	3	642	기타	1	25
관광	1	80			

자료 : 안양시, 『안양 통계연보』, 1996.



1995년 안양의 산업연맹별 노동조합수 현황



1995년 안양의 산업연맹별 노동조합원수 현황

- 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549~550쪽.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506~507쪽.
- 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145쪽.
- 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 2008, 410쪽.
- 5 1989년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경기노련 창립 이후 전노협 출범까지 지역 노동운동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1989년 시기 노동운동을 1990년대 노동운동과 묶어서 서술하였다.
- 6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노동사회연구소, 340쪽. 금속노조
- 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296~301쪽.
- 8 「금성전선 화불시위」, 『경향신문』 1989년 3월 1일.
- 9 「노조 격려 목사를 집단 폭행, 한국원전자 직원 10여 명」, 『한겨레』 1989년 6월 11일.
- 10 「부당하고 철회 등 요구, 합동메탈 노동자 집회」, 『한겨레』 1989년 1월 19일.
- 11 「2개 업체 노동자 5백 60명, 폐업결정 철회요구 농성」, 『한겨레』 1989년 11월 5일.
- 12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26~344쪽.
- 1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45~348쪽.
- 14 「경기남부 36개 노조 파업」, 『한겨레』 1989년 11월 29일.
- 15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13~315쪽.
- 16 「경기노련 안양지구 사업평가」, 『경기노련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 1989(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23쪽). 경기노련 안양지구 가입노조는 신아화학, 한선전자통신, 한국제지, 코발트전기, 케피코, 국제전기, 삼화왕관, 삼덕제지, 강진공업, 제원전자, 새한콘택트렌즈 등이었다.
- 17 이원보,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 『노동사회』 9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46쪽.
- 18 이원보,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 『노동사회』 9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46~147쪽.
- 19 『안노회보』 13호, 1990년 3월 5일(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56~357쪽에서 재인용). 『안노회보』에 실린 글의 필자는 김성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정성희의 가명이다.
- 20 이영희 구술.
- 21 「전노협 와해 수순 밝기」, 『한겨레』 1990년 3월 15일.
- 22 「노조탄압이 부른 노동자 집단 분신」, 『한겨레』 1990년 9월 2일.
- 2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61~382쪽.
- 2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83~394쪽.
- 25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95쪽.
- 26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06쪽.
- 27 「안양중심가 1천명 시위」, 『한겨레』 1991년 5월 23일.
- 28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417~421쪽.
- 29 「경기노련 집행부 바뀌」, 『한겨레』 1992년 1월 15일.
- 30 「경기 노동운동 구속 사태 배경」, 『한겨레』 1992년 4월 29일.
- 31 「'총액' 사업장 노조에 징계사태」, 『한겨레』 1992년 5월 29일.
- 32 이황미, 「이달의 노동운동: 1992년 10월 전해투 결성, 목숨을 걸다」, 『노동자 역사 한나』( <https://www.hannae.org/>).
- 33 유경순, 「노동운동의 흐름과 노동조합」, 『군포시사』 2,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10, 124쪽.
- 34 「주요사업장 파업 움직임」, 『한겨레』 1994년 6월 28일.
- 35 이원보,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 『노동사회』 9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49~152쪽.
- 36 이원보,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 『노동사회』 9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52~154쪽.
- 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민주노총 20년 연표 1995~2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6.
- 38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노동사회연구소, 354~360쪽.
- 39 「연혁」, 한국노총 중부지역지부 홈페이지(<http://cbgg.inochong.org/>).
- 40 강순희, 『한국의 노동운동-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998, 63~64쪽.

## 제6장

# 안양 노동운동 지원 단체의 결성과 활동

---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1. 안양근로자회관의 활동

안양의 대표적인 노동자 복지시설은 안양근로자회관이었다. 국제가톨릭형제회(A.F.I.)의 도움으로 건립된 안양근로자회관이 1969년 9월 10일 낙성식을 성대하게 열면서 문을 열었다. 안양근로자회관은 기숙사 운영, 교육활동, 상담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와 문화 증진, 권익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1980년대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근로자회관의 지역 노동자, 노동조합, 단체에게 공간을 제공하였고, 지역의 노동자와 단체는 이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집회,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1969년 10월 1일, 금성방직에서 일하던 5명의 가톨릭노동청년회(J.O.C.) 회원이 입사하면서 기숙사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여자기숙사만 있었는데, 입사 조건은 ‘안양에서 백 리 이상 떨어진 곳에 집이 있는 19세에서 23세 사이의 취업 여성’으로, ‘최소 6개월, 최장 2년 이하’ 기간을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기숙사비는 기숙생들의 임금수준에 따라 다른데 기숙비 책정의 원칙은 기숙생이 받는 기본 임금의 열흘치였다. 기숙사비를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나머지 1/3은 문화비와 교육비, 마지막 1/3은 장래나 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sup>1</sup>

1970년대 초 기숙생들의 연령은 18~19세가 6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6%, 중학교 중퇴·졸업이 36%를 차지하였다. 종사 직종은 1969년에는 섬유 업종 종사하는 기숙생이 95%를 넘었는데, 1973년에는 전자업체 근무 기숙자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당시 기숙생을 받을 때 “파별의식을 경계하여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0명 이상 입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기숙자의 업종별 분포는 당시 안양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2</sup>



1970년대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실시된 노동교육

안양근로자회관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1972년에 만들어진 ‘교우근로자 모임’은 전(前) 기숙생들 주축으로 “교회 안의 젊은 근로자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비복음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이었다. ‘노동절연구회’를 만들어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근로자 노래자랑’을 지역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하기도 하였다. 1975년부터는 경기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상담도 시작하였다. 1975년에만 상담건수가 400여 건에 달하였다.<sup>3</sup>

안양근로자회관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법, 문화강습 등 각종 강좌와 문화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노동법 강좌가 개설되어, 서울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 소장 김말룡과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김어상 교수가 담당하였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강습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개설되었다. 1979년부터 탈춤강좌가 시작되었다. 탈춤강좌와 연습은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성황을 이루었는데, 1981년 근로자회관 일지에 따르면 탈춤강좌는 수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총 9회 교육에 연인원 105명이 참가하였고, 탈춤연습은 88회에 걸쳐 연인원 659명이 참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탈춤강좌에서는 근로기준법, 한문교육도



1980년대 안양근로자회관 홍보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병행되었다. 공연도 있었는데, 1981년에는 ‘예수전’ 공연에 120명이 참석하였고, 1982년 3월 10일에는 ‘콩가루판’이라는 창작 탈춤공연이 있었는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당시 행사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면서 논란이 벌어져 탈반이 해체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영화 상영도 있었는데, 1981년에는 ‘동물농장’, 1982년에는 부두 노동자의 생활 및 파업과정을 다룬 ‘워터프론트’, 1983년에는 찰리 채플린의 ‘골드러시’를 상영하였다. 노동자들의 공부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981년 동양나이론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학공부모임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한문공부를 표방했지만, 의식 개혁을 목적으로 한 소모임으로 명칭은 ‘오투기’였다고 한다.<sup>4</sup>

1980년대 안양근로자회관은 노동자들의 기숙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복지시설이었지만, 1970~1980년대 노동자들에게 억압적인 사회현실은 근로자회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현실 참여적인 사회활동과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 기관의 눈총을 받기도 하고, 도시산업선교회와 유관한 단체로 잘못 알려져 잠시나마 명칭을 바꾸기도 하였다. 당시 안양근로자회관 총무를 맡았던 최병렬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본다.<sup>5</sup>

1980년대 '근로자회관'이 가지고 있던 얼굴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기숙생들이 살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이나 기업주, 경찰들과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70년대 전두환 정권과 광주사태로 인해 인권이 짓밟히고 핍박받는 사람들, 특히 해고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의식화시키는 얼굴이었는데 이 얼굴 때문에 정부 기관의 눈총을 많이 받았지요. 도시산업선교회와 유관한 단체로 잘못 알려져서 '빨갱이 단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 때문에 '가톨릭근로자회관'으로 잠시나마 회관의 공식 명칭을 바꾸기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80년대의 회관은 대외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내적으로는 가장 탄탄하고 충만한 기간이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도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안양근로자회관을 소개하는 기사에 따르면 1985년 당시 근로자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은 꽃꽂이, 서예, 포크 기타, 오락회, 노동법 강의와 상담 등을 진행하는 토요모임 등이 있었다고 한다.<sup>6</sup> 1987년 탈출강좌가 다시 개설되어, 1987년 9월까지 1~2기에 걸쳐 50명이 강습을 받았다. 7~8월

투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87년 9월 13일 안양근로자회관 개관 18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강습생들이 풍물굿을 펼치기도 했다. 1987년에는 미술교실도 진행되었다. 미술교실은 1987년 1~2월의 특강을 시작으로 4기까지 진행하여 50여 명이 수료하였다. 또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문을 공부하는 사랑방 모임도 열렸는데, 현실 사회문제에 대한 학습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한다.<sup>7</sup>



풍물교육

1987년 노동자대투쟁 기간에 안양근로자회관은 각종 노동조합 준비 모임, 결성식, 회의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지역 노조의 회의도 주로 근로자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안양독서회, 우리그림 등 지역의 노동자 문화단체가 창립대회 장소이



안양근로자회관 풍물교육(진승일 제공)

기도 하였고, 우리그림은 창립대회와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안양근로자회관은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활동 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독자적인 공간과 역량을 가지게 되면서, 안양근로자회관의 역할과 활동 영역은 점차 변화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사회복지 문제가 크게 대두하면서 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였다. 안양근로자회관은 1997년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기숙사 사업을 종료하였다.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안양근로자회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막을 내린 것이다. 1998년에는 안양근로자회관이라는 명칭을 ‘안양전진상복지관’으로 개칭하였다. 전진상복지관은 외국인 노동자상담소를 비롯해 여성들을 위한 성인교육, 여성들의 위한 긴급 전화와 쉼터의 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펼쳤다. 2007년 12월 31일, 안양전진상복지관이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폐관함으로써 1969년부터 39년간 이어지던 안양근로자회관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sup>8</sup>

## 2. 안양노동상담소와 노동운동 단체의 활동

1985년 안양노동상담소가 개소하여 안양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1985년 초 송운학은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를 개소하였다. 민청학련 출신인 송운학은 1977년경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는 당시 의왕시에 있는 회사에 냉동기능사로 취직해 있었다. 1985년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에서도 구속자들과 해고자들의 늘어나면서 노동상담과 활동을 위한 공개적인 공간이 요청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송운학은 노동상담소 설립을 준비하였다.<sup>9</sup> 당시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던 김문수 등의 요청으로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명의를 달기는 하였지만,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지원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이라는 명의를 달기로 한 것이었다. 송운학은 집을 팔아 석수동으로 옮기면서 그 차액과 한 수녀의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여 석수동 반지하에 1985년 6월 22일 상담소를 개소하였다.<sup>10</sup>

상담소 개소식에는 이소선, 김근태 등 노동·민주화운동가들이 참석하였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민주화운동청년협의회 김근태 의장이 개소식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전하기도 한다.<sup>11</sup> 안양에 처음 생기는 진보적인 노동단체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찾아와 상담소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였고, 전화국에서는 노동상담소 전화를 정지시키고, 시청에서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압박이 계속되었다. 송운학 초대 소장을 이어 안양노동상담소 소장을 맡았던 정금채는 상담소 개소 당시의 지역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sup>12</sup>

그 시점에서 안양노동상담소가 만들어졌어요. 안양노동상담소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송운학이라고, 서울대 1년 후배이기도 하고 아카데미에서 같이 활동했던 후배인데, 그 친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상담소를 만들었고. 이제 개소식에 서울에서도 그때 많은 분들이 이소선 어머니, 김근태, 장기표, 이런 재야의 명망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가운데, 안양노동상담소에서 개소식을 하고 그러면서, 안양에 완전 비상이 걸렸어요, 안양경찰서에. 왜냐면 안양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용한 도시였거든. 시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도시였는데 노동상담소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해 가지고 현판식을 거행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완전히 비상이 걸렸죠.



1985년 6월 22일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식(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관의 압력에도 상담소 활동이 지속되자, 관에서는 직접적인 탄압에 나섰다. 경찰에서는 7월 9일 상담소 회보인 『안양노동소식』 2,000부를 전량 압수하고, 간사 1명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24시간이 지난 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는 압수한 회보를 돌려주지 않았다.<sup>13</sup>

이후에도 경찰과 관의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이 와중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른바 ‘똥물사건’이었다. 관의 압박으로 집주인은 상담소에 계속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담소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집주인 아들과 친구들이 상담소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송운학 소장에게 인분을 바른 것이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안양노동소식』 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건의 전말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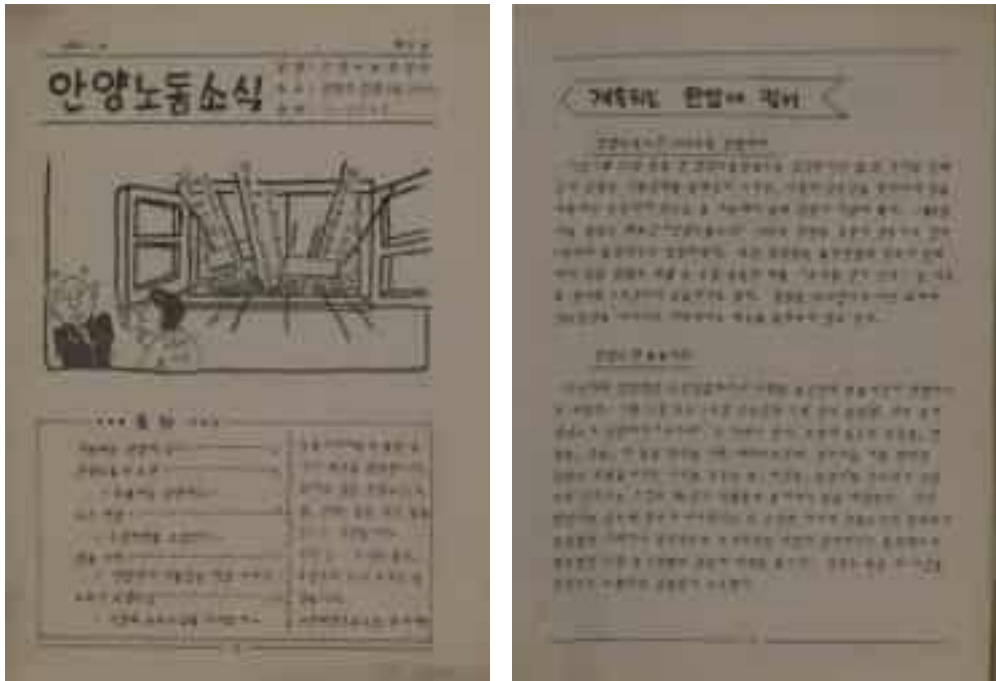
70년대의 잔인했던 유신정권하에서 자행된 동일방직 똥물사건이 안양에서도 터졌다. 7월 13일 오후 2시경 집주인과 그의 친구 (중략) 등이 상담소에 난입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망치, 오함마 등으로 부엌문, 현관문, 창문, 벽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었다. 심지어는 이를 말리면 상담소 회원들에게도 시비를 걸고는 똥, 페인트, 돌맹이를 갖고 와서 상담소로 던지고는 그것도 부족한지 회원들의 몸에게까지 똥을



안양노동상담소 초대 소장인 송운학(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처발랐다. 사건현장에는 정보과 형사가 재미있다는 듯 구경만 하다가 상담소에서 항의하자 ○○○만 데려가서 형식적으로 조사하고는 사건이 경미하다고 훈방했다가 월요일인 15일 총 6만 원의 벌금에 처했을 뿐이다. 상담소 측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안양노동상담소는 사건의 배후에 관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고, 7월 19일까지 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농성 기간을 전후로 하여 민주화추진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청계피복노동조합,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의 관계자들이 지지 방문하였다. 이 사건이 쟁점이 되어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긴급집회가 열렸고 규탄대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28일 안양유원지 주차장에서 규탄대회를 추진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를 개최되지 못하였고, 집회 참석차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집시법 등으로 체포, 구속되었다. 대회에서 사회를 보기로 한 송운학은 유인물을 가지고 대회장으로 가다가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상담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것, 폭력규탄대회 등을 위한 회의 참석에 당일 안양 시내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화염병 기습시위 배후조종 혐의 등을 덧붙여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이었다. 송운학은 재판 과정에서 화염병



안양노동상담소에서 발간한 『안양노동소식』 제2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배후조종은 무혐의로 되었지만 1년을 선고받고 만기를 5일여 지나 석방되었다.<sup>14</sup> 송운학 소장이 구속된 후에는 만도기계에서 해고되었던 정금채가 소장을 맡았다.

안양노동상담소는 개소부터 관과 경찰의 탄압을 받았는데, 회지 『안양노동소식』은 발간에서부터 수난을 당하였다. 창간호 2,000부가 전량 압수당하고 간사마저 연행되었고, 2호를 배포하다가 해고 노동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를 살기도 하였다. 『안양노동소식』 2호를 안양의 모든 노동조합에 우송하였는데, 상담소로 관심을 표시한 곳을 2곳에 불과하였고 불온유인물이라고 경찰에 신고되는 일조차 있었다. 정금채의 기억에 따르면, 『안양노동소식』은 간행 주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으나, 대략 월 1회 정도 간행되었다고 한다.

안양노동상담소는 노동운동의 지역 내 공개 거점이자, 활동가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노동운동 단체의 유인물과 소식지도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 활동가들이 제작한 유인물 등이 문제가 생기면 출처를 상담소라고 알리바이를 맞추기도 했다. 개소 당시부터 경찰의 주목을 받던 상담소는 1986년 11월 14개 노동운동단체, 5개 야학 등과 함께 불순 노동단체로

규정받아 자진 해산을 명령받기도 하였다.<sup>15</sup>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에는 지역의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노동자대투쟁 이후에는 그린힐 봉제공장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등 지역 내 연대투쟁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의 연대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89년 경기민련 의장을 맡고 있던 정금채는 공안정국이 시작되면서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1990년 금강공업 노동자 집단분신사건의 경기남부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수배되었고 1991년 구속되었다. 노동조합 연합조직이 등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역량이 성장하면서 1992년 안양노동상담소의 활동도 종료하였다.<sup>16</sup>

한편, 1985년 후반기부터 안양 노동운동 활동가 그룹 내에서 노선별 분화가 가속화되었다. 삼민동맹 그룹이나 제현의회(CA) 그룹, 제파피디 그룹 등은 지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비교적 조직적 이전으로 그룹을 점차 확대해 나갔고, 개별적으로 들어온 활동가들도 1986년을 거치면서 그룹화되었다.<sup>17</sup> 각 노동운동 그룹들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정치신문 등을 간행하며 그 실체를 드러냈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공개적인 노동단체로서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안양지역 노동3권 쟁취투쟁위원회’에서 발간한 『단결과 전진』 창간호(198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안양지역노동자회가 발간한 『안노회보』 창간호(1988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1985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안양지역 노동3권 쟁취투쟁위원회’라는 지역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정치신문 『단결과 전진』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단결과 전진』은 지역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고양과 정치투쟁을 선동하는 위한 목적에서 간행되었고, 이른바 ‘제현의회 그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었다. 이 정치신문은 매회 3,000부 정도가 간행되어 배포되었는데, 배포 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출처는 안양노동상담소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민 그룹에서는 지역적 정치신문을 폐기하고 전국 정치신문인 『전국노동자신문』으로 통일시켜 배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한다.<sup>18</sup>

1986년에 접어들어 그룹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김승호 등의 지도로 1985년경부터 경기 남부 차원의 모임을 갖던 그룹은 1987년 8월 초 ‘노동자 권익쟁취 전진대회’를 주최하면서 ‘경수지역노동자연합’(경수노련)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sup>19</sup> 1986년 공동입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비합법서클이 만들어졌고, 이 조직이 모태가 되어 1988년 ‘안양지역노동자회’(안노회) 결성으로 이어졌다.<sup>20</sup> 같은 해에 노동교육연구실, 노동회관, 군포노동자의 집 등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들이 속속 조직되었다. 기존의 노동운동 그룹들이 공개적인 노동운동단체를 설립하면서 노동운동 내에 정치적 입장 차에 따른 경쟁과 논쟁이 표면화되기도 하였다.<sup>21</sup>

### 3. 민중교회와 노동야학의 활동

1980년대에 안양에 민중교회가 창립되어 노동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교회는 한무리교회와 돌샘교회였다. 이들 교회는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 어린이집, 주부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5년 1월에 창립한 한무리교회를 창립 초기부터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을 위한 탁아소와 진료소, 노동자 교육을 담당하는 야간학교를 운영하였다. 또한 예정 안양노회 소속의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의 노조설립과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sup>22</sup>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한무리교회에서 후원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다양한 문화 활동이었다. 1986년부터 ‘사랑방학교’라는 이름으로 야학이 진행되었다. 기타반, 상식반, 풍물반 등 취미 소모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야학이나 교양반, 한문반 같은 학습을 통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무리교회는 공개적인 노동운동의 지원조직이나 거점 역할을 하



한우리교회 활동평가 및 계획(198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돌샘교회에서 전국 교회에 보내는 호소문(1992년,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였고, 이런 이유로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23</sup>

1985년 10월에 창립한 돌샘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노동야학, 공부방, 탁아소 등을 운영하였다. 돌샘교회는 1987년 5월부터 산본지역의 리운영비(리세) 강제징수 거부운동을 전개하였고, 노동자를 위한 야학을 시작하였다. 1987년 6월부터 산본2동 재개발지역 화재민 및 주민을 위한 무료진료와 보상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돌샘교회 이대수 목사는 1989년 한국원전자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격려하던 중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대수 목사는 한국원전자 노조 지원과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진상규명 대책 활동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sup>24</sup> 앞서 언급한 한국원전자 노조 지원 활동 과정에서는 이대수 목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다.<sup>25</sup>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 회사 정문 앞에서 ‘폭력 추방 및 이대수 목사 폭행 항의 기도회’를 갖던 전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경기 남부 지역 목회자·교인 등 100명에게 쇠몽둥이와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 오규만(33, 수원 한벗교회) 목사와 이정욱(30, 안양 한우리교회) 집사의 머리를 깨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1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17일 현장에 있었던 정상시(36, 안양 박달교회) 목사에 따르면 구사대원들 대부분이 술에 취한 채 쇠뿔 등이 등을 들고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며 기도회장에 들어와 노약자인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박달교회는 1987년 창립되었는데, 창립에 앞서 노동상담소를 개설하였다. 1988년에는 박달진료소를 개설하여 1989년까지 운영하였다. 1988년부터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을 위한 박달배움터를 만들어 기타교실, 사진교실, 서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90년에는 무주택, 맞벌이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민들레공부방을 운영하였다.<sup>26</sup> 박달교회는 1990년대 이후 교회 이름을 안민교회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한무리교회, 돌샘교회, 박달교회 등 안양의 민중교회들은 노동야학을 개설하고 노동자들의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연대와 조직화를 지원하였다. 교회 외에도 성락유치원에서 노동자를 위한 야학이 존재하였다. 성락유치원에서 했던 야학은 서울시 양평동 그루터기야학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1984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그해



박달교회 정상시 목사(안민교회 제공)

말부터 시작하였다.<sup>27</sup> 주로 포도원 근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퇴근하고 나오는 노동자에게 접근해 1 대 1로 학생 모집을 하였다. 학생은 10여 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삼화콘덴서와 금성전선 중기공장 등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중심이었다. 성락유치원에서 1년여 진행하다 이후 자취방으로 옮겨서 진행하였다. 1986년 4~5월경 학생 한 명이 야학 교재를 들고 가다 불심검문에 걸려 야학이 드러나면서, 야학 활동은 중단되었다. 이후 소모임으로 운영되었는데 6월항쟁 과정에 야학 멤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sup>28</sup>

1987년 안양의 진보적 교회세력은 경서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NCC)와 경서지역 기독교청년협의회(EYC)를 창립하고 사회참여적 실천을 시도하였고, 6월항쟁을 거치면서 경서지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결성되었다. 1987년 대통령 시기에 이들은 민주쟁취 경서지역 기독교공대위원회를 통해 공정선거감시운동을 전개하였고, 민중교회들은 1988년 안양지역민중교회협의회라는 연대기구를 조직하였다.<sup>29</sup>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중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를 꾀하였다. 지역의 아동, 노인, 빈곤가정 지원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4. 안양 노동자 문화 단체의 활동

안양은 일찍부터 노동자 문화운동이 활발하였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가 1970년부터 안양근로자회관에서 개설되어 있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안양에 자리 잡은 민중교회에서 각종 문화강좌, 소모임, 야학 등을 통해 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이후에는 문화예술 단체 등이 등장하여 문화예술운동을 전개하였다.

안양예술회관은 일찍부터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안양근로자회관은 기숙사 운영, 교육, 상담이 중심적인 활동이었는데,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가 1970년대부터 개설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열린 탈춤, 사물놀이, 미술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졌다. 안양근로자회관에서는 1970년대 후반 탈춤반 활동이 진행되었고, 1987년 3월부터 사물놀이 강좌가 개설되어 3월부터 9월까지 1~2기에 걸쳐 50명이 강습을 받

았다. 1987년 9월 13일에 열린 안양근로자회관 18주년 기념행사에서 해방놀이 풍물굿에 강습생들이 참여해서 기량을 뽐내기도 했다.

사물놀이반 1~2기 졸업생들이 추축이 되어 사물놀이패 ‘휘몰이’가 만들어졌다. 한국통신을 다니던 양해택이 초대 패장을 맡았다. 휘몰이 창립 멤버는 20여 명인데 대우전자부품의 양규현을 비롯하여 삼양통상, 농심라면, 뉴욕제과, 금성통신 등 지역의 다양한 사업장을 망라하였다. 휘몰이는 약 4~5개월의 강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주 3회 정도 연습을 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휘몰이 성원들은 1987년 6월 항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민주노조 활동에도 앞장섰다. 또한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 풍물패 결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풍물패 패장이었던 양해택은 대우전자부품 노동조합 풍물패, 한국통신 114 여성 조합원 풍물패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88년 그린힐 참사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장내동성당에서 휘몰이가 주최하는 마당극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sup>30</sup>

1987년 9월에는 노동교육문화연구소 ‘우리자리’가 경수노련 주도로 만들어졌다. 7·8·9월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활발한 선전 활동을 전개한 경수노련은 설립된 신규 노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 공간인 ‘우리자리’를 만들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였다. 같은 해 9월 30일에는 안양민요연구회가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창립하고 본격적인 강습에 들어갔다. 11월 22일에는 안양독서회가 같은 곳에서 창립되고, 곧이어 ‘우리그림’이 창립전과 창립대회를 안양근로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sup>31</sup>

1980년대 후반 안양의 문화예술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그림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창립 당시 취지를 보면 “우리 삶의 터전인 안양에서 안양 시민 스스로의 자신의 삶과 염원을 표현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미술문화를 꽃피우고자 한다. 그리고 서구세력의 문화적 침투에 맞서 당당히 맞서 면면히 이어 내려온 민중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림의 맥을 찾고 이를 통해 현시대에 맞는 미술양식을 창조하며 민중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미술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당시 이들 지역문화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던 박찬응에 따르면, 민요연구회, 안양독서회, 우리그림 등 지역예술문화 대중조직의 출현은 소집단운동에서 대중조직으로 공개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동시에 안양 지역 문예운동을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sup>32</sup>

우리그림은 생활의 작은 단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과 문예운동을 결합하고자 했다. 그러한 모습은 시민 미술학교의 운영과 지역 미술신문의 발행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시작했던 미술강좌를 기반으로 1988년부터 시민미술



서울놀이패 '휘몰이' 공연(진승일 제공)



사물놀이패 '휘몰이' 마당극(진승일 제공)



1988년 3월 10일 제1회 안양노동문화 큰잔치를 마치고



안양 노동자 문화 단체



'우리그림'의 시민판화전 전시회(경기도메모리 제공)



'우리그림'의 시민미술교실 작품 전시회(경기도메모리 제공)



1988년 <노동의 햇볕전> 출판 판화 작품(이중률 작, 경기도메모리 제공)



1988년 <노동의 햇볕전> 출판된 <농성장의 가족>(경기도메모리 제공)



〈안양문화연합 창립기념화〉(1988, 박찬응 작)



〈그린힐 노동참사 여성 노동자 22인 영정도〉(1988, 이억배, 정유정, 권윤덕, 홍대봉 작)



〈용찬이의 눈물〉(1992, 이억배 작, 경기도메모리 제공)

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문화운동을 펼쳤다. 우리그림은 시민 미술학교 졸업전을 개최하거나 공동 걸개그림, 벽화, 이야기 그림책 제작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특히 안양그린힐 봉제공장 화재로 죽은 22명의 여성노동자를 위한 위령제 합동 영정을 그리거나 안양전자 위장이전 투쟁에 쓰일 걸개그림을 그리는 등 안양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33</sup>

1987년 하반기에 출범한 안양독서회, 안양민요연구회, 우리그림 등의 문화단체들은 문화운동을 매개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적극 결합하였다. 안양의 문화단체들은 1988년 9월 23일 안양문화운동연합을 발족하여 안양권의 문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 안양문화운동연합은 1989년 2월 ‘민족민중문화의 대변지’로서 『안문연신문』을 발간하여, ‘지역문화운동 실천활동의 자료’, ‘올바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지’, ‘문예이론의 공유와 논의를 위한 정론지’, ‘문화운동의 방향을 모색, 제시하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천명하였다.<sup>34</sup> 안양문화운동연합은 노동문제를 비롯한 실천적 활동에도 적극 나섰는데, 박창수 위원장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문화패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5. 산업안전과 노동 건강권 관련 단체의 활동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성장과 함께 노동환경,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더욱 늘어났다. 특히 1988년 수은중독으로 15세의 노동자 문송면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업재해 추방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문송면의 죽음으로 민주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은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 건강검진문제 등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에 따른 집단 직업병 실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천 도금공장 노동자의 카드늄 중독 사망, 풍산금속에서의 폭발 사망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sup>35</sup>

공업도시 안양에서는 일찍부터 크고 작은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1964년 옛 안양교도소 인근에 폐탄처리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도 제약회사 공장 폭발,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등 사망에 이르는 산업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sup>36</sup>

1988년 3월에는 그린힐 봉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26세의 여성 노동자 22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1988년 중금속 중독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는 중금속 도금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되었다. 당시 언론은 현장을 취재하여 안전시설 미비, 안전관리 소홀, 형식적인 건강검진 등을 지적하고, 영등포, 부천, 안양 등지의 무허가 중금속 업체들은 환풍기마저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중금속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우려를 전하였다.<sup>37</sup> 또한 1988년 7월 노동부는 경인 지역의 중금속 취급 업체를 2차에 걸쳐 점검하였는데, 인천·안양 지역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5개 업체 24명이 중금속 중독 직업병 환자로 판명되었다.<sup>38</sup>

문송면이 1988년 7월 2일 사망한 이후 노동운동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연대활동 결과, 문송면에 대한 장례가 ‘고 문송면 산업재해 노동자장’으로 7월 17일 치러졌다. 문송면의 산재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민간의 보건의료 단체였다. 1986년 구로의원이 설립되어 산재 상담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주로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푸른치과, 인천의원, 평화의원, 군포치과 등 비슷한 형태의 의원 상담실이 속속 설립되어 갔다.<sup>39</sup>

안양에서 산업안전 및 노동자 건강권을 증진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곳은 군포치과의원이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의 전신인 청년치과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1988년 구로에 푸른치과가, 1989년에 군포에 군포치과가 개원하였다. 군포치과에는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노동자 건강을 상담하는 노동건강상담실을 설치하였다. 노동건강상담실은 지역에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1년여에 걸친 준비를 거쳐 탄생한 것이었다. 군포치과 초대 원장은 류은희, 노동건강상담실 초대 간사는 김선희가 맡았다.<sup>40</sup>

군포치과 개원 안내 팸플릿에는 “안양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군포치과의원이 탄생했습니다.”라고 군포치과의 목표 중의 하나가 노동자 건강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포치과의 설립 취지는 영리보다는 지역의 노동자,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역 주민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 병원을 지향하였다. 군포치과는 1990년 6월 20일자로 『건강신문』을 창간하였는데, 류은희 초대 원장 명의의 다음과 같은 창간사가 실려 있다.<sup>41</sup>

깨끗한 환경 속에서의 건강한 생활은 먼 꿈이 된 듯, 우리 삶의 터전은 공해로 오염되어, 공해병,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심각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의 산재발생률은 세계 1위입니

다. 안전시설 미비로 산재가 만연하고 (중략) 사업장의 안전시설 확보 등 안전한 작업조건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며, 적절한 노동과 휴식, 최저생계비, 생활임금 확보 역시 꼭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중략) 지역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상식을 전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매개체이기를 바랍니다.

노동건강상담실이 마련되면서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모임을 주도하여 노동조합의 산안부장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1년 이후에는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당시 진료항목에 없던 구강검진 현장검진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업장 구강검진에 참여했던 김혜진은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 점심시간이나 퇴근 무렵에 검진을 실시하였고, 이후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유료 또는 무료 구강검진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sup>42</sup>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모임은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전문적인 실무능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노동자 건강 관련 사업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sup>43</sup>

- 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4쪽.
- 2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5쪽.
- 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5쪽.
- 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8쪽.
- 5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56쪽. 이 책에 실린 최병렬 전 총무의 인터뷰를 그대로 옮겼다.
- 6 오동혁, 「노동관계기관 소개: 안양 근로자회관」, 『현대노사』 통권 21, 한국노동문제연구원, 1985, 139쪽.
- 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70~171쪽.
- 8 「안양 전진상 복지관 문답아」, 『가톨릭신문』 2007년 12월 16일.
- 9 「인터뷰: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선데이뉴스』 2020년 10월 22일.
- 1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4쪽.
- 11 「민청련 의장 연행 조사」, 『조선일보』 1985년 6월 25일.
- 12 정금체 구술, 2024년 11월 14일.
- 1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4쪽.
- 14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5쪽.
- 15 「14개 노동단체 해산명령, 노동부」, 조선일보, 1986년 11월 8일.
- 16 안양노동상담소는 해소 이후 1992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활동을 거쳐, 안양외왕근포환경운동연합을 설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정금체 구술)
- 1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7쪽.
- 18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8쪽.
- 19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8쪽.
- 20 정성희 구술.
- 2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84쪽.
- 22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7쪽.
- 23 『만안의 기억』, 143~145쪽.
- 24 한국기독교장로회 민중교회운동연합 편, 『바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민중선교의 현장』, 한국신학연구소, 1992, 271~272쪽.
- 25 「구사대 폭력 항의 교인 또 못매」, 『한겨레』 1998년 6월 18일.
- 26 한국기독교장로회 민중교회운동연합 편, 『바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민중선교의 현장』, 한국신학연구소, 1992, 275~276쪽.
- 27 그루터기 야학의 이재훈, 김형수, 양천주, 황순하 등이었다(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9쪽).
- 28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9쪽.
- 29 최병렬, 「6.10민주항쟁-33년 전의 기억찾기」, 『군포시민신문』, 2020년 6월 10일.
- 3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70~171쪽.
- 31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71쪽.
- 32 박영택 외,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지역별 흐름 연구」, 경기문화재단, 2005, 58~59쪽
- 33 박영택 외,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지역별 흐름 연구」, 경기문화재단, 2005, 58~60쪽.
- 34 안양문화운동연합, 『안문연신문』 창간호, 1989년 2월 22일(경기 도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 <https://memory.library.kr/main>).
- 35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2000, 86~87쪽.
- 36 「계약회사 공장 탱크 폭발, 2명 죽고 6명 화상」, 『경향신문』, 1977년 7월 8일; 「공장 화학기계 폭발, 실습생 등 11명 사상」, 『동아일보』 1979년 11월 7일.
- 37 「중금속 오염 도금 사업장, 배기장치조차 없었다」, 『동아일보』 1988년 7월 20일.
- 38 「중금속 중독 14명 또 발견」, 『경향신문』 1988년 7월 29일.
- 39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2000, 97쪽.
- 40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49쪽. 『안양지역 노동운동사』에는 노동건강상담소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다른 자료들에서는 노동건강상담실로 표기하고 있어, 노동건강상담실로 표현하였다.
- 41 군포치과의원, 「창간사」, 『건강소식』 1990년 6월 20일.
- 42 김혜영, 「지역치과위원의 경험」, 『건지』 2017년 12월 1일.
- 4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49~350쪽.





## 제1장

#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에 따른 안양 노동의 변화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외환위기와 안양 노동의 위기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 경제는 옥일승천의 기세를 보였다. 1987년 6월항쟁에 뒤이은 노동자대파업을 거치면서도 경제 성장은 3저호황에 힘입어 10%를 넘을 정도였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마치 사춘기처럼 격렬한 성장통을 수반하면서도 기세가 꺾일 줄을 몰랐다. 노동운동의 고양에 따른 실질임금의 가파른 성장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한국 자본주의는 탄탄대로를 밟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7년 말 외환위기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외환위기가 초래한 충격은 가히 전방위적이었지만, 특히 노동자에 대해서 가혹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실업률이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실업률은 3%대에 머물렀으나 1998년 7%를 넘어섰다. 두 배 이상 폭증한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노동계층에 직접 타격을 가했음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당시 안양시의 실업률을 보여주는 통계는 없는데, 공장 밀집지대였던 안양이 큰 타격을 받았음은 불문가지였다.

199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안양의 공장은 1998년 1,111개에 달했으나 1999년에는 불과 1년 만에 976개로 감소하여 무려 135개의 공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뒤인 200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공장이 감소하여 898개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공장수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지만, 외환위기가 안양 경제에 미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준다.<sup>1</sup>

위기 속에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공근로였다. 1999년 경기도가 시행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역별 신청자는 안양시가 5,947명으로 1단계 때의 2,265명에 비해 62.6% 증가하였다. 이는 오산시 46.1%, 성남시 27.7% 등 인근

# IMF구제금융 공식 요청

■ 하루 총리 아젠틀라 200억弗이상...내주초 협상단 訪韓

## 1997년 11월 22일 매일경제

### 경제부 11일

경제부는 11일 서울에서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IMF는 1~4주 내에 대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100억 달러를 대출할 수 있는, 국채와 동등한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100억 달러를 대출할 수 있는, 국채와 동등한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아젠틀라 200억弗 이상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아젠틀라 200억弗 이상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IMF는 100억 달러를 대출할 수 있는, 국채와 동등한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아젠틀라 200억弗 이상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아젠틀라 200억弗 이상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IMF는 100억 달러를 대출할 수 있는, 국채와 동등한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아젠틀라 200억弗 이상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아젠틀라 200억弗 이상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IMF는 100억 달러를 대출할 수 있는, 국채와 동등한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음을 알리는 신문 기사(『매일경제』, 1997년 11월 22일)

지역의 증가율을 압도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다.<sup>2</sup> 그만큼 안양의 충격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또한 고학력자와 여성들도 대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고학력자도 실업의 고통을 피해 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의 실직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불가피했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노동계층 중에서도 특히 1차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실업자 중 일용직 노동자 비중은 1997년 1~4월 16.3%였으나 1998년 같은 기간에는 26.8%로 급격히 높아졌다. 실업자 4명 가운데 한 명이 일용직 노동자인 셈이었다. 안양의 건설업체 명주건설 역시 이러한 영향을 직접 받았다. 대량 실업에 따라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다. 백화점 건물 건설 하도급을 주로 받는 이 회사는 임금 10%를 일괄 삭감하고 시간급을 실적급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담배 피우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실적에 쫓기게 되었다. 다른 작업조보다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하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관리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불만이라도 제기하면 곧바로 해고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일거리만 주면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조건에서 조직적 저항은 매우 힘들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명주건설에 부당하고 판정을 내렸지만, 실업자가 거리를 메운 상황 속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였다.<sup>3</sup>

외환위기가 불러온 대표적 문제가 정리하고였다. 당시 정리하고 문제는 안양에서도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경기개발연구원 세미나(1998년, 경기도청 제공)

주된 현안 중의 하나였다. 1999년 8월에는 안양의 한 펌프기계 제조업체가 전 직원 40여 명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12명의 노동자는 끝내 사표가 수리되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왔게 되었다. 회사 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매출 부진에 따른 자금난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에 따르면 월 매출액이 50% 이상씩 상승했고 자금난도 없었다는 것이다. 해고 전 사업주는 공장용지 명목으로 강원도 원주에 2,000평의 땅을 매입했는가 하면 방배동에 50평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할 정도로 자금이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주가 다른 곳으로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sup>4</sup>

보수적인 경제지에서조차 문제로 삼을 정도로 정리해고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면서 기업주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경영상의 긴급한 문제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의 정리해고도 문제지만, 단지 기업주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가 빈발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해만 갔다.

1999년 말에는 안양 소재 모 컨설팅업체가 청주에 소재한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가정 포기각서를 받아 문제가 되었다. 각서는 “회사의 경영혁신 활동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 2000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가정을 포기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경영혁신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도 함께 제출했다는 것이다. 부서별로 1~2명씩 차출된 이들은 출근 후 청소, 회사 발전방안 연구, 토론회 등으로 고된 일과를 보내고 있다 했다.<sup>5</sup> 회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사례는 청주 지역 공장에 해당되지만, 컨설팅업체가 안양에 있었다는 점에서 안양지역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잘려본 사람은 알아. 잘리는 건요. 앞이 캄캄해 그게요.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는데 100m 출발선에 서면 항상 가슴이 뛰어요. 아무리 많이 그 출발선에 서도 계속해서 항상 훈련이 안 돼요. 가슴이 두근거려. 근데 해고되면요. 내가 해고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해고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올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요. 앞이 캄캄해. 다음에 먹고살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당장 이제 애한테 뭐 밥도 못 사주는 거야. 맛있는 것도 못 사줄 뿐만 아니라 마누라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집에 갸갸한 거야. 그냥 앞이, 그제 할 때마다 매번 그제 똑같아.<sup>6</sup>

안양에서 수없이 해고를 당했던 한 노동자는 그것이 매번 적응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토로하였다. 100m 출발선의 긴장과 두려움에 비유한 것처럼 해고는 매번 새로운 고통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앞이 캄캄해지는 해고의 공포가 일상화되는 것이 외환위기의 시대였다.

물론 외환위기는 기업들에게 기존 생산방식을 변경시키도록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안양의 한 조명기기 업체는 기아자동차의 부도로 함께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인력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 40명이었던 직원을 2명으로 줄인 마당에 다시 인력을 확충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수주 물량이 변동될지 모르기에 무턱대고 인력을 늘릴 수도 없다는 것이 이 회사의 고민이었다.<sup>7</sup>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 공급 부족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공식 통계로만 150만 명 이상이 실직으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3D업종 노동력 공급을 위한 취업 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1998년 8월 27일 노동부는 경기도 안산에서 안양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5만 2,000여 명을 강제 출국시

새 천년 새 노사 제1부 —  
**이것만은 고집시다** ⑤

## 경영난 핑계 정리하고 남발

### 김형욱 기자

경영실績 불거지면 경우 핑계로 고는 인연이어 왔다. 노동계도 이와 불기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영실"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고를 남용하는 때가 적지 않다.

다음은 경영해고의 남용된 피해 사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컴퓨터 제조업체인 A기업은 직원 40여 명은 지난날 26일 일제사표를 제출하려는 통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뒤인 26일 12명 근로자와 사표가 권고 수락과 전후에 좀더 늦게라도 일해나고, 회사에서 밝힌 해고사유는 매출이 부진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 일천여 원과 경비로 1억3000만원이 나가는 12명 매출액은 1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고근로자가 설명한 달한다. 사용자 지난해 9월이 회사를 인수한 뒤 지난해 일부를 매출액이 10% 이상에 성장했고 심각한 적체난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고되기 전 강릉도 원주에 경영원지 2600명를 매달렸고 사용주는 서울 강남 정자동에 50명 규모로 안락주택을 살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해고 근로자는 오히려 A기업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밝힌 이유는 사용자 소유한 다른 기업체인 B사도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금의 상당부분이 해고 나감에 사용되고 주장했다.

해고대상 근로기준이 모호하다면 정도 지적했다. 해고된 사람 중에는 간담부담을 지는 하루지 여직원 3명이 있었다. 회사는 해고한 직후 직원 2명을 새로 채용하고 여직원도 새로 모집했다고 말했다.

해고 근로자는 "우리가 생각한 한-카운은 사용자와 근무사이었던 한 일원이 경영원책로 감당하면서 그 일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은 모두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근로 해고근로자가 이런 부당행위 신고를 다 13에 해야 할지, 그리고 부당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비용감당하는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IMF체제 후 과 기침은 그러나 경영해고에 대한 인권을 주장했지만 "해고된 내 가

습"이라는 인식의 흔적은 흔소기 일러지는 지경도 부당해고와 불합노동행위가 상행되고 있다.

찾아지 않는 곳에서 지행되는 이 같은 불법해고와 해고 남용이 기업주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움말=인간 A기업 해고근로자

\*'잠정된 노사대화와 관행'에 대한 독자 의견문의 제명이 담긴 제안과 원고를 기대합니다. 소견 자료 홈페이지 <http://www.mk.co.kr> (쪽지투고) 소견사무국 [edit@mk.co.kr](mailto:edit@mk.co.kr) 팩스 02-2266-2276 소견실 02-2266-2213 ~4 매일경제신문 '신노사관계' 담당자 및



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TV 노동부 공동기획

안양 A기업의 정리해고 사건이 보도기사(『매일경제』, 1999년 8월 19일)

킨 상황이라 일손 부족이 심각해진 상황이었다.<sup>8</sup>

다행히 정리해고를 피하고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온전할 수는 없었다. 외환위기가 초래한 노동환경의 악화는 과로사가 급증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정리해고로 줄어든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야근과 특근 등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과로를 불러오게 된다. 더욱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낯선 업무에 투입된 경우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연령이 낮은 직장인들로도 확산되고 있었고 생산직은 물론 전문직으로도 확장되고 있었다. 한 마디로 '과로 증후군'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1998년 안양의 한 유제품 공장의 물류센터 담당 소장도 불과 42세의 젊은 나이로 쓰러져 숨졌다. 이미 한 달 전 쓰러져 간이 안 좋으니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음에도 다급한 회사 사정 때문에 계속 근무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과로 질병자 건수는 428명에 달해 1998년 6월까지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2%나 급증하였다. 한 병원 의사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지나친 노동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감원 공포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9</sup>

가진 것이 '뭉뚱아리'밖에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의 고갈은 곧 생존의 위기이지 않을 수 없다. 고강도 노동으로 몸에 무리가 와도 실 수조차 없기에 노동력의 상품가치는 급속하게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노동시장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구축된다 해도 변변한 사회적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국가의 사회보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채 진행되었다. 사회보장과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국가는 모든 자원을 공업화에 쏟아부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든 생존은 개인과 가족의 온전한 책임이었다. 특히 산업화를 통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마을이 제공하던 각종 연대와 부조 시스템이 갑자기 사라진 조건에서 도시의 개별적 생존책을 익혀야만 되었다. 안양과 같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신흥 도시로 성장한 곳은 더욱이나 도시적 삶의 전통이나 관습이 존재할 리 없었다. 도시가 자신의 생활문법과 관습적 가치를 만들어낼 틈조차 없이 빠른 속도로 도시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곳'이 도시였다. 국가의 사회보장도 없고 도시민의 자체적 연대망도 극히 취약한 조건에서 오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생존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1970년대 거의 유일하게 기능했던 사회보장은 의료

보험이었다. 1977년 시행된 의료보험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부담으로 시행된 것이었기에 국가의 재정 투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sup>10</sup> 의료문제는 개인과 가족에게 가장 커다란 위험 중의 하나이다.

가족 구성원 중 하나라도 중병에 걸린다면 그것으로 한 가족의 생활과 생존이 끝장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대학병원 중심으로 종합병원이 확대되면서 고가의 의료장비와 치료약이 개발될수록 치료비가 치솟게 되었고 웬만한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게 의료비였다. 따라서 고스란히 앉아서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집과 자산을 처분해 의료비를 감당해야 했다. 가구 수입을 전적으로 책임진 가장의 질병은 더욱 치명적이다.

국가와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복지는 취약하기 그지없었는데, 역설적으로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폭 강화된다. 외환위기에 따른 긴급 복지책으로 강화된 것이 실업급여 제도다. 생존에 내몰린 해고자들에게 실업급여는 그나마 최소한의 생명줄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사건이 증대된 것이 그 일례가 된다.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998년 수원, 안양, 안산 등 3개 노동사무소에서만 부정 실업급여 수급자가 2,000여 명에 달해 피해 금액만도 10억 원 넘었다고 한다.<sup>11</sup>

외환위기에 따른 대책 중 하나가 주부, 고령자 등 기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인력을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인입하는 정책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 남녀에게 1~2주에 이르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케 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훈련 내용은 가사보조, 조리 보조, 수위, 경비, 주차관리 등 18개 직종이다. 안양도 당연히 포함되어 전국 주요 도시를 망라해 69곳에 훈련소를 마련하였다. 수강료는 일체 없으며 취업 알선도 이루어지는 제도였다.<sup>12</sup> 노동부도 나서 1999년 6월부터 '실직 여성가장 2만 명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여기에는 안양 지방노동사무소도 포함되어 사업이 전개될 예정이었다.<sup>13</sup>

그런데 외환위기 이전부터 이미 여성 노동의 확대가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6년 한 언론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 개최한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 여성 채용박람회의 성공에서도 확인된다. 1996년 6월 개최된 박람회에는 5일간 무려 15만 명의 여성 취업 희망자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행사가 성공하자 안양 시청에서도 박람회를 찾아 준비 및 진행상의 노하우를 조사해 갔다.<sup>14</sup> 이는 그만큼 여성의 취업 열기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노동 시장의 팽창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실질임금 하락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양가적 의미



안양시청에서 열린 IMF 시대 극복을 위한 생업진출 세미나(199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가 있는 현상이었다.

한 언론은 경기 침체로 명예퇴직, 조기퇴직 우려 속에 남편 대신 주부가 취업전선에 나서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주부를 대상으로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었는데, 안양 사회복지사업소와 여성회관도 이러한 흐름 속에 취업 수강생을 모집하였다.<sup>15</sup> 이미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명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여성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시장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인입시켜야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기 주로 이것을 감당한 것은 농촌이었다. 농촌은 거의 무제한의 노동력 공급 저수지 역할을 했다. 1960년대 이래 이촌향도는 농민의 노동자화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가게 되면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공급이 한계에 봉착한다. 더 이상 이촌향도할 농민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농촌의 몰락이 진행된 결과였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다음으로 노동력 공급을 책임져야 될 곳은 가정밖에 없었다. 1960~1970년대 보통 한국의 가정은 가장 1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것이 일



안양시 공공근로사업장(1998년, 안양시청 제공)

반적이다. 하층민의 경우 여러 명의 가구원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1인의 노동임금으로 4~5인 가족의 생계가 가능했던 것이 당대였다. 그만큼 노동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가장 외에 추가로 가구원이 임금소득을 올려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실질 노동임금이 계속 상승했으며 이른바 ‘스위트 홈’의 전형인 일하는 남편과 가정주부 부인의 성별 분업이 공고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더 이상 1인 노동임금으로 가족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sup>16</sup> 이로부터 여성의 노동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 해방의 논리와 결합되기도 했다. 이른바 맞벌이가 일반화되는 사회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1인당 노동임금의 하락에 대응하는 가족주의적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맞벌이 현상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본격화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직업훈련에

나선 것은 이러한 자본의 요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과거에 현모양처로 고착된 여성의 이미지가 이제는 노동력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2018년에서 2022년 안양의 경제활동 인구는 1만 889명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만 7명이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이 1만 1,021명이 감소한 반면, 고령자는 6,698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가 4,214명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sup>17</sup>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자 역시 연장된 노동을 감당해야 되었던 것이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사회복지도 매우 취약하기에 고령자의 소득은 노동임금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과거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과 고령자조차 노동력으로 호출해야 될 정도로 한국 자본주의의 노동시장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은 대부분 단순노동 위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동이 저임금의 주된 분야인 것도 분명하다.

요컨대 외환위기는 사회적 구성원의 노동력화가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한 결정적 계기였다. 정리해고와 실업률의 증가 속에 비정규직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양극화가 사회적으로 관철되게 되었다. 따라서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떨어진 임금소득을 벌충해야만 되었다. 이것이 여성과 노인들까지 추가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만 되었던 사정의 배경이었다. 이것이 외환위기가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대강이다.

## 2. 신자유주의와 안양 노동의 변화

주지하듯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거침없이 관철되어 왔다. 외환위기 극복을 내세운 김대중 정권이 이를 주도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화운동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김대중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결합을 내세운 DJP연합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 역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농담처럼 들리는 진담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하였다.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민주화 정권의 주도 속에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별다른 저항 없이 전 사회적으로 관철되어 갔던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과정은 2차대전 이후 급팽창한 사회복지 제도를 공격하면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영국은 노동

당 주도로 사회복지를 대폭 확장했고 이것이 서구와 미국으로 확산되어 전후 자본주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단계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를 거치면서 베트남전쟁을 통해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고 급속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닉슨 정권은 금태환 정지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는 곧 케인즈주의가 쇠퇴하고 하이에크(F.A. Hayek), 프리드먼(M. Freedman) 등의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74년과 1976년에 걸쳐 밀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가 연속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곧 이어 영국의 대처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 다시 말해 서구와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는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 모델, 그것을 이데올로기와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케인즈주의에 대한 공세로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물론 사회복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맞이했기에 서구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1978년 전경련 초청으로 하이에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1979년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은 시장개방, 민간자율을 내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기에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면서도 사회적 저항은 비교적 약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이미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던 1999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거주하고 있던 한 일용직 노동자는 언론 기고를 통해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이다. 지난해 초에 실직을 당한 후 뚜렷한 기술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막노동을 하고 있다. 건설이 아닌 다른 업종은 임금도 정상화되고 인력도 부족해 취업이 잘된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는 지금도 인력이 남아돌아 임금은 턱없이 떨어지고 일은 더할 수 없이 고되다. 하지만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기에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다. 문제는 고된 일을 하고서도 임금을 제날짜에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참으로 비참해진다. 요즘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시적인 실업자들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고단한 육신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노동조합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으며 퇴직금은 물론 퇴직 후 실업수당도 보장되지 않는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저축액도 많

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임금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 일용 근로자들은 끼니를 때울 양식조차 구하기 힘들다. 사업주들은 이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임금 체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sup>18</sup>

외환위기 이후 실직을 당하고 결국 건설현장 노동자로 변신한 한 노동자의 호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고용보험, 실업수당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노동조합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말 그대로 몸뚱아리 하나로 버텨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나마 임금마저 제때 나오지 않아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실직 이후 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상황 이었고 그 핵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자본의 지속적 요구였고 1996년 12월 노동법 개악의 핵심이 그것이었다. 즉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리해고를 가능케 했던 것이 노동법 개악의 요체였다. 따라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외환위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미 자본의 이해관계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요구하고 있었고 국가권력도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외환위기는 다만 그것을 촉진하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였을 따름이다.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장 단위 조사인 「사업체노동실태보고서」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임시 근로자, 그리고 그날그날의 필요에 따라 고용된 자를 일용 근로자로 분류한다. 임시직·일용직 등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모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칭하므로 총칭 계약직이라고도 한다. 계약직 중에서 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정규직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임시적이라고 하며, 특히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용직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임금 근로자는 상용고, 임시고, 일고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임시직,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한다.<sup>19</sup>

2003년부터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를 하면서 고용형태를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정규직 근로자는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써 “노동법상의 해고 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 노동자 등의 용어로 정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평생 고용을 전제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의 전일제 근로를 하면서 근로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의 법적 보호가 완벽하게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비정규직은 그것이 성별, 학력별,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2014년 8월 기준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53.5%로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았다. 2004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50.6%에서 46.5%로 줄어든 반면 여성은 49.4%에서 53.5%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20%대이지만 1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60%대 후반을 기록하였다. 직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은 63.6%에 달했고 농림어업과 서비스 판매직도 40%대를 기록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은 21.8%에 그쳤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에는 66.7%에 달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 격차다. 2014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45만 3,000원으로 정규직의 55.8%에 그쳤다. 평균 취업시간이 적은 것을 감안해도 66.2%에 불과하였다.<sup>21</sup>

그러면 안양시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떠한가. 2023년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는 47만 2,499명이며 경제활동 인구는 30만 0,885명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380명으로 9.7%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 6,581명으로 5.5%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 노동자는 243,931명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해 압도적 비율이다. 임금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16만 5,657명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7만 8,275명이다.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32.1%로 전국 비정규직 비율 39.1%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 중 남성은 3만 5,135명이고 여성은 4만 3,140명이며 반면 정규직은 남성 9만 6,840명이고 여성은 6만 8,817명이다.<sup>22</sup>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2022년 기준 안양의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수는 5만 3,220명이며, 이중 직접고용 정규직은 2만 9,762명(55.9%),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19,668명(37.0%),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790(7.1%)명이었다.<sup>23</sup>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합치면 비정규직 비율 44.1%로 안양시 전체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비정규직이라고 할 때는 취약 미조직 이런 비정규직들을 이제 폭넓게 포함을 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한 60% 정도는 비정규직이다. 노동자 중에 특히 안양시에 노동자들의 한 60%는 비정규직이다. 저는 어떤 노동자들을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포함 안 되는 사람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필수 노동자들이예요.<sup>24</sup>

경기중부지역비정규직센터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안양의 비정규직은 60%를 넘는다 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배달로 상징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 통계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60%가 비정규직이라면 사실상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즉 학력, 성별,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노동 문제로 국한될 수 없으며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먼저 안양시의 활동을 보자. 안양시는 2021년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안양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22년 안양시장이 이사장인 비영리사단법인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노동인권정책 전담부서인 고용노동과(노동정책팀)를 설치하여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였다. 이미 안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주택 노동자, 감정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였고,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기초적인 노동인권정책 기반을 갖추고자 하였다.

안양시는 ‘안양시 노동인권 조례’ 외에도 ‘생활임금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조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노동정책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25</sup>

그러나 행정기관의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 자신의 노력과 활동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안양의 노동조합 상황은 어떠한가. 2023년 기준 안양 지역의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50개 민주노총 소속은 3개 노조이다. 조합원은 한국노총이 3만 4,554명이고 민주노총은 773명이다.<sup>26</sup> 2009년에는 한국노총이 60개 노조에 민주노총은 9개였으며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만 5,515명 대 민주노총 1,003명이었다.<sup>27</sup>

14년간 한국노총은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민주노총은 오히려 세력이 약화되었음이 눈에 띈다. 노동조합도 외환위기로 직격탄을 맞기도 하였다. 1997년 1만 명이 넘던 안양의 조합원 수는 1999년에는 7,000명 대로 대폭 하락하였다. 전국적으로도 노동조합 전체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기준 13%를 기록하고 있다.

안양의 경우 19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끈 전노협과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 활동이 매우 미약해진 것이 특징이다. 1989년 안양지구협의회 사업장은 14개였는데, 1992년 1월 현재 5개 노조로 줄어들었다. 1996년에는 쟁의발생 신고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운동은 급속한 쇠퇴 현상을 보였다. 그 이유는 다각도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실제 활동가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연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가치랄까요? 투쟁의 목표 이런 것들이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 나오고 소위 말해 양극화되고 특히 IMF 이후에 사실 특히 이제 뭐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이 셋었던 울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결국 노동자들의 연대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물론 이제 자본의 어떤, 아니면 정권의 그런 통치술의 변화 뭐 그런 것들도 작용을 당연히 했겠지만, 결국 연대의 가치보다는 그냥 우리 사업장 아니면 우리 정규직 이런 그런 분할 통치로 귀결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건대. 그러니까 이 당시 80년대 말에 이때 그 연대라고 하는것에 어떤 뭐랄까 의미랄까 그 투쟁의 의미가 또 남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는.<sup>28</sup>

1980년대 안양에서 치열하게 노동운동을 전개했던 한 활동가는 외환위기 이후 안양의 노동운동이 쇠퇴한 이유를 양극화와 비정규직-정규직 사이의 분할통치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노동자들



2021년 11월 30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창립총회(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22년 8월 10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개소(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은 연대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IMF 때 그러니까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이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IMF를 겪고 나서 살아남았던 노조들에서는 진짜 이제 대기업도 망하고 이런 거 다 망했잖아요. 벌 수 있을 때 벌자, 뭐 이런 거 완전히 팽배하고 산업 특근하고 뭐 뭐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안전판 그러니까 이제 3D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좀 하기 싫은 일 비정규직에 넘기는 거. 이제 대중적으로는 그걸 훨씬 더 선호하고. 그리고 그런 비정규직이 있어야 나중에 안 좋을 때 그 사람들부터 잘라내고 뭐 이런 구조가 이제 돼 버린 거요.<sup>29</sup>

외환위기는 거대 기업조차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고 이에 노동자들은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야 된다.’는 생존술을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자 사이의 연대 대신 개별 노동자의 생존이 우선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노동과정 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예상해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할 수 있도록 안전판으로 삼고자 한다는 설명은 충격적이기조차 하다. 이는 곧 신자유주의 질서 하의 개인의 생존술이자 처세술이라 할 것이다.

IMF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비정규직이 완전히 이제 일상화돼 버리는 시대로 이제 들어온 거고 이제 그때 IMF 때 임금들도 많이 깎였잖아요. 대기업들도 반납도 하고 뭐 하면서 어쨌든 고용을 유지시키고 지켰던 데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들이 이제 되는 거요. 이렇게 좀 되어졌고 노개투 총파업은 상당히 힘 있게 했는데 이제 그런 대응 자체가 잘 안 되고. 이제 대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일반적인 정서들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팽배해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죽기 살기로 돈만 버는 거.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업별이다 보니까 어쨌든 어떤 투쟁의 방향이 이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지도부잖아요. 근데 직선제야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조합원들의 이해에 반하는 걸 걸면 다 떨어져요. 올바른 주장만 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게 되는 거요. 그나마 이제 대개 현장 조직들이 있어서 운동성 갖고 있는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들의 독자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쪽이 당선되고 이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요. 지금<sup>30</sup>

“최선의 무기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The best weapon is to sit together & share ideas.  
- 윈스턴 처칠



안양시노동인권센터(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인용문은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실직의 공포가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조차 거의 완전히 변모시켰음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198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던 노동조합 직선제가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주체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주체들에 의해 운용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역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안양은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로 수도권의 손꼽히는 공업도시가 되었다. 동시에 산업화가 초래한 가혹한 노동에 맞서 치열한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만에 전투적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자리를 내주고 만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될 것을 강제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할 것을 장려한다. 이기적 본성에 충실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조화롭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노동운동의 변화는 자본의 변화와 짝을 이룬다. 자본은 이윤의 최대화를 위해 노동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구한다. 즉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확실히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처세술일 것이다. 이윤을 위한 자본의 처세술과 더 많은 화폐를 위한 개인의 처세술이 결합된 것이 곧 신자유주의의 실체일 것이다. 영국 산업혁명 당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을 목도한 한 시인은 이를 “악마의 땃돌”이라 했다. 악마의 땃돌에 갈려 나가는 것에 순서는 있겠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註

- 1 안양시, 『안양 통계연보』, 각 연도.
- 2 「여성·고학력자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 늘어」, 『연합뉴스』 1999년 4월 14일.
- 3 『한겨레신문』 1998년 7월 23일.
- 4 「경영난 핑계 정리하고 남발」, 『매일경제』 1999년 8월 19일.
- 5 「건설팅업체 “가정을 버려라”」, 『경향신문』 1999년 12월 22일.
- 6 김중주 구술(2차, 2024년 11월 27일,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 7 「무너지는 산업현장 어떻게 세울까」, 『동아일보』 1998년 10월 1일.
- 8 「문 넓은 3D업종」, 『한겨레신문』 1998년 8월 24.
- 9 「유언 없는 죽음, 과로사 급증」, 『경향신문』 1998년 10월 12일.
- 10 황병주, 「1970년대 의료보험 정책의 변화와 복지담론」, 『의사학』 20권 2호, 2011 참조.
- 11 「실업급여 부정 수령 급증」, 『동아일보』 1998년 12월 26일.
- 12 「주부 교령자 취업 훈련」, 『조선일보』 1999년 3월 29일.
- 13 「취업전선 나선 여성가장에 힘들」, 『한겨레신문』 1999년 6월 7일.
- 14 「여성 인력 발굴 활용 새 지평」, 『매일경제』 1996년 6월 8일.
- 15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명퇴, 조퇴를 한다. 주부들이여 취업을 준비하라」, 『경향신문』 1997년 3월 15일.
- 16 토마 피케티 저, 안준범 역,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참조.
- 17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21쪽.
- 18 조용민, 「건설 일용직 끼니 끊는 임금체불」, 『경향신문』 1999년 12월 20일.
- 19 송준호·장영현,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프로그램 실태」, 『복지행정연구』 제30집, 2014, 5쪽.
- 20 송준호·장영현,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프로그램 실태」, 『복지행정연구』 제30집, 2014, 5~6쪽.
- 21 송준호·장영현,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프로그램 실태」, 『복지행정연구』 제30집, 2014, 7~11쪽.
- 22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2024년 노동상담 사례집』, 2024, 20쪽.
- 23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4쪽.
- 24 신영배 구술(2024년 9월 27일,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 25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3쪽.
- 26 고용노동부,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 30쪽.
- 27 고용노동부, 『200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2010, 11쪽.
- 28 이시정 구술(3차, 2024년 9월 24일, 안양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 29 이시정 구술(3차, 2024년 9월 24일, 안양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 30 이시정 구술(3차, 2024년 9월 24일, 안양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 제2장

# 안양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의 분화

---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안양의 탈산업화와 도시공간 변화

노동은 생존을 위해 자연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 개념이 전 사회적으로 핵심적 가치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근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성립과 함께 노동은 자본에 고용된 임노동이 되었으며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가 사회의 중핵적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는 자본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란 자본이 주도하는 생산과정을 가리키며 노동은 이 과정의 일환으로 포섭된 것이다. 노동과정 전체가 곧 자본의 생산과정이 된 셈이다.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은 애초 형식적 포섭으로 시작되었다. 즉 개별 작업자를 단지 한 장소에 모아 일을 시키는 형식이었다. 예컨대 구두를 만드는 장인들을 한 공장에 모아놓기는 했지만, 작업 과정은 과거처럼 장인 각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 하나를 자율적인 노동으로 완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분업이 적용되면서 장인은 노동자가 된다. 즉 한 사람은 구두 밑창만 만들고 다른 사람은 구두 윗부분만 만들고 또 다른 노동자는 두 부분을 결합하는 일을 하게 되는 식이었다. 요컨대 노동과정 전체가 한 사람에 의해 완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다만 부분품을 만들거나 부품을 조립하는 역할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노동과정의 자율성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작업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지시하는 존재가 생산과정과 노동과정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노동자는 노동의 자율성을 결정적으로 상실하고 생산과정을 지배하는 관리자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라 불렀다. 자본은 단지 상품 생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정과 노동과정 전체를 장악해 노동자를 부품처럼 활용하고 지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과정의 자율성을 상실한 노동자가 자본에 대항하는 것은 이제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과 같이 생산과정의 문제로 축소된다. 요컨대 자본이 없으면 노동과정도 없으며 노동자도 존재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노동은 자본의 종속물이 되었고 자본이 주도하는 생산과정의 변화에 따라 노동 역시 적응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이나 생산품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본의 경영에 따라 노동도 이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결국 노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산업의 변화, 생산과정의 변화와 같이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선차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컨대 최근 새로운 노동 형태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노동만 보더라도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노동을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주지하듯이 안양은 1960~1970년대 질풍노도의 공업화로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공업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안양의 산업은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즉 섬유와 기계 및 제지산업 등이 주도하던 안양의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 원인 중의 하나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이었다. 1960년 전체 인구의 20.8%였던 수도권 인구는 1980년 35.5%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여기에 제조업체는 전체의 43.8%에 달하는 13,935개에 달했고 자동차는 전체의 51%, 대학생은 47%가 몰려 있었다. 금융 대출 또한 수도권 편중이 극심해 무려 전체의 69.2%가 수도권이었다.<sup>1</sup> 이에 정부는 1982년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을 제정해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법에 따라 서울은 이전 촉진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과 대학 등의 신·증설이 금지되었고, 안양은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의 신설이 금지되고 이전만 허용되었으며 증설도 기존 공장에만 허용되었다. 안양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유사한 규제에 놓여 있다. 즉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수도권 과밀현상은 신도시 건설로도 이어진다. 노태우 정권 신도시 계획에 안양의 평촌 지역이 선정되어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존 공장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기존 도시지역의 과밀이 문제가 되자 공장 이전 압력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도시는 팽창함에 따라 공장 주변에 주거지가 대거 확장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지가 앙등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전기와 용수 등 공장 운영

에 필요한 기반 시설 역시 주거지 확대로 부담스럽게 되었다.

이에 1990년대 안양에 입주해 있던 대규모 공장들의 이전이 본격화된다. 동일방직, 오투기식품, 만도기계 등 안양의 산업화를 상징했던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전하게 되면서 안양의 산업 구조조정이 기정사실화되었다. 공장 이전은 국내로 국한되지 않았다. 백판지 업체 중앙제지는 노후화된 안양공장을 폐쇄하고 공장 설비를 말레이시아에 새로 설립한 합작공장으로 이전하였다.<sup>2</sup>

사실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공장 이전은 기업들의 이윤 추구에도 유리하였다. 중앙제지는 공장 부지를 아파트형 공장 부지로 재활용하여 약 100억 원의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다. 동일방직이나 여타 이전 기업들 역시 공장 부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노린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안양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파트 건립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공장을 이전하고 아파트만 짓게 되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이에 안양시는 1996년 5월 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4월 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안양시 산업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평촌신도시 지역에 하드 및 소프트웨어 타운을 조성하고 박달동에 패션의류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멀티미디어 단지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고자 했다. 소프트웨어 타운은 평촌신도시 중앙부인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 상업지역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박달패션의류복합단지는 박달동 34만여 평을 남북으로 구분, 남측 부지에는 패션의류 연구시설, 디자인 등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북측부에서는 시내의 기존 공장을 이전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장기산업배치계획으로 안양7동 일대 공업지역을 소프트웨어 산업, 전자통신 분야 유통서비스, 사무주택기능이 복합된 산업복합타운 또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관악산 개통로가 개통되면 평촌 지역과 서울대학교가 직접 연결되는 점을 고려, 당시 개발제한구역인 이 일대를 비메모리 반도체 및 멀티미디어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sup>3</sup> 또한 안양시는 1996년 평촌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함께 공장 이전 부지에 첨단산업 유치계획을 발표하였다.<sup>4</sup>

그런데 공장 이전 부지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었다. 동일방직 공장이 입지했던 평촌동 일대 17만 8,000평 부지는 1996년 1월 10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공업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지역은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주택단지로서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갖고

# 안양공장 팔아 순익 6배

## 한국제지

김철호 기자

한국제지가 안양공장 매각으로 인한 특별이익에 힘입어 지난해 전년도 8배가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회사 재무관계자는 1일 "지난 매출액은 3154억원, 영업이익은 87억원, 경상이익은 30억원, 순이익은 3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순이익은 531%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제지는 97년 말 결산에서 매출액 2749억원, 영업이익 225억원, 경상이익 71억원, 순이익 55억원을 기록했다.

제지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수출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부담이 커져 영업이익은 큰폭으로 줄었다. 안양공장 매각으로 특별이익이 825억원이나 발생해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순이익 많이 내고 차입금 등 부채규모를 줄여 부채비율은 151%에서 55%로 낮아졌다.

한국제지가 안양공장 매각으로 크게 이익을 냈다는 기사(『매일경제』, 1999년 3월 2일)

있었다.<sup>5</sup> 기업들은 공장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아파트를 짓고자 했지만, 안양시는 산업 공동화와 도시 과밀현상을 우려해 이를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1996년 5월 안양시는 준공업지역 내 신규 아파트 건축을 금지하는 시 건축조례안을 만들었다. 이에 기업 측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이견을 제시하는 등 양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특히 만도기계, 오투기식품, 동일방직 등에서는 경과조치 없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발하였다.<sup>6</sup>

이 문제는 동안구 관양동 934번지 일대 43만㎡의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이 지역에는 오투기식품 등 5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애초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전환되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계획이 변경된다. 민선 단체장으로 당선된 이석용 시장이 이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경제 기반 약화 등의 이유로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안양상공회의소 등은 적극 찬성하고 나섰지만,



1980년대 한국제지 전경



한국제지 이전 부지에 들어선 삼성래미안아파트



동화약품 안양공장(1997년, 동화약품 제공)

입주 기업 사장단은 당초 공고대로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반발하게 된다.<sup>7</sup>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개별 기업의 입장과 지역 전체의 산업 생태계 재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양시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였다.

물론 안양시는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이전에는 적극 찬성이었다. 대신 환경문제가 비교적 덜 발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안양시만의 전략은 아니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첨단산업 유치와 공해 배출업체의 해외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지만, 이는 한편으로 산업 공동화를 불러올 위험이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업체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다.<sup>8</sup>

특히 풍부한 자금력으로 해외로 공장 이전까지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공장 이전이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양 중소기업들의 자구 활동도 전개된다. 1996년 안양의 300여 개 중소기업이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1996년 9월 6일 '안양시 중소기업발전협의회'가 창립된다. 초대 회장으로 선



동화약품 안양공장 자리에 지은 지식산업센터 안양아이에스비스타워

임된 조태웅 우진전사 사장은 “회원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회원 상호 간 경영 및 기술정보 교류 확대, 임대형 아파트 공장 건립, 회원사 권익 보호와 판로 확대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 했다. 특히 판매난 타개를 위해 안양 뉴코아백화점과 본백화점 등과 상설 중기제품 공동 판매장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sup>9</sup>

## 2. 안양의 산업구조 재편 : 벤처 산업과 유통 산업

이러한 변화 속에 2005년 기준 안양의 종업원수는 1차 산업이 17명, 2차 산업이 3만 5,075명으로 19.7%를 차지했고 3차 산업은 14만 3,410명으로 80.3%에 달하였다. 이미 3차 산업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현황을 보면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1,235개, 종사자수는 2만 8,011명, 생산액 5조 8,400억 원, 부가가치 2조 3,000억 원이다. 안양의 부가가치율은 34.9%로 성남의

39.7%, 부천의 43.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안양시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낮은 업종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려 준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가 18%이고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가 17.3%로 가장 많다.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1.8%, 봉제·의류가 6.4%, 의료·정밀·광학기계가 6.2%, 음식료품이 5.4%였다. 특히 컴퓨터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대한전선, LS전선을 비롯, 닉소텔레콤, 샤프 트코리아, 우성전기, (주)풍전, (주)단암전자통신, 성미전자, (주)성일컴퓨터, (주)위테크, (주)인창전자, 정우전자, (주)태강산업, 세인전자 등이었다.<sup>10</sup> 전통적 굴뚝산업이 이전해 간 이후 안양에는 전자 부문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인덕원을 중심으로 1995년부터 3년간 200여 개의 중견 전자업체들이 속속 입주해 전자타운을 형성하였다. 인덕원사거리 인근 도시형 공장인 동일테크노타운을 중심으로 8층 건물 3개동에 한립전자통신 등 150여 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입주 기업들은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관련 업체들과 거래하기 편리해 전자정보통신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고 했다. 안양시 지역경제연구실의 연구원은 1996년 신규 등록업체의 53%가 전자정보통신업체로 산업 비중의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sup>11</sup> 이에 경기도 역시 안양-수원-기흥으로 이어지는 첨단 전자정보통신 벨트를 구성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sup>12</sup>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첨단정보통신 분야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김대중 정부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했고,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상징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광통신망이 전국에 걸쳐 깔리게 되었고 휴대폰 기지국 안테나가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된다. 안양의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확장은 이러한 당시의 흐름 속에 가능하였다.

〈표 1〉 2025년 7월 안양시 업종별 공장 현황

구분	계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섬유가죽	식음료	기타
업체수(개소)	1,801	1,043	348	125	100	48	137
종업원수(명)	30,114	18,168	4,386	2,516	1,787	1,502	1,755
비율(%)	100	57.91	19.33	6.94	5.55	2.67	7.60

자료 : 안양시청 홈페이지.

〈표 1〉에서 보듯이 2025년 7월 1일 현재 안양의 제조업은 전기전자업종의 압도적 우세로 재편되었다. 과거 1970년대에는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도시였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조립금속,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전환되었고 다시 전기전자업으로 재편된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전기전자업보다 기계금속업의 수가 더 많은 편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전기전자업이 급격히 확장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재편에는 벤처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가장 많은 액수인 50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진흥자금 등의 영향으로 2000년 2월 기준 기초자치단체로는 가장 많은 182개의 벤처기업이 안양시에 입주하게 된다. 안양시는 벤처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형 첨단 벤처기업 집적화를 도모하고자 벤처밸리를 추진하였다.<sup>13</sup>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5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은 예비 벤처를 포함해 모두 2만 9,910개에 달했으며 2013년 벤처기업 매출액은 214조 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어 GDP 1,485조 원의 14.5%에 해당한다. 기업당 매출 규모도 7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 같은 매출액 증가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소프트웨어개발업(39.2%)이 가장 높았다. 벤처기업 종사 근로자수는 모두 71만 7,00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3년 전체 산업체 근로자수 1,534만 5,000명의 4.7%에 해당한다.<sup>14</sup>

2015년 7월 말 안양시 관내 벤처기업의 현황은 업체수 700개소, 종업원 1만 2,127명이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는 창조산업센터, 만안벤처센터, 동안벤처센터, 안양과대학벤처센터, NPL센터, 창조경제융합센터 등이 있다. 특히 미래를 여는 안양벤처밸리는 명학역-안양IT밸리-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 구간의 3.25km에 이르는 밸리로서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이 지정하였으며 2009년 9월 17일에 추가 지정하였다.

안양벤처밸리에 벤처기업이 몰려들기 시작한 이유는 벤처기업이 입지하기 유리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양벤처밸리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이며, 서울 및 수도권 공업지역 내 관련 업체 간 연계가 가능하며, 전국 주요 도시 및 국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요충지, 벤처기업 지원기관과 산업 인프라 우수,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산업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적 여건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안



2001년 4월 27일 안양벤처밸리 선포식(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양벤처밸리로 모이고 있다.<sup>15</sup>

벤처기업 지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양시는 수도권권비기본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용지 추가 지정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신성장 거점 조성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신성장 거점은 광명-안양-과천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벨트를 구축해 산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거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클러스터 조성, 안양형 테헤란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sup>16</sup>

안양 벤처기업의 상당수는 전기전자, 정보통신(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의 가장 커다란 노동조건적 특징은 장시간 노동과 높은 업무 강도라 할 수 있다. IT 기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신규 서비스 출시, 시스템 개발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다. 또한 유연한 근무 형태가 눈에 띈다. 많은 IT기업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개인이 업무



World IT Show 2008에 참여한 안양시 홍보관(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수평적 조직문화가 발달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IT기업은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기에 수직적인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조직 문화가 발달하였다. 아울러 빠른 기술 변화와 평생 학습을 요구한다. IT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학습을 요구하며,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한다. 따라서 높은 업무 강도에 항상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추가되는 셈이다.

또한 IT산업은 인력 수요가 많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더 나은 연봉, 복지, 근무 환경 등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개인의 경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유출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컨대 벤처 IT기업에서는 평생직장 개념이 성립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벤처 IT기업은 과거의 전통적 산업과는 매우 다른 노동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안양시는 대규모 공장 이전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등장으로 산업구조에 커



2007년 안양시민축제에서 진행한 안양벤처밸리 우수제품전시회(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07년 안양벤처밸리 우수제품전시회에 참여한 벤처기업 부스(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다란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에 따라 지역총생산 비중도 감소하게 된다. <표 2>에 나오듯이 안양의 지역 총생산은 부천, 평택, 성남, 안산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규모가 작은 군포와 의왕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2> 2004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총생산(GRDP) 및 산업구조 현황

(단위 : %)

구분 지역	총생산액(백만원)				산업구조			도내 비중
	전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2차	3차	
경기도	140,178,240	2,903,341	55,226,662	82,048,237	2.1	39.4	58.5	100
안양시	6,961,306	2,551	1,628,370	5,330,385	0.0	23.4	76.6	5.0
군포시	3,121,054	2,358	1,354,943	1,763,753	0.1	43.4	56.5	2.2
의왕시	1,522,146	5,572	421,123	1,095,451	0.4	27.7	72.0	1.1
수원시	11,840,946	14,558	2,980,259	8,846,129	0.1	25.2	74.7	8.4
성남시	9,019,248	8,498	1,616,569	7,394,181	0.1	17.9	82.0	6.4
부천시	8,471,446	9,547	2,286,224	6,175,775	0.1	27.0	72.9	6.0
평택시	9,034,642	302,972	5,299,844	3,431,826	3.4	58.7	38.0	6.4
안산시	11,960,556	51,163	6,764,477	5,144,916	0.4	56.6	43.0	8.5
용인시	14,037,569	104,502	8,778,443	5,154,624	0.7	62.5	36.7	10.0
화성시	9,281,942	363,145	6,365,717	2,553,081	3.9	68.6	27.5	6.6

자료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3권, 2008, 432~433쪽에서 재구성.

여기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안양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기준 안양시의 1인당 연간 소득은 3,530만여 원으로 순위는 경기도에서 7위로 인구 순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21위로서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 이러한 불일치는 고용이 발생하는 지역과 피고용자의 주거 장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sup>17</sup> 다시 말해 안양에 거주하면서 타지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산업구조 조정이 활발한 상황 속에서 안양에 산업기자재 유통단지가 들어선 것도 주목된다. 1996년 12월 서울·경기 산업중기계부품상협동조합은 3,800억 원을 들여 안양시 호계동 일대에 3만 7,000평 규모의 산업기자재 유통단지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유통단지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상가 34개 동과 지원동 등 2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 중장비 부품 등 통 4,000여 개 상가가 입주할 예정이었다.<sup>18</sup> 이 단지는 현재 안양국제유통단지로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대형



안양국제유통단지

마트도 들어서는 등 국내 최고의 산업용 기자재 단지로 기능하고 있다.

1990년대는 유통체계에도 거대한 변화가 도래한 시기였다. 대형마트가 주도한 유통의 변화는 안양에도 밀어닥친다. 1997년 9월 범계역 부근에 지하 7층 지상 12층 규모의 하이웨이백화점을 비롯해 LG백화점도 2001년까지 백화점을 짓기로 했고, 산업기자재 단지에는 카르푸를 비롯해 미국의 완구 전문 유통업체 KB 토이스토어, 호주의 극장체인 그레이트 유니온 등이 입점하는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4만 평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평촌역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12층 규모의 뉴타운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안양플라자가 안양민자역사에 개장할 예정이었다.<sup>19</sup>

유통체계의 변화는 노동의 양상도 변모시킨다. 대형마트가 설립되면 인근의 소규모 소매점들, 이른바 '구멍가게'로 불리던 수많은 소형 가게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예컨대 부업 개념으로 가족 노동력으로 운영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대신 대형마트의 판매직으로 취업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자영업에서 마트 고용인으로 변화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어 2024년 현재 20% 밑으로 떨어졌다.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 6.6%, 독일

8.7%, 일본 9.6%, 프랑스 13.1% 등이었으나 한국은 23.5%를 기록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는 그만큼 기업 중심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 3. 안양의 탈산업화와 노동구조의 변화

〈표 3〉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그에 따른 노동 형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3년 거의 70%에 육박하던 비임금 근로자는 2010년대 들어 20%대로 떨어진다. 산업화 초기 비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이 아니라 농민을 의미한다. 농민은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 농업 노동을 영위하기에 비임금 근로자로 취급된 것이다. 즉 이 통계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민이 격감하고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표 3〉 1963~2024년 비임금 근로자 비율 변화

(단위 : %)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연도	전체	남성	여성
1963	68.5	63.3	78.2	1999	37.6	36.1	39.7
1970	61.1	55.1	71.4	2000	36.9	35.8	38.5
1980	52.8	47.8	60.8	2010	28.8	30	27.1
1990	39.5	36.9	43.2	2020	24.4	26.5	21.7
1997	36.8	34.7	39.8	2024	22.9	25.4	19.6
1998	38.3	36.3	41.3				

자료 : 국가통계포털.

1990년대 이후로는 비임금 근로자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격감했다고 할 수 있으며 대신 도시 자영업 비중이 커져 갔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점차 그 비중이 감소 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자영업 영역으로 침투해 왔음을 말해 준다. 안양도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상황이 이를 반증해 준다. 과거 거리마다 들어서 있던 제과점이나 빵집 대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고, 무수히 많았던 다방 대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안양시의 3차 산업 비중은 70% 중반대를 넘어서 인근 군포와 의왕보다 높았다. 반면 2차 산



2002년 5월 안양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대형 백화점(200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업은 23.4%에 불과해 비슷한 규모의 수도권 도시 중 성남시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표 4〉 2005~2023년 안양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5	37,501	178,502	2020	63,348	267,279
2010	40,740	214,264	2021	63,452	272,065
2015	43,617	237,022	2022	66,722	276,105
2018	44,824	255,402	2023	66,594	282,736
2019	45,375	261,491			

자료 : 안양시 홈페이지.

〈표 4〉를 보면 안양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 2023년 들어 사업체수가 전년도보다 극미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안양시의 사업체는 일관된 증가세를 보였고, 종사자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심지어 사업체가 줄어드는 최근에도 종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안양의 인구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 1975~2023년 안양시의 가구수와 인구수 변화

(단위: 가구, 명)

연도	가구수	인구수	세대당 인구	외국인 인구
1975	29,182	134,862	4.62	
1980	55,587	253,541	4.6	
1985	92,406	361,530	3.9	
1990	129,164	480,668	3.72	
1995	190,428	594,427	3.12	1,285
2000	190,689	583,240	3.0	2,074
2005	220,167	629,426	2.84	4,076
2010	229,848	628,831	3	7,117
2015	223,779	605,451	2.7	7,662
2020	220,552	556,570	2.49	6,543
2023	227,627	551,112	2.39	6,452

자료 : 안양시, 안양 통계연보, 1976~2024.

〈표 5〉를 보면 안양시 인구는 1970~1980년대 폭발적 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 들어 완만한 성장 내지 정체기를 맞는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최고점을 찍은 다음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준다. 지방과 달리 경기도가 지속적 인구 성장을 보여 준다는 점에 비추어 안양의 인구 감소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어쨌든 안양은 인구 감소에도 사업체 종사자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는 안양에 주소지를 두고 타지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 직장을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아마 양자가 결합된 결과일 터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4.6명이 넘던 것이 2023년의 경우 절반 가까이 떨어져 2.39명에 그치고 있다. 평균 가구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핵가족화를 넘어 무자녀 가정이 늘어난다는 점과 함께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경향과 동일한 흐름일 텐데,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평균 가구원이 적을 수록 그만큼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노동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4인 가족 중 가장 역할을 하는 1인만 노동시장에 등장했다면, 이제는 2명 중 1명은 노동시장에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

〈표 6〉 2025년 안양시 규모별 기업 현황

구분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업체수(개소)	1,801	4	0.22%	98	5.44%	1,699	94.34%
종업원수(명)	30,114	1,647	5.47%	9,455	31.40%	19,012	62.13%

자료 : 안양시청 홈페이지.

그렇다면 안양의 기업 규모는 어떻게 될까. 기업 규모는 노동 형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에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6〉에서 2025년 기준 안양의 대기업은 4개에 불과해 0.22%에 그치고 압도적 비율이 소기업이다. 94% 이상이 소기업인데, 종업원수는 62%에 그친다. 대기업은 종업원 수에 있어 5.47%이고 중기업이 31%가량 차지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서 압도적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30%대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996년의 경우 30.3%였다. 1999년에는 33.3%였고 2000년에는 33.8%였다. 2023년에도 29.9%로 큰 차이가 없다. 2023년의 경우 20~49인 사업체가 2위인데 3만 8,675명으로 5인 미만의 절반이 채 안 된다.

〈표 7〉 1996~2023년 안양시 5인 미만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합계					1~4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남자	여자			
1996	31,353	154,419			26,726	46,811	
1997	31,576	150,971			27,077	47,193	
1998	30,110	138,627			26,232	44,976	
1999	31,409	141,622			26,846	47,250	
2000	32,976	157,493			27,653	53,336	
2019	45,375	261,491	147,989	113,502	34,731	66,056	
2020	63,348	267,279	155,220	112,059	53,806	81,156	
2021	63,452	272,065	156,722	115,343	53,476	84,382	
2022	65,722	276,103	157,698	118,405	55,853	87,003	
2023	66,594	282,736	160,459	122,277	56,308	84,510	

자료 : 안양시, 안양 통계연보, 1997~2024.



안양7동 공업지역 출근길 풍경(2024년, 이정범 제공)

〈표 7〉의 1996~2023년 안양시 5인 미만 사업체 통계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단 1년 만에 사업체수는 2만여 개, 종사자는 1만 5,000여 명이 급증한 사실이다. 이는 통계 기준의 변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자영업자로 집계되지 않던 사람들이 기준 변화로 포함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예컨대 임노동자로 분류되었던 배달 라이더 등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면서 통계상의 변화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동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그 법률과 행정상 지위가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바뀐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탈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는 변화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판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막이 사라진 셈이기에 악화된 노동환경에 노출된 것이다.

자본주의 성립 이래 오랫동안 운동과 투쟁을 통해 축적해 온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보호막이 무력화되는 상황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노동운동이 크게 성장하고 노동자 권리 강화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본으로서는 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 되었다. 이에 자본은 조직화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직접 대응하는 것 대신 노동자의

법적, 제도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고용 형태를 창출해낸 것이다.

노동운동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에 유리한 고용 형식을 만들어내 신규 노동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흔히 신자유주의가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새로운 임노동자층의 확산을 초래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신종 직업군을 만들어내는 것도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특징임이 확인된다.

또한 대기업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초단기 노동의 확산이다. 흔히 아르바이트로 불리기도 하는 초단기 노동은 시간 단위로 노동력을 구매하는 양상을 말한다. 기업과 사업체 입장에서는 불규칙하고 변동 폭이 심한 시장의 수요에 최적화된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절실해진다. 다시 말해 계절별, 유행별, 지역별 시장의 불규칙한 수요에 조응해 탄력적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과거에는 대량소비에 조응하는 소품종 대량생산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시장 변화에 최적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른바 포디즘으로 불리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가 변형되어 포스트 포디즘으로 이행하면서 노동 유연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비단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동네 식당이나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도 초단기 노동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발성 대량 주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 등에 초단기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하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정규 노동력을 확보해 이를 감당해야 되었지만, 자본의 이윤율 최적화를 위해서는 초단기 노동력 고용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기간제 교사가 대표적이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학령 아동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에 정규직 교사 채용이 곤란해졌지만, 당장 교사 충원은 필요하기에 1년 단위 임시직 기간제 교사가 활용되는 실정이다. 요컨대 분야별로 다양한 이유와 조건들로 인해 세분화된 고용 형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는 한편으로 합리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은 자본의 책임이기도 했다. 즉 노동자 한 사람의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해야 지속적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비용 전체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시장의 합리성을 넘어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정부나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역시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노동력의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초단기 노동의 경우 시간당 임금 단가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될 필요가 없다. 오직 필요한 노동력을 초단기로 구매하고 노동자 역시 필요한 시간만 노동력을 판매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면 그뿐이다. 이러한 단순한 노동시장은 오직 직접적 화폐 거래 외에 아무것도 개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장 거래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시장의 합리성이 사회적으로 관철되는 한 양상일 터이다.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화폐 이외에 별다른 매개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날 것의 시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화폐 이외에 사회적, 인간적 관계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주의를 넘어 고립주의와 원자화를 부추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존에 꼭 필요한 재화를 구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초단기 노동만 수행하고 나머지 삶은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가는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현상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안양의 직종별 사업체 현황을 통해 노동력 분포 상황을 알아보자. 이 문제도 가장 많은 인원을 포함하고 또 가장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8〉 2000년 안양시 5인 미만 사업체 직종별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전체		1~4인 사업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3,403	39,489	1,995	4,583
건설업	771	5,721	457	986
도매 및 소매업	9,956	31,612	8,928	17,816
숙박 및 음식점업	6,433	16,950	5,797	12,255
운수업	2,568	7,385	2,459	2,7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05	5,440	1,322	2,298
교육서비스업	1,360	11,657	947	1,960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513	8,057	3,241	5,155

자료: 안양시청 홈페이지.

〈표 8〉에서 2000년 안양의 5인 미만 사업체 직종별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와 종사자 모두 가장 많은 것은 도매 및 소매업이었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이 그 뒤를 이었고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이 3위, 제조업이 4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전형적인 도시 자영업 분포를 보여 준다. 동네 구멍가게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가 자영업의 대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5인 미만 제조업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대공장들이 이전했음에도 직원 1~2명을 고용한 영세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표 9〉 2023년 안양시 5인 미만 사업체 직종별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전체 사업체	여성 대표	합계			1~4명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남자	여자		
제조업	4,730	978	34,152	23,607	10,545	3,327	5,966
건설업	3,772	651	23,504	20,023	3,481	2,934	5,006
도매 및 소매업	18,734	7,714	43,797	24,465	19,332	16,995	25,371
운수 및 창고업	7,767	727	14,045	12,520	1,525	7,601	8,005
숙박 및 음식점업	7,338	4,149	21,828	8,031	13,797	6,054	11,696
정보통신업	2,314	499	12,079	8,728	3,351	1,877	2,6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62	939	30,892	22,507	8,385	2,860	4,596
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1,516	481	20,019	10,577	9,442	1,203	1,836
교육서비스업	3,280	2,085	20,254	6,386	13,868	2,650	3,92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798	767	22,947	4,119	18,828	714	1,875

자료: 안양시청 홈페이지.

〈표 9〉에서 2023년 현황을 보면 2000년과 연속과 단절의 양상이 드러난다. 종사자 1만 명 이상 업종 중 5인 미만 종사자 업체수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도·소매업이었고 그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이다. 운수 및 창고업이 3위였고 제조업이 4위, 건설업이 5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3위에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이 기록되었으며 제조업이 4위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2000년과 비교해 도·소매업은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었지만, 음식점과 숙박업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감소했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운수 및 창고업이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각종 배달 서비스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배달업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0년에는 아예 통계 기준조차 없었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5,000명가량



단기 노동력 고용이 많은 음식점의 영업시간(안양시청 제공)

집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업종은 직접적인 소비보다는 다른 사업체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 컨설팅, 법률 자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률, 회계, 세무, 광고, 시장조사, 경영 컨설팅 등 전문 자격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며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설계, 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 시험 및 분석, 측량, 지도 제작 등도 해당된다.

이 업종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며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전문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안양의 산업이 전자전기, 정보통신 쪽으로 재편되고 벤처기업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전문 서비스업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서비스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확장도 안양의 사회적 변화와 산업 재편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평촌 범계역 부근은 인근 지역에서 손꼽히는 입시 학원가로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하다. 이것이 안양의 교육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사교육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21세기 들어서도 더욱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현재 중고교생들의 학습은 사교육 중심으로 이루



영유아 보육시설의 돌봄 노동(인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중심의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임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인데, 이를 반영해 교육 서비스가 팽창하는 것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최근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돌봄노동의 확장을 불러온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은 그 종류도 매우 많아졌고 점점 확장되는 추세이다. 특히 이 업종은 여성 노동의 확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영향이 강한 상황에서 과거 돌봄노동에 해당되는 일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 육아를 비롯해 노인층에 대한 돌봄은 대표적인 여성들의 일이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팽창은 더 이상 가족적 유대에 입각한 돌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희소한 가운데 갑자기 환자라도 발생하면 돌봄노동을 감당할 수 없다.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장되면서 돌봄에 투입될 여력이 남아 있지 않기도 하다. 이는 한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사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돌봄노동은 과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무보수 노동이었지만, 가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국가와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여성의 가족 내 무보수 노동이 시장의 임노동으로 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생활양식의 변화가 결국 시장경제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잘 보여 주는 직종이지 않을 수 없다.

註

- 1 「수도권 정비계획법안의 의미」, 『매일경제』 1982년 9월 18일.
- 2 「신규사업 진출, 적자부문 폐쇄, 원가절감 불황극복기업 의외로 많다」, 『매일경제』 1997년 1월 17일.
- 3 「평촌에 멀티미디어 의류단지 조성」, 『매일경제』 1996년 5월 27일.
- 4 「우리 지역 새해 사업」, 『경향신문』 1996년 1월 25일.
- 5 「수도권 공장터 집터로 각광」,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12일.
- 6 「공장 옮긴 땅 주택 못짓는다」, 『매일경제』 1996년 5월 29일.
- 7 「안양 권양도 공장지대 용도변경 논란」, 『매일경제』 1996년 7월 15일.
- 8 「경기 공단 해외 이전 논란」, 『매일경제』 1996년 10월 5일.
- 9 「안양지역 중기 300여사 공동 협력체제 구축」, 『매일경제』 1996년 9월 6일.
- 1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3권, 2008, 437~439쪽.
- 11 「정보통신 안양, 용인, 분당 3각 벨리」, 『동아일보』 1997년 5월 19일.
- 12 「분당, 탄현, 안산, 화성, 용인 첨단 산업단지 200만 평 조성」, 『경향신문』 1997년 6월 12일.
- 13 양지청, 「안양시 경제산업 발전과 정책과제」, 『안양학논총』 3호, 2003, 173~175쪽.
- 14 이무선, 「벤처기업의 입지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양시 도시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통권44호, 2016, 208쪽.
- 15 이무선, 「벤처기업의 입지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양시 도시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통권44호, 2016, 208~209쪽.
- 16 안양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404~409쪽.
- 1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3권, 2008, 433쪽.
- 18 「안양에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매일경제』 1996년 12월 16일.
- 19 「평촌 쇼핑 천국 된다」, 『동아일보』 1997년 9월 28일.

## 제3장

# 안양의 노동 형태 변화와 새로운 갈등

---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안양의 노동 형태 변화

안양시는 1905년 안양역 개통과 함께 섬유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제조업 지방 및 해외 이전으로 안양시 산업구조는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였다.<sup>1</sup> 1990년대 이후 전체 사업체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종사자를 보유한 사업체를 늘리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이들 대규모 사업체는 대폭 감소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사업체 가운데 제조업체는 전체의 8.9%에 머물렀지만,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체 종사자의 17.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이 16.9%와 10.2%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sup>3</sup> 2000년대 중반까지도 안양의 제조업은 일정 수준의 고용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2015년에도 안양 등 4개 공업지역은 서울 디지털 단지의 5.8배 규모로 약 12만 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었다.<sup>4</sup> 요컨대 전통적으로 안양의 핵심 산업은 제조업이었고 현재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산업 분야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커다란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디즘이 만들어낸 산업현장의 익숙한 모습일 터이다. 아니면 조그만 ‘마찌꼬바’에서 작은 선반 기계로 금속을 깎아내는 모습도 당시의 흔한 풍경이었다.

그 당시에는 산재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손가락 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그 프레스에다가 손가락 눌러가지고 뭐 잘리면 보상도 얼마 못 받고 우리 활동가 중에도 손가락 잘린 사람이 있었죠. 철심의 원재료인 그걸 뭐라 그러나 강철 강판을 이제 커트를 해야 되거든요. 펄을 잘라야 되는데 거기에 잘못 해갖고 손가락이 잘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예리해요. 이 철심을 박다가 베이는 경우가 많아.<sup>5</sup>

인용문은 1980년대 안양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정성희의 말이다. 당시 산업재해는 노동현장의 흔한 모습이였다. 당시 노동은 거칠고 위험했으며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박노해의 시 「손 무덤」에 나오듯이, 산재를 당하고도 변변한 치료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비단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비인간적 대우는 많은 노동자를 참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기 일쑤였다.

환경 개편 완전 개편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87년 대투쟁 때 나온 이제 슬로건들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걸리잖아요. 목 일상 사였고 목하고 뭐 강제 진압하고 뭐 이런 건 일상사였으니까. 저는 조인트를 맞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스페나 집어던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sup>6</sup>

인용문에 보이듯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슬로건이 '인간적인 대우'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구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와 함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이 모든 것을 웅변해 준다. 기계처럼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기계에 의해 다치고 죽어 나가던 시대였다. 당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는 인간으로 대우받기 힘들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어쩌면 비인간적인 대우가 더욱 노동자들을 힘들게 했는지도 모른다.

확실히 노동현장이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양시의 산업재해 통계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전국 단위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재해율이 0.77%,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 2.6%에 달했던 것이 2023년 재해율이 0.66%, 사망만인율이 0.98%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2023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3만 5,796명이었고 사망자만 2,016명에 달하였다.<sup>7</sup>

대통령이 나서 산업재해를 반복하고 있는 대기업을 질타할 정도로 21세기 한국의 노동현장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고 거친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

한 인간적인 대우가 가능할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죽어도 개선되지 않는 노동현장에서 여전히 노동자는 인간이기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안양의 노동운동이 그렇게 치열하고 전투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노동현장의 비인간적 조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동의 저항이 완강해질수록 자본의 대응도 치밀하고 정교해진다.

철커덕 치익- 200리터짜리 냉장고만 한 스테커 크레인이 오밀조밀 짜여진 선반대 사이로 레일을 타고 들어간다. 어림잡아 3초 남짓 들어가더니 불쑥 멈춰서선, 팔이라도 내뻗는 양 포크가 나와 선반에 놓여 있던 부품 상자 밑으로 들어가더니만 상자를 사뿐히 들어 올려 제품으로 당겨 안는다. 상자는 흐르는 시냇물에 낙엽 타고 떠가던 동화 속의 개미처럼 유유히 흘러 흘러 이 모퉁이 저 모퉁이 몇 차례 돌다 우뚝 멈춰 서는데, 그곳이 바로 목적지인 조립라인. 한 여 사원이 쳐다보지도 않고 뒷손질로 상자 속에 손을 넣어 부품 하나를 들어 제 앞에 놓고 이리저리 손을 바삐 놀린다.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불과 세 명. 한 명은 중앙 통제실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오퍼레이터고 나머지 둘은 컨베이어 길목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품을 확인해 컴퓨터에 입력시켜 주는 터미널 오퍼레이터, 이제 남은 것은 조립라인에 사람 대신 로봇을 집어넣는 일뿐이다.<sup>8</sup>

이 인용문은 1985년 유명 대기업이었던 금성통신 안양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 기사는 공장 자동화(FA)의 최첨단을 자부하는 일본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완벽한 자체기술로 1984년 6월 오픈한 전자동 창고를 찾아 자동화의 물결을 가늠해 본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기사는 “금성통신 안양공장에서 국내 최초의 완벽한 공장 자동화가 실현될 날도 멀지 않음을 본다.”라는 말로 끝난다. 이후 자동화는 널리 확산된다.

자동화하는 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쇄기 같은 경우도 운전기도 이 자동화잖아요. 신문 운전하는 것도 그래서 자동화 영역도 되게 많은 거죠. 대기업은 대부분 이제 컨베이어 태워서, 자동차 라인도 옛날에는 다 수작업했거든요. 물건 오면 근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바꾸기 시작하게 하는 거고 그게 한 90년대 중후반 정도 됐어요.<sup>9</sup>

1980년대 안양에서 노동자 생활을 시작해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김종주는 환갑이 넘은 현재까지도 자동화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 공장 자동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자동화는 노동현장의 모습을 크게 바꾼



공장 자동화의 명암에 관한 신문 기사(『한겨레신문』 1991년 1월 15일)

다. 과거 인력으로 수행되던 업무들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해고는 불가피해진다. 다시 한번 그의 회고를 보자.

제가 자동화에 매달렸던 이유는 이게 좋은 세상이 오면 똥 툴거나 이게 안 좋은 일에 이걸 쓰고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창조적이 되니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더 매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계속 잘리고 그게 이제 이거 만들고 나서 다른 걸 할 때였는데, 그때가 맞아 콘덴서 콘덴서 이제 이게 누르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손으로 하다가 이걸로 누르니까 갑자기 세 사람이 해고 되더라고. 그때부터 비애를 느꼈는데 이게 역시 이게 독점되는 거 누군가 자본이 독점되는 문제는 기계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소외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자동화가 되면 이 낙수 효과는 절대로 안 생긴다.' 그런 생각이 아주 들죠. 그리고 비애가 너무 많이 들죠. 이번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나이를 먹으니까 더 그렇더라고 이게 이제 또 훈련이 안 돼요. 보니까 마치 내가 해고된 것 같은 느낌 그때의 그 심정 그대로 그리고 막 도움 감아 놓고 울고 그러니까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sup>10</sup>



자동화 기계를 조작하는 공장 노동자(200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공장 자동화가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노동자 해고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자동화 노동자 김종주의 비애는 깊어만 갔다. 더럽고 힘든 일을 대신할 기계를 만들어 노동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한 선의가 노동자 해고를 초래하는 역설로 귀결된 셈이었다. 자동화를 통한 장밋빛 미래는 차별적으로 구현되었다. 노동력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골치 아픈 노조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었던 자본에게 자동화는 장밋빛인 게 분명하였다. 그러나 기계의 속도와 효율성을 따라갈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자동화는 해고의 암흑에 다름 아니었다.

게다가 자동화가 되었다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더 안전해지고 편해진 것만도 아니었다. 물류 자동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노동자들의 노동도 더 빨라져야 했고 인간의 속도 감은 기계의 그것에 종속되어야 했다. 기계가 인간을 부리는 셈이었다. 김종주는 수십 년간 자동화 설비에 매달리면서 아주 다양한 자동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제빵 자동화 기계도 그 중의 하나였다.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좀 다른데 설계 도면이 나오면 이제 이게 내가 이 박스를 이거 이제 자동으로 포장 하는 거거든요. 박스 이제 이게 나오면 이걸 전체 전 과정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빵 이제 제 이게 믹 서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여기 넣는 거 밀가루 반죽하는 거 넣고 다음에 보내서 이거 싸는 거 이렇게 해서 쭉 컨베이어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컨베이어의 중간중간에 공정이 있는 거예요.<sup>11</sup>

주지하듯이 SPC의 제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과거 3년간 3명에 이르렀고 또한 과로사로 3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다.<sup>12</sup> 자동화 기계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자동화 설비를 만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해고를 슬퍼했지만, 남아 있는 노동자들조차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해고의 슬픔과 노동자의 죽음, 그 사이에 자동화의 현실이 놓여 있다.

자동화가 노동 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였다. 과거 인간의 손을 거쳐야 했던 수많은 공정이 기계로 대체되어 생산성이 올라간 것도 분명하였다. 결국 자동화의 목적은 단 하나 효율성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이른바 발전일 것이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것만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전되었다. 노동자들 역시 최고의 숙련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성실한 노동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해야만 되었다.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술한 노동자들이 갈려 나가야 했다. 인간을 갈아 넣어 달성한 효율성과 생산성이 오늘의 발전을 가능케 했을 터이다.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는 0.43명으로 OECD 평균인 0.29명보다 훨씬 높았다. 이 수치는 38개 OECD 회원국 중 3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순위였다. 한국의 산업화는 위험 사회화에 다름 아니었고, 위험의 최전선에 노동자가 배치된 셈이었다.

그러나 안양시의 노동시장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였다. 대규모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줄었고, 주거지화되면서 근린생활 등 서비스업종이 증가하고 있다. 즉 생산업체가 지방으로 많이 이전되면 다른 일자리들이 생겨야 되는데 서비스업 위주로 생겨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조금은 불안정한 형태의 산업체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 안양은 공단도 있는 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 발전되고, 또 빌딩형으로 IT 등의 중소기업장들이 밀집되어

있다. 안양에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도 많다.<sup>13</sup>

서비스업종 중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형마트이다. 안양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대형 할인마트가 등장하였다.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은 유통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형태는 물론 일상적 삶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재래시장과 구멍가게를 비롯해 소규모 상점이 주도하던 유통망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영업의 쇠퇴와 노동자화를 촉진하는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또한 재래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대부분의 생활용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대중의 일상생활도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더욱이 까르푸, 코스트코 등 해외자본 진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유통시장의 지각변동이 초래되었다. 까르푸의 경우 이미 1996년 안양에 지점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sup>14</sup>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적 변화로 돌봄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급증하게 되어 2008년 1,754개에서 2018년 말까지 5,187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도 2007년 9만 9,350명에서 2018년 14만 1,479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도 많이 배출되어, 2010년 3만 4,822명에서 2018년 6만 549명으로 증가하였다.<sup>15</sup>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70만 정도 되고 안양의 요양보호사도 8,500명에 달한다.<sup>16</sup>

이러한 변화 속에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안양시의 산업 및 노동시장 살펴보면 ① 인구 감소와 고령화, ② 청년 일자리 경로 취약, ③ 높은 성별 임금 격차, ④ IT와 공공부문 산업 성장, ⑤ 초단시간 노동 이슈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써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는 경향이 확연하다.<sup>17</sup>

안양시 산업별 임금 노동자 현황을 보면, 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산업은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같은 IT 관련 산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같은 공공, 돌봄 영역의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IT 관련 산업은 정규직 비율이 2022년 들어 약 90%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정규직 숫자는 증가했으나, 비정규직도 함께 증가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2018년보다 1.8%p, 2.9%p가 증가하였다. 한편 인구 감소와 관련되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이 민간 영역의 서비스 산업의 임금노동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다.<sup>18</sup>

2022년 안양시 임금노동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56.0%, 여성이 44.0%로 남성 비율이 높다. 또한 남성은 비정규직이 23.0%이지만, 여성은 비정규직이 33.2%이며 안양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중 성별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남성이 59.5%로 높지만, 비정규직은 여성이 53.2%로 높다. 특히, 노동시간으로 보면, 남성은 단시간 4.5%, 초단시간 1.6%이지만, 여성은 단시간이 14.9%, 초단시간이 6.9%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안양시 전체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8.0%, 65.7%로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sup>19</sup>

노동시장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적지 않은 차별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규직은 남성이 많고 비정규직은 여성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노동시간에서도 여성들이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남성 위주로 편제된 반면, 여성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더 많이 포진해 있는 형국이다.

2023년 기준 안양시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비정규직이 32.3시간, 정규직이 42.1시간으로 전체 평균은 38.9시간인데, 이는 군포의 38.2시간, 의왕의 37.9시간은 물론 경기도 평균 38.6시간보다 높은 것이다. 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8년 42.9시간이었던 것이 2022년 39.9시간으로 축소되었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비정규직이 더 적은 노동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충분한 임금 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말해 준다. 즉 비정규직은 노동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인 것이다.

월평균 임금은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다. 즉 안양은 354만 원가량으로 군포의 324만 원, 전국 평균 307만 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물론 이는 평균 임금이고 정규직이 410만 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234만 원에 불과하였다.<sup>20</sup> 또한 월평균 임금의 증가 추세도 뚜렷하였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46.1만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 폭은 전국 평균 10.8% 정도 오를 때 안양시는 15.9%가 올랐다. 또한,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335만 8,000원으로 전국보다 50만 2,000원 높고, 경기도보다 36만 5,000원 높다. 시간당 임금도 약 2,000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임금 수준이다. 비정규직은 거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상황인데,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 사이에서 다시 반복된다. 안양의 남성과 여성 임금 차이를 보면, 2018년에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59.4%였으나, 2022년에는 그것이 61.4%로 격차는 2.0%p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시간당 임금 격차는



안양시 대형 쇼핑몰의 화장품매장(이정범 제공)

70.2%에서 68.4%로 1.8%p가 증가하였다.<sup>21</sup>

이상을 통해 보건대 현재 안양 노동시장의 특성은 IT산업과 돌봄노동,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증대 속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여성 노동의 확대, 특수고용의 확대 등으로 특징된다. 특히 프리랜서나 N잡러 등 특수 고용 형태로 여러 개의 직종에 걸쳐 단기, 초단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또한 여성들의 일자리 중 요양보호사, 가사관리사, 아이돌보미, 산모돌보미, 정리수납사 등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관련된 직종이 확산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서비스업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실제 이들 직종에서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한 계약형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높을 것이다. 특수 고용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은 계약 형식 자체로부터 근로계약과 달리 수요 변동에 따른 일과 소득의 안정적 유지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고용방식은 직종마다 상이하지만, 그 기본적 취지는 사업체가 필요한 시간과 노동력만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반복 계약하고, 임금은 시급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는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동일하지 않고, 실질은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계약임에도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노동자로 인정받기 곤란하게 한다.

최근 대표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보여 주는 것이 이른바 ‘플랫폼’ 노동인데, 배달과 퀵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안양은 배달시장에서 플랫폼 직영방식 보다는 일반대행 업체 소속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략 80% 정도가 일반 대행업체인데, 최근 점점 플랫폼 직영 쪽에서 단건 배달만 하던 것을 2~3건 배달로 늘리는 식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배달에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있어야 하기에 비용이 든다. 그래서 업체에서 500만~1,000만 원 정도 빌려주고 보험 가입도 대행하여 수수료에서 월 3만~4만 원을 떼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사고가 나서 변상해야 하면, 번 돈이 없어지고, 결국엔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서 돈을 다시 빌려서 갚으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그래서 강제노동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한다.<sup>22</sup>

일반대행 방식에는 관리자와 사무실에 따로 있다. 방식은 다양한데,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른바 ‘퐁콜’도 처리해 준다. 관리자는 기본급을 30~70만 원 정도 올려 준다거나, 퐁비를 안 받는다거나, 가맹비를 나눠 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퀵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활동(2023년,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공)

서비스의 경우 강제 배정은 없으며 라이더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달과 퀵서비스는 마지막까지 물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 오토바이와 핸드폰 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이 낮기에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즉 5명이 할 거 10명이 나누어 먹는 상황이다.<sup>23</sup>

다음으로 대표적 프리랜서 계약 형식으로 교육 서비스가 있다. 학교 강의의 경우 한 학기나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수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급을 정해 계약하며 4대 보험 없이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택배나 배달의 경우 대부분 재계약이 되지만, 학교 강사들은 학생이 바뀌고 수요가 달라지면 반이 없어지기도 하고, 방과 후 학교나 문화·예술·교육은 더 단기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음악 분야 강사도 비슷해서 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투잡·쓰리잡’ 하는 사람이 많다.<sup>24</sup>

마트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이다. 심지어 동일한 마트에 근무하면서도 용역업체를 변경해 가며 매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3군데 업체를 3년씩 옮겨 가며 동일한 마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에 연차에 따라 인상되는 것도 없다.<sup>25</sup> 위 사례의 경우 거의 10년에 가까운 9년간이나 동일한 마트에서 근무했음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에 기준해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비정규직의 불공정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은 제도적 허점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예컨대 입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약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정한 유보 조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2년 이상 고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sup>26</sup> 복잡다단한 현실을 법률 규정으로 모두 담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아무리 법적 규정이 치밀하게 짜여 있다고 해도 이를 피해 가는 다양한 편법 역시 새롭게 나오기 마련이다. 법과 제도로 모든 문제를 환원할 수 없는 현실적 딜레마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일을 병행하는 소위 ‘N잡’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심지어 주업과 부업이 전환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서비스 업종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무가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린다.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이 1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여러 명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2022년 2월 23일 안양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종사 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2022년, 안양시 청 역사 · 포토갤러리 제공)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업주들은 이러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주일 15시간 이하로만 초단기 계약을 통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를 번갈아 고용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으나 사장과의 관계가 있기에, 법을 지켜달라는 말이나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많다. 매일 봐야 하는 입장이고, 같은 동네에 있는 경우도 많아 더욱 곤란하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소득세를 낼 것인지, 4대 보험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업소득세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확산은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 주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제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쪼개기 근로계약을 다수의 노동

자와 체결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휴게·휴가 사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체근로 요구가 잦고 불안정한 노동자는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이다. 대타가 필요하면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근무가 가능하냐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간을 잘게 쪼개고 갑자기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차 휴가를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유급 처리를 안 해 주기에 휴가가 필요하면 동료들과 바꿔서 갈 수밖에 없다.<sup>27</sup>

또 하나 노동 형태의 변화를 보여 주면서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휴게공간 문제이다. 플랫폼 등 이동 노동자의 안정적 휴게공간 부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안양시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대행이 중심이긴 하나, 플랫폼이 점차 확산되고 대행업체들이 흡수되는 상황이기에 휴게공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즉 일반 대행의 경우 사무실이 있기에 일종의 휴게실 역할을 해 주지만, 플랫폼에는 이러한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다.

휴게공간 문제는 아파트 경비 직종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안양시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아, 경비, 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열악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악부영아파트 경비원휴게실

노후화된 아파트라 자동화된 경비 시스템이 없어 초소에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하는 환경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느 아파트의 경우 휴게공간은 있지만, 지하에 미로처럼 된 길을 지나 샤워장도 없고, 스티로폼이 침대 대신 있고, 배선이 엉켜 있어 위험하고 불안해서 사용하기 곤란하였다.

2023년 8월 18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또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과 미화원 등 7개 취약 직종이 있는 사업장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럼에도 어지간한 지원으로는 휴게공간 설치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제조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상 내부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동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화장실 문제이다. 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경기도는 시범사업으로 여성 이동 노동자에게 충전하고 쉴 기회를 위해 커피숍 쿠폰을 지급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sup>28</sup>

한편 돌봄노동의 일환인 생활지원사의 근로조건도 여러 문제가 확인된다. 안양시는 2020년부터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어르신들 셀프케어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에



2023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권익 개선 토론회(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공)

생활지원사가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의 안전, 안부를 전화와 방문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그런데 결핵 같은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기에 위험한 경우도 있다. 또한 폭염이나 혹서 주의보가 뜨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담당구역 전체 연락을 돌려야 하고, 연락이 안 되면 방문해야 한다. 제조업 분야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한 업체는 과산화수소, 청산가리 등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사용함에도 세척실에 환풍기 하나 없는 경우도 있다.<sup>29</sup>

이렇게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의 확대, 초단시간 근로의 증대 속에서 근로조건마저 열악해지는 상황은 노동강도의 증대와 겹쳐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트의 경우 2교대 9시간 노동제인데, 근무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통합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캐셔면 캐셔, 물류면 물류 이렇게 근무했다면 이제는 물류에서 하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쉬는 것이 아니라 계산대에 투입되는 방식이다. 캐셔 역시 손님이 없을 시간이면, 가공이나 생활문화 등 다른 데 가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흔한 모습이 된 스피드 계산대도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두 배 이상 넓어지니까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과거에 계산대에 서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의자가 생겼는데, 이제 다시 서서 근무하게 된 셈이다.<sup>30</sup>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는 오래된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다. 식민지 시기부터 ‘고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생활하는 학생의 존재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한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현대의 격언이 통용될 정도로 젊은 시절의 강도 높은 노동이 장려되기도 할 정도였다.

전통시대에는 학생은 물론 청년이란 개념 자체가 없을 정도로 세대에 따른 노동 분할이 정교하지 않았다. 또 신체 성장의 개인차도 크기에 일정한 근력과 지구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농사일에 투입되는 것이 상례였다. 근대 이후 생물학적 재생산이 사회적 재생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학생이라는 장기간의 성장기가 설정된다. 다시 말해 학생은 사회적 노동에 투입되기 위한 장기간의 재생산 과정을 상징한다.

달리 말하자면, 학생은 사회적 노동력으로 구성되는 과정이기에 실제 노동과정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학생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런데 학생이 노동시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더욱이 학생은 정규 노동력이 아니기에 노동시장의 하층으로 편입되며 이는 경쟁의 하방 압력을 증대시킨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2023년,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공)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하층을 채우듯이 학생도 유사한 역할을 감당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나 학생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노동임금 저하를 노린 것이다. 더 싼 가격의 노동력을 고용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학생은 한국 사회의 최하층 노동시장을 형성하면서 제도와 법률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과 불법 노동이 자행될 수 있는 취약한 노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 상황을 파악하면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최저점을 확인하는 셈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학생의 비정규 노동이 하층을 받쳐주기에 임금 상승을 비롯한 현장 노동의 개선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 이들은 예비 노동자로서 가장 열악한 노동에 내몰리는 한편 전체 노동시장의 향상을 저지하는 역설적 위치에 배치된 셈이다. 이들의 바닥 노동시장 경험은 이중적 효과를 산출한다고 보인다. 한편으로 열악한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지향을 산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조장하기도 한다. 예비 노동자로 일종의 열악한 노동시장의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 되는 것이다.

학생 아르바이트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 사이에서 흔한 현상이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23%에서 50%에 달하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받고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sup>31</sup> 당시 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종별로는 전단지 돌리기(51%), 일반 음식점 서빙(34%), 패스트푸드점 근무(26%) 등이 제일 많았다. 그런데 안양의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는 전국 평균을 넘어선다.

2000년대 초반 안양의 고등학생 302명(여학생 215, 남학생 8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 87명(54.5%) 여학생 215명(63.2%)으로 전체 60%에 달하였다.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이유는 용돈 벌기로 47.2%에 해당되었다. 소비처도 옷과 신발 구입이 55.6%에 달했고 간식, 핸드폰 이용료 등의 순서였다. 저축은 불과 2.6%에 그쳤다.<sup>32</sup>

아르바이트 종류는 패스트푸드가 26.2%였고 음식점 서빙이 18.5%, 전단지 12.3%, 주유소 8.9%, 상점 점원 3.6%, 건설현장 2%, 배달 1.7%였으며 기타가 26.8%로 제일 많았다. 구직 방법은 친구 소개가 30.8%로 제일 많았고 광고 전단지 24.8%, 생활정보지 18.2%, 인터넷 4.6% 정도였으며 교사나 학교 소개는 1.7%에 그쳤다. 근무 기간은 16~30일이 21.2%로 제일 많았고 90일 이상도 20.5%나 되었으며, 8~15일이 10.6%, 3~7일이 9.9% 등이었다. 하루 노동시간은 5~7시간 미만이 35.1%, 3~5시간 미만이 33.4%로 대부분이었다. 시간당 보수는 2,500~3,000원 미만이 32.1%로 제일 많았고 2,000~2,500원 미만이 30.1%, 1,500~2,000원 미만도 19.5%를 차지했으며 3,000원 이상은 14.2%에 불과하였다.<sup>33</sup>

사실 위에서 다룬 안양의 아르바이트 직종은 제한적인 것이었고 그 분야는 대단히 넓다. 위에서 언급한 전단지 배포, 주유소, 식당,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건설현장 외에도 공장, 신문배달, 레스토랑 및 커피숍, 당구장, 대학교 서류 심부름, 슈퍼 판매보조, 팬시점 감시, pc방, 노래방, 비디오 방, 독서실, 방송국 방청객, 벼룩시장 옷 판매, 아기 보기, 상품조사 모니터링, 아이스크림·우유 판매, 유급 가사노동, 의류점, 전화 설문, 졸업식장 꽃 판매, 클럽 공연 등 심지어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성행하였다.<sup>34</sup>

## 2. 안양 노동현장의 문제와 갈등 양상

노동 형태의 변화는 노동현장의 갈등 양상도 변모시킨다. 앞서 보았듯이 안양시 노동 형태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초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정리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은 개별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고용주는 여러 명의 노동자를 단기로 동시에 고용하여 시간별로 노동을 시킨다. 이러한 경우 여러 명의 노동자가 교대로 근무하기에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개별화된 노동자는 고용주의 1대 1로 상대하게 되어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는 형성되기 곤란하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능력주의가 확산되면서 연대 대신 경쟁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동일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승진과 임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져 연대의 끈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질적 집단을 구성하는 구심력보다 개별화하는 원심력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자본-임노동 관계가 전면화되기 곤란해진다. 요컨대 노동자는 집단적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보다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분할지배 전략(divide and rule)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본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를 상대할 경우 개별화시켜 개인별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손쉬운 법이다. 이렇게 개별화되고 원자화된 노동은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게 되기도 한다. 자본과 기업에 의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구조화된 차별이 노동자들에게도 관철되어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규직의 집단 이익을 앞세우며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를 못본 체하거나 심지어 은근히 조장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제도화된 차별이 개개인의 실천으로 구조화하고 습속화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면 안양시 노동현장의 갈등 양상은 대체적으로 어떠한가.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다양한 활동 중에 노동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매년 『노동상담 사례집』으로 묶어낸다. 매년 500건이 넘는 각종 상담 내용은 현재 안양시 노동문제와 관련된 대체적 내용을 알려 준다.

〈표 1〉에 나와 있듯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근로계약 등에 관련된 것으로, 2023년의 경우 24% 이상을 차지했고 2024년에는 27%를 넘어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비율도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비정규직 관련한 고용계약의 문제점이 반영된

〈표 1〉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상담 유형

(단위 : 건)

구분	합계	임금 체불	임금 등	부당해고 등	직장 내 괴롭힘	4대 보험	노동 조합	산업 재해	인사 노무	근로계약 등
2023	544	94	93	81	59	38	22	16	8	133
2024	567	79	69	89	78	45	9	26	15	157

자료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2024년 노동상담사례집』.

이는 앞서 보았듯이 비정규직 관련한 고용계약의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프리랜서 계약, 단기 및 초단기 계약 등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노동상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그만큼 현재의 비정규직 관련 고용계약에 많은 사람이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부당해고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다. 고용계약의 불완전함은 곧 부당해고로 이어지기 십상인 것이다. 부당해고는 2023년에는 3위에 해당했으나 2024년에 2위로 올라설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인다. 2023년 2위를 차지했던 임금 체불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부당해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고용계약의 불완전성을 반영한 것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임금 문제가 여전히 제일 큰 쟁점임은 분명하다. 임금 체불과 임금 문제를 합치면 2023년에는 압도적 1위이고 2024년에도 근로계약 등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 주었다. 즉 결국 노동문제는 경제적 수입 문제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 준다. 특히 비정규직과 초단기 아르바이트에 있어 돈 이외에 노동의 뚜렷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뚜렷하게 증가세인 것도 주목된다. ‘갑질’을 비롯해 직장 내 다양한 괴롭힘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양도 예외가 아님이 확인된다.

이러한 와중에 노동조합에 대한 상담 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 이채를 띤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감소 폭도 대단히 컸다. 현재 한국사회의 노조 조직률이 상당히 낮기에 노동조합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요컨대 노동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동조합이 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화된 노동자는 항의와 저항에서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보인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의 상담내용을 사업체 규모별로 일별해 보면, 5~30인 사업체가 41%를 차지해 제일 많았고 5인 미만은 17%에 그쳤다. 100인 이상은 20%, 30~100인은 22%였다.<sup>35</sup>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노동자수가 형성되어야 저항과 항의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 안양 노동인권센터 업종별 상담 통계

구분	합계	제조업	도소 매업	교육 서비스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건설업	숙박및 음식점	보건· 복지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지원	공공 행정
2023	212	41	81	14	14	11	16	53	31	16
2024	269	46	89	22	23	14	14	58	41	25

자료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2024년 노동상담사례집」.

다음으로 업종별 노동상담 상황을 살펴보자(〈표 2〉). 업종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기록한 것은 도소매업으로 2023년은 전체의 38%를 넘었고 2024년에도 33%를 기록하였다. 다음이 보건·복지 서비스업으로 2023년 25%, 2024년에는 21%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이 제조업과 사업시설 관리·지원이 차지하였다. 도소매업은 음식점, 카페 등의 자영업과 대형마트를 포괄하는데,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가장 활성화된 직종이기도 하다.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각종 돌봄노동의 확대와 더불어 급팽창하고 있는 직종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노동 영역으로 준거가 될 만한 관행도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더욱 갈등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동상담 통계는 노동현장의 대체적 흐름을 알려주는 하지만, 구체적 실상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다.

먼저 제조업 노동현장의 모습을 살펴보자. 다음 인용문은 동안구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 아르바이트 경험담이다. 이 회사는 종업원 300명 이상이 되는 중견기업이다. 경험담 작성 시점은 2025년 4월 15일로 최근 안양 제조업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일주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1. 제전복 머리부터 발까지 착용. 2. 쉬는 시간 오전 없고, 오후 3시~3시 20분 단 한번 3. 야근 2번 이상 빠지면 짤림(야근 거의 매일 있음). 4. 폰 사물함에 두고 제전복 입고 현장 들어감(사물함 1개당 4명 옷 비닐에 담고, 화장실,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입고 벗고 해야 함) 5. 하루 휴가 내고 다음 날 오면 다른 자리로 변경(일 새로 익혀야 함) 6. 라인이 엄청 빨리 돌아가고, 일하는 동안 허리 한 번 펴지 못함. 7. 쉬는 시간은 폰 볼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갔다 오면 끝이고, 저녁 시간은 30분. 8.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옷 갈아입을 때는 완전 전쟁터이고, 밥도 줄서서 먹느라고 점심



안양역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2023년,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공)

시간도 여유가 거의 없음. 결론적으로 이곳은 정말 돈이 급하고, 나는 휴대폰 확인 필요 없고 야근 9시까지 해도 된다. 하는 사람만 하면 될 듯.<sup>36</sup>

시급은 1만 30원으로 최저 임금에 딱 맞춘 금액이었다. 이 후기에는 몇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점심시간 12시 40분까지 오라고 하면 30~35분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함. 안 그럼 엄청 혼나거나 짤림. 그러기에 점심에 옷 갈아입고 현장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밥만 먹고 부재중 휴대폰 확인하다 그냥 들어가야 함”, “거기 그냥 잘라버리기로 유명해요. 누가 노동청에 고발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등이었다.

진짜 주 6일에 하루 12시간 근무임. 면접에는 잔업은 선택이라는데 진짜 잔업하기 싫으면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눈치 보여서 못함.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최저 시급 9,860원에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음. 점심시간도 1시간에 밥도 근처 기사식당임. 맛도 드럽게 없음. 그리고 쉬는 시간도 짧음. 12시간 근무에 오전에 10분 쉬고 오후에 10분 쉬고 끝임. 잔업하면 빵하고 우유 주고 끝임. 진짜 쇠 부품을 하도 힘으로 눌러대서 손가락에 진물나고 부어오름. 몸도 다 아작나고 진짜 생산직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만 해야 함. 워라벨 등 두 번 다시 하나 보라.<sup>37</sup>

위 인용문은 2024년 안양의 한 정수기 부품업체 아르바이트 후기이다. 주 6일 12시간 노동은 거의 1970년대 근로조건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최저 시급에 휴식 시간도 극히 짧아 생산직을 삶의 포기라 비유할 정도이다. ‘킹산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기업 생산직은 높은 임금과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안정으로 유명한 데 비해, 중소기업 생산직은 20세기 후반 초기 산업화 시기를 떠올릴 정도로 열악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은 안양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조사에 의하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일과 삶의 불균형에 대해, 응답자의 49.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sup>38</sup> 워라벨이나 ‘저녁이 있는 삶’이 회자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고에는 월급 280만 출근 8시 반~ 퇴근 6시 반, 야근 없음 직원수 5명 써 있는데, 3개월 근무해보니 첫 달 월급 180 이후 250(식대 포함), 야근 매일 함. 가장 늦은 퇴근 저녁 9시. 직원 수 3명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신고 안 되는 거 알고 인신공격, 욕설 서슴치 않음. 알바후기란에 입력도 못함 전화지원만 받아서.<sup>39</sup>

채용 공고 내용과 다른 근무조건은 물론이고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모습은 제조업 노동현장의 문제가 단지 저임금이나 잔업 같은 노동조건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알려 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인간적인 대우가 전국적으로 가장 흔한 슬로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대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조차 하다.

공장이다 보니까 안 다치고 잘 돌아가려면 언제 어디서나 나쁜 역할은 꼭 하나씩 있다는거. 특히 반장님이 주간 야간 두 분 계신데, 제가 주간 때 반장님하고 팀장님은 너무 친절하셨어요. 근데 야간 반장님은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할 때 봤는데 포스가 넘쳐흐른답니다. 또 컨베이어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서 소리 지르면서 일하시는데 절대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sup>40</sup>

인용문은 생산과정의 비인간적 대우가 공장 특유의 관행임을 추정케 한다. 안전을 빌미로 이러한 관행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마치 군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가혹한 체벌과 군기를 강요하는 것과 유사하게 제조업 노동현장은 군대식 통제와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인간적 관행은 다만 제조업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용문은 안양의 한 의류매장 아르바이트 후기 중 일부이다. 소규모 매장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업소의 경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통제하고자 한 것이 특징적이다. 미시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분할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단결을 방해하여 효율적인 통제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 사장 알바들 통제 가스라이팅 장난 없어요. 알바들끼리 카톡 주고 받아도 난리나구요, 사적 대화 금지시키고 모든 걸 자기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매일매일 매출 압박 장난 아니구요, 아침마다 어제 매출 너네가 얼마 팔고 내가 얼마 팔고 카톡으로 시작하구요, 하루 매출 250 이상 안 나오면 난리 나요. 매출이 안 좋은 달이나 비수기엔 온종일 들들 볶일 각오하고 들어가세요. 퇴근 후 주말 가리지 않고 카톡 전화 해대구요. 장사 잘되면 지 잘나서 안 되면 알바 탓 오집니다. 알바들끼리 좀 친해진다 싶으면 서로서로 이간질시키고 없는 얘기 지어내고 말도 하도 바뀌어서 통화하면 녹음해 놔야 돼요. 자기랑만 소통하라 그래요.<sup>41</sup>

이러한 이간질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종종 나타나는 텃세, 집단 따돌림 등과 결합되어 더욱 복잡다단한 갈등 국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후기를 보면, 고참 노동자들이 신참에 대해 다양한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기존 노동자들이 소 집단을 이루어 신입 노동자를 따돌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을 가르쳐 주지 않거나 식사 시간에 따로 몰려나가 외톨이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 힘들게 하는 방법도 있다.

2층에서 다소 쉬운 거 시키고 한국인들만 있었음. 속도 안 빨랐고 지하 1층 가서 박스포장 엄청 하다가, 1층으로 가래서 왔더니 조선족 아줌마들 겁나 속도 빠름. 조선족 아줌마랑 첨 일해 보는데 말 진짜 못 알아듣겠다. 나보고 처음 하는 거라 일 못하는 거라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겁나 느려 보였는지 아줌마들 끼리 돌아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알려주는데 참. 그러더니 과장인지 팀장인지 하는 사람이 4시 50분 쯤 나오라고 5시까지 일한 거로 처리해 줄 테니 가란다.<sup>42</sup>

이 인용문은 2024년 안양대교 인근 수건 제조업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후기 중 일부이다. 신참과 고참 노동자 사이의 갈등에다 이주노동자와 소통 곤란 문제가 겹쳐져 상당한 갈등이 노정된 것이 확인된다. 결국 관리자는 신참 노동자 해고로 사태를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 작업 효율을 위해 고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으로 현재 노동현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여성과 남성, 연령에 의한 차별 등 안양의 노동현장에서 차별 문제는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 진행한 2023년 안양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22.8%였다. 응답자의 차별 경험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남녀 차별과 나이에 따른 차별이었다. 남녀 차별 경험은 13%였으며 연령에 따른 차별은 12.6%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10.1%였다.<sup>43</sup>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여 연대를 저해하는 상황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던 어느 파견 노동자 갑의 사례를 보자. 해당 사업장 파견 업체 직원은 노동자 갑을 포함한 2명뿐이었고, 부서장은 전체 직원회의 및 회식과 워크숍, 단체 사진 촬영 등에서 “용역은 빠져라.”라고 하면서 배제시키고 육아 휴직을 간 노동자의 사업 업무를 대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sup>44</sup>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안전화가 필요한 직종임에도 파견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

도 있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의 경우 똑같이 3교대를 하고 똑같이 업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노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절 수당 30만 원”이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었다.<sup>45</sup>

2차 협력사인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나면, 1차 협력사의 하청을 받아 2차 협력사 소속으로 보안팀이 있는 건데,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실장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더 힘든 건 1차 협력사 직원들의 은근 갑질 있고 센터장이라고 1차 협력사 최고 높은 직급인데, 일을 잘하면 본전이고 무언가 실수하면 아주 크게 질책당합니다. 근무는 휴식 시간도 많고 걷거나 서 있는 일입니다 점심식사 제공+정장 지급해 주고 일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곳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sup>46</sup>

인용문은 2024년 안양 LS타워 보안팀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기이다.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었지만, 문제는 진급이 거의 불가능한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이다. 또한 1차 협력사 소속 직원들의 갑질과 차별이 상당한 갈등 요소였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다단계 하청구조인데, 경비업체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음을 알려 준다.

원청업체로서는 부담스러운 노무관리를 용역이나 하청업체에 떠맡길 수 있기에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겠지만, 원래 하나의 기업에 속해야 될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업체에 차별적으로 고용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강제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저임금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산정. 전에는 160만 원이었음. 2~3년 전에는 처음에는 수습 기간 2~3개월 있다가 올려준다고 하면서 1년 반이 지나도 안 올려줘서 이직하였음. 호봉이 없고 계속 최저임금임. 같은 병원에 있으면 1년에 5만 원 올려 줌. 다른 병원을 가면 다시 최저임금임. 안양이 심한 편임. 병원에서 담합을 해서 의사들 협회에서 거의 룰이 되어 있음. 안양시 의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이 차라리 보너스도 있고 처우가 더 좋음.<sup>47</sup>

인용문은 안양의 어느 병원 간호사의 토로인데, 낮은 임금 문제가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의사협회 차원에서 결정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개별 병원의

낮은 임금으로 이직하였으나 결국 안양시 전체가 비슷한 임금 수준에 묶여 있기에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었음을 토로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단순 이직은 모든 병원이 비슷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기에 이직을 단행하지만, 또다시 최저임금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종의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학생 아르바이트는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 중의 하나이다. 초단기 계약인 것은 물론 임금 수준 역시 2002년 최저 시급 2,100원에 미달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sup>48</sup> 특히 소규모 자영업이 대다수인 음식점 같은 곳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 학생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근로 중 부상 등의 고용주 치료 의무 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낮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중 느낀 문제점으로는 39.4%가 낮은 임금을 꼽았고 어른들의 안 좋게 보는 시선이 15.2%, 인격모독 13.6% 등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단지 가 낮은 임금을, 주유소는 어른들의 안 좋게 보는 시선, 배달은 인격모독, 건설현장은 위험한 환경 등을 꼽았다. 임금 지급이 제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59.3%에 그쳤다.<sup>49</sup> 학생들이 제도와 규정 바깥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며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라도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54%로 절반 이상이였다. 이와 달리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하였다. 두 번째 문제로 꼽은 것은 육아와 돌봄 서비스의 미흡으로 49.4%였으며 세 번째는 49.2%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이었다. 우리나라의 향후 노동정책 중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역시 62.1%를 기록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였다.<sup>50</sup>

다음으로 갑질과 감정노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토로이다. 고령의 피보호자는 물론 가족들의 갑질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고, 주변에서 보호자에 대한 노인 학대 신고도 접수가 많이 된 사안이 있음. 전임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상황은 동일하고, 대상 어

르신은 결국 돌아가셨음. 그러나 여전히 터무니없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한 직원 보호 시스템은 없음. 자살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었음. 최초 목격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함. 트라우마가 커서 회복이 안 되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가 없었음.<sup>51</sup>

실제 2020년 안양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흥·안산·화성 소재 60곳의 장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도가 매우 낮았음을 보여 준다. 이 설문조사에 응한 요양보호사 500명의 구체적 정보를 보면, 연령은 '60세 이상'이 216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4명(45.9%), '50세 미만'이 36명(7.7%)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이 251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 이하'가 128명(27.5%), '2년제 대졸 이상'이 81명(17.4%)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190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01명(21.7%), '100만 원 미만' 60명(12.9%), '300만 원 이상' 103명(22.1%)으로 나타났다.<sup>52</sup>

요양보호사는 주로 저소득층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금전적, 물리적인 근무조건이 열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낮은 직무만족이 지적된다. 맡은 업무 외의 과도한 업무 요구와 이용자들의 무시하는 태도, 심리적·육체적 노동의 보수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낮게

2024년 1월 18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출범식(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제공)



나타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sup>53</sup>

요양보호사와 함께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마트 판매 직원도 다양한 갑질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음 인용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직장에서 생긴 울화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일상의 삶마저 파괴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노동현장의 문제는 단지 직장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삶 전체가 관련되는 문제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파트가 많다 보니 반복적으로 오는 진상 고객이 많음. 돈을 집어 던지는 일도 많고, 매대에 가격표와 바코드가 맞지 않는 이유(사람들이 제자리에 두지 않거나 하면서)로 민원이 많음. 모바일 상품권을 바로 쓸 수 없어서 지류로 바꿔오라고 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포인트 카드를 달라고 했더니 얼굴에 포인트 카드를 집어던진 적이 있었음. 물건 개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의심하냐면서 난리가 나서, 그 손님 아파트를 찾아가서 휴지 사 들고 무릎 꿇고 사과한 적도 있었음. 이전에는 욕을 잘 안 했는데, 마트를 다니면서 욕을 하는 것이 많이 늘었음. 화가 나는 감정이 풀리지 않아 그런 것 같음. 아이들도 왜 그러냐고 함. 왜 화를 못 참느냐고 함. 배출을 못 하니까 집까지 이어지는 거 같음.<sup>54</sup>

다행히 이 작업장은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중간 관리자가 민원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즉 이렇게 중간 관리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직원에게 한정되며 파견직은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혼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울타리가 되어 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파견직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즉 파견직은 다른 업체에 속해 있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안양의 경우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갑질과 감정노동 문제가 노동현장의 중요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막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태부족이다. 임금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리 치유라든지 각종 그런 프로그램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오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이 둘이 전부 다 다 관리를 받아요. 가해자도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

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같이 받아야죠. 근데 병원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체계는 쉽지는 않죠. 환자 진료가 먼저니까, 정신과적 상담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의사랑 싸울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 수련 같은 데를 한 번 기본 적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담받아 보기도 하고 어디에다가 내 울분을 토할 때가 필요한 거죠.<sup>55</sup>

인용문은 안양시 어느 병원 간호사의 호소이다. 병원은 대표적 감정노동 현장이다. 아픈 환자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더욱 감정노동의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물리 치료사, 운동 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직종 간 갈등 소지도 다분하다.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고참과 신참 사이의 알력도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간호사들의 ‘태움’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위 인용문의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해자의 개인적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의 문제가 선차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조직 관리의 문제와 밀접하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이다. 나이 어린 관리자가 나이 많은 직원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특히 세대 간의 차이도 크게 작용한다. 과거 개발연대를 거처온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거친 환경에 익숙한 편이다. 특히 군대 경험이 있는 남성들의 경우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군대문화 세례를 받았기에 집단주의적 정서가 강하다. 20세기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통해 형성된 집단주의적 정서 등이 매우 강하였다. 이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등으로 특징되는 21세기 신세대들의 일반적 정서와 조화롭게 어울리기 힘들다.

더욱이 대가족 하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세대들과 자녀가 한두 명에 그친 핵가족 하의 경험의 차이도 무시하지 못한다. 위 인용문의 간호사는 새로운 세대를 “태움이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라든지 자기 무시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취업해서 부딪힌 현실은 커다란 자괴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즉 돈이 아니라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현장의 경험을 통한 상처는 단지 자존감의 손상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이 2012년 12월 안양 고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4명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



필수감정노동자를 위한 '섬뜩' 마음 치유 프로그램(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공)



필수감정노동자를 위한 몸건강 회복 프로그램(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공)

하였다.<sup>56</sup> 사회생활의 첫 경험이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커다란 불행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다른 것 보다 이게 제일 곤란했어요. 사장님이 피자도우 만드는 걸 알려 주셨는데, 불필요한 스킨십이 생기더라고요. 백허그 자세로 제 손을 잡고 도우 만들기를 가르치셨어요. 그땐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 상기해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억울하기도 해요.<sup>57</sup>

인용문은 2024년 안양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한 학생의 후기이다. 아르바이트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여전한 문제임을 보여 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학생들이기에 제대로 된 저항과 항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피해들은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 문제와 밀접하다. 앞에서 본 2023년 안양 시만 대상 설문문에 따르면, 회사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은 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근무시간 외 추가적인 업무 요구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가 18%로 뒤를 이었다.<sup>58</sup>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음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16.3%에 그쳤고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다. 최근 더욱 확대되는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계약 형식상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하여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 불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처리 과정의 복잡성 등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배달과 퀵서비스 등의 경우 수익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 중과실이 되어 실제 산재보험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수업을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나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산재처리 경력이 고용 과정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인 경비 노동자는 반복적 위탁계약의 형식과 단기 근로계약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산재 가입은 되어 있어도, 은폐되고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산재 처리하는 경우는 사직이나 계약 종료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산재처리를 하면 용역회사에서 입찰하는 데 감점이 되기 때문에 퇴직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아프면 연

차를 이용하고 대근자를 데려와야 하며 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주 이상 장기 간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직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9</sup>

이와 같은 사례가 모든 노동현장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분명 존재하며 제도와 규정의 허점을 파고드는 다양한 시도들이 난무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법률과 제도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제도와 법률을 운영하고 그것을 피해 가는 편법을 찾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실제 상황 속에서 구체적 해법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안양의 다문화 노동현장과 이주노동의 현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이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 성립 이래 노동자의 이동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지만,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등장하였다. 자본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세계화를 불러왔다. 자본은 더 저렴한 노동력을 구하고자, 노동자는 더 많은 임금을 얻고자 하는 필요가 결합되어 노동자의 이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 고학력 및 저출산 등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1994년 등록 외국인수는 8만 4,905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21만 명을 돌파했고 2015년에는 114만 3,087명을 기록하였다.<sup>60</sup>

2023년 외국인수는 총 245만 9,542명이었고 이중 이주노동자는 47만 명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 783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5.17%로 드디어 다인종 국가 기준인 5%를 돌파하였다. 단일 민족 신화가 강력했던 한국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 변화이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95만 8,959명, 베트남 30만 5,936명, 태국 18만 8,770명, 미국 17만 251명, 우즈베키스탄 9만 4,893명, 필리핀 7만 392명, 일본 6만 5,216명 등이다.<sup>61</sup>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도시로는 안산시가 있다. 단원구의 경우 이미 2015년 외국인 비율이 14%를 넘어 다인종 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비롯해 2000년 연수 취업제 등 정부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정책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런데 안양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였다. 2015년 기준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별 등록 외국인수는 보면 1위가 안산시 단원구였고 2위는 서울 영등포구였다. 안양시는 10위권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낮았다.<sup>62</sup>

안양시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안양시의 외국인수는 7,130명으로 나타난다. 『안양 통계연보』 기준으로 2023년 안양의 외국인수는 총 6,452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안양 통계연보』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등록된 해는 2015년으로 7,662명이었다. 『안양 통계연보』에 처음으로 등장한 1994년 949명으로부터 증가하기는 했지만, 당시 안양시 전체 인구 60만 5,451명의 1.2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물론 미등록 외국인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로는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거지와 직장이 달라 통계에 누락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양의 이주노동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1990년대부터 안양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한 안양 시민은 1996년 언론 투고를 통해 당국은 불법 체류자를 일소해야 하겠지만,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취업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돈도 벌어 가는 근로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sup>63</sup> 또한 1997년에는 라이파이한 자매 2명이 입국해 안양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sup>64</sup> 같은 해 안양 평촌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국내 취업 중 산재로 큰 상처를 입은 조선족 노동자와 결연을 맺어 후원했다는 기사도 있었다.<sup>65</sup>

안양의 대표적 노동자 복지공간으로



구인난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수요에 관한 기사(『동아일보』 1996년 2월 17일)





2006년 10월 1일 안양전진상복지관 뒤뜰에서 열린 네팔 노동자들의 축제 '해피 더서인'(최병렬 제공)



**노동자 생활 개선법**

세계는 모두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으면  
 피로해당하여 노동조합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생활**






**노동을 수입했는데,** **노동자들이 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역할해 온 전·진·상복지관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복지관은 더 나아가 결혼 이민자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sup>66</sup> 2001년 4월 1일에는 수원교구 안양중앙성당 소강당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세 쌍의 무료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다. 복지관은 이주노동자의 집을 운영하며 네팔,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법률, 의료, 산재, 노동 상담 등을 제공,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되었다.<sup>67</sup>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양의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미보장,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이나 차별이 여전하여, 안양시의 이주노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4%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했던 한 이주노동자는 출근시간이 9시임에도 8시 출근을 강요받았고 임금은 동일하게 받았는가 하면, 점심시간 쉬는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사장에게서 욕설과 반말을 일상적으로 듣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국어가 서툴러 노동과정의 어려움이 배가되기도 했고 특히 한국인과의 차별이 큰 문제였다. 동일한 불량이 나와도 한국인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주노동자는 질책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의 열악함으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하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부당한 대우에 구제를 받고자 해도 처리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처리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더욱 해결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노동과정의 문제는 곧 생활 문제와 결합되어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

특히 육아문제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혼자 노는 경우가 많으며 마땅한 공부방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인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외국인이기에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다자녀 가구임에도 기관에 따라 혜택 적용이 들쭉날쭉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도 별도 체류자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아이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취학에 곤란한 점도 있었다.<sup>68</sup>

이주노동자들의 요구 중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은행 통장 개설을 위해서도 통역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통역의 문제는 소통



2002년 안양병원에 개소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진료소(2002년, 안양샘병원 제공)

과 정보교류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컨대 G-1비자가 나온 후에도 취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른 것은 물론이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 200만 원, 고용주 400만 원 등 도합 6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또 불법 체류로 9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 다른 회사 이직한 것도 미신고 사유로 또 600만 원의 벌금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sup>69</sup>

산업재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 클뿐더러 만에 하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규정이나 제도에 관한 정보가 어두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저임금에 위험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은 분명하다. 작업 중 다치게 되면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산재 처리가 안 되면 자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이주노동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인 경우가 많다. 간혹 ‘아시아의 창’과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저렴한 병원을 안내받기도 하지만, 모든 이주노동자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sup>70</sup>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단지 노동현장에만 국한되지



2007년 동안여성회관에서 개강한 한글학당(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가족을 꾸리기도 하고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이 노동현장에 진출하기도 하기에 이주노동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기도 안산 및 성남, 안양, 대전 등 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145명 대상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 중 39%가 취업해 일을 하고 있었다.<sup>71</sup>

조사 대상자 145명의 평균 연령은 25.39세였고 남편의 평균 연령은 43.54세였는데, 경제 수준은 상 12%, 중 73%, 하 15%로 조사되었다. 경제 상황이 중간 정도로 파악되었다 해도 한국의 현실상 맞벌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에 취업 비율이 높게 나온다고 이해된다. 출신 국가로는 필리핀 30%, 태국 25%, 베트남 21%, 중국 17%, 인도네시아 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한국의 국제결혼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차별과 문화충격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가사 노동, 경제문제, 시댁과의 갈등 등이 대표적인데, 흥미로운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 여성들이 전업주부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이었다.<sup>72</sup> 이는 그만큼 가족이라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의미일 터이다.

결국 이주노동의 이슈는 노동에만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다. 결

혼, 육아, 교육, 의료 등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sup>73</sup> 주지하듯이 이주노동자는 무엇보다 한국의 필요성에 의해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가장 하층의 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의 삶이 불행하다면, 한국의 노동현장은 분명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와 안양의 중요한 현안임은 분명하다. 이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대체로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안전한 일터, 고용 개선 및 노동권 보장, 노사협력, 정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정책집행을 가능케 할 예산인데, 노동정책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총예산의 0.07~0.64%에 불과한 실정이다.<sup>74</sup>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양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2년 8월 10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인력 구성은 3팀(정책기획조정팀, 상담구제팀, 교육홍보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7명은 안양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2023년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안양’을 비전으로, “안양시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와 “노동인권 인식 및 존중문화 확산”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동환경 분석, 노동 분야 사업 개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 사각지대 해소, 선진형 노동복지 문화 형성, 노사정 거버넌스 강화 등 4개의 전략과 전략 달성을 위한 12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토끼와 사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사자의 잡아먹을 자유와 토끼의 잡아먹힐 자유가 공존하는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시대라면, 이는 공동체 자체의 파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강부약(抑強扶弱)이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퇴조 속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 1 신기동 외, 『안양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2018, 16~7쪽.
- 2 한진수, 「안양시의 상업 발달사」, 『기전문화연구』 35집, 2009, 8쪽.
- 3 한진수, 「안양시의 상업 발달사」, 『기전문화연구』 35집, 2009, 11쪽.
- 4 문미성, 「경기도 노후공업지역 진단과 과제」, 『이슈&진단』 303호, 2017, 1~4쪽.
- 5 정성희 구술(2차, 2024년 10월 21일).
- 6 이시정 구술(2차, 2024년 9월 19일).
- 7 국가 통계포털(<https://kosis.kr>).
- 8 「무인공장 시대가 열린다 - 금성통신 무인창고 개발」, 『발명특허』 10권 3호, 1985, 60쪽.
- 9 김종주 구술(2차, 2024년 11월 27일).
- 10 김종주 구술(2차, 2024년 11월 27일).
- 11 김종주 구술(2차, 2024년 11월 27일).
- 12 「SPC 빵공장의 죽음 더 있었다...과로사 3명 확인」, 『뉴스타파』 2025년 7월 16일.
- 13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13쪽.
- 14 「대형 점포 102개 새로 생긴다」, 『매일경제』 1996년 7월 3일.
- 15 노론산, 「요양보호사에 대한 클라이언트 폭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감정노동 매개효과 및 기관장의 진정성리더십 조절효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쪽.
- 16 이시정 구술(3차, 2024년 9월 23일).
- 17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92쪽.
- 18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29쪽.
- 19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28~29쪽.
- 20 안양시노동인권센터, 『2024년 노동상담 사례집』, 2025, 23쪽.
- 21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33쪽.
- 22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88~96쪽.
- 23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00쪽.
- 24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87~99쪽.
- 25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91쪽.
- 26 안양시노동인권센터, 『2024년 노동상담 사례집』, 2025, 86쪽.
- 27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90~92쪽.
- 28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16~117쪽.
- 29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93~94쪽.
- 30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00쪽.
- 31 조영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쪽.
- 32 조영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1~37쪽.
- 33 조영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8~46쪽.
- 34 조영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1쪽.
- 35 안양시노동인권센터, 『2024년 노동상담 사례집』, 2025, 227쪽.
- 36 「안양 오상헬스케어」(<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990536>), 『알바몬-알바경험담』.
- 37 「안양 정수기부품 4/1에 가고 하루만에 그만둔셀」(<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937693>)
- 38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54쪽.
- 39 「안양 ㅇㅇ렌트카」(<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1000757>), 『알바몬-알바경험담』.
- 40 「안양 던킨 공장」(<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1001314>), 『알바몬-알바경험담』.

- 41 「안양역 지하상가 풀숲 c38」(<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936663>), 『알바몬-알바경험담』.
- 42 「안양대학교 송월타워-수건넷」(<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952173>), 『알바몬-알바경험담』.
- 43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48쪽.
- 44 안양시노동인권센터, 『2024년 노동상담 사례집』, 2025, 276쪽.
- 45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97쪽.
- 46 「보안, 경비업에 종사 해보고 느낀점」(<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943101>), 『알바몬-알바경험담』.
- 47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89쪽.
- 48 조영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0-4쪽.
- 49 조영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8-68쪽.
- 50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53-9쪽
- 51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93-4쪽
- 52 노론산, 「요양보호사에 대한 클라이언트 폭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감정노동 매개효과 및 기관장의 진정성리더십 조절효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59쪽.
- 53 노론산, 「요양보호사에 대한 클라이언트 폭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감정노동 매개효과 및 기관장의 진정성리더십 조절효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2쪽.
- 54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95쪽
- 55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05쪽
- 56 「안양 고교 알바 35% 급여 체불 경험…83% 16살 때 시작」, 『뉴스1』 2013년 1월 11일.
- 57 [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1003601?sortType=CREATED\\_DATE](https://www.albamon.com/alba-talk/experience/1003601?sortType=CREATED_DATE)
- 58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49쪽.
- 59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47-48쪽, 92-93쪽.
- 60 김혜진, 「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지 분리」, 성신여대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2쪽.
- 61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62 김혜진, 「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지 분리」, 성신여대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87쪽.
- 63 「불법 체류문제 해결돼야」, 『조선일보』 1996년 12월 18일.
- 64 「베트남인 산업 연수생 자매, 한국 아버지 찾아 입국」, 『매일경제』 1997년 1월 11일.
- 65 「조선족 동포도 우리 가족」, 『조선일보』 1997년 2월 1일.
- 66 「안양 전진상복지관 문닫아」, 『가톨릭신문』 2007년 12월 16일.
- 67 「안양전진상복지관, 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 『가톨릭신문』 2001년 4월 8일.
- 68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97-8쪽.
- 69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08쪽.
- 70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94쪽.
- 71 나임순,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제7권 제1호, 2008, 2쪽.
- 72 나임순,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제7권 제1호, 2008, 110-116쪽.
- 73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15쪽.

## 제4장

# 외환위기 이후 안양 노동운동의 변화와 전망

---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외환위기 이후 안양 노동운동의 동향

1980년대 전투적 노동운동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으로 역할했다. 안양도 노동운동이 거의 최초의 사회운동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산업화가 안양이라는 도시를 만들어냈다면, 노동운동은 안양 사회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조직적 사회운동의 역사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고, 거의 유일하게 학생운동이 1960년대부터 운동의 대부분을 감당해 왔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거쳐 1980년대 전투적 노동운동이 성장해 전노협과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실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현재 안양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와 비교해 그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23년 기준 안양의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이며 민주노총 소속은 거의 명맥이 끊긴 상황이다. 한때 어용노조라 비난의 대상이었던 한국노총이 현재 안양 노동운동의 중심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한국 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은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를 통해 거대 재벌이 순식간에 해체되었는가 하면 수많은 기업이 도산과 파산해 버리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 여파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어 실업자가 되었고 당연히 노동운동의 기반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 모으기 운동처럼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주의적 동원이 강화되면서 노동운동은 계급 이기주의로 매도될 수도 있게 되었다. 즉 국가 전체가 위태로운데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큰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지배집단이 늘 써 오던 수법이기는 했지만, 외환위기는 그 충격과 강도가 이전 상황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강했기에 강한 소구력으로 확산되었다. 아울러 외환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노동운동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신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었고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기 시작하였다. 즉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운동의 가치가 크게 의심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전환의 조짐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대표적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안양 유유산업 노조 활동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유유산업 노조는 산악회를 조직, 매주 조합원들이 함께 산에 올랐는가 하면, 조합원들의 수필, 시, 콩트 등을 모아 매달 『신새벽』이란 문예지도 내고 있다. 유유산업 노조뿐만 아니라 전노협 산하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는 87개 단위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여름 한마당을 개최, 노동자들이 직접 쓴 시낭송 발표회 등 해변문화교실과 해변가요제, 체육대회 등을 가졌다. 『조선일보』는 노동연구원 최영기 박사의 말을 빌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극심한 혼란기를 거쳐 이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해 가면서 독특한 ‘노동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분석”하였다.<sup>1</sup>

1990년이면 이제 막 전노협이 결성된 직후였고 아직 민주노총도 결성되기 전이었다. 외환위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도 등장하기 전이었다. 이 시점에 벌써 『조선일보』는 노동운동이 이미 극심한 혼란기를 지났다고 진단한 셈이다. 물론 1980년대 전투적 노동운동도 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풍물과 소모임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전개되었고 나름의 노동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활동들은 노동운동으로부터의 일탈이나 다른 노선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즉 문화 활동은 기존 노동운동에서 전혀 수행하지 않던 활동처럼 보이게 보도하였다. 다시 말해 1980년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와 노선의 노동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재현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이제 파업투쟁 같은 투쟁 활동보다 문화 활동 등 좀 더 온건하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선전선동을 감행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민주화 효과가 노동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도 사

실이기는 했다. 예컨대 1990년 초 한 재판 결과는 변화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즉 1990년 서울 민사지법 합의 12부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안양시 안양7동 거주 업체숙이 태광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무효이므로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때까지 매월 23만여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체숙은 1987년 7월 태광산업 안양공장에 입사한 뒤 1989년 5월 19일부터 3일간 연속 결근했다는 이유로 회사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간 무단 결근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징계 절차 없이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산부서의 책임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아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회사 단체협약에도 월중 하루 결근은 생리휴가로 대체한다고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전 승낙이 없더라도 생리휴가일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sup>2</sup>

1980년대까지 노동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에 정권의 눈 밖에 날 수 있는 판결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위 기사는 보수적이고 친기업 성향이 강한 재판부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민주화의 효과는 양가적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뿐이었다. 민주화 효과는 노동자보다 다른 영역에서 더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 기사  
(『조선일보』, 1990년 2월 2일)

얼마 전 어느 노동자가 “양심대로 생활하는 조합원은 행동을 보여 주기 바란다.”라는 말을 남기고 분신한 일이 있었다. 요즘처럼 누가 어느 당에 입당했는지, 5·18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가 떠들썩한 상황에서는 이런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조차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자나 노동운동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적으나마 신문지면을 차지하는 노동정책이나 그들의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들의 처신이 얼마나 소심한지를 알 것이다. 노동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만 그 종류의 차이가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 자신은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계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곡된 사회 분위기 탓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정부나 시민들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먼저 불합리하게 행해지는 노동정책들의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자신도 노동자의 일원임을 깨닫고 노조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sup>3</sup>

위 기사에서 언급한 분신 노동자는 한국전력 소속 한일병원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던 김시자 열사를 가리킨다. 김시자 열사의 분신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전력노조 집행부가 벌인 비민주적인 노조운동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회사 쪽의 강압적인 노무관리와 정부 당국의 노조 전임자 축소 방침을 비롯한 노동 통제정책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4</sup>

‘누가 어느 당에 입당했는가’가 화제가 되는 것은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출신들이 여야 정당을 통해 대거 제도권 정치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할 터이다. 5·18 수사는 김영삼 정권의 국면 전환용 깜짝쇼처럼 진행된 수사를 의미한다. 즉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정세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노동운동 주체들의 제도정치권 진입은 이제 더 이상 1980년대와 같은 노동운동이 힘들 것이라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 1996년 제15대 총선이였다. 15대 총선은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노동자 후보 전술을 적극 추진했다는 특징이 있다. 민주노총은 독자 후보를 내는 방침을 정했다면 한국노총은 기존 정당 후보 중 노동자 후보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신한국당 소속의 박종근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안양 만안구에 출마하여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sup>5</sup>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노동운동으로 축적된 정치적 역량이 기존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노동운동의 독자적 전망을 포기



1988년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 초청 간담회(안양시청 제공)

하고 기존 정치세력으로 흡수된다는 측면이 공존하였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민중당이였다. 민중당은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본격 정당 정치운동을 전개했지만, 그 결과는 총선에서 단 한 석의 의석도 얻지 못한 참패였다. 이에 민중당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사람이 기존 보수 여당과 야당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1996년 제15대 총선은 민중당 출신들이 대거 기존 제도정치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우재·이재오·김문수 등은 신한국당으로 출마했고, 장기표·송운학 등은 민주당으로 출마하였다. 특히 송운학은 안양노동상담소를 만드는 등 연고가 있었기에 안양 동안을로 지역구를 정해 출마하게 된다. 송운학은 민중당 시절 지구당위원장을 맡았었고 이후 경실련 기획실장으로 전신하였다. 그는 민중당 경력은 가급적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대신 경실련 경력을 주로 강조했다고 한다.<sup>6</sup>

그러나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았던 후보는 총 20명 중 단 세 명만 당선되었고 민주노총 독자 후보 3인은 모두 낙선해 현실 정치의 벽을 절감하게 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은 안양 만안구에 출마했던 박종근은 당선을 확신했으

나 불과 350표 차로 자민련 권수창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고 말았다.<sup>7</sup>

민주화와 함께 안양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구조 조정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시작된다. 섬유산업 내에서도 대표적인 노동 집약산업으로 꼽히는 면방공업은 1988년 이후 3저현상 퇴조와 함께 지속적인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급격한 임금 상승, 국제 원면가격 상승, 설비 노후화, 인력 부족 등으로 면방업계는 구조조정에 내몰리게 된다. 이에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여타 산업 분야로 진출하여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안양의 동일방직도 공장 이전과 함께 공장용지에 아파트와 유통단지를 건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양지역 유선방송 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다.<sup>8</sup>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전통적 산업화 업종들이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 공장 이전 등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안양 공업을 상징하던 대기업들이 줄지어 안양을 떠나게 되면서 노동운동의 기반 자체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공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노동자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과거처럼 대공장에 집결된 수많은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운동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민주화와 함께 산업구조 조정으로 노동운동이 큰 변화에 직면한 것은 분명했지만, 노동현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노동계의 현안 중 하나는 해고자 문제였다. 1994~1995년 철도·지하철·한국통신 등의 쟁의 여파로 240명 이상의 해고 노동자가 발생했고, 이는 노사 간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1996년 6월 안양에서도 안양중앙병원 노조 등이 해고자 문제로 쟁의발생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sup>9</sup> 이렇게 해고 노동자가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여전히 해고가 노동운동 탄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파업투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6년 7월에는 대우중공업 노동조합이 인천·안양·창원·안산 등 사업장별로 전체 조합원 4,391명 중 3,920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89%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에 7월 4일부터 2~3시간의 잔업을 거부하는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sup>10</sup> 만도기계 안양 공장도 파업이 전개되었으며 노사합의로 파업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7월 2일 안양 경찰서가 노조 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노조원들의 항의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무렵 한국방송이 첨예한 노사대립을 빚은 기아 자동차, 만도기계, 서울지하철 등의 노조원과 경영진을 함께 모아 노사화합 열린 음악회를 기획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sup>11</sup>

정권의 탄압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하였다. 1996년 4월 7일 민주노총 경기남부추진위원회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안양역 주변에서 ‘4·11총선 알고 짝잡시다.’는 내용의 후보자 설문조사 유인물을 돌리다 김용선(대우자동차 판매노조 지부장) 등 6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고 3시간여 만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남부노동연구소 간사 김영호의 안경이 깨지고 옷이 찢어지는 등 경찰의 폭력이 행사된 것은 물론이었다.

유인물은 경기남부지역 노동자 선거투쟁본부가 수원, 안양, 안산 등 13개 선거구 후보자 77명을 대상으로 임금 억제선(가이드 라인)과 제3자 개입금지 등 노동정책 관련 10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들의 찬반 의견을 정리한 것이었다.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설문조사가 후보들의 사전 양해를 얻어 이뤄졌고 정책을 비교한 것인데, 경찰이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경기도 선관위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sup>12</sup>

1990년대 노동운동 최대의 이슈는 1996년과 1997년에 걸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이었다. 1993년부터 시작된 김영삼의 ‘문민정부’와 자본 진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자 사이에 경쟁을 부추겨 노동조합을 힘을 빼려고 ‘신경영 전략’과 ‘신노사문화’를 확대하였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들은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인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쟁의 제한 규정들을 보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와 직결되는 것들이었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일반적 모습으로 관철되어 갔다.

이에 민주노총은 자주적 단결권 쟁취(노동3권)와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악 저지를 노동법 개정의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1996년 7월 11일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 열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교육, 선전, 총파업 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개투 실천단 구성, 리본 달기, 현수막 걸기 같은 다양한 대중사업을 벌이면서 총파업을 준비하였다.

결국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의원 154명은 자기들끼리 임시국회를 열어 7분 만에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악한 것이다.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를 허용하여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고, 대체 근로제, 무노동 무임금, 전임자 임금 지급 철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총파업을 선포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지도부는 이미 명동성당에

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었고 12월 26일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했고 12월 29일 현재 민주노총은 196개 노조 23만 6,0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였고 한국노총은 535개 노조 15만 6,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었다.<sup>13</sup> 12월 30일부터는 안양중앙병원이 파업에 돌입하고 했으나 병원노련 산하 서울대 병원, 고려대 병원 등 12개 노조가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파업을 유보하였다.<sup>14</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안양에서는 1996년 11월 28일 ‘민주적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을 위한 안양, 군포, 의왕 시민·노동자 200인 선언’이 발표되었다. “총파업으로 노동악법 제정 저지하자!”는 슬로건에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교사 단결권 금지, 제3자 개입금지 철폐를 비롯해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 선언에는 정상시 목사를 비롯해 송재영, 정금채 등 안양 노동운동가 다수가 참여하였다.<sup>15</sup>

해를 넘긴 1997년 1월 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 수호를 위한 안양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sup>16</sup>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의 연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기원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나 조직 성향도 다른 두 조직이 함께 연대 투쟁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특히 두 조직은 상호 경쟁적 위치에 있기도 해서 연대의 어려움은 더 컸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에 맞서 공동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필요했고 다양한 연대 형태들이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 한국노총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입장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두 조직의 연대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안양지역의 연대투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해를 넘겨서도 총파업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1997년 1월 6일 민주노총 2단계 총파업에 150개 노조 19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1월 15일 민주노총 3단계 총파업에는 431개 노조 37만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노총도 1,510개 노조 37만 8,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날 총파업이 최고조에 올랐다. 지역에 따라 공권력과 직접 대결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연대도 확대되고 있었다. 1997년 1월 13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사제 1천 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를 규탄하였다. 이 선언에 안양에서는 중앙성당의 고선선 신부와 비산동성당의 윤석원 신부가 동참하였다.<sup>17</sup>

노동법 개정 투쟁이 최고조에 오른 1월 17일 민주노총은 3단계 총파업을 18일까지 진행한 뒤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수요파업’으로 바꾸겠다고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관계



1996년 11월 10일 열린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이어졌다.(『한겨레』, 1997년 1월 17일)

자는 “장기파업에 따른 사업장 현장의 파업 역량 저하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했지만, 그보다는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상황변화가 투쟁수위 조절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요 사업장의 파업 참가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파업 열기가 수그러들자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던 것이다.<sup>18</sup>

이에 호응하듯이 1월 21일 정부·여당은 노동법 재개정 약속과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철회 방침을 밝혔다. 또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노동법 관련 쟁점을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sup>19</sup> 1월 21일의 영수회담에서는 노동법 국회 재론 등이 언급되었고 후속 논의가 이어졌으나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곤란하였다.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얻지도 못했고 변형근로시간제, 공장점거 파업이나 비공식 파업금지, 무노동 무임금, 공익사업장 직권 중재, 노조위원장 직권조인 승인 등을 저지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을 일단 폐기시키는 성과를 얻었고 상급단체의 합법화와 정리해고제 2년 유예 등 부분적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었다.

4단계에 걸쳐 진행된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투쟁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총파업투쟁이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총파업 과정에서 한 번 이상 총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531개, 조합원수는 40만 명이 넘었다. 총파업에 참가한 노조와 조합원수의 누계는 3,422개 노조, 조합원 387만여 명이 넘었다.

결국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심지어 해고 통보조차 없이 ‘잘린’ 경우도 발생하였다. 1995년 입사해 LG에어컨 안양 총판점에서 설치기사

로 일하던 이근주도 1996년 12월 20일 해고되었다. 회사 쪽의 해고 사유는 “지휘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안양상담소 소장 최국중은 “정리해고 등을 포함한 노동법 통과에 크게 고무받은 사용자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마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조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sup>20</sup>

1996년 12월 31일 개정 노동법이 공포돼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가 합법화한 가운데 1997년 1월 14일에는 처음으로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소송 제기자가 안양 사람이었다. 안양1동에 거주하던 이경령 등 2인은 자신들을 해고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4,300여만 원의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연합회가 무리한 사옥 신축 등으로 빚어진 적자 운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한편 노동법 개악에 따라 사용자 측의 무리한 해고 등 각종 노동문제가 빈발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안양의 경우 한국노총 산하 지역 상담소에 한 해 10여 건 내외였던 노조설립 문의가 노동법 통과 이후부터 불과 보름여 만에 38건이나 늘어왔다. 이는 평소의 거의 4배에 가까운 건수였다.<sup>22</sup>

한편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에 따른 투쟁은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불러왔다. 1997년 1월 22일 안양, 군포, 의왕 각계 인사·사회단체 시국선언이 언론에 발표된 것이 그 단적 사례였다.

오늘 우리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신한국당은 개악 안기부법,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기본적 의회민주주의 정치조차 실종시켰다. 현 정부는 문민정부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 버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법에 담긴 반민주주의적 요소와 반인권적 독소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회와 현 정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작되어 종교, 학자, 법조, 교육, 문화, 언론계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적 항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저항권 행사로서 정당한 것이다.<sup>23</sup>

시국선언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무효화하고 국제기준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재개정할 것, 안기부법 철회, 파업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이 그것이었다. 선언문은 문민정권을 내세운 김영삼 정권이 권위주의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1987년 민주화가 의회민주주의조

## 안양 노동상당소 상담 활동 보고서(95년 6월~10월)

### 1. 상담활동 보고

#### 1) 월별 상담활동

월 별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계
건 수	30	32	30	33	30	155

#### 2) 지역구별 상담활동

내곡별	계동성당	회계동	계곡동	안정동	우정동	노동조합	계	기	타	계
건 수	125	74	28	75	34	1		50		407

### 2. 기타활동

#### 1) 회계동근로자의 상담 및 상담을 위한 공적활동

- (1) 회계동근로자를 위한 세차회 및 송 보내기
- (2) 식사 제공
- (3) 근로일 활동 중 계획장

#### 2) 노동조합

- (1) 지역생활정보지 발행한 결과 개회(우서)
- (2) 안양지역별동 생활실태 및 홍보(전달) 및 복지 개회-달성회과 중심)
- (3) 지역신문 "우리생존신문"에 고정 노동상담단 게재
- (4) 지역생활정보지 '사랑발전'에 상담사례 게재(2건)

### 3. 안양노동상당소 조직

이사회 : 임종훈 목사(의사장), 서일규 목사, 임종훈 목사, 우경희 목사, 임영수 목사, 김재환 목사, 송승희 장모, 안승태 장모, 김철길 장모, 장서영 장모, 권태희 장모, 안기상 목사(총회상담소 조장), 최두상 목사(집부서장)

서면직원 이현정 변호사(새천년유일봉사부조), 김남준 변호사(새천년유일봉사부조), 안우근 장모, 박원석 목사

소 명 : 최주삼 목사

상담원 : 구본홍 집사

☞역사상 변경 : 임종훈 목사→임종일 목사

차 실종시킨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으로 귀결되었다는 비판이었다.

1980년대 전투적 노동운동을 통해 형성된 안양의 운동역량은 1990년대 들어 저항적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사회 운동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안양도 1980년대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운동 세력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하면서 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었다. 앞서 보았던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복지, 문화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요컨대 1980년대 노동운동은 1990년대 시민사회운동의 저수지 역할을 했던 셈이다.

시민사회 영역과 노동운동의 중간적인 영역으로 교사 운동이 있다. 1989년결성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교사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런데 전교조 역시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탄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1999년 8월에는 안양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미가입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학교 당국이 이를 막고 해당 교사들에 징계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sup>24</sup>

물론 이 시기 노사 대립만이 안양 지역 노동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유한김벌리 안양공장은 1997년부터 3년간 노조가 회사에 임금 결정을 일임해 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였다. 이에 경기도 산업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sup>25</sup> 식민지 기 유일한이 설립한 유한양행은 여러모로 독특한 기업이다. 노사관계에서도 남다른 면모를 보인 것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노동운동으로 출발해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분야가 환경운동이다. 1988년 불과 17세의 나이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사건이 발생하면서 작업환경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했음에도 1990년대에도 여전히 작업환경은 커다란 문제였다. 1996년 안양의 한성병원은 작업환경 측정을 부실하게 진행해 노동부의 업무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sup>26</sup>

안양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이 서울보다 대기오염 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안양은 아황산가스, 먼지 등의 농도가 서울보다 심각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 오염대책이 서울로 집중된 반면, 자동차 증가와 산업활동은 수도권에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였다.<sup>27</sup>

1990년대 안양의 환경문제를 잘 보여 준 대표적 사례가 평촌신도시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사건이다. 이미 평촌신도시 부지에서 1993년부터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이 발

견되었는데, 1996년 7월에는 세 번째 다시 발견되어 큰 물의를 빚었다. 부지 조성을 책임진 한국토지공사는 1992년 부지 조성 당시까지 건축폐기물 처리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공공기관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던 상황을 잘 보여 준다.<sup>28</sup>

불법 매립폐기물은 건설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무려 트럭 600대분에 달하였다. 결국 경찰 조사가 착수되어 부지 조성을 책임진 한국토지공사는 물론 공사를 맡은 (주)한양, 관리감독을 담당한 안양시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sup>29</sup> 이렇게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안양 사회운동의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 2. 안양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노동운동의 전환

1980년대 노동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안양의 사회운동이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준 것이 정치 분야였다. 단적인 예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박종근이 안양 만안구에서 내리 3번이나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결국 세 번 다 낙선하고 말았지만, 평균 30%대의 득표율을 보여 주었다. 안양이 노동자가 많고 노동운동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한나라당에서도 노동운동 관련 인물을 공천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같았으면 노동운동가 출신이 유력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노동운동의 성장을 통해 그 활동가들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고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평촌신도시의 등장은 이러한 안양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평촌은 20~30대 유권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었고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평촌 지역의 1996년 총선에 출마한 인물을 보면 새정치국민회의 이석현, 민주당의 송운학, 신한국당의 정진섭 등이었다. 이중 송운학은 안양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종사해 온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985년 초 송운학은 전태일 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를 개소하였다. 그는 민청학련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 옥고를 치르고 기능공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경실련 기획실장을 거쳐 민주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였다.<sup>30</sup>

1996년 제15대 총선은 단지 개별 활동가의 제도정치 진출만을 보여 준 것은 아니었다. 운동진영 전체가 제도정치에 커다란 압력단체로 역할하기 시작한 것이다.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양, 군포, 의왕 지역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참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후보 뽑기 시민연대 모임’(공동대표 정상시 목사)가 결성되었다. 간사를 맡은 송재영은 조직을 만든 이유를 “선거를 앞두고 찍을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이 모임을 만든 동기”라고 말하였다. 특별한 선거 쟁점이 없는 데다 후보마다 모두 개혁을 부르짖고,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구도도 아닌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 처지에서 보면 좋은 후보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찍을 후보가 없으니 등산이나 가자는 냉소적 분위기도 한몫하는 게 현실이라 진단하고 유권자들의 선거 보이콧을 막고, 지역과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들에 대한 공약 비교와 인물 검증을 해내겠다는 의도였다.

시민연대모임은 좋은 후보로 5~6공화국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노동·방송법 등 5~6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120여 개 악법 폐지에 앞장서는 인물을 뽑았다. 또한 부족한 도시기능 보완과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하며 노력하는 사람도 포함시켰다. 시민연대모임은 이를 위해 안양과 군포 지역 4개 선거구 중 1~2곳을 선정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 등산 캠페인을 벌이고자 했다. 또 각 당 후보의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한 팸플릿을 찍어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12대 사회개혁 과제를 각 후보에게 보내 서명을 받기도 했다.<sup>31</sup>

이러한 활동은 전형적인 시민운동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선거를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것으로 보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운동의 특성을 보여 준다.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감시하고 분석하여 유권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은 과거 정치와 다른 것임이 분명하였다. 그럼에도 5~6공화국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이는 “금품을 뿌리거나 지역 연고를 등에 업고 당선하려는 후보보다 이 땅에 ‘봄다운 봄이 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을 뽑도록 하겠습니다.”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구체적 환경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은 1990년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운동 진영의 관심을 잘 보여 준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환경문제는 1980년대 운동이 1990년대로 이행하는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의제였다. 환경운동이 큰 주목을 끈 이유는 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보편적 주제라는 점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 두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환경운동은 1990년대 시민사회 운동을 상징하는 핵심 이슈였다.

시민모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시민노동인권상담소였다. 시민모임의 간사를 맡은 송재영은 시민노동인권상담소장을 맡고 있었다. 이 상담소는 1995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부설로 안양시 만안구(도정오피스텔)에 개설되었으며 각종 노동문제와 생활법률 및 인권상담을 무료로 실시해 왔다. 산재,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임대차, 대여금, 가사, 교통 등과 성폭력, 가정폭력, 행정 및 경찰의 반인권문제 등 시민노동인권상담소가 맡아왔던 상담건수는 월평균 450건, 5년간 2만 7,000여 건에 달하였다. 또한 대중 법률강좌 개최와 고문변호사제를 통한 노동조합 및 아파트단지 법률고문뿐만 아니라 자체 소식지인 시민노동강좌 발간, 팩스정보 제공,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sup>32</sup>

2001년 시민노동인권상담소는 5년간의 안양 시대를 마감하고 군포로 이전했는데, 이는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부설기관에서 독립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전 개소식에는 김진용 시의회 의장, 유선호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이금연 전진상 복지관장, 최창남 디딤돌 문화교육원 이사장, 광도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이금순 환경자치시민회장 등 지역사회의 중요 인사 상당수가 참석했는데, 그만큼 지역의 유력한 시민사회운동 기관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이전식에서 송재영 소장은 “인권은 삶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는 시민과 노동자를 기다리지 않고 발로 뛰고 함께 나아가는 상담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였다.<sup>33</sup>

또한 시민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상시 목사는 안양의 대표적 운동권 교회였던 박달교회를 만든 사람이었다. 1987년 6월 설립된 박달교회는 노동상담과 노동자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노동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시민모임은 사실상 안양 사회운동 세력이 주도해 결성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상시 목사가 박달동에 박달교회를 만든 것은 6월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이다. 당시 전도사였던 정 목사는 박달교회를 설립하고 ‘노동상담’과 ‘노동자 문화교실(기타반, 영화반)’, 박달무료진료소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노동선교’라고 표현하였다. 그가 노동선교 사업을 한 이유는 “당시 노동문제가 사회적 화두”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선교로 출발한 박달교회는 1992년,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선

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바로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었다. 정 목사는 “사회적으로 노동문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히고 나니 그다음 필요한 것은 노동자도 되지 못한 소외된 민중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름도 안민교회로 바꾸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 목사는 이른바 긴급조치 세대(75학번)로 대학 시절 긴급조치 반대운동을 하다 1년 6개월 징역을 살았고 1980년에는 군사정권에 맞서다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안양과 아무런 연고도 없던 정 목사가 안양 이주를 결심한 이유는 뜻밖에도 안양이 개발이 될 된 ‘시골스러운 모습’ 때문이라고 했다.<sup>34</sup> 박달교회의 설립과 활동 그리고 변화 과정은 1980년대 노동운동이 어떻게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달교회가 안양의 대표적 개신교 계통의 노동운동 지원 기구였다면, 가톨릭 계통의 지원 조직으로는 전진상복지관이 있다. 안양의 대표적인 노동자 활동공간인 전진상복지관의 변화 과정도 안양 노동운동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1969년 당시 수원교구장이던 윤공희 대주교 요청으로 국제가톨릭형제회(AFI) 회원 2명이 젊은 여성 노동자 숙소로 문을 연 전진상복지관의 애초 이름은 근로자회관이었다. 복지관 공동 창립자인 한성인(베르타)은 1970년대 농촌을 떠나온 공장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시대의 징표’라 생각했고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고자 했다고 말하였다.<sup>35</sup>

2000년대 들어서에는 인권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예컨대 2001년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2기 인권학교는 인권과 인권의 역사(인권운동사랑방 박래균 사무국장), 노동권(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 장애우의 인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 북한 동포의 인권(우리민족 서로 돕기 이종무 정책실장),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 교수), 인권단체 소개(고은태 교수) 등의 강의로 준비되었다.<sup>36</sup>

1990년 초반부터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사회복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노인들과 행려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개소하였다. 또 1998년에는 근로자회관이라는 명칭을 안양 전·진·상복지관으로 개칭, 여성들을 위한 성인 교육, 여성들을 위한 긴급 전화와 쉼터의 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복지관은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결혼 이민자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다. 그러나 결국 2007년 전진상복지관은 가톨릭 내부의 복잡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변화 속에 문을 닫게 된다.<sup>37</sup>



여성과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했던 안양 전진상복지관(안양시청 제공)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좌 개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안양 민중학교는 영화강좌를 개최하였다. 영화문법과 산업, 영화사, 영화작가, 제3세계 영화, 여성영화 등에 대해 알아본다는 취지였다. 영화에 대한 글쓰기와 영상문화의 대중 참여에 대해서도 강의가 준비되었다. 영화감독 김홍준, 영화평론가 오영숙, 변재란, 주유신 등이 강의를 맡았다.<sup>38</sup>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올라가면서 운동 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민중학교가 시민 대상 영화강좌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안양의 노동운동은 노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갔다고 보이는데, 1999년 11월에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안양, 군포, 의왕 지역 148인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모든 양심수 석방과 정치 수배 해제 등의 요구를 내세운 이 선언은 노동, 시민사회단체, 법조·의료계, 청년, 복지 등의 분야로 구분된 148인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운동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정금채가 시민사회단체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노동운동 출신 인물이 여타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39</sup>

시민사회 운동의 활성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시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

하기 위한 활동도 그 일환이었다. 1996년 안양시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인도 일부분을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어 운영하자 이를 반대하고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경우가 그것이다. 노동정치연대 안양지부 녹색교통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종박이 그 주인공이었다.<sup>40</sup>

김종박은 1996년 제15대 총선에 안양 만안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는데, 기업 대표를 종업원 투표로 뽑아야 된다는 이색 주장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안양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됨을 강조해 개발주의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sup>41</sup> 회사 대표를 종업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만, 첨단산업단지 유치는 전형적인 개발주의 공약임이 분명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 전투적 노동운동은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었다.

김종박은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 안양 민청련, 민중회의, 민중정치연합(민정련)의 지도급 활동가였으며,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 독립적인 좌파정당 건설, 진보정당 운동과 민중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누구보다 앞서서 주장하고 실천했던 사람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이끌었던 진보정치연합과 민중정치연합을 통합하여 좌파의 독자적인 진보정당 창당을 모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1980~1990년대의 좌파 학생운동권에게 그는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당』, 『힘 있는 조직 만들기』 등의 운동권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는 작은 기획사를 만들어 자립해 갔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해외직판(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현재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티쿤글로벌이다. 수출이라고 하면 대기업의 몫이었던 시기에 중소기업과 1인기업도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외국 현지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사업을 시작한 것이다.<sup>42</sup>

이상의 모습을 보던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활동가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대신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노인이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생계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사회운동 대신 기업활동으로 전신한 경우도 있다. 물론 사회운동의 경력을 살려 정치 분야로 진출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980년대에 비해 오늘의 한국 사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숙도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대의 운동 노선과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가 해소된 것을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더욱 심화된 측



김종박의 1996년 선거 홍보물

면도 크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은 크게 개선되기도 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그에 대비되어 더욱 열악해져 가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4%인데, 이 중에서 정규직의 조직률은 18.9%이나, 비정규직은 3.1%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임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고용 지위 때문에 헌법상의 노동 3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불안정한 고용 지위로 인해 근무지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요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sup>43</sup>

특히 비정규직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로 채워진다. 여성, 이주노동자, 노인과 청소년 등 사회적 상징자본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더럽고 힘들면서도 임금은 최저 수준에 머무르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부분 채우고 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양은 주로 그 어떠한 복수의 가능성조차 없는 약자들에게 선정된다고 한다.<sup>44</sup> 다시 말해 공동체의 안전과 통합을 위해 선택되는 희생자들은 공동체에 어떠한 위해도 가할 힘이 없는 약자들이라는 것이다. 약자에게 선택되고 희생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이 고대의 희생제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사회로 이어지는 셈이다. 현대판 희생제의 담론이 곧 능력주의일 터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보상 규모가 결정된다는 능력주의야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 삼아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현대판 희생제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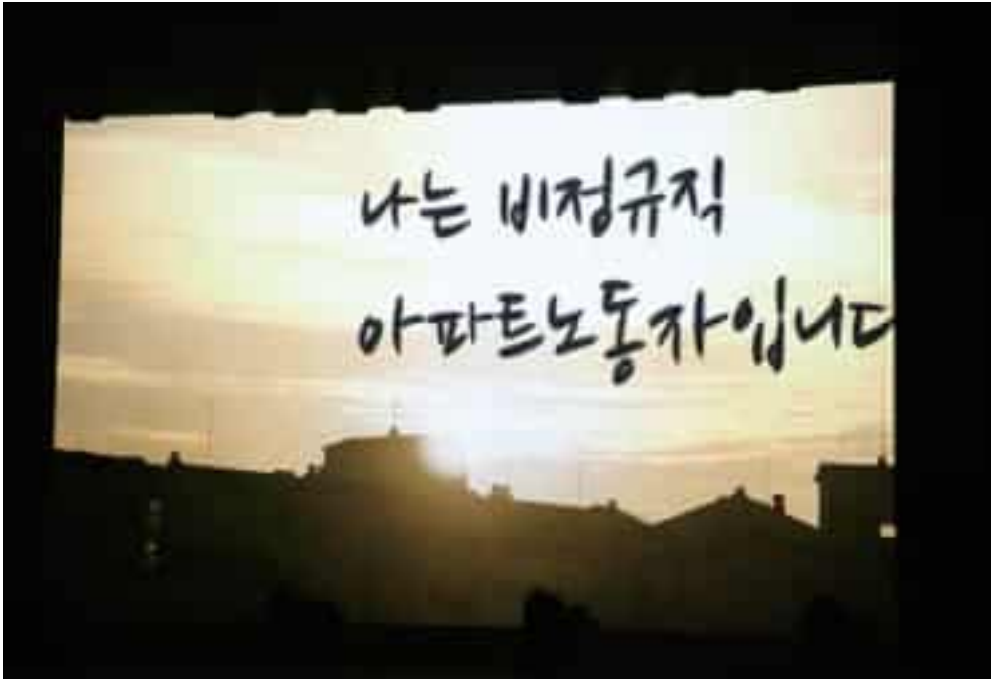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실천과 운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비정규 노동은 매우 다양하여 짧은 지면에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트 노동, 배달노동, 돌봄노동, 제조업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등 안양의 비정규직 노동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이를 모두 다 살펴보기는 힘들다.

### 3.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과 활동

여기에서는 현재 안양에서 그나마 운동의 형태로 등장하는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경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비 노동자는 인구학적으로 고연령이며, 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상태로 사회적으로 저평가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21년 기준 66.2세이며, 70세 이상의 노동자도 29.3%를 차지한다. 간접고용 비율은 90%를 넘으며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1.7%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임금도 최저임금 선에서 결정되는데, 위탁·용역회사들이 계약을 따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금액의 입찰금으로 응찰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휴게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은 감시·단속적 근로로 분류되어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편법적 조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노동조합 조직 역시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한국노총 산하 아파트노동조합연맹은 2000년대 말 활동을 멈추었고 민주노총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일반노조 산하에 300여 명의 노조원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sup>45</sup>

요컨대 현재 아파트경비노동조합의 활동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2021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 문화한미당에서 상영된 영상(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에서 2020년 5월 경기도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5,000만 원이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에 배정되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50여 명의 경비노동자로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가 창립되었다.<sup>46</sup> 그 경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20년 경기도의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양과천의왕군포비정규직센터(대표 하상수, 이하 비정규직센터)’는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단장 정성희, 이하 지원사업단)’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지역 실태조사를 하던 중 2020년 9월 안양의 A아파트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다. 조사 결과 A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주체 간 내부 분쟁으로 경비원과 미화원 등 노동자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원사업단은 고용노동부·안양시·은행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경비 노동자 45명 2개월분, 미화원 24명 1개월분, 관리소 직원 21명 1개월분 등 체불임금 총 4억 6,000만 원가량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sup>47</sup>

여기서 아파트 내부 분쟁이란 입주자 대표회장이 법원에 의해 회장직무 정지가 되었

지만, 직인을 회장 권한대행에게 반납하지 않고 이중계약을 통해 다른 관리업체에 넘기는 바람에 기존 관리소장이 은행 인출을 하지 못해 생긴 문제를 말한다. 지원사업단은 정치계와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의 해결을 도모했던 것이다. 결국 안양시와 국회의원 민병덕, 경기도 노동국, 고용노동부 등의 협력으로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의 갈등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되도록 해결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20년 10월 16일에는 아파트 노동자 고용안전 권리선언식을 가졌다. 권리 선언문은 ① 고용불안-단기계약 근절, ② 자유로운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확보, ③ 일자리 안정자금 감액 반대, ④ 1년 미만자 퇴직금 지급, 5. 부당 업무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8</sup>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20년 12월 14~15일에 걸쳐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가 창립될 수 있었다.

창립식 자료집을 보면, 이학영,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등 안양과 군포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군포시의회 의장, 안양시의회 의장 권한대행, 경기도 노동국장 등 정치와 행정의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만큼 이 조직의 창립이 안양과 군포는 물론 경기도 내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창립 선언문의 일부를 보자.

그간 우리가 겪은 아파트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입주민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에 정말 고마워했다. 몇몇의 무시, 갑질, 천대에는 화가 났지만, 속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초단기 근로계약에 사표와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혹시 잘리나’ 몹시 떨었고, 초소에서 먹고 자고 휴게시간을 늘려 월급을 깎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적도 많았다. 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때까지 이 나라 산업화의 역군으로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청춘을 다 바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어 경험이 풍부하고 삶의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처지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침묵과 속앓이에서 벗어나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고자 한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노동이 신성한 노동의 가치로 존중받는 참세상을 아파트에서부터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경비원만이 아니라 미화원과 기전, 경리 등의 관리원들도 함께 뭉칠 것이다. 아파트노동자협회는 아파트 노동자만의 권익을 이기적으로 관철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책임 있게 일할 것이다. 입주민과 노동자와 지자체가 서로 손잡고 사랑과 웃음이 꽃피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앞장설 것이다.<sup>49</sup>





창립선언문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침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준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 입주민의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문제 등도 커다란 해결 과제였다. 그럼에도 선언문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비롯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속한 여타 직렬의 노동자와의 연대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서 조직 형태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협회라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법상 감시근로 노동자라는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제약과 함께, 경비업의 특성상 노동조합 형태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즉 기존의 전형적 노동자 성격과 많이 다른 노동 형태이기에 이에 조응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택한 셈이다.

창립 이후 협회의 활동이 그리 원활하기는 힘들었다. 창립에 큰 역할을 한 비정규직 센터에 따르면 애초 조직했던 150명의 CMS 유료 회원 중 1년 후 30%는 아예 아파트 경비노동을 그만두었다는 것이다.<sup>50</sup> 고령의 노동자들이기에 중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또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이기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 협회의 조직 과정은 현재 안양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귀중한 사례이지 않을 수 없다.

#### 4. 비정규직 문제와 안양시노동인권센터의 활동

여기서 이상의 활동을 주도한 비정규직센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센터의 역사는 멀리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직접적인 조직 기원은 1988년 결성된 안양지역노동자회(안노회)이다. 1980년대 안양 지역의 노동운동 정파는 대략 세 흐름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김승호 등이 주도하던 경수지역노동자연합(경수노련), 장명국 등의 석탑그룹 그리고 안양지역노동자회가 그것이다.<sup>51</sup> 안양지역노동자회는 1980년대 다양한 정파별로 진행된 노동운동의 산물이었는데, 1990년대를 거치면서 활동이 침체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등 전환 국면을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이 직면했던 상황과 비슷한 여건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로 떠나기도 했고 또 다른 영역으로 활동공간을 옮

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안양지역노동자회는 적극적 활동보다 안양지역노동자회 동지회를 만드는 등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로 축소되었다. 활동이 거의 정체된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오랜 침체기를 딛고 2010년경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를 만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2020년 무렵에는 조직 명칭을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로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센터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독립 조직이다. 그렇기에 운영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대표와 운영위원 모두 무보수이며 상근 활동가는 있다 없다는 반복할 정도라고 한다. 다만 경기도 노동국이나 안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비정규직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에 응해서 사업비 보조를 받기도 한다. 앞서 보았던 아파트 노동자협회 결성이 단적인 사례이다.

어쨌든 비정규직센터는 안양의 거의 유일한 비정규직 대상의 노동운동 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의 활동은 밖으로 외화되는 것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비정규직 상대의 활동이 1980년대 노동운동 후신 조직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안양시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파업 집회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비정규직이라고 할 때는 취약 미조직 이런 비정규직들을 이제 폭넓게 포함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한 60% 정도는 비정규직이다. 노동자 중에 특히 안양시에 노동자들의 한 60%는 비정규직이다. 근로기준법 포함 안 되는 사람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필수 노동자들이예요. 비정규직을 설명을 하면 비정규직은 일단 취약해요. 취약하다는 거는 노동법이 적용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렵거나 법이 있어도 그걸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예요. 법이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미조직인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태 파악이 안 돼요.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은 실태 파악이 안 돼요. 도대체 그 사업 방식들이 급변하니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도 못해요.<sup>52</sup>

인용문은 비정규직센터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와 안양의 비정규직 문제를 요약해서 보여 준다. 법과 제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장치는 너무나 취약하다.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다양한 편법과 수법들이 개발되면서 더욱이나 법과 제도에 호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초단기 근로계약자들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법부 판례가 극히 드물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몇 년간 끌어야 되는 법적 투쟁을 지속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생업에 치이다 보니 행정기관에 마련된 비정규직 관련 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길거리 노동상담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5년 넘게 진행된 찾아가는 길거리 노동상담은 비정규직센터의 열정과 활동 방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낮에만 운영되는데, 야간과 새벽 시간에 움직이는 배달 노동자, 대리 기사 등에게는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 그렇기에 더욱더 찾아가는 노동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기 힘든 노동자 중에 돌봄노동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방식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협회 방식의 직능단체나 노동공제회에 대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파편화된 노동으로 조직이 어려운 방문요양보호사를 회원으로 하는 서울요양보호사협회가 5년째 활동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2023년 11월 출범하였다.<sup>53</sup> 이러한 흐름 속에 안양에서도 요양보호사 공제회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제 관심은 어쨌든 이제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서 어쨌든 이제 돌봄 노동자 미조직 영역 거의 조직화되지 않은. 현재도 이미 150만 명이 넘어서 이제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고 그중에서도 이 노인 돌봄 조직화 사업을 지금 하느라고 그 방향으로 노조 방식으로 조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협회 방식, 전국 협회 만드는 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드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노동자 숫자로 따지면요. 안양의 요양보호사가 8,500명이예요. 전국적으로 70만 정도 되고 아마 노동자 숫자로 따지면 그만큼 대기업이 없을 걸요. 안양에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sup>54</sup>

인용문은 안양에서 1980년대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민주노총 등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이시정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불과 1년 만에 요양보호사는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1년 사이에 10만 명이 늘어나는 한국 유일한 직군이라는 것이다. 또한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서 육아와 돌봄노동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이 영역의 특징이 여성 노동이예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최저임금 그냥 요양보호사가 생긴 게 공식화된 게 2008년도 7월 1일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는데, 16년 동안 그냥 최저임금이 임금이예요. 오히려 역행하려고 하죠. 지금 일자리(노동력의 오기)는 부족하니 외국인 들어와서 최저임금 적용 안 시켜도 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sup>55</sup>

돌봄노동의 특성상 여성 노동이 많은데, 문제는 여성 노동에 대한 저임금 등 차별적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이어진다는 말도 주목된다. 최저 임금제라는 제도적 안전망이 이주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도는 곧 여성 노동에 대한 저임금 유지와 맥락이 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에 대한 이러한 차별 구조야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물론 요양보호사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돌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마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돌본다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도립이라든가 시립에서 직접 위탁을 줬을지언정 개입해서 하는 게 1%밖에 안 돼요. 90%를, 99%를 시장에 다 떠넘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사업장이 사업체가 2만 8천 개예요. 근데 여기가 임금은 건보공단에서 주는 100이 내려오면은 그중에서 86%를 임금으로 써야 돼. 14%가 운영하는 거야. 운영도 안 돼. 여기다가 노조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이거 조직한다고 공공은

수조라든가 서비스연맹 같은 데 조직한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별 노조 가입시켜 여기 하고 상대로 단협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 다 망가져 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서로 문 닫아버리고 안 되지. 노조 방식으로 안 된다. 근데 이제 관심이 무서워요. 새로운 걸 시도할 못 해요.<sup>56</sup>

돌봄은 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간다. 특히 돌봄 노동은 국가와 공동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의 일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돌봄은 거의 대부분 시장에 맡겨버리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에 2만 8,000개로 나누어진 사업장은 조직화 사업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장애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사업장에 일일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공제회나 협회 방식의 대안적 조직 형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노동조합을 포기하는 개량적 방침이라는 비판이 등장했다고 한다. 기존 노동운동의 관성의 힘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보다는 협회 조직이 이제 장점일까? 그것은 장점은 이제 노조가 지금 인식이 안 좋고 그다음에 노조 만든다 하더라도 입대위가 사용자가 동대표로 구성되는 입대위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하청받은 사람이 경비업체거든. 형식적으로는 경비업체가 형성하지만 실권은 입대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 만들어 가지고는 덕이 별로 없다, 쉽게 가입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협회로 쉽게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일상 활동을 그들의 구미 당기는 걸 많이 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역사 문화 산책이야 너무 좋아해. 개별적으로 어디 놀러 가기 어려우니까 의미 있는 데를 가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패 노래. 지금도 이제 화요일마다 민요 배우기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이제 유행가의 노래 가사 바꾸기로 해서 경기도 발표회도 하고 그랬는데. 셋째가 좋은 영화 보기 운동. 이 세 가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sup>57</sup>

노조에 비해 협회 조직이 가진 장점은 또 다른 1980년대 노동운동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경기중부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창설에 큰 역할을 했던 정성희는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있는 경우 협회가 훨씬 유리한 조직 형식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일상 활동을 통해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역사문화 산책, 노래패 그리고 영화 보기 등 세 개의 동아리를 통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가 건설현장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 있다. 애초 100원짜리 공사가 하청에 하청을 거쳐 실제 시공회사에서는 10원짜리 공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마저 경쟁이 치열해 더욱 저가 수주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를 잘 보여 준 사건이 2021년 12월 1일 안양시 만안구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3명의 사망사고다. 사건 직후 안양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신영배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안전 수칙만 지켜졌어도 사람 3명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하였다.

이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였는데, 야간작업 중 롤러를 통제할 신호수가 부재한 조건이 사고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즉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 보건작업 지침’을 보면 롤러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 중장비 부근에 노동자가 있는 등의 경우, 장비별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장비 유도자’는 장비의 운행 경로는 안전한지, 주행 속도는 적절한지 확인한다. 호각과 수신호 등을 이용해서 장비를 움직이거나 멈추게 하고 도로에 떨어져 있는 방해물 등을 치우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문제의 만안구 도로 공사장에는 이 신호수가 없었다.<sup>58</sup>

신호수가 없었던 이유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공사의 원청기업은 LG유플러스였고 시공사는 S&I건설이었으며 1차 하청업체는 엘에스 일렉트론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차 하청업체인 통광이 맡았다. 이렇게 불법 재하청을 거쳐 공사비가 줄어들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규정에 따른 인력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고의 희생자들 역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이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근본적인 현안은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례와 예산과 노동행정 조직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듯 60%, 60%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기업 노동자들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정권이 바뀌면 대기업 노동자들은 정말 좋아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거든요. 민주화가 된다든지 뭐 그런데 거거하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 같으면 야 너 예를 들어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런 사람이 너그 공자왈 맹자가 좋은 소리는 다 하면서도 막상 우리한테 도와주는 게 뭐야 말해 봐. 우리 이름으로 뭐라도 했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봐. 그거는요. 민주노총한테도 마 찬가지예요. 민주노총한테 저는 뭐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그 비정규직 얘기하지 비정규직 조직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실무자 예산이 있으면 가져와 봐.<sup>59</sup>



2023년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공동으로 개최한 안양노동운동 전시회



# 이모저모



2023년 안양노동운동 전시회에 전시된 안양 노동운동 관련 사진

열악한 조건에서도 오랫동안 안양의 비정규직 문제와 씨름해 온 비정규직센터 운영 위원 신영배의 말은 결국 정부와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만들어낸 문제를 시장에 맡겨서는 결코 해결 전망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제까지 민주화를 통해 덕을 본 노동자들은 대기업 소속이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다는 말은 왜 민주화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라일하 의장의 활동이 주목된다. 라 의장은 1995년 안양시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2002년 안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들어갔다. 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을 맡기도 했고,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그는 2010년 2월 28일 돌연 해고당한다. 통합 사무처장 임기 일주일도 안 돼서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비합법 노조 활동과 그에 따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다.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된 그는 11년간 부당해고를 외치며 정부와 맞서 싸웠다. 라 일하 의장은 2020년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쟁취해냈다. 그리고 해고 4,139일째인 2021년 6월 28일 안양시 공무원으로 복직하였다. 복직한 라 의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함께 복직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함께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한 것이었다. 2021년 7월 2일 노동인권센터설립추진TF팀을 설치하고, 9월 29일 안양시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예산을 배정받아 다음 해인 2022년 8월 10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였다.

그가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세운 이유는 노동조합 밖 노동자를 위함이었다. 그는 “공무원으로 복귀하면 규모가 있는 노동조합을 넘어서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당시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였다.<sup>60</sup> 요컨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다짐한 것이었다.

흔히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운동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은 그 주체들의 자율적 실천으로 전개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은 노사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통해 노동운동의 성장을 억압하고자 했다. 그러나 완전히 고립된 절대적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모든 사회운동은 관련된 여러 주체의 실천이 복잡하게 뒤얽히며 진행된다. 요컨대 노

동운동은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실제 1980년대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세계의 주인이며 역사 발전의 주체라는 신념하에 현장에 투신한 수많은 대학생 출신 활동가들의 노력을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그 신념의 옳고그름을 떠나 그 실천이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배치된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과 연대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불평등한 세계에서 약자에 대해 더 많은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만능주의에 가깝다. 즉 시장의 자유경쟁만이 세계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자비할 수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어야 하는 이 자유경쟁의 정글 속에 사자와 토끼는 공존할 수 있을까. 사적 욕망의 적나라한 배출장인 시장은 공동체 전체의 몰락을 재촉할 수 있다. 이에 공동체와 국가에 의한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개인의 생존은 더 이상 사적인 것일 수 없다. 저출생이 보여 주듯이, 개인의 선택조차 공동체 전체의 공공적 문제로 현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로서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의 하층을 보호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고도로 분업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어느 한 귀퉁이가 무너진다면, 사회 전체가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이다. 안양의 현 노동운동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 74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155쪽.
- 1 『조선일보』 1990년 8월 2일.
- 2 『한겨레신문』 1990년 2월 2일.
- 3 김필영, 「노동자 죽음 둔감한 사회 분위기 큰 실망」,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30일.
- 4 「자결한 김시자씨의 절규」(사설),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23일.
- 5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24.
- 6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13일.
- 7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14일.
- 8 『매일경제』 1996년 10월 26일.
- 9 『한겨레신문』 1996년 6월 23일.
- 10 『경향신문』 1996년 7월 4일.
- 11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5일.
- 12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8일.
- 13 『동아일보』 1996년 12월 30일.
- 14 『동아일보』 1996년 12월 31일.
- 15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28.
- 16 『한겨레신문』 1997년 1월 10일.
- 17 『한겨레신문』 1997년 1월 14일.
- 18 「대화 분위기 맞춰 수위 조절」, 『동아일보』 1997년 1월 20일.
- 19 『동아일보』 1997년 1월 22일.
- 20 『한겨레신문』 1997년 1월 17일.
- 21 『한겨레신문』 1997년 1월 14일.
- 22 『한겨레신문』 1997년 1월 17일.
- 23 『한겨레신문』 1997년 1월 22일.
- 24 「전교조 사학 갈등 심화」, 『한겨레신문』 1999년 8월 23일.
- 25 「유한 김벌리 산업평화대상 수상」, 『매일경제』 1999년 10월 9일.
- 26 「작업환경 측정 허위 작성」, 『매일경제』 1996년 7월 8일.
- 27 「수도권 오염 서울보다 심각」,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15일.
- 28 「건축폐기물 수천 톤 불법 매립」, 『조선일보』 1996년 7월 13일.
- 29 「평촌 쓰레기 매립 경찰 토공 등 수사」, 『동아일보』 1996년 7월 14일.
- 30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24일.
- 31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20일.
- 32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20일.
- 33 『오마이뉴스』 2001년 5월 31일.
- 34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17일.
- 35 우리신학연구소, 「교회는 지금-가난한 이 위해 39년간 일해온 안양 전진상복지관 문 닫아」, 『갈라진 시대의 기본소식』 817호, 2008, 30쪽.
- 36 「안양전진상복지관, 제2기 인권학교 개설」, 『가톨릭평화신문』 2001년 10월 13일.
- 37 「안양 전진상복지관 문닫아」, 『가톨릭신문』 2007년 12월 16일.
- 38 「민중학교 내년 2월까지 영화강좌」, 『경향신문』 1997년 11월 17일.
- 39 『한겨레신문』 1999년 11월 26일.
- 40 『동아일보』 1996년 11월 24일.
- 41 「합동연설회 현장」, 『조선일보』 1996년 3월 31일.
- 42 「편파TV 인터뷰: 김종박, 좌파 활동가에서 해외 직판 전도사로」, 『레디앙』 2020년 1월 8일.
- 43 안양시 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앞의 책, 209쪽.
- 44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우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 45 이병권, 「비정규노동센터의 조직적·제도적 실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2022, 278-279쪽.
- 46 이병권, 「비정규노동센터의 조직적·제도적 실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 2022, 291쪽.
- 47 「직접민주주의의 뉴스」, 2020년 11월 14일.
- 48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소식지」 2호, 2020, 1쪽.
- 49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대회 자료집」, 2020년 12월, 71쪽.
- 50 신영배(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구술(2024년 9월 24일).
- 51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장) 구술(3차, 2024년 10월 28일).
- 52 신영배(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구술(2024년 9월 24일).
- 53 안양시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양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3, 209쪽.
- 54 이시정 구술(3차, 2024년 9월 23일).
- 55 이시정 구술(3차, 2024년 9월 23일).
- 56 이시정 구술(3차, 2024년 9월 23일).
- 57 정성희 구술(3차, 2024년 10월 28일).
- 58 「중대재해법 그 후③ 윤석열이 몰랐던 안양 롤러 사망 사건의 전말」, 『뉴스타파』 2022년 4월 29일.
- 59 신영배(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구술(2024년 9월 24일).
- 60 「라일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 중부지부 의장 "지역 중심 노동조합 지향"」, 『군포시민신문』 2025년 4월 22일.

## 제5장

# 안양 노동의 역사적 궤적과 21세기 노동의 전망

---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 20세기 안양 노동의 역사

안양이 경험한 20세기 산업화와 근대적 산업노동의 등장 그리고 치열한 노동운동은 곧 한국 사회 전체가 겪은 역사의 축소판이다. 수천 년 지속된 농업경제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고도의 산업경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도 상전벽해의 변화를 감당해야 했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와 공장의 삶에 적응해야 했다. 공동체적 안전망도 없고 모든 것을 시장의 화폐 흐름에 의존해 개별적으로 생존을 도모해야만 하는 도시의 삶이 곧 한국의 일반적 생활양식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노동자 집단의 형성이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만들어낸 태반의 힘은 바로 이들로부터 나왔다. 한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국가로 입지를 굳힌 것도 이들의 덕이다. 후자는 발전국가의 통치성과 기업가의 창의력 또는 과학기술 엘리트들의 공을 꼽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집결된 생산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노동자들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없다면, 국가의 철두철미한 계획도 기업가의 신묘한 경영수완도 과학기술 엘리트의 놀라운 전문성도 다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미국의 학자 제임스 C. 스콧(James C. Scott)은 실행지(metis)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실행지는 관료제적 지식인 테크네(technē)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식적이고 추상화된 지식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에서 경험과 직관을 통해 체득되는 실천적이고 암묵적인 지혜를 의미한다.<sup>1</sup> 실행지는 실행자들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체득되기에 주관적이고 고유하며 쉽게 일반화되기 힘들다. 즉 공식적 매뉴얼이 있다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실행지는 노동자들의 특권적 지식이자 지혜이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계획과 기업가의 경영전략 그리고 과학기술 엘리트의 전문적 매뉴얼은 결국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으로 전화해 생산현장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곧 거대한 노동자 집단에 의한 거대한 실행지의 생성과 축적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근원적 원천일 것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종종 선진국 추격 과정으로 설명된다. 추격의 성공은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후발 주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결국 선진국을 넘어서는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 일본 제품을 넘어선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한국 산업의 힘일 것이다. 이 추격의 산업화를 가능케 한 것이 곧 노동자들의 메티스인 것이다.

90년 후반으로 오면 이제 부품 가공이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제 이제 핀이 빈자리가 맞으면 '가공을 잘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네 근데 빈 구멍이 여기 있고 여기 있

안양 노동운동 전시회(2023년)



어. 그런데 이게 100분의 2에 공차가 100분의 2야 100분의 2mm. 그러면 거기에 여기 딱 넣었을 때 딱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이걸 못 맞춰가지고 맨날 구멍을 따로 뚫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공을 하는데, 그걸 맞추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공해서 그걸 수출 역수입되잖아요. 일본 제품이 그런 게 많아요. 가공품들이 이제 그게 되면서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sup>2</sup>

인용문은 안양에서 노동과 노동운동을 시작한 어느 노동자의 회고이다.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기술과 도면을 이용해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정밀한 가공이 힘들어 애를 먹다 결국 일본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기술과 도면을 다 들여왔음에도 실제 그 도면과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셈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실행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선진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메티스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2천년대인가 90년대, 2천년대 들어서 반도체 장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7세대 이제 8세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몰랐냐 그러면 이게 기름이나 유분이 나 먼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데 예를 들면 베어링이나 뭐 이런 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슬라이딩 되는데 미끄러지는 데 이런 데를 다 닦은 거야. 싹 신나로 싹 불어내고 베어링도 뚜껑 열면 싹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다 불어낸 거야. 불어내야 된대. 아니 이거 움직이는데 안 된다. 그때는 그렇게 무식했어. 우리가 우리 능력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대기업이 대단히 관료적이거든요. 모르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기계가 다 부서지고 나서 그때야 이제 이런 데는 구리스를 칠해라.<sup>3</sup>

반도체 장비에 뛰어든 대기업은 자신들의 전문성만 믿고 현장 노동자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노동자들은 움직이는 부위이기에 윤활유를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오직 깨끗한 손질만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시행착오 끝에 나온 개선안은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었다. 이처럼 현장 노동자들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암묵적 지식으로서 메티스가 풍성하게 형성되어야 기술적 우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기반하였다. 후후발 자본주의 산업화를 추구했던 한국은 기술과 자본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유일한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임금을 최대한 낮추고자 했다. 노동집약적 산업화란 곧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억압적 성장을 의미하였다. 시쳇말로

노동력을 갈아 넣어 성취한 성장이었던 셈이다.

공업도시 안양은 이러한 성장의 명징한 사례이지 않을 수 없다. 안양은 서울 남쪽에 위치한 배후 공업도시로서, 식민지시기부터 해방, 한국전쟁, 산업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고, 동시에 이에 맞서 집단적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안양은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 근대적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특히 1930년대 들어 대규모 공장이 세워졌다. 조선직물주식회사의 인견공장은 당시 최대 규모의 방직공장이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기숙사 생활, 그리고 형편없는 임금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결국 1936년 이 공장에서는 안양 노동운동 최초의 파업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인 소유 공장들은 무주공산이 되었고, 일부 노동자들은 이를 접수해 자주적 운영을 시도했다. 한국전쟁의 파괴를 딛고 1950년대 후반 안양은 ‘공도(工都)’로 불릴 만큼 성장했으며, 금성방직·제일방직·삼덕제지·고려석면 등 대규모 기업들이 속속 들어섰다. 1970년대 안양은 ‘제2의 영등포’라 불리며 수도권의 대표적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인구는 1960년 약 3만 명에서 1977년 16만 명으로 증가했고, 기업체 수도 1971년 64개에서 1981년 409개로 늘어났다. 금성통신 등 대기업을 입주하면서 전자·기계 산업도 발전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였다. 임금은 생계비에도 못 미쳤으며, 하루 12~14시간의 노동이 강요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규율과 통제가 심해 개인의 자유가 거의 없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집단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엄격한 통금과 규제를 받았다. 이는 단순히 노동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58년 삼덕제지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은 노동자 저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치 경영’을 시도하였다.

1963년과 1965년 고려석면 공장에서는 저임금에 맞선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경찰은 이를 강경 진압했다. 특히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노조 간부를 체포하거나 협박하는 등 국가 권력이 직접 노동운동을 억압했다. 1969년 금성방직·태평방직 등 면방업계의 총파업은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파업은 안양을 넘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었고, 노동자들이 전



1988년 경기남부지역 노동조합연합 창립보고 및 임금인상투쟁 전진대회(경기도메모리 제공)

국적으로 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파업은 완전히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임금 인상에 성공하였다.

1960~1970년대 노동운동은 국가 권력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시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를 억눌렀고, 중앙정보부와 경찰은 노조 활동을 직접 관리·감독했다. 파업이 발생하면 군·경찰을 동원해 강제 진압했으며, 노조 지도부를 교체하거나 탄압하기도 했다.

1980년대 안양의 노동운동은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안양의 노동현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노동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1987년 6월항쟁에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으로 폭발하였다. 안양에서는 1987년 7~8월에만 66개 사업장에서 노조 결성 및 파업 투쟁이 일어났고 이 투쟁을 거치면서 안양의 노동조합수는 1980년 20개에서 1990년 9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20세기 후반 안양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노동자 집단을 대량으로 형성했고 이들에 의한 노동운동은 198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안양

은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갔고 대규모 공장들이 지방과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고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노동운동은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취약 노동자가 확대되면서 노동 형태가 급변했고 노동운동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 2. 신자유주의와 21세기 안양 노동의 전환

안양의 산업은 21세기 들어 급속하게 재편된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시작된 것은 좀 더 오래된 일이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전체의 산업구조가 확연히 뒤바뀐 것은 21세기 이후라 할 수 있다. 그 대체적 양상은 전통적 굴뚝산업의 퇴조와 새로운 첨단 산업의 확대라고 요약 가능하다. 다시 말해 섬유를 비롯하여 초기 산업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굴뚝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빈 공간을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안양은 1970년대까지도 제조업 종사자가 60%를 넘을 정도로 공업도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 되면 3차 산업 종사자가 2차 산업 종사자를 추월했으며 2005년 무렵에는 3차 산업 비중이 80%를 넘긴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인구가 60만을 넘나들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 서비스업종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맞물려 안양의 노동시장과 노동 형태는 물론 노동운동의 양상을 극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이다. 제조업의 경우 기존 단일하게 통합된 생산과정을 잘게 분해하여 사내 하청, 사외 하청을 통해 외주화함으로써 노동자들도 단일 기업의 통합된 노동자가 아니라 잘게 쪼개진 개별 소기업 소속으로 뒤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일 노조 하의 통합된 노동자란 생각할 수 없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플랫폼노동이 이를 대변한다. 기존 단일 회사의 직원 운수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계약 관계를 맺는 개별 사업자가 된 것이다. 실제 업무는 과거와 비슷한 노동자이면서도 계약상 신분은 독립 사업자가 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배달 라이더 등이 이러한 플랫폼노동의 대표적 업종이다. 이외에도 개별 사업자로 등록해 계약을 맺는 업종은 무수히 많으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학원 강사, 교육 서비스 종사자, 돌봄노동 종사자, 대형마트 판매직 등이 대표적 업종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한테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그래서 자유와 자유화라고 해서 규제를 철폐해 주고, 개방화라고 해서 해외화하고 유연화라고,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시직 파트타임 이런 게 늘어나고, 임금은 연봉제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형태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대노조 정책은 이제 꼭 노조 만들어야 되나 노조에 대한 관념이 옛날에 병영적 노무 관리를 해서 탄압이 심하면 자연스럽게 노조 만들기도 쉽고 생산 공정도 생산 라인이라는 동질성도 강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노조로까지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sup>4</sup>

한 마디로 ‘쉽게 버리고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요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자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 시장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며 이는 그만큼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자유가 확대되면 누군가의 자유는 줄어든다. 자유는 무한대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더욱이 강자의 자유가 늘어난다면 약자의 그것은 더욱 쪼그라든다. 이미 시장의 강자인 자본의 자유가 확대된다면 약자들의 자유는 가속도가 붙어 줄어든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 군사적 통치성과 병영식 노무관리가 노동자를 억압하는 경우 역설적으로 단결도 쉽고 집단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도 수월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억압적 통제 대신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적 방식으로 작용하기에 집단적 저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생산라인이 갈갈이 찢겨 있기에 이들을 하나의 단일한 대오로 묶어내는 작업 자체가 대단히 곤란해지는 것이다.

소사장제, 큰 대기업도 사내 하청을 두거나 사외에 하청 이렇게 뒤가지고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복지 혜택도 들어가. 그러니까 다 쪼개가지고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 사내 하청 또는 사외 하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지고 작은 규모에서는 그 단독 단위 노조로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역 노조를 만들자 또는 업종 노조를 만들자고 하지만 지역 노조가 업종 차이를 불문하고 지역에서 노조 만들자 하는 것도 결국 분회는 단위 노조거든. 근데 분회는 30명 규모가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30명 중에서 내가 가입해서 흑시라도 박해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노조 조직화가 현재의 지금 그 영역에서 잘 안 되고 있다.<sup>5</sup>

인용문은 하청과 외주 용역을 통해 단일한 생산라인을 여러 개의 소사장 관할로 분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설명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생산라인의 분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진다. 전형적인 분할지배 전략(divide and rule)의 일환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집단적 단결 대신 개인적 이익 추구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또한 이런 경우 근로계약도 단기 또는 초단기로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무엇보다 기업과 자본의 일방적 노무 관리를 곤란하게 만든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도도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 자본이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힘들다. 예컨대 자본은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력 역시 신축성 있게 운용하고자 한다. 수요가 줄어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면 당연히 노동력도 줄여야 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비정규직은 이를 위한 최적의 고용 형태이지 않을 수 없다.

초단기 계약은 제조업 현장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소규모 점포나 자영업 등에서 초단기 아르바이트는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다. 심지어 주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하루 단위나 시간 단위 고용도 흔하다. 시간 단위, 일 단위로 근무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와 단결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생산현장의 변화, 노동 형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곤란하다.

결국 노동의 힘을 빼고 자본의 힘이 더욱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는 실질 노동임금의 하락을 초래한다. 애초 신자유주의의 목적 자체가 시장의 강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토끼와 사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실질 임금의 하락에 맞서 과거와 같은 임금 인상 투쟁조차 쉽지 않다면, 노동자의 대응은 무엇인가. 개별화된 노동자들의 생존술은 결국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맞벌이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남성 노동자 한 명의 임금으로는 도저히 한 가정의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노동임금의 지속적 하락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과거 한 사람의 임금으로 한 가정의 재생산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임금 수준이 높았음을 반증해 준다. 물가 상승, 생활수준 향상 등의 여러 요인을 거론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임금의 실질적 하락이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혁명의 효과임도 부정할 수 없다. 전통적 가부장제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21세기 공장의 불빛」(믹스라이스 작,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문화재단, 2017) 1978년 비밀리에 제작되어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배포되었던 민중극 『공장의 불빛』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업으로, 계약직 노동자·해고자·이주노동자·청년들이 참여하였다.

에서 여성은 가정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여성도 사회활동이 가능해졌고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권이 커짐에 따라 가정 내 발언권도 확대된 것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맞물리는 것임도 분명하다.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란 곧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더 많은 산업예비군이 창출되어 노동시장의 경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더 낮은 노동 비용으로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시장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략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실질 노동임금이 그 이후 하락하면서 부부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역시 활성화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1990년대 시작되어 21세기 들어 일반화된다고 보인다.

노동의 유연화와 더 많은 인구의 노동력화에 대한 필요성은 이주노동자를 통해 달성

된다. 대략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고 현재 한국은 이미 다인종 사회로 접어들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은 5.2%에 달해 다인종 국가의 기준인 5%를 넘어섰다. 체류 외국인의 절대다수가 이주노동자임은 분명하다. 과거 대규모 해외 이민자를 만들어냈던 한국이 이제 수백만 단위의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변화 자체가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사를 압축한다고도 할 것이다.

안양의 등록 외국인수는 최근 6,000~7,000명 내외이다. 전 인구의 1% 내외로 한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양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023년 안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만큼 안양의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 3. 21세기 안양 노동의 전망

인간의 노동과 관련되어 최근의 가장 큰 변수는 자동화를 넘어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이다. 자동화는 생산현장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키오스크가 일반화된 것은 물론 티켓 예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형마트의 셀프 계산대는 판매직 일자리를 축소시켰으며 배달 주문은 이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일이 되어 버렸다. 인공지능은 간단한 신문기사 작성을 넘어 논문 작성과 소설 창작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로봇 기술은 어지간한 인간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두뇌 및 신체활동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미칠 파장은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노동 상당수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기술 발달에 따른 인간 노동의 변화 또는 소멸의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삶의 개선과 향상으로 이어질지 또 다른 지옥도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과학기술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힘겹게 감당해 오던 고통스런 노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커다란 진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또한 소득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임노동 관계를 기본으로 하

여 성립했으나 이제 그 관계가 전면적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노동과 임금의 교환체계가 해체된다면 과연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며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기술의 발달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임노동 관계의 근본적 정정과 변형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임금소득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곧 구매력을 상실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소비를 두 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이룬다. 생산된 상품이 소비되지 못하면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순환이 멈추게 된다. 이것을 흔히 불황으로 부르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공황이 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임금소득 대신 자산소득에 열중하고 있다. 흔히 '쥐꼬리만 한 봉급'으로 불리던 임금소득으로는 도저히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조차 구입하기 힘들어진 게 사실이다. 예컨대 안양의 아파트 가격은 월급을 모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이다. 주식과 코인 열풍은 임금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이 일반화된 시대의 자화상일 터이다.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초단기 계약 노동은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정규직이 된다 해도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도 않고 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르바이트 단기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을 도모하고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결혼하여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한국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도 낮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10%에 불과하다. 즉 신생아 10명 중 1명만 저소득층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산층 이상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칼 폴라니는 『거대한 변환』에서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를 전대미문의 부와 전대미문의 빈곤이 공존하는 시대로 요약했다. 그러나 이는 정정되어야 한다. 후기 산업화 시기 야말로 전대미문의 양극화가 전면화되는 것이다. 이 양극화 속에 노동이 어느 극에 속할지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금 굵고 자리 잡고 구멍 뚫고 이렇게 해서 조립을 싹 해서 올렸어요. 전원을 딱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 기분, 그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장비를 납품했을 때 최근에 가장 비애를 느꼈죠. 어떤 이제 검사인데 건전지 전지 검사기를 만들었는데 다 수공으로 했어요. 수공을 이렇게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검사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 말레이시아에.



2023년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제6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개막식 퍼포먼스(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근데 그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잘리는 거야. 10명 정도가.<sup>7</sup>

인용문은 안양에서 1980년대 노동운동에 헌신했고 현재까지도 자동화 설비 현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의 말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보람과 즐거움이 결국 이국의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는 역설 속에 오늘날 한국의 노동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노동이 노동의 소멸로 귀결되는 이 역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 노동의 운명인 셈이다.

노동자 의식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환경에 작용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임금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잖아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일당 3,200원이고 산업 안 하면 10만 원이 안 됐고.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살기 위해서라도 노조를 만들어서 뭐 해야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IT 청년 노동자들도 취직한 상태에서는 절대 빈곤에서는 우선 벗어나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도 많이 직장 민주화가 돼 있습니다. 언어 폭력 직장 갑질이 여전한긴 하지만, 그런 것도 경계하고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신고하면은 노동부에 조사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

그다음에 자유화,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문화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주체적으로 보면 은 노조운동이 신뢰를 충분히 얻을 만큼 잘하지 못하고 국민적 지지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조 만들어서 뭐 움직여서 더 나아지겠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경쟁을 통해서, 개인 경쟁은 더 치열해져. 또 사측은 그걸 이용을 하고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는 나한테 더 연봉을 더 많이 쳐주니까.<sup>8</sup>

오늘의 청년 세대가 과거와 달리 노동자 의식이 매우 약화된 상태라는 현실 진단이 어느 정도 적실한 것인지는 좀 더 많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과거의 집단적 정체성을 오늘날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 과거를 지양하면서 축적된 것 이외에, 그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를 면하기 힘들다.

이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주체가 하나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주체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 갖는 것 중에 하나가 87년 대투쟁을 경험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노조 운동이 쪽 됐잖아요. 중간에 없어졌든 어쨌든. 이제 노조 운동을 경험하면서 간부 경험을 했던 사람을 따져 보면 수만 명 될걸요. 이 사람들이 다 퇴직했어요. 나도 퇴직자지만, 나 이 부분을 새로운 주체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 운동이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퇴직해서 사회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원을 재조직하는 문제에 굉장히 좀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sup>9</sup>

인용문은 1980년대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의 말이다. 시대를 건너뛰는 대신 두 시대를 잇고자 하는 고민의 발로라고 이해된다. 과거의 노동운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생각된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다. 즉 서로 다른 여러 시대가 한 사람의 마음과 신체에 응축되어 있기에, 인간은 역사적 현재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삶이 이러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대착오조차 필요할는지 모른다.

독일에서는 2010년대 이후 '돌봄'과 '혁명'의 연결을 기반으로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돌봄혁명'(Care-Revolution)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 사회의 무게중심을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돌봄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경쟁자로 맞서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새로운 공동체로

연결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돌봄혁명은 '삶의 총체적 경제화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으며 성장경제와의 작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sup>10</sup>

확실히 현대 한국 사회는 돌봄조차 노동이 된 시대임이 분명하다. 과거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이 시장을 통해 구입해야만 되는 노동력이 된 것이다. 돌봄이 노동이 된 시대를 받아들이되, 또한 그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되, 또한 인간의 삶이란 서로서로 돌봐야만 될 만큼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것임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20세기의 노동으로부터 21세기의 노동을 전망하되, 또한 21세기의 노동이 20세기의 노동을 돌아봐야만 될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 註

- 
- 1 제임스 C. 스콧 저, 전상인 번역, 『국가처럼 보기』, 에코리브르, 2010.
  - 2 김종주 구술(2차, 2024년 11월 27일).
  - 3 김종주 구술(2차, 2024년 11월 27일).
  - 4 정성희 구술(3차, 2024년 10월 28일).
  - 5 정성희 구술(3차, 2024년 10월 28일).
  - 6 『중앙일보』 2024년 2월 22일.
  - 7 김종주 구술(2차, 2024년 11월 27일).
  - 8 정성희 구술(3차, 2024년 10월 28일).
  - 9 이시정 구술(3차, 2024년 9월 23일).
  - 10 안숙영, 「성장 만능주의 경제에 저항한다…이제는 '충분한 돌봄'을 논할 때」, 『한국일보』 2025년 8월 2일.

집필(가나다순)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편집·교정

손예은, 홍현영

안양시사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18-8

ISBN 979-11-94861-09-6 (세트)



